

이주 배경을 가진 독일 유권자의 정당 선호 : 귀환 이주민 사례를 중심으로*

최정애 ■ 한국개발연구원**

〈국문요약〉

최근 몇 년 동안 독일에서는 이주민 수 증가와 함께 이주민 통합이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2019년 하반기를 기준으로 이주 배경을 가진 유권자는 독일 인구 전체의 9%, 630여만 명에 이른다. 이주민 2,3세대가 사회 중심으로 나오며 유권자로서 이주민들의 영향력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주민 이슈를 향후 주력 과제로 내세운 정당의 지지율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 논문은 투표행태의 이론적 흐름에서 '정당 일체감'을 기반으로 정당 선호를 해석하는 인지학적 연구의 질적 분석을 토대로 하였다. 연구 사례로는 독일 이주민 사회 통합을 논할 때 빠지지 않는 구 소련계 귀환 이주민(Aussiedler)을 선정하였다. 2010년 이전에 이주민 유권자의 정당 선호에 큰 영향을 끼쳤던 '이전' 과 '차별화' 요인의 중요성이 감소하였음을 논하고, 2010년 중반 이후 변화한 사회에서는 '접촉' 요인이 이주민 유권자 정당 선호 연구의 핵심이 되어야 함을 밝힌다. 요컨대 이 논문은 독일 정치 생태계의 중요한 변수 중 하나인 이주민의 정당 선호를 살핀다. 이를 통해 이주민 연구에 대한 이론적 기여는 물론이고, 이주민과의 상생이라는 현대 사회의 정치적 과제를 의미 있게 다루어 볼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독일 이주민, 정당 선호, 독일 정치, 귀환 이주민, 정당 일체감

* 이 논문은 저자의 박사 학위 논문 “이주 배경을 가진 독일 유권자의 정당 선호: 이전, 차별화, 접촉 요인의 영향력을 중심으로(2020)”의 일부를 수정하여 작성하였음을 밝힘.

** 한국개발연구원 전문연구원 (E-mail: jeongae@kdi.re.kr)

I. 서 론

독일의 관심이 이주민에 집중된 것은 오랜 일이 아니다. 식민국가 통치 등 역사적 이유로 인종적 다양성을 확보한 이웃나라 프랑스와 달리 독일은 전통적인 게르만 인종의 거주 지역이었으며 특히 내륙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상 외국인 이주가 많지 않았다. 독일에 외국인 유입수가 가장 많았던 첫 번째 시기는 2차 대전 이후 독일 산업이 제조업을 중심으로 재편되었을 때였다. 독일은 1955년부터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터키, 모로코, 튀니지 등의 국가와 노동자 협정을 맺으며 외국인 체류를 반겼다. 초청 노동자들이 노동 계약 만료 이후에도 안정적인 사회 시스템을 갖춘 독일에 계속 정착하기를 원하면서, 독일에 정주하는 외국인 수가 대폭 상향되었다. 이에 독일에 정착한 외국인 수는 1951년 50만 명, 1973년 400만 명에서 2019년 현재 1,091만 명으로 증가했다. 독일 내 이주 배경을 가진 유권자는 2019년 하반기 기준 630여만 명에 이른다.

독일 정부는 1990년 말 이주국으로서 국가 정체성을 확립하고 외국인법 (AuslG: Ausländergesetz)을 개정했다. 1999년 귀환 이주민 및 숙지주의 관련안이 개편¹⁾되었고, 2005년 개정에는 노동이주, 난민 및 망명, 이주민 사회통합 문제가 포괄적으로 다뤄졌다. 이런 상황에서 이주민들은 뚜렷하게 집단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1965년 대량 유입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한 터키계 초청 이주민 (Gastarbeiter), 과거 소비에트 연합에서 독일로 재이주한 귀환 이주민 (Aussiedler)은 독일 이주민 집단 중에서도 가장 뚜렷한 색을 보유한 집단이다. 독일 내 이주민 정당 선호를 연구한 학자들에게도 이 두 집단은 중요한 분석 대상이었다.

이 논문은 과거 선행연구들이 활용한 분석 방법만으로 2010년 중반 이후 크게 변화한 독일 이주민 정당 선호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없다는 비판적 관점에서 시작하였다. 대다수의 선행연구들이 이주민 집단 '내부'에서 정당 선호 영향 요인을 찾고 있는 한편, 최근에는 이주민 집단을 둘러싼 '외부'적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근 정당 선호에 큰 변화를 보인 귀환 이주민 집단을 대상으로 이주민 정당 선호의 외적 변화를 분석하고 그 의미를 새롭게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1) 2000년 1월 1일 출생한 아동의 경우,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도 출생 시 부모 중 한 명이 8년 동안 독일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었을 경우 독일에 무제한 거주할 권리를 가짐 (§ 4 Abs. 3 StAG).

연구 방법으로는 분석 대상인 귀환 이주민 집단의 역사 및 문화, 집단적 성격을 각종 1차 자료 및 현지 조사를 통해 파악하고, 정부 및 연구기관의 관련 연구자와 현지 면담을 진행하면서, 이들이 제공한 포커스 집단 인터뷰 결과 분석을 병행하였다. 이론적으로는 버나드 베렐슨(Bernard Berelson)을 위시한 인지심리학 이론의 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학문적 체계성을 견고히 하였다.

이주민 유권자의 정당 선호에 대한 논의는 한국 사회에 중요한 시사점을 남긴다. 한국에 정착하는 외국인의 절대 수도 많아졌지만, 노동 수요 증가, 국제 결혼 증가 등으로 사회 곳곳에서 이주민 영향력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보다 한발 앞서 이주민 증가와 정책 차원의 변화를 겪은 독일의 정치 사회적 모습을 분석하는 것은, 독일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 사회의 변화를 준비하는 지금 시기에 의미 있는 시도라 할 것이다.

II. 이주 유권자 정당 선호에 관한 이론적 논의

정당 선호 연구가 본격적으로 활발해진 시기는 1940년대로, 컬럼비아 대학교(Columbia University)의 라자스펠드(Paul F. Lazarsfeld)와 베렐슨(Bernard Berelson) 교수가 미국인 투표 행태를 분석한 연구물 『국민의 선택(The people's Choice)』을 발표한 후였다. 베렐슨은 이 연구 이후 정당 선호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계속 살피며, 사회집단이 유권자 투표 행태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꾸준히 주장했다. 베렐슨이 활동한 1950-60년대는 정치를 하나의 체계로 보고, '개인과 사회를 둘러싼 환경이 정치 체계에 영향을 주고 정치 체계가 다시 개인과 사회에 영향을 준다'고 설명하는 구조 기능주의 이론이 활발한 때였다(Easton 1964).

구조 기능주의 이론은 정당 선호 연구를 크게 세 가지 양상으로 발전 시켰다. 첫 번째로 '개인'의 정치적 태도나 가치관에 주목하는 연구는 캠벨(Campbell 1960)이 '정당 일체감'이라는 개념을 확립하며 자리 잡았다. 캠벨은 정당 일체감이 개인의 정치적 선호를 구성하며, 사회 역시 이런 일체감을 보유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정당 선호를 유지하는 습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흐름의 연구에서는 정당 일체감을 '한 개인이 성장하며 정치사회화 과정을 습득해가는 결과 나타나는 것'으로 정의하고, 따라서 '성인이 된 후에도 지속되는 감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전용주 외 2007). 두 번째는 개인보다 '사회집단'에 주목한 연구의 흐름으로,

캠벨의 영향을 받은 후세대 연구자들이 캠벨의 연구를 확장하여 사회집단과 네트워크의 중요성에 집중한 것이다. 세 번째는 '제도'적 차원에 대한 연구로, 순수한 제도주의적 관점에서 국가의 선거제도가 투표행태의 결정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Farrell 1977).

베럴슨은 이 중 두 번째인 사회집단을 강조한 학자였으며, 이주민을 다룬 상당수 선행 연구들도 '집단'을 주요 분석 대상으로 삼는데 동의했다(Strijbis 2014). 한편 이주민 유권자의 정당 선호 연구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정당 일체감이 형성 되는가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띠었다. 이 과정에서 이주민들이 겪는 '내외적 경험'이 중요한 요인으로 지목되었다. 이주한 국가에서 이주민이 소속된 사회 집단을 규정하는 방식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다. 그 결과 많은 선행 연구가 주목한 요인이 바로 '이전(transfer)'과 '차별(differentiation)' 요인이었다. 이주민이 정당일체감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가치와 이념 등 세대에서 세대로 '이전'된 정치 성향이 다른 집단과의 '차별성'을 만들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앞서 베럴슨이 주장한 영향 요인들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었다. '이전'은 베럴슨의 용어로 '친숙한 관계에 따른 세대, 가족 간에 이전되는 정치 성향'으로, '차별화'는 '그룹 컨텍스트(group context of voting behavior)'로 각각 소개되었다(Berelson 1954). 베럴슨은 이외에도 한 가지 영향 요인을 더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행동과학자이면서 커뮤니케이션 연구가로서 주장한 '외부와의 접촉'이었다. 베럴슨은 이것을 '유대(circle of friends/co-worker)'로 소개하며 대중 매체의 영향력에 대해 언급하였다.

베럴슨이 주장한 세 가지 정당 선호 영향 요인을 토대로, 우리는 독일 이주민 정당 선호를 다룬 선행 연구를 세 가지로 분류하여 설명을 정교화 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이전 요인을 다룬 선행연구들은 정당 일체감이 세대 이전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괴레스(Goerres 2018b)는 초청 이주민들에 대한 연구에서 노동 이주라는 테마가 이전 요인을 작동하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설명하였으며, 귀환 이주민들의 경우에는 기민련에 대한 정당 일체감이 2세대들에게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았다. 초청 이주민을 다루는 연구들은 꾸준히 노동 이주와 사민당의 관계에 대해 다루어 왔으며, 노동자 직군이 대물림 되는 성향이 있는 경우 이전 요인의 중요성은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설명하였다(Snitil 2012; Müssig und Worbs 2012). 앞선 연구들은 시대 배경을 간과하거나 통제시킴으로써 이전 요인의 중요성을 획득했다. 그러나 1세대 이주민과는 성장 배경과 생활 환경이 다른 세대가 등장하면서 이전 요인의 중요성이 감소되고 있음을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두 번째로, 차별화 요인을 다룬 연구에서는 정당 일체감을 형성하는 방식을 집중적으로 논한다. 이 경우 한 이주민 집단의 정당 선호는 현지인, 다른 이주민 집단들의 그것과 차별성을 보인다고 설명된다. 많은 연구자들이 이 요인에 주목했는데, 차별성은 독일 1세대 이주민들에게 가장 잘 나타나며 이슈 중심으로 차별 의식이 만들어지는 경향을 보였다(Goerres 2018a; Ireland 2012; Wüst 2004). 귀환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차별화 요인을 활용해 정당 선호를 설명하는 연구도 찾아볼 수 있다. 피레스(Goerres)는 러시아계 귀환 이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독일에서 보낸 시간과 민족적 정체성 등 '차이'의 요인과 '독일을 위한 대안(Alternative für Deutschland: AfD, 이하 대안당)' 지지는 상관성이 없는 반면, 독일 사회에서 '차별'을 느끼는 경우 대안당 지지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앞으로 설명할 귀환 이주민의 독일 내 입지와도 중요한 연관성을 갖는다.

세 번째로 접촉 요인을 다룬 연구 사례는 다른 두 가지 요인을 통한 분석보다 적은데, 이는 내부 요인이 기존 선행 연구들의 주요 관점으로 굳혀져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블래테 외(Blätte et al. 2018)는 터키계 이주민들이 대터키 외교 정책, 터키의 EU 가입문제, 유럽연합과 터키 관계에 있어 사민당과 총리 후보자 마틴 슈츠(Martin Schulz)의 불충분한 답변에 불만을 가졌다는 점에 집중했다. 이것이 2017년 총선 결과로 표출되었다는 것이다. 한편 접촉 요인의 중요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탈국경적 행위의 증대, 이주민·난민 문제의 대두, 이주민 경계의 증대, 교통 발달,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 등은 접촉 요인의 영향력이 높아지는 계기로 작용한다. 이주민 정당 선호가 과거 거주국의 문제로만 한정되어 있었다면, 이제는 출신국-거주국 관계 등 외부와 밀접한 영향을 주고받게 된 것이다. 특히 2015년 난민 대거 이주, 2016년 브렉시트 투표 등 이주민과 직결된 사회 문제가 복잡해지면서, 이주민들은 내부적 결속 뿐 아니라 외부와의 접촉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앞의 설명을 바탕으로 영향 요인 분석의 기준을 다음 <표 1>와 같이 세워 볼 수 있다. '이전', '차별화', '접촉'의 세 가지 요인을 설명하기 위해, 선행 연구들이 중요하게 여겼거나 측정의 기준으로 삼았던 사항을 분류하여 아래 표로 정리하였다.

〈표 1〉 이주민 정당 선호의 영향요인

분류	요인	측정 기준
내부 요인	이전	정당 선호에 있어 세대 간 의견 일치, 세대별 정당에 대한 연대성
	차별화	차별 인식에 대한 정당의 대응, 관습적 차별에 대한 정당의 반응
외부 요인	접촉	내부적 접촉(모국어 미디어에서 정당에 대한 평가, 준거 집단의 활동), 외부적 접촉(출신 국가에 대한 정당의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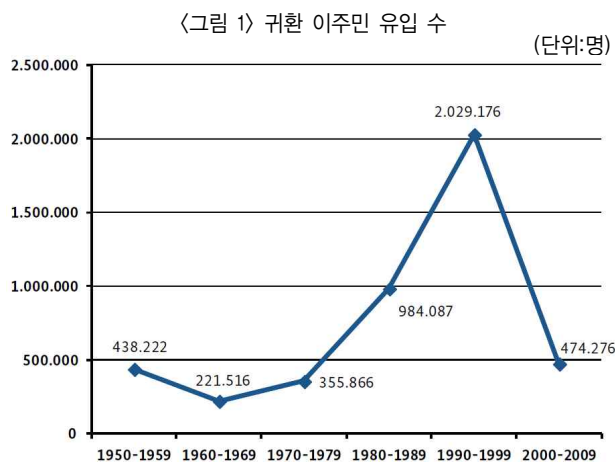
측정 기준의 구체적 설명은 다음과 같다. ‘이전’ 요인은 내부요인의 하나이며, 많은 연구가 ‘세대 간 이전’을 집중적으로 논의해왔다. 이 논문의 분석 모델에서도 정당 선호에 있어 현재 세대 간 의견이 일치 하는지, 즉 정당 선호에 있어 1세대가 2세대에게 충분한 영향력을 끼치는지, 세대별로 각 정당에 대해 어느 정도의 일체감과 연대를 보이는지를 중점으로 이전 요인의 가치를 다시 한 번 논할 것이다. 두 번째로 ‘차별화’ 요인 역시 내부요인의 하나로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에 의해 자주 활용되어왔다. 이 논문에서는 선행 연구들이 차별화 요인을 논할 때 중요하게 여겼던, 정당이 이주민 차별을 인식하는 정도와 이주민 이슈에 대응하는 정도에 대해 살펴본다. 특히 어떤 사회적 기준보다 첨예하게 다뤄지는 종교적 차별성과 이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 차별을 인식한 이주민에 대한 정당의 대응 방식과 입장에 대해 논한다. 마지막으로 ‘접촉’ 요인은 외부요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요인은 미디어 등을 통한 이주민들의 외부 접촉, 특히 출신 국가와의 관계나 외교 상황, 준거 집단과의 접촉 등을 통해 정당 선호 방향이 결정될 수 있다고 설명하는 것이다. 요컨대 본 연구는 귀환 이주민이 처한 독특한 상황에서 정당 선호 흐름을 분석하고, 제시된 측정 근거를 토대로 선행 연구들이 간과하고 있었던 비대면 준거 집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III. 독일 내 귀환 이주민 현황과 정당 선호 추이

귀환 이주민의 선조는 수세기에 걸쳐 러시아로 대거 이주했던 독일인이었다. 독일 출생으로 러시아 황후가 된 예카테리나 2세(1762~1796년 재위)는 남편 표트르 3세의 무능한 통치 능력이 러시아인들의 반감을 사는 동안 세력을 넓혀 남편을 폐위하고 스스로 제위에 올랐다. 예카테리나 2세는 세력을 넓히기 위해 대

외 정치를 활용하였는데, 그중 하나가 독일인에 대한 이주장려정책이었다. 이 정책을 통해 주로 독일의 빈농들이 구 소련의 국가들로 들어가 노동 생산력을 보강했으며, 예카테리나 이후에도 이들에게 언어, 문화, 자치 공동체를 보장해주고 병역 징집을 면제 해주는 특혜가 지속되었다. 그 결과 모스크바 북서쪽에서 지금의 카자흐스탄 서쪽에 이르는 볼가강 유역의 도시, 우크라이나, 폴란드와 같은 동유럽 국가에 독일계 이주민의 수가 늘어났다.

한편 20세기에 들어와 독소전쟁, 2차 대전 등이 발발하면서 독일계 이주민들은 혼잡한 여건 속에서 정치적 희생을 치렀다. 스탈린은 이주 독일인들을 시베리아 노동 수용소로 강제 이주시켰고, 자치권에서 독일식 이름, 언어를 유지하는 것을 금지했다. 급기야 2차 대전 패전을 계기로 독일 영토가 축소되며 슐레지엔 및 프로이센 지역, 구 소련에 거주하던 독일인들은 대거 독일로 들어왔다 (Goerres 2018a; Stricker 1997). 독일 혈통이었던 이주민들이 역이주 해 오면서, 독일 정부 역시 이들을 위해 새로운 정책을 도입했다. 이주민에 관한 법률이 1953년 ‘연방이주법(Bundesvertriebenengesetz)’이라는 명칭으로 처음 공표되었고, 본격적으로 ‘이주하였다가 귀환된 이주민’이라는 뜻의 ‘귀환 이주민(Aussiedler)’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기 시작했다. <그림 1>에서 1950년대부터 독일로 들어온 귀환 이주민 유입의 증감을 한눈에 볼 수 있다. 1950년에서 80년까지 독일로 이주한 독일 혈통의 이주민 숫자는 총 101만 5천명 정도였으며, 한 해 유입된 이주민은 2만 명에서 많을 때는 6만 명 정도의 수준이었다.



*출처: Bundesverwaltungsamt 자료를 토대로 구성

귀환 이주민 유입 수가 가장 많은 시기는 1990년대였다. 1982년 헬무트 콜을 수장으로 하는 기민·기사 연합 정부가 이들을 위한 귀환 장려 정책을 만든 데다, 몇 년 후 동구권 사회주의가 붕괴되면서 그 수가 폭발적으로 늘었기 때문이었다. 1990년부터 1999년까지 10년 동안에만 200만 명이 넘는 이주민이 독일로 유입되었다. 그런데 다시 돌아온 이주민들은 언어, 생활습관 등 독일의 풍습과 문화에 적응하지 못했다. 이는 독일의 혈통주의적(Jus Sanguinis) 정책 방향에 대한 근본적 의심으로 이어졌다. 그때까지 독일은 대다수 이민 국가에서 실시하던 동화정책의 필요성을 묵인하고, 차별을 배제시키는 정도로만 이주 정책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정부의 태도가 바뀐 것은 1992년 마스트리히트 조약 체결 이후였다. 1995년 선거부터는 독일에 거주하는 유럽연합 시민에게 지방 선거권을 허가했고, 독일에 거주하는 비유럽연합 시민의 선거권 논의도 시작했다. 독일은 이주국으로서 국가 정체성을 확립하였으며, 이주 문제 역시 장기적 관점에서 다루기 시작했다(박재복 2016). 1990년에 발의한 외국인법(Ausländergesetz: AuslG)에는 1999년 국적법(StAG: Staatsangehörigkeitsgesetz)이라는 명칭을 새로이 부여했다. 2000년 초 발표된 국적법에서는 제한적이나마 속지주의(Jus Soli)를 인정했다.

한편 독일 혈통의 이주민들에 대한 귀화도 엄격해졌다. 1993년 이후부터는 현지에서 입국허가를 받고, 독일어가 어느 정도 가능해야 독일 입국 자격을 주었다. 독일에 정착해서도 통합교육 코스(Integrationskurs)²⁾를 반드시 통과하도록 하였다. 이주 및 망명자들을 위한 연방청(Bundesamt für Migration und Flüchtlinge: BAMF)이 나서서 언어능력을 테스트하고 통합 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통합 정책 뿐 아니라 검열 정책 또한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 자격 미달이나 통합의 의지가 없는 귀환 이주민들을 본국으로 송환시키는 경우도 생겼다.

1950년에서 1989년까지 귀환 이주민의 출신 국가를 분류해보면, 러시아에서 독일로 오는 경우가 가장 많고(238만 명, 52.6%), 폴란드(144만 명, 31.9%) 루마니아(43만 명, 9.5%), 체코슬로바키아(10만 명, 2.3%), 유고슬라비아(9만 명, 2.0%), 헝가리(2만 명, 0.5%), 기타 국가(5만 명, 1.2%) 순이었다(Bundesverwaltungsamt 기준).

2019년 하반기에 정부에서 집계한 유입 귀환 이주민의 총 수는 4,529,758명이며, 이중 투표권자는 1,683,000명이다. 이들은 전국에 분포되어 있으나 몇 개 도

2) 이 통합 코스는 '난민 및 망명자 처리에 관한 법률'로서 연방난민법(Gesetz über die Angelegenheiten der Vertriebenen und Flüchtlinge (Bundesvertriebenengesetz - BVFG) 15조에 의거해 운영되고 있다.

시에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특성을 보인다. 귀환 이주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곳은 각각 27%와 19%를 차지하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ordrhein-Westfalen)과 바덴-뷔르템베르크(Baden-Württemberg)이다. 바덴-뷔르템베르크 주도 슈투트가르트(Stuttgart)에는 20만여 명의 귀환 이주민이 거주중이다. 뒤파라 바이에른(Bayern)에 16%, 니더작센(Niedersachsen)에 11%가 분포한다. 구 동독 지역에는 귀환 이주민 전체의 5% 미만(124,000명) 정도만 거주한다. 귀환 이주민 5천 5백 명이 거주하는 바덴-뷔르템베르크의 포르츠하임(Pforzheim), 3만 2천명이 밀집 거주하는 니더 작센(Niedersachsen)의 클로펜부르크(Cloppenburg)는 대표적인 귀환 이주민 거주 지역이다.

귀환 이주민들의 사회 경제적 상황은 다른 이주민 그룹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이다. 비교적 좋은 학교 교육을 받고, 직업 교육 및 노동 시장에서 대우도 상대적으로 높다. BAMF 공식 문서에서 밝힌 이들의 공식 실업률은 5.7%정도이며, 연봉 수준은 '500유로 이하(2%), 500-1000유로(34.8%), 1,500-3,200유로(46.8%), 3,200-4,500유로(11.5%), 4,500유로 이상(4.8%)'이다. 직업군 별로 보면 '일반 기술 노동자(35%), 마이스터 등 전문직(21%), 사무직(36%), 자영업(5%), 공무원(3%)' 순이었다.

이들의 교육 수준과 직업 환경 역시 다른 이주민 집단에 비해서 월등하다. 최종 교육 수준은 '교육미이수자(3.6%), 중등교육(34.6%), 기술학교 등 중등교육(34.6%), 고등교육 이상(27.2%)' 순이었다. 전체 이주민의 중등교육 비율 평균은 이들보다 10% 포인트 낮았다. 귀환 이주민들은 실업자인 경우에도 다른 이주민들 보다 높은 비율로 연금을 수령했고, 다른 이주민 집단에 비해 개인 자산 축적률도 높다. 종교적으로는 기독교가 전체의 82%이며 이중 개신교 신자가 55.6% 정도였다(Baier et al. 2010).

구 소련 지역에서 독일로 돌아와 정착한 귀환 이주민들은 자신들을 독일로 불러준 기민·기사 연합의 오랜 지지층이었다. 1990년대 귀환 이주민들이 대거 유입된 직후부터 다른 정당에 비해 기민·기사 연합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귀환 이주민들은 철저히 독일식 생활습관을 유지하고, 독일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동시에 기민·기사 연합의 비호를 받으며 견고한 지지층이 되었다. 2000년대에 들어 귀환 이주민 집단의 기민·기사 연합 지지율은 전에 비해 낮았지만, 여전히 평균 65% 정도로 다른 정당에 비해서는 높은 지지율을 차지했다. 기민·기사 연합에 대한 귀환 이주민 지지율이 급격히 낮아진 것은 2010년 중반 부터였다. 2010년 중후반에 이루어진 정당 선호 조사에서는 기민·기사 연합에 대한 지지율이 40%에 가까울 정도로 감소되었고, 급기야 2017년 총선에서는 27%

까지 감소했다. <표 2>는 귀환 이주민들의 역대 정당 선호 추이를 보여준다.

<표 2> 귀환 이주민 정당 선호 추이

	~1995	1995~ 2002	2000~ 2008	2016	2017	2018
CDU/CSU	71	53	65	45.2	27	40.6
SPD	18	21	24	25.6	12	15.0
FDP			3	0.7	12	7.9
Die Grüne	0	3	4	8.2	8	7.7
Die Linke			4	11.5	21	15.6
AfD	-	-	-	4.7	15	12.0
기타 정당	2	2	-	4.2	5	1.3
참고	N=93	N=62		정당선호	64	정당선호

*출처:

2016년 자료: 설문조사 대상 4,000명, 기간 2015.3-8. 설문조사 기관 Sachverständigenrat deutscher Stiftungen für Integration und Migranten. 오차범위 ± 0.05

2018년 자료: 설문조사 대상 1,438명, 기간 2017.7-2018.1 설문조사 기관 SVR-Integrationsbarometer 2018. 신뢰구간 95%, 오차범위 ± 0.05

2017년의 총선 결과는 귀환 이주민들의 투표 성향이 일시적 현상이 아님을 확인시켜준다. 2016년과 2018년의 정당선호 설문 결과보다 2017년의 실제 투표 결과는 기민·기사 연합에 훨씬 더 부정적이었다. 2016년 대안당(AfD)과 좌파당(Die Linke)에 대한 귀환 이주민들의 지지율 상승은 그런 측면에서 놀랍고 흥미로운 결과다. 같은 기간 독일 전체 유권자의 투표 성향과 비교해보면 귀환 이주민들의 정당 선호가 극단으로 변화해가고 있음을 더 잘 비교할 수 있다. 독일 유권자들의 기민·기사 연합 지지율은 1990년 43.8%, 1994년 41.4%, 1998년 35.1%, 2002년 38.5%, 2009년 33.8%, 2013년 41.5%, 2017년 32.9%이었고, 대안당 지지율은 2013년 4.7%, 2017년 12.6%였다. 좌파당은 2013년 8.6%, 2017년 9.2%였다.

대안당과 좌파당의 지지율에 대해서는 다른 해석이 필요하다. 대안당 지지율의 비약적 상승은 주목할 만하다. 난민·이주민 등의 사회 갈등 이슈 증가, 정당 일체감을 토대로 한 포퓰리즘 정당의 이주민 전략 등에서 그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 다음 장에서 기민·기사 연합 지지율 감소에 대한 영향요인 변화를 세세히

살피며 대안당 지지율 상승에 대한 해답을 함께 찾을 것이다. 좌파당 지지의 급격한 상승에 대해서는 우선 정치 이념보다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상황을 해석할 필요가 있다. 귀환 이주민들의 사회적 특성에서 살펴듯, 이들은 아비투어를 치르는 대신 기술 교육을 받고 직업 전선에 뛰어드는 경우가 많다. 일자리에 대한 불안과 사회 경제적 불안감은 좌파당 지지율을 높인 결정적 이유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미디어, 준거집단과의 접촉이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다음 장에서 이 상황을 자세히 분석해볼 것이다.

앞서 살펴본 데이터에 근거해 우리는 귀환 이주민들의 정당 선호 추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첫 번째로, 귀환 이주민은 기민·기사 연합 지지자라는 기존의 선거 공식이 무너지고 있다. 우리는 다음 장에서 이러한 상황이 일시적이기보다 지속되는 상황을 보이는 이유를 분석해볼 것이다. 두 번째로, 거대 정당을 선호하는 비율이 줄었다. 비 거대 정당, 소수 정당에 대한 지지율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 이 역시 논문이 고안한 연구 모델을 통해 원인을 분석할 수 있다. 이 분석을 통해 우리는 대안당의 대 이주민 집단 홍보 전략에 대해서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IV. 정당 선호 영향력 분석

1. 이전 요인

이전 요인은 차별화 요인과 함께 선행 연구에서 가장 자주 다뤄진 귀환 이주민 정당 선호의 영향 요인이었다. ‘기민·기사 연합에 대한 귀환 이주민 1세대의 정당 일체감이 후세대들에게도 영향을 끼쳤다’는 논리였다. 선행연구들은 어떻게 1세대의 정당 일체감이 2세대에게 전가되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 대상을 분석했다. 그러나 2017년 총선 전후에 1.5세대들의 정체성 혼란, 대안당 선전 등과 함께 이러한 세대 이전 성향이 완화되는 모습을 보인다. 우리는 이를 살피기 위해 500명을 대상으로 하는 포커스 집단 인터뷰의 결과를 분석하기로 한다³⁾.

3) 1세대는 이주 경험이 있는 사람, 2세대는 이주 경험이 없는 사람으로 구분되며, 1.5세대는 12세 이하에 독일로 이주해 독일에서 성장한 사람을 뜻한다(BAMF 2018). Goerres, Achim., Mayer, Sabrina J., Spies, Dennis C. 연구팀이 독일 정부 지원을 받아 수행한 2017-2018년 포커스 그룹 면담 결과를 기본으로 하였다. 이 면담에 참여한 500명 중 1세대는 481명, 2세대는 21명이다. 연구팀 책임자 중 Sabrina Mayer 박사와는

인터뷰 결과 우리는 1.5세대 이후 귀환 이주민들의 모호하고 복잡한 정체성과 마주하게 된다. 우선 귀환 이주민 중 1세대인 60대 이상은 구 소련 지역에서 독일로 이주하면서 기민·기사 연합의 도움을 받았음을 인정했다. 그리고 이러한 도움이 귀환 이주민의 기민·기사 연합 지지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설명했다. 한편 1.5세대부터는 그들 스스로 구 소련에서 왔다는 인식보다 독일에서 성장한 독일인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더 이상 기민·기사 연합을 자동적으로 지지하지 않는 모습도 보였다. <표 3>은 500명 인터뷰 중 23명을 다시 면담한 결과 중에, 1세대와 2세대의 세대 간 의견의 불일치와 1.5세대 이후 귀환 이주민들의 기민·기사 연합 지지에 대한 철회의 의견을 보여주는 부분을 정리하고 있다. 또한 그들의 정체성을 알 수 있는 부분을 따로 정리하였다.

<표 3> 귀환 이주민 포커스 그룹 인터뷰 결과

대상	- 총 23명(20-79세, 평균 연령 27세) - 이주민 대부분이 독일 시민권자이며, 20%가 이중국적자 1세대 이주민: 60세 이상으로 성인이 되어 독일로 이주 1.5세대 이주민: 12세 이하에 독일로 이주	
1세대	정당에 대한 입장	• 제 생각에 러시아계 독일인들은 헬무트 콜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갖고 있습니다. 독일로 들어오는 경계를 열어주었으니까요. 그게 신뢰를 만들어낸 것이죠. (남성, 65-69세) • 대안당이 난민 정책에 대한 메르켈 총리의 대응에 대한 실망감을 덜어 주고 독일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남성, 65-69세)
	정체성 인식, 생활 방식	• 아마 독일인들은 우리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러시아에서 독일인으로 사는 것도 그랬으니까요. 부정적인 방향으로요. (남성, 65-69세) • 사실 독일로 들어오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니다. (남성, 65-69세) • (이주 전 국가에서 받아온) 자격증이나 대학 증명서 같은 것들이 독일에서는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니다. 결국 독일에 들어와 미화원으로 일을 합니다. (여성, 60-64세) • 저희 어머니는 평생 독일 방식으로 살아오셨고, 다른 식으로 행동하거나 동화되는 걸 좋아하지 않으셨어요.(여성, 25-29세)

2019년 7월 면담을 갖고 이후 이메일로 교신하며 2년에 걸친 포커스 인터뷰에 관한 정보를 얻었다.

1.5 세대	정당에 대한 입장	• 대안당이 보여주는 것은 또 다른 의미의 애국심이에요. 대안당의 민족주의적 프로그램이 완전히 개방되었기 때문에 귀환 이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보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 45-49세)
	정체성 인식, 생활 방식	• 초등학교에서 저는 러시아인으로 취급당했어요. 카자흐스탄에서는 독일인이었죠. (여성, 30-34세) • 여전히 러시아식 삶을 고수하고 있어요. (여성, 30-34세) • 독일에 들어왔으니 이제 독일인이라고 생각하실 테지만, 사람들은 아마 우리를 외국인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여성, 29세)
2 세대	정당에 대한 입장	• 물론 감사하게도 제가 지금 독일에 있는 것은 맞는데요, 그랬기 때문에 기민·기사 연합에 감사함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성, 20-24세) • 기민련을 지지했는데요, 이제는 그래서는 안 될 이유도 많아졌어요. (여성, 25-29세) • 기민련이 아니라 사민당, 아니면 녹색당이나 그 어떤 정당이든 저희 입장을 대변해주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성, 25-29세) • 어떤 부분에 가치를 두느냐는 전적으로 정당에 의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성, 20-24세, 대안당 지지자) • 러시아어로 제안을 한다는 사실은 우리를 100% 이해한다는 느낌을 줍니다. 우리의 고민을 이해하고 이야기 해보겠다는 의지로 생각되고요. (여성, 20-24세)
	정체성 인식, 생활 방식	• 고모는 헬무트 콜이 저희를 독일로 들여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 스스로 겪은 일은 아니니까요. (여성, 25-29세) • 제가 직접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친지들은 독일로 들어올 수 있었음에 감사함을 느끼고 있죠. (여성, 25-29세) • 종교가 같다는 면에 있어 우리는 독일인에 훨씬 가깝습니다. (여성, 25-29세)

우리는 귀환 이주민을 1세대, 1.5세대, 2세대로 나누어 그들의 정당에 대한 입장과 생활 방식을 설명한 위의 <표 3>에서 두 가지 현상을 포착할 수 있다. 우선, 1세대와 2세대가 기존 지지 정당 기민·기사 연합에 대해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1세대가 헬무트 콜과 기민련에 대해 무한의 신의를 갖고 있었다면, 2세대들은 그들에게 감사함을 느껴야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또 기민련을 지지하고 있던 2세대의 경우에도 기민련에 대한 판단을 보류하며, 1세대에 비해 훨씬 냉정한 시선으로 선거를 치르고 있었다. 2세대가 차츰 중심 세력을 형성하는 시기에 이런 결과는 매우 의미 있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흥미로운 점은 전 세대가 대안당에 호감을 보이고 있지만, 이 정당에 대한 해석은 세대별로 다르다는 것이다. 우선 1세대는 대안당을 새로운 방식의 ‘민족주의’ 정당이라고 해석하고 있었다. 민족주의는 스스로를 ‘독일 민족’으

로 칭하던 이들 1세대 귀환 이주민에게 매우 의미 있는 것이었다. 한편 2세대들은 실망한 기존 정당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 대안당을 선택하고 있다. 요컨대 기민·기사 연합에 대한 회의감과, 이를 대신 해줄 대안으로서 새롭게 등장한 대안당이라는 변수가 이들에게 영향을 끼치기 시작한 것이다. 실제로 2010년 중반 이후 귀환 이주민 집단 내에서 대안당 지지율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귀환 이주민들을 세대로 나눌 때, 각 세대의 정당에 대한 연대감은 완전히 달랐다. 1세대의 지지 정당과의 연대감은 2세대로 오며 상당히 희석되거나 다른 방식으로 변형·해석되고 있다.

2. 차별화 요인

많은 귀환 이주민들은 지역 사회의 차별에 두려움을 갖고, 차별 받지 않기 위해 자신이 독일인이라는 사실을 과장해 드러내곤 한다. 이들은 터키계 이주민처럼 한 번에 구별하기 쉽지 않으므로, '은근한 경멸'의 눈빛을 받곤 한다고 고백한다. 독일인들이 내면적으로 자신들에 적대적일 것이라 예상하는 귀환 이주민들도 자주 만날 수 있다⁴⁾. 2016년 이후 귀환 이주민들이 느끼는 차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건은 단연 '폴 리사 Fall Lisa 가짜 납치 사건'이었다. 2016년 1월 11일, 13살 러시아계 이주민 3세인 리사는 부모에게 행방을 알리지 않은 채 친구들과 밤을 지새운 후에, 부모에게 혼날 것이 두려워 세 명의 난민 남성에게 납치당했다고 말했다. 러시아어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잡혀 갔다는 그녀의 주장에 귀환 이주민을 포함해 러시아어를 쓰는 이주민 전체가 들고 일어났다. 폴 리사의 거짓말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도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무분별하게 번져 나갔다. 러시아어를 쓰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폴 리사를 찾자는 메시지가 오고 갔다. 구 소련계 이주민은 한데 모여 연방과 주정부에 강력한 치안을 요구하며 시위했고, 이 시위는 난민과 이주민을 함부로 받지 말라는 강력 시위로 번졌다.

당시 이주민, 난민 통제를 강력히 주장하던 대안당은 이 사건을 귀환 이주민 네트워크 결집에 활용했다. 귀환 이주민들을 앞세운 대안당은 러시아어와 독일

4) "터키인들이 가게에 들어가서 터키어를 하면 아무도 그를 쳐다보지 않아요. 그런데 러시아어를 쓰면 갑자기 사람들이 쳐다보지요. 차이점은 터키인은 이미 생김으로 구별하는 한편, 우리 같은 경우에는 독일인처럼 생겼는데 러시아어를 쓴다는데 있는 거죠. 지역 사회에서 이런 말도 해요, '왜 독일인처럼 생겼는데 러시아어를 하고 그래?'" - Pfetsch(1999)의 포커스 인터뷰 결과에서 발췌

어를 혼용한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서 난민 반대 등의 시위를 열었다. 이 시위는 앙겔라 메르켈 사퇴를 주장하는 시위로까지 번졌다(Focus 2017; Roppert 2017). 2016년 뉘른베르크 시위를 보도한 뉘른베르크 차이퉁(Nürnberger Zeitung)의 엘라 쉰들러(Ella Schindler)는 '이주민들의 불안정한 사회 경제적 위치 등 복합적인 문제들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한편 이들의 기독교적 자존심, 무슬림에 대한 혐의도 대안당 지지율을 올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폴 리사 사건 직후였던 1월 26일 첫 시위의 주요 이슈는 '정부의 안보 강화'였는데, 이때 무슬림의 비동화적 특성을 강력하게 비난했다. '무슬림 반대'를 주제로 한 시위는 바이에른, 바덴-뷔르템베르크에서 3,000여명의 귀환 이주민을 끌어 모았다. 이들의 시위를 비꼬며 푸틴 대통령은 '새로운 이주민들의 유입이 유럽 몰락의 원인'이 되어가고 있다며, 러시아의 안보 강화를 자축하는 해프닝을 벌이기도 했다. 무슬림과 안보 위협은 대안당이 2015년부터 강력한 포퓰리즘 정당을 자처하며 캐치프레이즈화 시킨 주제였다. 이에 귀환 이주민들의 대안당 지지율이 4년 사이에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었다.

자신감을 얻은 대안당은 귀환 이주민들이 모여 거주하는 집단 구역으로 직접 들어가, '대안당을 위한 러시아 독일인(Russlanddeutsche für die AfD)'과 같이 이주민에 특화된 특별 네트워크를 만들어 이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수용하는 태도를 보여주었다. 지지층이 결집되자 대안당은 다음 절차로 홈페이지와 공약집에서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모든 유권자들에게 전방위적인 지지를 도모하기 시작했다.

대안당의 러시아어 이주민 네트워크 및 주요 활동 소개문

1. 헬무트 콜(Helmut Kohl)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귀환된 독일인들은 수 년 동안 기민 연합을 지지해옴.
2. 그러나 범죄율 증가, 우크라이나 위기, 러시아에 대한 강경 태도, 망명 이슈에 대한 혼란 증가 등으로 사회는 위협을 받았음.
3.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독일인들(Russlanddeutsche)은 보수적, 기독교적 가치관을 옹호 해왔으며, 잠재적인 위험 세력인 독일 이슬람교를 제재하고 독일의 이익을 위해 균형을 잡힌 국내외 정책을 지지해야 함.
4. 이 네트워크는 AfD안에 설립되며, 다음과 같은 목적을 지님.
 - 구소련계 독일인들 사이에서 AfD 정책 아이디어, 프로그램, 아젠다 등 보급을 도움.
 - 지역별 AfD는 선거운동을 지원
 - 독일어 정치 용어가 어려운 이주민들을 위해 러시아어 서비스 제공
 - 유튜브, 소셜 네트워크 등 필요한 플랫폼에 정보를 축적하고 공유하는 협력 활동

*출처: Russlanddeutsche für die AfD

이런 상황에서 기민·기사 연합의 득장 대응도 정당 지지를 감소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귀환 이주민의 오랜 지지를 받았던 기민·기사 연합에게는 오래 전부터 귀환 이주민을 위한 네트워크가 있었다. 그러나 이 네트워크의 활동은 대안당처럼 지속적이고 친밀하기보다, 대표를 중심으로 일회성 초청 행사를 주최하는 정도에 그쳤다. 또 중요한 차이점 중 하나는 지역 네트워크의 활성화였는데, 대안당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바덴-뷔르템베르크를 중심으로 지역별 네트워크를 만들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원한 각종 모임을 설립하며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대안당의 거센 공약에 충선을 한 달 앞둔 2017년 8월 말, 기민·기사 연합도 늦게나마 바덴-뷔르템베르크 지역을 시작으로 귀환 이주민 네트워크를 만들었다(CDU Baden-Württemberg 2017). 그러나 한발 뒤떨어진 홍보 전략의 성공 여부는 20% 가까이 떨어진 지지율이 대신 답해주고 있다.

3. 접촉 요인

대안당은 지지율 상승을 위해 이주민 네트워크를 효과적으로 사용한 사례로 주목할 만하다. 대안당은 네트워크의 내부적 접촉, 즉 이주민 집단 내 네트워크는 물론이고, 외부적 접촉, 즉 이주민 집단 밖의 유대도 중시했다. 따라서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 우리는 접촉 요인을 내부 접촉, 외부 접촉의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필요가 있다. 우선 내부적 접촉은 이주민 집단 내부에서 일어나는 접촉이 정당 선호에 영향을 주는 것을 이른다. 여기에 활용되는 수단으로는 각종 미디어 및 온/오프라인의 준거 집단이 있다. 외부적 접촉은 이주민 집단 밖에서 들어오는 정보에 의한 영향을 뜻한다. 단, 외부적 접촉은 앞의 이전, 차별화 요인에 영향을 주는 단순한 사회적 교류를 뜻하지는 않는다. 이주민의 생활 영역인 거주 국가와의 접촉을 벗어난 '외부', 즉 출신 국가에 대해 각 정당이 어떻게 대응하느냐를 두고 이주민이 받는 영향을 의미한다. 따라서 '접촉 요인'에서의 '외부적 접촉'은 출신국·거주국의 외교 관계 등과 연관되어 있다.

우선 내부적 접촉으로 두 가지 요인을 고려할 수 있다. 첫 번째로는 '미디어'가 집단에 영향을 주어 정당 선호의 변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독일 내에는 귀환 이주민을 타깃으로 만들어진 미디어 매체들이 상당히 많은데, 대부분은 소규모 인터넷 방송이며, 동영상은 클립으로 만들어지거나 생방송으로 인터넷 방송 채널이나 페이스북 등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전해진다. 소규모 매

체의 경우 자극성 높은 문구나 인터뷰 멘트를 사용하는 것이 눈길을 끌고, 대안당을 노골적으로 옹호하는 인터뷰어도 많다. 인터뷰 주제로 '대안당이 어째서 프로파간다인가'를 놓고 토론하는 식이다.

이런 성향은 다른 정당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저널리스트이며 귀환 이주민인 올가 소콜로바(Olga Sokolova)는 2017년 총선 직전 귀환 이주민들에 상당히 영향을 끼친 '메르켈 반대 운동'이 미디어를 중심으로 번졌다고 설명한다(Bayerischer Rundfunk 2017). 사민당도 공격 받았다. 대안당 지지율이 한참 상승하던 2017년 9월, '러시아 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지그마 가브리엘(Sigmar Gabriel, 외무부 장관 및 전 사민당 대표)이 대안당을 '네오 나치' 등으로 명명하며 구설수에 올랐다.

<표 4>는 귀환 이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매체에서 총선 관련 기사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귀환 이주민들이 가장 많이 보는 인쇄 매체는 러시아에서 발행되어 독일로 배달되는 신문이었으며, 대안당에 대한 기사는 사민당보다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더 심층적으로 작성되었다.

〈표 4〉 귀환 이주민 이용 인쇄 매체

비율 (%)	매체	독일 총선 관련 기사
47	Argumenty i Fakti 러시아에서 발행되어 독일로 배달되는 형태	사민당: 지지율 대폭 감소 대안당: 지방의회 성공적 입성, 지지율 증가 기민련: 기사권과 의견 충돌, 선거에서 무난히 승리
35	Semljaki 월간 발간. 독일과 러시아의 정치와 귀환 이주민 생활 정보 공유	기민련: 대안당 지지율과 대비, 귀환 이주민 생활고에 대한 기민련 대비 방안 미비
27	Russkaja Germanija, Russkij Berlin 1996년 창간 초기에는 베를린 지역 신문이었으나, 섹션을 늘려 전국 단위의 미디어가 됨. 정치, 경제, 스포츠, 사회 지면이 있음.	대안당: 대안당 성공의 의미
25	Deutsch-Russische Zeitung 바덴바덴 지역에서 출간되는 신문	주요 정당별 러시아와의 관계, 파트너십 형성 가능성 등에 대해 공략집을 토대로 분석

두 번째로 '준거 집단' 역시 정당 선호에 영향을 주는 내부적 접촉요인이다.

최근 온라인 네트워크가 활성화 되면서 이주민 준거 집단 역시 온, 오프라인을 넘나들며 활동 영역을 넓혔다. 포겔장(Vogelsang)은 특히 온라인 준거 집단을 ‘미디어 디아스포라(Mediale Diaspora)’로 명명하고, 귀환 이주민 중에서도 젊은 청소년들이 미디어 준거집단을 발달시킨다고 하였다(Vogelsang 2008). 보스(Worbs 2013)도 이 점을 지적하면서, 귀환 이주민들은 높은 방어력과 경계심을 갖고 인터넷을 기반으로 준거 집단을 발달시켜왔다고 했다. 귀환 이주민 준거 집단은 인터넷을 중심으로 강한 친화력을 보이고, 네트워크 안에서 강한 인종적 경향을 보였으며, 이를 통해 친교 관계의 내적 경향(innerethnische Tendenzen im Freundschaftsnetzwerk)을 발전시키며 폭발적으로 성장했다는 것이었다(Worbs 2013). 대안당을 지지하는 한 20대 여성은 인터뷰에서, 2014년 이후 러시아와 독일(또는 유럽연합)의 관계가 급속히 냉랭해진 점이 귀환 이주민 준거 집단 사이에서 중요한 이슈였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기민련 정부가 해결하지 못하는 이주민·난민 문제를 대안당이 해결하겠다고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이다⁵⁾.

상당수의 귀환 이주민 네트워크는 가족과 친구를 중심으로, 비공식적으로만 들어진다. 한 네트워크 분석 연구에서는 귀환 이주민의 네트워크가 1차 영역인 가족 및 친구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3차 네트워크 영역인 동료(Kollegen)에 대한 사회적 지지는 매우 낮았다(Bayerischer Rundfunk 2017, Frank 2011). 대안당은 이 네트워크를 가장 잘 활용한 정당이었으며, 대안당의 러시아인 네트워크(Russlanddeutsche für die AfD)는 이런 특성을 고안해 만들어진 준거 집단이었다. 이들은 동영상 클립을 개인 SNS나 메신저를 통해 조직적으로 전파했고, 페이스북, 텔레그램, 왓츠앱 등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뉴스를 생성시키고 네트워크를 활성화했다. 특히 터키계 터키회처럼 이들을 대표해 활동할 수 있는 준거 집단이 부재한 상황에서, 이런 네트워크 모임은 이들이 친목을 다지면서 정치적 선호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는 자리로 활용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외부적 접촉 요인은 앞에서 살핀 논리에 의거해 출신국-거주국의 관계에 따른 접촉이 정당 선호에 주는 요인을 이룬다. 2013~2017년 총선 시기에 독일 외교 관계의 중점에 있는 곳은 러시아였고, 가장 첨예한 이슈는 크림(Krym) 반도 지역의 독립에 얽힌 문제였다. 이 문제가 불거진 2014년은 대안당

5) “대안당이 이 관계에 대한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고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의지력이 중요합니다. 기민당이 제대로 하지 못하는 난민 문제를 풀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다는 걸 많은 이들이 이야기 합니다.”(여성 20-14세 그룹)

이 정당의 중심 이슈를 반 유로화에서 반 이주민·반 난민으로 정비하던 시기(최정애 2018)였다. 크림이 우크라이나로부터 독립하겠다고 선언했으나, 국제 사회가 러시아의 크림 복속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독일 정부는 2014년 7월부터 대러시아 경제제재를 발효시켰다. 무기, 에너지 분야에 대한 제재는 물론이고, 러시아는 독일 뿐 아니라 유럽 시장 자본 접근마저 어렵게 되었다. 이에 독일의 대러시아 수출량이 급속도로 감소했다. 2013년 대러시아 독일 수출량이 3천5백8만 유로인데 비해, 제재 이후 2015년에는 2천1십7백만 유로 수준이었다.

계속되는 국가 간 불화와 급격히 냉랭해진 러시아-독일 외교 관계에 대해 각 정당은 다른 입장을 내놓았다. 기민련 총수인 메르켈 총리는 상황에 따라 러시아 제재가 해제될 수 있다는 조건을 내걸었지만, 여전히 러시아 제재에 동의했다(Handelsblatt 2017). 기민·기사 연합과 연방정부는 러시아 제재를 해제하자고 할 수 없었는데, 러시아 제재를 지지하는 유럽연합과의 관계 등 한층 더 복잡한 문제에 얽혀있었기 때문이었다. 사민당은 러시아 제재에 대한 문제의 언급을 꺼렸다. 국제법과 러시아 외교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리지 않았다. 그러나 대안당만큼은 러시아 제재 압박에 대한 종식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대안당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독일이 러시아와의 관계에 좀 더 근본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다⁶⁾. 러시아를 경제 및 안보 측면의 파트너로 과소평가 하는 것은 독일에 있는 러시아계 이주민들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던진다는 논리였다. 대안당은 러시아인 네트워크(Russlanddeutsche für die AfD)를 통해 꾸준히 당 차원의 러시아 제재 해제 주장을 홍보했다.

이념적으로 극에 있는 좌파당이 귀환 이주민들의 표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도 짚어낼 수 있다. 좌파당은 '러시아를 희생양으로 만드는 것은 비생산적'이라는 입장문을 내고, 크림 합병에 따른 제재를 종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Die Linke 2017, 12). 보수를 자처하는 귀환 이주민들이 좌파당을 새롭게 보게 되었음은 물론이다. 2017년 총선에서 좌파당 지지율은 전체의 21%까지 올라갔다. 그러자 언론들도 독일의 대러시아 경제 제재 반대 입장이 정당 지지율을 높이는 원인이 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기 시작했다(Grachtrup und Korf 2017).

끝으로 언급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귀환 이주민들이 많이 보는 라디오나 TV 등 상당한 수의 소매체가 러시아에서 재정적 지원을 받고, 러시아와 깊은 관계를 갖고 있다. 특히 러시아 정부가 독일 내 러시아어 매체들을 통해 러시아의 입장을 직접적으로 내기도 한다는 점은 외부적 접촉요인으로서 러시아 정부, 내

6) 독일연방하원의원 게오르크 파츠데르스키 Georg Pazderski(AfD 당원)

부적 접촉 요인으로서 미디어의 정당 선호 연관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게 한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귀환 이주민이 가장 많이 보는 인쇄 매체인 Argumenty i Fakti는 러시아에서 발행되어 독일로 들어오는 것이며, 그 밖에도 2016년 러시아어 단독 방송으로 설립된 RTVD(Russisches TV Deutschland), 예초 베를린 지역 신문이었으나 1997년부터 전국 단위의 미디어가 된 ReLine GmbH의 Russkaja Germanija(russisch Russkaja Германия)등이 러시아어를 베이스로 하고 러시아 자본이 들어간 대표적 미디어라고 할 수 있다.

V. 결 론

지금까지 우리는 귀환 이주민의 정당 선호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분석했다. 귀환 이주민들은 러시아와 독일의 관계, 푸틴의 영향, 새로 생겨나는 미디어 매체를 통해 보수적 신념을 굳혀가고 있다. 또한 최근의 복잡한 사회 현상은 중도 스펙트럼인 기민·기사 연합에 대한 지지율 감소에 영향을 주고 있다. 우리는 세 가지 요인들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첫 번째는 많은 선행 연구에서 주장한 이전 (transfer) 요인이었다. 이주민의 세대가 변화하면서 정당 선호에 영향을 주는 요인 역시 변화하고 있으므로 이전 요인이 과거만큼 강력한 영향을 끼친다고 보기는 힘들다. 특히 독일에서 성장한 2세대들은 기민·기사 연합에 대해 1세대만큼의 애착 관계를 형성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이전 요인은 2세대의 낮아지는 정당 일체감을 충분히 답변해주지 못한다. 세대가 변화하면서 귀환 이주민들의 집단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로, 차별화(differentiation) 요인은 오랫동안 귀환 이주민의 집단 정체성을 설명하는 개념이었으나, 2017년 기민·기사 연합 지지율 급하락의 원인을 설명하지 못한다. 한편 폴 리사 사건으로 촉발된 귀환 이주민의 반 이주민, 반 무슬림 시위를 대안당이 정당의 홍보와 네트워크 확산에 사용하면서, 이 요인은 대안당 지지율 상승을 설명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기민·기사 연합 역시 대안당의 방법을 활용해 뒤늦게 지역별 네트워크를 만들기 시작했으나, 현재까지는 대안당 네트워크가 훨씬 견고하고 활발하다. 특히 반 무슬림은 귀환 이주민 네트워크에서 대표적인 혐오 발언의 주제로 부상했다. 출신 국가에서 독일의 루터교 신앙을 지켜 폄박받았던 이들이 반 무슬림을 향해 극렬하게 벌이는 차별 언행과 시위는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세 번째로, 귀환 이주민들이 기민·기사 연합의 대처 방식에 실망하는 사이에, 대안당이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기까지의 과정에는 내·외부적 접촉 요인이 작용했다. 우선 폴 리사 사건 이후 개인 SNS, 온라인 매체를 중심으로 하는 소규모 미디어에서 대안당의 새로운 관점을 환영했고, 귀환 이주민의 출신 국가 언어로 된 방송 매체들이 끊임없이 생겨났다. 온, 오프라인의 준거 집단이 활성화되고 그 중심에는 대안당의 러시아인 네트워크 같은 정당 중심의 네트워크도 자리 잡고 있다. 외부적 접촉 요인으로는 출신국·현지국의 관계에 대한 정당의 대응을 볼 수 있다. 기민·기사 연합과 사민당이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는 사이, 대안당은 EU 및 독일의 대러시아 수출 제재에 강력하게 반대했다.

우리는 귀환 이주민들의 2010년 중반 이후 정당 선호 양상의 변화가 선행연구에서 강조되었던 이전 요인이나 차별화 요인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으며, 접촉 요인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함을 밝혔다. 세대가 변화하고 이주민의 영향력이 커지며 이전 요인의 중요도가 감소하고 있고, 차별화 요인은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해석될 필요가 있었다. 이를 본 논문의 연구 모델에 상응하도록 아래와 같이 <표 5>로 결론 내릴 수 있다.

<표 5> 귀환 이주민 정당 선호 요인 측정 기준 결과

이전		차별화		접촉	
세대간 의견 일치	x	차별 인식	△	내부접촉 (미디어, 준거집단)	○
세대별 국가·정당 연대성	△	차별에 대한 정당의 반응	○	외부접촉 (출신국가에 대한 정당입장)	○

마지막으로 귀환 이주민들이 독일인을 향해 가진 복잡한 내면과 모순성에 대해 강조하고 싶다. 이들은 독일인들 앞에서 주눅 들어 있었고, 열등의식을 갖고 있었다. 자신의 독일어 실력을 실제보다 과대평가 하였고, 자신을 독일인으로 인정하는 대안당에 열렬히 환호했다. 다른 이주민 집단을 배제해야 한다면 적극적으로 찬성했다. 차별화를 이용한 배제 전략을 기꺼이 취하고, 준거 집단의 영향력을 강력하게 유지하는데 동의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독일 정부는 이주민 사회통합이라는 난제를 앞두고 있다. 이들을 포함해 다양한 출신의 이주민들을

수용하고 이들과 함께 할 사회를 구상해야 한다. 이주민 유입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대한민국 역시 마찬가지다. 앞으로도 다양한 이주민 집단에 대한 과학적 분석이 중요해질 것이다. 이주민과 현지인의 구분이 없어지는 이 시대에는 더욱 그렇다.

참고문헌

국문 자료

- 고상두. 2012. “이주민 통합 모델 비교분석: 네덜란드, 독일, 한국의 사례”. 『한국정치학회보』 46(2), 241-264.
- 구춘권. 2012. “이주의 증가와 독일 이주민정책의 변화”. 『국제지역연구』 21(1), 119-154..
- 박채복. 2007. “독일의 이주민정책 : 사회적 통합과 배제의 딜레마”. 『한독사회과학논총』 17(1), 293-319.
- 전용주. 2017. “유권자 투표 행태의 변화”. 『현대사광장』 10, 42-61.
- 전용주·차채권·김은미. 2007. “정치 사회화와 정치성향 형성에 관한 연구”. 『한국 정당학회보』 6(2), 97-131.
- 최정애. 2018. “독일 극우정당 부상 배경: 유로화, 이주민 요인을 중심으로”. 『OUTHOPHIA』 33(1), 39-67.

독문 및 영문 자료

- Baier, Dirk, Christian Pfeiffer, Susann Rabold, Julia Simonson and Cathleen Kappes. 2010. “Kinder und Jugendliche in Deutschland: Gewalterfahrungen, Integration, Medienkonsum”. *Forschungsbericht Nr. 109*. Kriminologisches Forschungsinstitut Niedersachsen.
- Bayerischer Rundfunk. 2017. “Die Verführbaren? - Russlanddeutsche vor der Wahl - BR Fernsehen”. *Bayerischer Rundfunk*, September 14.
- Berelson, Bernard, Paul F. Lazarsfeld and William N. McPhee. 1954. *Voting*.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Blätte, Andreas, Simon Gehlhar, Jan Gehrmann, Andreas Niederberger, Julia Rakers, Eva Weiler. 2018. “Migrationspolitik im Bundestagswahlkampf 2017- Die Kluft zwischen Entscheidungs- und Darstellungspolitik”. Merctor Forum Migranten und Demokratie; Technischen Universität Dresden. *Policy paper* 2018-2, 363-387.
- Campbell, A., P. E. Converse, W. E. Miller and D. E. Stokes. 1960. *The American Voter*.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Die Linke. 2017. “Wahlprogramm 2017”.
- Easton, David. 1953. *The Political System: An Inquiry into the State of Political*

- Science* New York: Alfred Knopf.
- Farrell, David M. 1997. *Comparing Electoral Systems*. New York: Prentice Hall.
- Focus. 2017. "Russlanddeutsche wenden sich von CDU ab - jetzt wirbt die AfD um sie". *Focus*, August 26.
- Goerres, Achim, Spies Mayer, C. Dennis and J. Sabrina. 2018a. "Immigrant Voters against their Will? A Focus Group Analysis of Identities, Political Issues and Party Allegiances among German Resettlers during the 2017 Bundestag Election Campaign". *Journal of Ethnic and Migration Studies*.
-
- _____. 2018b. "How did Immigrant Voters Vote at the 2017 Bundestag Election?" First Results from the *Immigrant German Election Study*.
-
- _____. 2017. "The 'Most German' Voters? A Focus Group Analysis of Identities, Political Issues and Allegiances to the Right among Ethnic Germans from the Soviet Union before the 2017 Bundestag Election". Paper to be presented at the Council for European Studies Annual Conference in Glasgow, July 12-14.
- Grachtrup, Bettina and Katja Korf. 2017. "CDU und AfD kämpfen um Russlanddeutsche". *Schwäbische Zeitung*, September 6.
- Handelsblatt. 2017. "Kanzlerin Merkel grundsätzlich für Aufhebung". *Handelsblatt*, September 8.
- Frank, Fabian. 2011. *Soziale Netzwerke von (Spät-)Aussiedlern: eine Analyse sozialer Unterstützung aus sozialarbeiterischer Perspektive*. Freiburg: Centaurus.
- Ireland, Patrick. 2000. "Die politische Partizipation der Einwanderer in Westeuropa: Die Macht der Institutionen." in *Europäische Politikwissenschaft: Ein Blick in die Werkstatt*, edited by Jan W. van Deth and Thomas König, 249-280. Frankfurt/New York: Campus.
- Roppert, Manuela. 2017. "Die Verführbaren?: Russlanddeutsche vor der Wahl". *BR Fernsehen*, September 8.
- Stricker, Gerd. 1997. *Deutsche Geschichte im Osten Europas: Russland*. München: SiedlerVerlag.

- Strijbis, Oliver. 2014. "Migration Background and Voting Behavior in Switzerland: A Socio Psychological Explanation". *Swiss Political Science Review* 20(4), 612 - 631.
- Michon, Laure, Jean Tilie and Anja Von Heelsum. 2007. *Political participation of migrants in the Netherlands since 1986*. Institute for Migration and Ethnic Studies; Universiteit van Amsterdam.
- Vogelgesang, Waldemar. 2008. *Jugendliche Aussiedler: Zwischen Entwurzelung Ausgrenzung und Integration*. Weinheim und München: Juventa Verlag.
- Worbs, Susanne, Eva Bund, Martin Kohls and Christian Babka von Gostomsk. 2013. *"(Spät-)Aussiedler in Deutschland"*. Bundesamt für Migration und Flüchtlinge.
- Wüst, M. Andreas. 2004. "Naturalised citizens as voters: behaviour and impact". *German Politics* 13(2), 341-359.

인터넷 및 기타 자료

- Bundesverwaltungsamt(www.bva.bund.de) (2019/7/1 검색)
- Russlanddeutsch für die AfD NRW. <https://russlanddeutsche-afd.nrw> (2019/4/18 검색)
- "Landesnetzwerk Spätaussiedler und Heimkehrer gegründet". *CDU Baden-Württemberg*
<https://www.cdu-bw.de/presse/landesnetzwerk-spaetaussiedler-und-heimkehrer-gegruendet/>
(2020/5/20 검색)

Abstract

**The Party Preference of German Voters with
Migration Background
: Focus on the case of Aussiedler**

Jeong-ae Choi ■ Korea Development Institute

In recent years, with increase of the number, immigrants integration has become an important social issue in Germany. As of the second half of 2019, 9% of the total population of Germany, or 6.3 million, were immigrants from abroad. Further, as the second and third generation of immigrants has come to center of German society, influence of migrants as voters is also growing. In this situation, the support rate to a party who deals strongly with migrants issues is continue to rise.

This research uses the qualitative analysis methodology based on anthropological study, which stresses party identification for interpretation on voting behavior. As a research case, immigrants from the former Soviet Union (Aussiedler) who are often discussed for social integration of Germany were selected. This paper firstly argues the factors such as 'transfer', 'differentiation' which were importantly considered by the researchers are losing the influence. Then, we handle 'contact' factor which should be importantly considered for further studies. In short, this paper examines the party preferences of migrants, one of significant variables in German politics. This research theoretically contributes to migrants studies, and give us an opportunity to think of coexistence with migrants in our society at the same time.

Key Words: German migrants, party preference, German politics, Aussiedler, party identification

고객만족지수 1위의 명성과 기업성과와의 관계*

김용현 ■ 한양사이버대학교**

김남곤 ■ 동덕여자대학교***

〈국문요약〉

본 논문의 목적은 “고객만족도가 높은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성과는 과연 좋을까?”라는 주제를 실증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에서 발표하는 ‘한국산업에서 고객만족도(KCSI) 조사 결과’에서 1위로 선정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2008~2018년의 11년의 장기간에 걸쳐 전체기간별로 분석하는 한편, 경기국면을 확장기(호경기)와 수축기(불경기)로 분류하여 기업성과를 분석하였다.

기업성과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측정하였다. 첫 번째는 주식수익률(stock returns)로 연말 종가와 연초 종가를 비교한 EBR과 보유기간 수익률(BHAR)을 이용하였다. 두 번째는 영업성과(operating performance)로 총자산대비 감가상각전 영업이익을 사용하였고, 세 번째는 토빈큐(Tobin's Q)로 총자산대비 보통주 시장가치와 우선주 시장가치 및 총부채 장부가치를 합산한 것을 사용하였다. 표본기업인 KCSI 1위 기업의 성과를 단순히 업종평균 성과나 전체평균 성과와 비교하는 조악한 방법을 피하기 위하여, Barber and Lyon(1996 & 1997)의 조사방법론에 의거하여 선정된 매칭(matching)기업과 비교하였다.

전체기간의 연도별 결과로, 고객만족도 1위 기업은 비교기업에 비하여 세 가지 기업가치 측정치인 주식수익률과 영업성과 및 토빈큐 모두 비유의적인 결과를 보였다. 경기국면별 결과로, 고객만족도 1위 기업의 성과(주식수익률, 영업성과, 토빈큐)는 비교기업에 비하여 경기확장기 뿐만 아니라 경기수축기에도 통계적 차이가 없었다.

내생성 통제를 위해 1기간 시차의 랜덤효과모형을 이용한 결과에서도, 고객만족도 우수기업 선정여부는 기업성과인 토빈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을 발견하였다. 고객만족도 우수기업이라는 것은 기업명성(reputation)이라는 무형자산(intangible assets)에 속하는 것인데, 본 실증결과는 현존하는 재무·회계 시스템에 무형자산 가치

* 자료정리에 많은 도움을 준 한양사이버대학교 경영대학원(Finance & Accounting MBA)의 윤효상 조교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 주저자, 한양사이버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E-mail: yhkim@hycu.ac.kr)

*** 교신저자, 동덕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E-mail: fencer@dongduk.ac.kr)

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외국문헌의 이론적 주장과 부합하며 외국의 일부 실증 연구와 일치하는 것이다. 이는 자본시장에서 투자자들은 기업의 고객만족 요소 보다 투자결정, 자본조달결정, 배당결정, 기업인수 및 합병 등의 요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고객만족도 1위로 선정된 결과를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연결시키면 기업의 광고효과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주식수익률 같은 기업성과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어 유사연구인 박진우·조장은(2015) 및 길재욱 외(2017)와 일맥상통하였다.

*주제어: 고객만족, 무형자산, 기업성과, 경기국면, 내생성

I. 서 론

최근 많은 기업들이 고객만족(customer satisfaction)을 경영이념의 하나로 채택하며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많은 투자와 노력을 하고 있다. 그 이유로 고객이 만족하면 고객의 가격민감도 감소, 기업의 원가감소 실현, 실패비용 감소, 신규 고객 유치비용의 감소, 재구매 증가 등으로 인하여 결국 기업성과를 향상시킨다는 것이다(Capraro & Srivastava 1997; Fornell 1992; 이유재 2000). 고객(소비자) 관점에서는 ‘고객만족 우수기업’이라는 광고나 선전을 통하여 기업의 관심도 및 호감도가 제고되어 해당기업의 제품을 구입할 수 있으며, 제품사용 경험을 SNS 등을 통하여 다른 소비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업 관점에서는 ‘고객만족 우수기업’이라는 명성이 기업의 이미지와 경쟁력에 직결될 수 있고 기업성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적 틀을 넘어서 2000년을 전후하여 고객만족과 기업성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분석하는 논문이 출현하였다. 고객만족과 기업성과에 대한 해외 실증연구는 고객만족 우수기업 선정·발표를 기준으로 하는 단기 공시효과와 고객만족지수에 따르는 장기 주식성과를 연구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인 고객만족 선정사건에 관한 공시수익률은 비유의적(Ittner & Larcker 1998; Fornell et al. 2006)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는데, 이는 고객만족 같은 무형자산 정보는 재무·회계 시스템에서는 신속하게 반영되지 못한다는 많은 기존 연구와 일치한

다. 후자인 고객만족이 장기 주식성가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 효과(Anderson et al. 2004; Gruca & Rego 2005; Fornell et al. 2006; Aksoy et al. 2008)와 비유 의적(Jacobson & Mizik 2009; Ittner et al. 2009; O'Sullivan et al. 2009) 결과가 혼재되어 있는데, 그 이유로 분석목적의 불일치, 시장 환경의 불일치, 분석대상 (산업)과 분석기간의 상이함, 조사방법론의 차이 등을 들 수 있다.

고객만족에 대한 국내 연구로 공시효과에 대한 것은 김주완·백재승(2019) 뿐 이고, 기업성과에 관한 연구는 다수 존재하는데 긍정적 효과를 발견한 것이 우 세한 편이다. 예컨대 안태식·김완중(2000)과 박상준·김현철(2003)은 고객만족과 기업성과가 관계없다는 것을 발견하였지만, 전인수·김현정(2005), 이유재·이청림 (2006), 이유재 외(2008), 정혜영·임대규(2010) 그리고 김주완·백재승(2019)은 고객 만족의 긍정적 효과를 발견하였다. 본 주제와 유사하게 조사지수나 지표(혹은 이 벤트)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박진우·조장은(2015)과 길재욱 외 (2017)는 히든챔피언 선정이 장단기 주식성가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하 였다. 고객만족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국내연구는 거의 회계적 성과 를 다루었고, 자본시장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성과를 분석한 논문은 매우 희귀하 여 이에 관한 필요성이 제기된다. 회계적 성과는 양적 수치(quantitative) 정보인 재무제표에 근거하며, 과거인 결산일까지의 경영성과를 보여주는데 반해, 자본시 장에 근거한 성과는 양적 수치 뿐만 아니라 질적(qualitative) 정보에 반영하며 미래 성과를 보여준다고 알려지고 있다(예로써, 주가는 선행한다). 또한 회계적 성과는 내부경영자의 자의적 결정을 많이 반영하지만 자본시장 성과는 기업외부 인 증권시장에서 수많은 기관투자자와 개인투자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된 결 과라는 차이점이 있어, 후자를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재무금융분야에서 자본시장을 기반으로 하는 연구를 살펴보면 초기에는 단기 효과인 공시수익률을 주로 분석하였는데, 1990년대 중반부터는 장기 주식수익률 을 조사하는 것이 보편화되었다(Spiess & Affleck-Graves 1995; Loughran & Ritter 1995). 이후 장기적인 영업성과를 분석(McLaughlin et al. 1996; Loughran & Ritter 1997)하는 연구와 함께 토빈큐(Tobin's Q)도 분석(Demsetz & Villalonga 2001; Wei et al. 2005)하는 논문이 계속 나오고 있다. 국내에서도 기 업성과를 측정할 때 주식수익률 뿐만 아니라 영업성과와 토빈큐를 분석하는 논 문이 많아지고 있다. 예컨대 국내에서 윤평식(1999)과 김병기·공명재(2000)는 유 상증자에 따른 장기 주식수익률 및 영업성과를 분석하였고, 최정호(1994) 및 김 주완·백재승(2019)은 토빈큐를 이용하여 기업성과를 측정하였다. 그러나 '고객만 족' 분야에서 이러한 분석이 국내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본 논문은

기업성과를 분석할 때 주식수익률 뿐만 아니라 영업성과 및 토빈큐를 조사할 것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고객만족 요소를 직접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고객만족지수 1위로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2008~2018년 동안의 기업성과(firm performance)를 실증분석한다. 고객만족 1위 기업은 한국능률협회컨설팅(Korea Management Association Consulting, KMAC)이 개발하여 발표하는 KCSI (Korean Customer Satisfaction Index)¹⁾ 자료에서 추출하였다. 기업성과의 대용치로 주식수익률(stock returns) 뿐만 아니라 영업성과(operating performance) 및 토빈큐(Tobin's Q)의 세 가지를 모두 이용하는데, 이와 같이 분석한 논문은 저자가 아는 한 '고객만족' 분야에서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본 논문은 경기확장기와 경기수축기라는 경기국면에 따라 기업성과를 분석할 것이고, 고객만족에 따르는 내생성문제를 고려하는 패널모형을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는 특징이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고객만족' 분야에서 기존의 연구를 찾아보고, 제3장에서는 데이터와 연구방법론에 대하여 설명한다. 제4장에서는 실증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마지막인 제5장에서는 결론과 한계점을 제시한다.

II. 기존연구

과거에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시장을 주도하였는데, 지금은 고객이 이끄는 수요중심으로 시장이 변모하였고, 고객면에서도 단순하고 기본적인 니즈측면에서 다양화와 개성화 및 차별화되는 니즈(needs)측면으로 변모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영환경의 변화에서 고객이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하는 시대가 도래하여, 고객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기업은 경쟁에서 도태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따라 고객만족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가 다양한 방면으로 수행되었다. 본 논문의 연구분야는 고객만족의 개념 정립이나 고객만족도의 측정이나 지수개발 등

1) 우리나라의 대표적 고객만족지수로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개발한 KCSI 외에 한국생산성본부가 개발한 National Customer Satisfaction Index(NCSI)와 한국표준협회가 개발한 Korea Standard Service Quality Index(KS-SQI)가 있다. 이 가운데 KCSI는 개발시점이 1992년으로 가장 빠르고(NCSI는 1998년, KS-SQI는 2000년), 라선아·이유재(2015)의 기존연구 정리에서 나타났듯이 국내 고객만족과 경영성과에 관한 실증연구 분야에서 가장 많은 이용 빈도수를 보이고 있다.

에 관한 것이 아니라 고객만족도와 기업성과의 연관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고객만족과 기업성과에 대한 국외 실증연구는 크게 보아 고객만족 우수기업 발표시점을 전후로 하는 단기 사건연구(event study)와 고객만족지수를 이용한 장기 주식성과 연구라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사건연구에 대한 실증연구는 비유의적(Ittner & Larcker 1998; Fornell et al. 2006)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는데, 그 이유로 주식시장이 이미 고객만족이라는 정보를 공시 이전에 흡수하여 반영하였거나 고객만족이라는 비재무적인 정보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Daniel & Titman(2006)은 무형자산 정보가치에 대하여 자본시장이 신속하고 충분하게 반영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무형자산인 연구·개발(R&D)에 대하여 분석한 Chan et al.(2001) 및 Eberhart et al.(2004)은 정확한 가격이 반영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Hauser et al.(1994)은 고객만족도 같은 마케팅자산(marketing assets) 정보 역시 R&D 정보가치와 비슷하게 현재의 회계·재무 시스템에서는 잘 반영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한편 고객만족의 장기 주식성과에 대한 연구는 긍정적 효과와 비유의적 결과가 혼재되어 있다. 예컨대 Anderson et al.(2004)에 의하면 고객만족이 토빈큐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는 것을 발견하였고, Gruca & Rego(2005)는 고객만족이 미래 현금흐름을 증가시키고 변동성을 감소시켜 결국 주주가치를 극대화시킨다고 하였다. 또한 Fornell et al.(2006)은 고객만족도가 높은 기업들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를 대상으로 6년간 롱숏투자전략을 구사한 결과, DJIA와 S&P 500 보다 주식성과가 월등하게 좋은 것을 발견하였다. Aksoy et al.(2008) 역시 고객만족도가 높은 기업들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에 대하여 CAPM과 Fama-French 3요인모형 및 Carhart 4요인모형을 적용한 결과 주식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Jacobson & Mizik(2009)은 고객만족도가 높은 기업들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를 산업별로 분류하여 조사한 결과 긍정적(+)효과는 IT산업에서만 나타나고 나머지 대다수 산업에서는 긍정적 영향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하였고, Ittner et al.(2009) 및 O'Sullivan et al.(2009)의 연구 역시 비유의적인 결과를 발견하였다. 이와 같이 실증결과가 다른 이유로 분석목적의 불일치, 시장환경(국가)의 상이함, 분석대상(산업)과 분석기간의 상이함, 조사방법론의 차이 등을 들 수 있다. 예로써 동일한 미국시장을 분석했는데도 Fornell et al.(2006)은 롱숏투자전략의 조사방법론을 이용하여 월등한 주식성과를 발견한 반면, Ittner et al.(2009)과 O'Sullivan et al.(2009)은 Fama-French 3 요인모형의 조사방법론을 이용한 결과 비유의적인 주식성과를 발견하였다.

고객만족에 대한 국내 연구는 공시효과는 김주완·백재승(2019) 뿐이고, 기업성과에 관한 연구는 긍정적 효과를 발견한 것이 우세하다. 전자인 공시효과 연구로 김주완·백재승(2019)은 고객평판 지수인 NCSI와 K-BPI에서는 정(+)의 공시수익률이 나타났으나 KCSI에서는 그렇지 않게 나타나 일관성이 결여되었다. 후자인 기업성과의 연구로 안태식·김완중(2000)은 분석결과 은행고객의 우수한 평가는 재무성과와 무관하다고 하였고, 박상준·김현철(2003)은 고객만족 지표(NCSI)를 이용하여 기업성과를 분석한 결과 비유의적인 현상을 발견하였다. 이와는 반대로 전인수·김현정(2005)은 고객만족 지표(KCSI)가 매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였고, 이유재·이청림(2006) 및 이유재 외(2008)는 고객만족 지표(KCSI)가 기업의 수익성과 기업가치에 긍정적 효과를 끼치는 것을 발견하였다. 정혜영·임대규(2010)은 고객만족 지표(NCSI)가 주주지분가치(Market Value of Equity)와 기업가치(토빈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였고, 김주완·백재승(2019) 역시 고객만족지표(NCSI, K-BPI, KCSI)와 토빈큐는 긍정적 관계에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박상준·김현철(2003)은 기업성과의 대용치로 시장점유율(market share)을 이용하였는데, 시장점유율은 기업성과가 아니라 기업특성변수로 간주되는 것이 보통이다. 전인수·김현정(2005)은 매출성장률과 매출액이익률 및 총자산이익률을 분석하였는데, 이는 모두 회계적 성과이다. 이유재·이청림(2006) 및 후속연구인 이유재 외(2008)는 기업의 수익성을 총자산이익률인 회계적 성과로 측정하였고 기업가치를 경제적 부가가치(Economic Value Added, EVA)로 측정하였는데, 이는 재무분야의 실증연구에서 사용하는 측정치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김주완·백재승(2019)은 기업성과를 분석할 때, 본 논문과는 달리 이론적 배경이나 설명없이 비교기업을 선정하였으며, 역시 본 논문과는 달리 패널회귀분석을 이용하지 않았다.

이상에서 보듯이 국내연구는 회계적 성과를 주로 분석하였고, 자본시장을 반영한 연구는 정혜영·임대규(2010)와 김주완·백재승(2019)으로 극히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기업성과를 자본시장에서 대표적으로 측정하는 주식수익률 등에 대한 실증분석이 부족하여 이에 관한 필요성이 제기된다. 고객만족도가 높다고 알려지면 그 기업의 광고·선전측면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자본시장에서 나타나는 기업성과는 고객만족도 보다도 설비자산에 대한 투자결정(investment decision), 주식이나 채권발행에 의한 자본조달결정(financing decision), 배당의 증감이나 자사주정책(dividend decision), 기업인수 및 합병(M&A), 획기적인 제품이나 디자인(예를 들어 제약업종에서 신약개발) 등

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더 받는 것이 현실이다.

한편 경기확장기(호경기)와 경기수축기(불경기)라는 경기국면에 따라, 자본시장에서 나타나는 공시효과(Choe et al. 1993; 조지호·김용현 1996), 펀드성과(Kosowski, 2011), 기업의 투자결정 및 자본조달결정(이동원·조재호 2016) 등이 달라진다는 것이 국내외적으로 발견되었다. 이것은 실증결과가 기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연구기간을 호경기와 불경기 국면 등으로 나누어 조사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는데, 이는 기존연구에서 볼 수 없었던 것이다. 예컨대 조지호·김용현(1996)은 주식수익률이 경기국면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는 현상을 발견하여 수많은 외국연구와 비슷함을 보였는데, 본 연구기간과 유사한 김주완·백재승(2019)은 이러한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또한 후술하겠지만 회귀분석시 내생성문제를 고려하는 패널모형을 이용하여 고객만족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것인데, 이 역시 기존연구에서는 없는 것이다.

요약하여 본 논문의 목적은 장기간에 걸쳐 고객만족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인데, 기업성가로 주식수익률 뿐만 아니라 영업성과 및 토빈큐라는 다양한 측정치를 이용한다. 전체기간 뿐만 아니라 경기확장기와 경기수축기로 분류하여 조사하며, 고객만족요인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패널회귀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III. 자료와 연구방법

1. 데이터

본 연구에서는 고객만족의 대용치로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개발한 고객만족지수인 KCSI(Korean Customer Satisfaction Index)를 사용하였다. KCSI는 1992년에 처음 발표되었으나 1996년까지는 업종이나 기업숫자가 매우 제한적이었다가 1997년에 공공서비스 업종을 추가하였고, 2000년 이후에 대폭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기간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의 11년이다.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 의하면 KCSI 지수는 전반적 만족도 30%, 요소 만족도(산업별 특성 고려) 50%, 재이용(구입) 의향률 20%를 반영하여 산출된다. 전반적 만족도는 설문지상의 전반적인 만족정도를 묻는 질문에 ‘매우 만족’과 ‘만족’에 응답한 비율(Top2 비율)이다. 요소만족도는 $\sum C_i \cdot W_i$ 로 표시하는데, C_i 는 i 번째

세부요소의 TOP 2 비율이고 W_i 는 i 번째 세부요소의 중요도 가중치이다. 재이용(구입)의향율은 향후 재이용(구입) 의향을 묻는 문항에서의 Top 2 비율을 의미한다(한국능률협회컨설팅 홈페이지 자료).

연구대상기업은 12월 결산법인 중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기업 또는 코스닥에 등록된 법인 중 제조업체로 제한한다. 따라서 재무제표 구조나 회계처리방법이 다른 서비스업종이나 금융업종 및 기업성격을 산출하기 어려운 공공서비스 업종은 제외한다. 또한 기업의 인수와 합병이나 계열사로 분리나 분할된 경우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자료를 적용한다. 12월 결산기업의 재무제표 자료는 차기연도 3월 이후에 공시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차기연도에 발표되는 고객만족도 지수를 당해연도 고객만족 수준으로 사용한다. <표 1>은 KCSI 1위로 선정된 기업을 연도별로 표시한 것이다.

〈표 1〉 연도별 KCSI 1위 기업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기업 수	21	21	20	20	24	21	22	20	22	21	20

표는 매년 20~22개의 표본기업 숫자를 보이고 있다. 후술하겠지만 자료의 숫자가 적으므로 모수(parametric) 검정 뿐만 아니라 비모수(non-parametric) 검정을 함께 사용하여 실증분석의 강건성을 제고하였다.

2. 경기국면의 분류

1) 통계청의 분류

<표 2>는 통계청이 분류한 경기순환국면으로 우리나라의 제1 순환기(1972년 3월~1975년 6월)부터 제 11순환기까지 발표되었지만, 본 연구기간이 관련된 부분을 발췌한 것이다. 표는 2019년 10월 시점의 정보에 기초한 것으로, 최근 경기정점을 2017년 9월이라고 정부(기획재정부)는 발표하였다. 이번 경기 전환점 설정은 경기지표와 경제성장률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잠정적으로 내려진 결정이고, 최종 확정에는 오류가 없음이 확인된 뒤 나중에 이뤄지지만 그대로 굳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기초하였다.

〈표 2〉 통계청의 경기순환국면

	기준순환일			지속기간 (개월)		
	저점	정점	저점	확장기	수축기	순환기
⋮	⋮	⋮	⋮	⋮	⋮	⋮
제9 순환기	2005년 4월	2008년 1월	2009년 2월	33	13	46
제10 순환기	2009년 2월	2011년 8월	2013년 3월	30	19	49
제11 순환기	2013년 3월	2017년 9월				
⋮	⋮	⋮	⋮	⋮	⋮	⋮

2) 본 연구의 분류

기업성과의 대응치인 영업성과(Operating Performance, OP)와 토빈큐(Tobin's Q, TQ)자료는 월간(monthly)이나 계간(quarterly)자료가 아닌 연간(yearly)자료만 존재하므로, 분석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식수익률(Stock Return, SR)도 연간단위로 조사하였다. 월별단위로 구분한 통계청의 경기순환국면을 이용하여 본 논문의 표본기간(2008~2018년)을 확장기와 수축기로 분류하되, 연도별로 분류한 것이 <표 3>이다.

〈표 3〉 본 연구의 경기국면 분류

	통계청 분류 (연도와 월별)					본 연구 (연도)
확 장 기		2009년 2월 ⋮ 2011년 8월		2013년 3월 ⋮ 2017년 8월		2009년, 2010년, 2011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수 축 기	2008년 1월 ⋮ 2009년 2월		2011년 8월 ⋮ 2013년 3월		2017년 8월 ⋮	2008년, 2012년, 2018년

표에서 2009년은 통계청 분류의 수축기에 2개월 속하지만 확장기에 10개월 속하여, 본 연구는 확장기로 분류하였다. 마찬가지로 2011년과 2017년은 통계청 분류의 수축기에 8개월 속하지만 확장기에 2개월 속하여, 본 연구는 수축기로 분류하였다.

3. 기업성과의 측정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분류한 세그먼트(segment)²⁾에서 KCSI 1위 기업과 이에 매칭(대응)시킨 벤치마크의 장기적 기업성과(주식수익률, 영업성과, 토빈큐)를 차례로 분석한다. KCSI 1위 기업의 성과를 단순히 업종평균 성과나 전체평균 성과와 비교하는 조악한(crude) 방법보다는 기업규모와 시장가치/장부가치 등에서 비교가능한 매칭기업(comparable firm 혹은 matching firm)의 성과와 견주는 것이 적절한 방법일 것인데, 이에 대한 것은 후술한다.

1) 주식수익률

주식수익률(stock return, SR)은 두 가지 방법으로 측정하였는데, 첫 번째는 연말(end of year)종가와 연초(beginning of year)종가를 비교한 EBR이다.

$$EBR_{i,t} = (\log P_{i,t} - \log P_{i,t-1}) \times 100$$

두 번째는 한국증권시장에서 사건연구를 위한 가장 적합한 장기 수익률은 BHAR이라고 Jung(2008)이 제시함에 따라, 본 연구는 보유기간 수익률(BHAR)도 사용하였다. BHAR은 KCSI 1위 기업의 주식수익률에서 매칭(대응)한 기업의 주식수익률을 차감한 매년 수익률로 다음의 식을 이용하였다.

$$BHAR_{i,t} = \prod_{t=1}^T (1 + R_{i,t}) - \prod_{t=1}^T (1 + R_{b,t})$$

위 식에서 R_i 는 KCSI 1위 기업의 주식수익률, R_b 는 매칭기업의 주식수익률을 각각 나타낸다.

2) 자세한 세그먼트 분류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 홈페이지의 자료에 있다.

주식초과수익률은 KCSI 1위 기업의 주식수익률에서 대응(매칭)기업의 주식수익률을 차감한 값인데, 대응기업 선정은 Barber & Lyon(1997)이 제시한 기업규모와 시장가치/장부가치(market value/book value, MB) 접근법에 의거하였다. 대응기업은 ① 표본년도에 KCSI 1위 기업의 보통주 시장가치(market value of equity)의 $\pm 30\%$ 에 속하고, ② KCSI 1위 기업의 MB 비율과 가장 가까운 기업으로 선정하였다(Bae et al. 2002).

2) 영업성과

영업성과(OP)의 측정치로 영업이익(Hansen & Crutchley 1990), 순이익(Healy & Palepu 1990) 등이 사용되었으나, Barber & Lyon(1996)은 영업성과를 측정하는 가장 적절한 변수는 총자산대비 감가상각전 영업이익(EBITDA/TA)이라고 제시함에 따라, 본 연구는 이 변수를 이용하였다.

$$\text{영업성과(OP)} = \frac{\text{감가상각전 영업이익(EBITDA)}}{\text{총자산(TA)}}$$

따라서 초과영업성과는 표본기업의 총자산대비 감가상각전 영업이익(EBITDA/TA)에서 대응(매칭)기업의 그것을 차감한 값이다. 대응기업은 ① 표본년도에 표본기업의 총자산 장부가치(book value of total assets)의 $\pm 30\%$ 에 속하고, ② 표본기업의 영업성과와 가장 가까운 기업으로 선정하였다(Bae et al. 2002).

3) 토빈큐

토빈큐(TQ)는 Chung & Pruitt(1994)의 방법을 이용하여 (보통주 시장가치+우선주 시장가치+총부채 장부가치)/(총자산 장부가치)로 산출하였다.

$$\text{토빈큐(TQ)} = \frac{\text{보통주 시장가치} + \text{우선주 시장가치} + \text{총부채 장부가치}}{\text{총자산}}$$

위와 동일한 논리로 초과토빈큐는 표본기업의 토빈큐에서 매칭(대응)기업의 그것을 차감한 값이다. 즉 대응기업은 ④ 표본년도에 표본기업의 총자산 장부가치의 $\pm 30\%$ 에 속하고, ⑤ 표본기업의 토빈큐와 가장 가까운 기업으로 선정하였다. Barber & Lyon(1997)은 매칭기업 선정시 산업은 고려하지 않았는데, Loughran & Ritter(1995)는 산업을 고려하는 것이 오히려 기업성과 측정능력을 감소시키며 동일기업이 매칭기업으로 중복 선정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표 4>는 표본기업의 주식시장가치(market value of equity, MVE), 총자산 장부가치(book value of total assets, TA), 주식수익률(EBR), 영업성과(OP), 토빈큐(TQ)에 관한 기초통계량을 보여준다.

〈표 4〉 표본기업의 기초통계량

	평균값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보통주 시장가치(MVE) (백만원)	16,963,495	48,818,837	18,007	328,942,963
총자산 장부가치(TA) (백만원)	15,469,624	38,060,625	85,670	219,021,357
주식수익률(EBR)	0.02098	0.29886	-0.98385	0.73971
영업성과(OP)	0.10611	0.07344	-0.08831	0.38722
토빈큐(TQ)	1.72282	1.33263	0.40794	6.87388

2008~2018년 동안에 KCSI 1위로 선정된 표본기업의 보통주 시장가치는 약 16조 9천 6백억원, 총자산 장부가치는 약 15조 4천 7백억원이었다. 또한 표본기업의 주식수익률(EBR)과 영업성과(OP) 및 토빈큐(TQ)는 평균적으로 2.098%와 10.611% 및 1.723으로 나타났다.

4. 패널회귀분석

실증결과의 타당성 확보 및 강건성 제고를 위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한다. 현실적으로 기업성과에 영향을 주는 모든 변수들을 완벽하게 포함시키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므로, 복수 이상의 모형을 설정하여 회귀분석을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시간에 걸친 기업의 특성을 나타내는 패널 데이터를 사용하는데, 횡단면적 특성과 시계열적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패널

자료는 패널회귀분석을 사용해야 한다.

고객만족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패널회귀모형을 이용하는데 내생성(endogeneity)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즉 고객만족으로 인하여 기업성과가 향상될 수 있지만, 기업성과가 원래 우수한 관계로 고객만족도가 높을 수 있는 인과관계(causal relationship)가 대두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내생성문제가 발생되는데 이를 완화하기 위해 시차를 이용하거나, 고객만족도와는 관련이 있되 기업성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적절한 도구변수를 찾아내는 2단계 회귀분석(2SLS)을 이용하는 등의 조사방법론을 사용할 수 있다.

본 연구와 같이 시계열이 길지 않고 적절한 도구변수를 찾기 난해한 경우에는 1기간 시차방법을 많이 이용하므로(김영식·위정범, 2011), 여기에서도 1기간 시차인 패널회귀모형을 사용하기로 한다. 토빈큐를 분석한 국내연구인 정혜영·임대규(2010) 및 김주완·백재승(2019)과 비교하기 위하여 기업성과 측정치 중 토빈큐를 분석하기로 하는데, 아래 모형과 같다. 종속변수(TQ)는 토빈큐이고 설명변수(DUM)는 KCSI 1위 기업 여부이며, 국내외 기존연구에 근거하여 기업규모(SIZE), 수익성(PRO), 연구개발비(RD), 광고선전비(ADV), 기업연령(AGE)을 통제변수로 선정하였다.

$$TQ_{i,t} = \beta_0 + \beta_1 DUM_{i,t-1} + \beta_2 SIZE_{i,t-1} + \beta_3 PRO_{i,t-1} + \beta_4 RD_{i,t-1} + \beta_5 ADV_{i,t-1} + \beta_6 AGE_{i,t-1} + \epsilon_{i,t}$$

이 모형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DUM(더미변수)으로 KCSI 1위로 선정된 기업이면 1, 그렇지 않은 매칭기업이면 0을 부여하였다. 고객만족도 1위 기업이라는 정보 가치가 기업성과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값을 보일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비유의적인 값을 보일 것이며, 반대로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값을 보일 것이다.

통제변수(control variables)는 기업성과인 토빈큐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특성적인 변수인데, 각 변수의 측정치와 근거한 기존연구는 각각 다음과 같다. 기업규모(SIZE)는 보통주 시가총액의 로그값으로 측정하였는데, 기업규모가 크면 규모의 경제로 인해 기업성과가 우수할 수 있다. 대체로 기업규모가 크면 거래비용과 정보취득비용이 낮아져 결국 정보비대칭이 감소하므로 기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정혜영·임대규 2010; Anderson et al. 2004). 수익성(PRO)은 당기순이익/총자산으로 측정하였는데, 이론적으로 볼 때 수익성이 좋으면 기업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Ittner & Larcker 1998; 정혜영·임대규 2010). 연구개발비(RD)는 (연구개발비+경상연구비)/매출액으로 측정하였다(Gruca &

Rego 2005). 연구개발비는 기업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Eberhart et al. 2004), 비유의적인 영향도 발견되어(최정호 1994; 김병기 2009) 다소 일관성이 결여된다. 광고선전비(ADV)는 (광고선전비+판매촉진비)/매출액으로 측정하였는데, 기업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정혜영·임대규 2010; Gruca & Rego 2005). 마지막으로 기업업력(AGE)을 (해당 회계연도 - 기업설립연도)로 측정하였다(이유재·이청림 2006; 이유재 외 2008). 기업이 오래될수록 영업노하우 축적, 기술축적, 용이한 자금조달, 정보망구축, 유통채널 등의 우위로 기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라이프사이클(life-cycle)상 산업자체가 성숙단계(mature stage)에 이르면 좋은 투자기회를 찾기 힘들거나 쇠퇴단계(decline stage)로 접어들어 레드오션 효과로 기업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IV. 실증결과

여기에서는 KCSI 1위로 선정된 기업과 대응(매칭)기업의 기업성과인 주식수익률과 영업성과 및 토빈큐를 차례로 비교·분석하기로 한다.

1. 주식수익률 분석

전체 표본기간인 11년 동안에 걸쳐 KCSI 1위 기업과 대응기업의 기업성과인 주식수익률의 평균값에 대하여, T검정(T값)과 윌콕슨 순위부호검정(Z값)을 사용하여 비교·분석한 것이다. T검정은 모수(parametric)검정 방법이고 윌콕슨 순위부호검정은 비모수(non-parametric)검정 방법인데, 본 연구의 자료의 숫자가 적으므로 비모수검정도 함께 사용하여 강건성을 보강하였다. <표 5>와 <표 6>은 각각 주식수익률을 EBR 및 BHAR로 측정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표 5〉 KCSI 1위 기업과 비교기업의 주식수익률(EBR) 분석 (전체기간)

	KCSI 1위 기업	비교기업	T값	Z값
2008년	-23.8015	-20.3803	-0.32	0.25
2009년	27.2421	65.4846	-2.20**	2.23**
2010년	14.9048	21.1388	-0.58	-0.70
2011년	13.1191	8.9173	0.51	-0.28
2012년	3.0048	-2.7380	0.53	-1.41
2013년	2.3642	8.1950	-0.76	-0.62
2014년	15.5648	7.4944	0.57	0.31
2015년	13.8257	8.9625	0.43	-0.10
2016년	-7.1645	2.3674	-2.11*	0.84
2017년	3.1701	2.1867	0.68	-0.86
2018년	-8.4757	-10.0816	0.52	-0.45

* 10% 유의수준, ** 5% 유의수준

〈표 6〉 KCSI 1위 기업과 비교기업의 주식수익률(BHAR) 분석 (전체기간)

	KCSI 1위 기업	비교기업	T값	Z값
2008년	0.7934	0.8160	-0.64	0.44
2009년	1.6984	2.0061	-2.68**	-2.11**
2010년	1.1916	1.2659	-1.46	-0.37
2011년	1.1192	1.8173	-0.91	-0.17
2012년	1.0348	1.0738	0.53	0.27
2013년	1.0645	0.9691	1.19	-0.76
2014년	1.5648	1.0044	1.37	-1.28
2015년	1.2044	1.1970	0.20	0.15
2016년	1.7645	1.9674	-1.65	-1.42
2017년	1.0509	1.0381	-0.03	-0.87
2018년	0.9560	0.9732	-0.23	-0.41

** 5% 유의수준

KCSI 1위로 선정된 기업의 EBR은 벤치마크에 비하여, 전체기간인 11년 중 1개 연도만 통계적으로 열등하였지만 나머지 10개 연도에서는 비유의적인 결과를 보였으며, BHAR 역시 매우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이는 국내시장을 분석한 기존연구는 없어서 비교할 수 없지만, 미국시장을 대상으로 분석하여 비유의적인 주식성과를 발견한 Ittner et al.(2009) 및 O'Sullivan et al.(2009)과 일맥상통한 결론이다.

2. 영업성과 분석

<표 7>은 전체 표본기간인 11년 동안에 걸쳐 KCSI 1위 기업과 대응기업의 기업성과인 영업성과의 평균값에 대하여, T검정(T값)과 윌콕슨 순위부호검정(Z값)을 사용하여 비교·분석한 것이다.

〈표 7〉 KCSI 1위 기업과 비교기업의 영업성과 분석 (전체기간)

	KCSI 1위 기업	비교기업	T값	Z값
2008년	0.1145	0.1365	-0.19	-0.28
2009년	0.1436	0.0978	2.78**	-1.68*
2010년	0.1274	0.1297	-0.35	0.90
2011년	0.1192	0.1124	0.27	-0.09
2012년	0.1169	0.1436	-1.54	1.21
2013년	0.1026	0.1478	-1.10	0.69
2014년	0.1099	0.0903	1.03	-0.60
2015년	0.1194	0.1191	0.18	-0.13
2016년	0.0971	0.1061	-0.78	0.17
2017년	0.1235	0.0999	0.70	0.34
2018년	0.1096	0.1101	-0.07	0.02

* 10% 유의수준, ** 5% 유의수준

KCSI 1위로 선정된 기업의 영업성과는 벤치마크에 비하여, 전체기간인 11년 중 1개 연도만 통계적으로 열등하였지만 나머지 10개 연도에서는 비유의적인 결과를 보였다. 이는 KCSI 1위 기업의 성과가 대응기업에 비해 우수하지 못하다는

주식수익률 경우와 부합하는 결론이라고 할 수 있다.

3. 토빈큐 분석

<표 8>은 전체 표본기간인 11년 동안에 걸쳐 KCSI 1위 기업과 대응기업의 기업성과인 토빈큐의 평균값에 대하여, T검정(T값)과 윌콕슨 순위부호검정(Z값)을 사용하여 비교·분석한 것이다.

〈표 8〉 KCSI 1위 기업과 비교기업의 토빈큐 분석 (전체기간)

	KCSI 1위 기업	비교기업	T값	Z값
2008년	1.2685	1.1849	0.82	-0.40
2009년	1.6075	1.7179	0.15	0.29
2010년	1.7851	1.9699	-0.37	0.73
2011년	1.6734	1.8436	-0.11	-0.09
2012년	1.8372	1.9746	0.39	0.23
2013년	1.7289	1.8347	-0.32	-0.05
2014년	2.0743	1.5724	1.73	-0.15
2015년	2.1320	2.1722	0.87	0.22
2016년	1.9748	1.6926	0.81	-0.10
2017년	2.1610	1.7868	1.89*	-0.03
2018년	1.9063	1.8160	1.65	0.35

KCSI 1위로 선정된 기업의 토빈큐는 벤치마크에 비하여, 전체기간인 11개 연도 모두에서 비유의적인 결과를 보였다. 이 결과 역시 KCSI 1위 기업의 성과가 대응기업에 비해 우수하지 못하다는 주식수익률 및 영업성과 경우와 동일한 결론이라고 할 수 있다.

4. 경기국면별 분석

<표 9>는 KCSI 1위 기업과 비교대상기업의 기업성과인 주식수익률과 영업성

과 및 토빈큐를 T검정을 사용하여 경기국면별(확장기 vs. 수축기)로 비교·분석한 것이다.

〈표 9〉 경기국면별 기업성과

기업성과		경기확장기	경기수축기
주식수익률 (EBR)	존경기업	10.9534	-3.6174
	비교기업	15.8547	-7.7542
	T값	-1.08	0.81
	Z값	0.61	-1.02
주식수익률 (BHAR)	존경기업	1.2036	0.9889
	비교기업	1.2275	0.9900
	T값	-0.98	0.32
	Z값	0.3116	-0.5529
영업성과 (OP)	존경기업	0.1174	0.1191
	비교기업	0.1132	0.1305
	T값	0.30	-0.75
	Z값	0.16	0.66
토빈큐 (TQ)	존경기업	1.8927	1.7690
	비교기업	1.8310	1.7728
	T값	1.53	1.44
	Z값	-0.65	0.30

EBR과 BHAR로 측정한 주식수익률 뿐만 아니라 영업성과와 토빈큐로 측정한 기업성과 모두, KCSI 1위로 선정된 기업은 비교기업인 벤치마크에 비해 경기확장기(호경기) 뿐만 아니라 경기수축기(불경기)에서도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경기국면에 따르는 KCSI 1위 기업과 비교기업간 기업성과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5. 패널회귀분석

패널회귀분석을 시행할 때, 하우스만(Hausman) 테스트 결과가 비유의적이면

랜덤효과(random effect) 모형을 선택하고 유의적이면 고정효과(fixed effect) 모형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알려져 있다. 본 패널자료에 대한 하우스만 테스트 결과는 비유의적으로 나와 랜덤효과모형을 보고하기로 한다. 전술하였듯이 정혜영·임대규(2010) 및 김주완·백재승(2019)과 비교하기 위하여 기업성과 측정치 중 토빈큐만 분석하였는데, 이 결과가 <표 10>이다.

<표 10> 토빈큐에 대한 패널회귀분석 결과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모형 5	모형 6	모형 7
상수	2.0964 (7.29***)	-0.8865 (-1.16)	-0.0346 (-0.05)	-0.0380 (-0.07)	0.8249 (1.33)	0.2605 (0.41)	0.3015 (0.47)
DUM	-0.4357 (-1.41)	-0.3092 (-1.05)	-0.1792 (-0.67)	-0.0523 (-0.20)	0.1245 (0.51)	-0.0234 (-0.10)	0.0118 (0.05)
SIZE		0.1971 (4.26***)	0.0939 (2.06**)	0.1918 (4.61***)	0.0834 (2.06**)	0.1153 (2.85***)	0.1107 (2.68***)
PRO			8.8519 (5.74***)		8.8881 (6.57***)	7.0261 (4.71***)	7.1254 (4.73***)
RD					2.3123 (0.85)		1.5343 (0.57)
ADV						6.4602 (2.56**)	6.2883 (2.47**)
AGE				-0.0297 (-6.02***)	-0.0302 (-6.83***)	-0.0267 (-6.06***)	-0.0273 (-6.04***)
F 값	1.99	10.77***	19.25***	20.51***	24.49***	26.64***	22.15***
수정 R2	0.0066	0.1102	0.2700	0.2834	0.4425	0.4642	0.4616

** 5% 유의수준, *** 1% 유의수준

본 논문의 주제인 ‘KCSI 1위 기업’ 더미변수(DUM)이라는 설명변수는 모든 모형에서 일관되게 비유의적으로 나타났다(음영처리 부분). 이는 KCSI 1위 기업이라는 명성효과는 토빈큐라는 기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못한다는 것으로, <표 8>의 결론과 일치한다. 하지만 본 결과는 고객만족이 토빈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한 정혜영·임대규(2010) 및 김주완·백재승(2019)과 대조되는데, 이는 고객만족지수가 다르고 분석기간이 다르며 조사방법론이 상이한 이유 등이 있겠다. 예컨대 본 연구와 달리 정혜영·임대규(2010)의 고객만족지수는 한국생산성본부가 발표하는 NCSI이고, 분석기간은 1999년~2008년이며,

Ohlson모형에 기초한 조사방법론을 사용하였다. 또한 패널회귀분석을 사용한 본 연구와는 달리, 김주완·백재승(2019)은 내생성문제를 외면하는 횡단면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통제변수인 기업규모(SIZE)의 계수는 모든 모형에서 유의적인 정(+)의 결과를 보였다. 이는 기업규모가 클수록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고 거래비용 및 정보비대칭이 낮아지는 등의 효과로 기업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수익성(PRO) 변수는 모든 모형에서 정(+)의 유의수준을 보여주어 본 연구의 이론적 기대에 부응하였다. 연구개발(R&D)은 이론적으로 정(+)의 값을 보여야 하지만 본 실증결과는 비유의적인 결과를 보였는데, 국내 기존연구인 최정기(1994) 및 김병기(2009) 등의 연구도 비유의적으로 나타났다. 광고선전(ADV)은 기대한 대로 유의한 정(+)의 결과를 보여, 기업성과인 토빈큐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 마지막으로, 기업연령(AGE)은 전술하였듯이 기업의 특성에 따라 정(+) 혹은 음(-)의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데, 본 실증결과는 유의한 음(-)의 관계를 보였다.

요약하여 <표 10>은 고객만족도 1위로 선정되었다는 정보는 기업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을 보여주었는데 논의는 결론부분에서 언급하기로 하는 한편, 통제변수들은 대체로 예상했던 결과를 보여주었다.

V. 결 론

1. 연구의 요약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에서 발표하는 고객만족도 지수(KCSI)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만족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우리나라 산업의 질적 성장을 유도하고 산업과 기업들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고객의 만족도가 높으면 매출증대, 원가감소, 가격민감도 감소 등으로 기업경쟁력이 향상되므로 기업성과는 우수해질 것으로 KMAC는 주장하고 있다. 고객만족도 1위로 선정되었다는 정보는 해당기업의 광고·선전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업성과는 경영활동 과정에서의 수많은 요인과 각종 정보에 의하여 영향을 더 받는 것이 현실적이다. 본 연구는 고객만족도 1위 기업으로 선정되는 명성효과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2008~2018년의 11년 동안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에서 발표한 KCSI 1위 기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본 논문은 기업성으로 주식수익률 뿐만 아니라 영업성과와 토빈큐의 세 가지를 이용하였고, 표본기간을 전체기간 뿐만 아니라 확장기(호경기)와 수축기(불경기)의 경기국면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비교대상인 벤치마크를 선정할 때 주식수익률 경우 Barber & Lyon(1997), 영업성과와 토빈큐는 Barber & Lyon(1996)의 조사방법론에 각각 의거하여, 단순히 업종평균이나 전체평균과 비교하는 조악한 방법을 피하였다. 또한 고객만족도 1위라는 명성효과와 기업성과간의 내생성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1기간 시차를 두는 패널회귀모형을 이용하였다.

전체기간의 결과로, 주식수익률과 영업성과 및 토빈큐 모두 KCSI 1위 기업과 비교기업 간의 통계적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경기국면별 결과 역시, KCSI 1위 기업의 주식수익률과 영업성과 및 토빈큐로 측정된 기업성과는 확장기와 수축기 모두 비교기업과 통계적 차이가 없었다. 패널회귀모형에서도 KCSI 1위 선정변수는 기업성과(토빈큐)와 관련이 없었다. 한 마디로, KCSI 1위 기업으로 선정되었다는 명성효과는 기업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을 발견하였는데, 국내의 유사한 제도라고 할 수 있는 히든챔피언 선정효과를 분석한 박진우·조장은(2015) 및 길재욱 외(2017)의 연구와 일치되는 결론이다.

2. 시사점과 향후 연구

이러한 실증결과는 기업명성이라는 무형자산은 현존하는 재무·회계시스템에 반영이 되기 힘들다는 외국문헌의 주장(Capraro & Srivastava 1997)과 부합할 뿐만 아니라 외국의 일부 실증연구(Ittner et al. 2009; O'Sullivan et al. 2009)와 일치하지만, 논의는 필요할 것이다. 예컨대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은 고객만족도를 구성하는 전반적 만족도와 요소 만족도 및 재이용(구입)의향률을 지수화하여 KCSI 1위 기업의 선정여부를 결정하는데, KCSI 1위 기업 지수와 비(非) KCSI 1위 기업 지수의 격차가 미세한 관계로 이러한 비유리적인 실증결과가 나왔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또한 복수의 고객만족지수(한국생산성본부의 NCSI, 한국표준협회의 KS-SQI 등)나 대체가능한 제도³⁾ 등 많이 존재하고, 이러한 것이 나올 때마다 적극적으로 홍보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각종 제도는 문제점이 있어 개선책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선정되었다는 사실을 기업의

3) 예로써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주관하는 존경받는 All Star기업 및 고객이 가장 추천하는 기업, 한국표준협회(KSA)가 주관하는 품질대상수상기업, Great Place to Work(GPTW) Institute가 주관하는 일하기 좋은 기업, 한국거래소(KRX)가 주관하는 히든챔피언 등이 있다.

제품이나 서비스에 연결시키면 해당 기업의 광고효과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언급하였듯이 고객만족 보다 기업성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시설투자결정, 자본조달결정, 배당결정, 기업인수 및 합병, 획기적인 제품출시 등)은 많이 존재한다. 이러한 현실적 상황과 본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KCSI 1위 기업이라는 정보는 광고·선전 같은 (간접적) 효과를 누릴 수 있어도, 자본시장에서 측정되는 주식수익률 같은 기업성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미미할 수 있다.

KCSI라는 고객만족지수가 1992년에 처음 개발되어 2000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확대되었으니, 확대시점 기준으로 보아도 20년이 경과되었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대체가능한 제도가 많아졌고 자본시장의 환경이 변함에 따라, 고객만족 1위의 유무가 예전과는 달리 기업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고객만족지수라는 제도를 하나의 라이프사이클(life-cycle)로 보아, 개척기(도입기)-성장기-안정기-성숙기 등으로 분류하여 기업성장을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이를 향후 연구과제로 넘긴다.

참고문헌

국문 자료

- 길재욱, 김송희, 이은정. 2017. “강소기업을 위한 히든챔피언 선정 효과에 관한 연구.” 『증권학회지』 46(3), 687-722.
- 김병기. 2009. “연구개발투자 증가기업의 장기성과에 관한 연구.” 『기업경영연구』 16(2), 109-130.
- 김병기, 공명재. 2000. “유상증자 후의 장기 주가수익률 및 영업성과.” 『재무관리연구』 17(1), 13-44.
- 김영식, 위정범. 2011. “기업의 사회적 활동과 재무적 성과의 통합적 고찰.” 『대한경영학회지』 24(5), 2913-2950.
- 김주완, 백재승. 2019. “고객평판도와 기업가치: NCSI, K-BPI, KSCI 수상을 중심으로.” 『재무관리연구』 36(3), 89-118.
- 라선아, 이유재. 2015. “고객만족, 고객충성도, 관계마케팅, 고객관계관리 관련 문헌에 관한 종합적 고찰.” 『마케팅연구』 30(1), 53-104.
- 박상준, 김현철. 2003. “고객만족지수와 기업성과.” 『마케팅연구』 18(3), 19-50.
- 박진우, 조장은. 2015. “KOSDAQ 시장에서 “히든챔피언종목”은 과연 히든챔피언인가?” 『증권학회지』 44(4), 637-662.
- 안태식, 김원중. 2000. “고객만족과 재무성과간의 관계.” 『회계학연구』 25(1), 75-95.
- 윤평식. 1999. “유상증자의 장·단기효과.” 『증권학회지』 25, 71-105.
- 이동원, 조재호. 2016. “경기변동에 따른 한국 기업의 자금조달패턴에 관한 연구.” 『재무연구』 29(2), 235-264.
- 이유재. 2000. “고객만족 연구에 관한 종합적 고찰.” 『소비자학연구』 11(2), 139-166.
- 이유재, 이청림. 2006. “고객만족이 기업의 수익성과 가치에 미치는 영향.” 『마케팅연구』 21(2), 85-113.
- 이유재, 차경천·이청림. 2008. “기업의 수익성과 가치에 미치는 고객만족의 동태적 영향.” 『한국마케팅저널』 10(1), 1-23.
- 전인수, 김현정(2005), “ROCSI: 고객만족투자 과연 효과있는가?” 『마케팅연구』 20(3), 65-84.
- 정혜영, 임대규. 2010. “고객만족 지속성이 기업의 미래 재무성과와 시장가치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연구』 35(4), 163-162.

- 조지호, 김용현. 1996. “고정자산 매각공시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 『증권학회지』 19(1), 85-110.
- 최정호. 1994. “광고비 및 연구개발비 지출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토빈Q에 의한 실증적 분석.” 『회계학연구』 19, 103-124.

영문 자료

- Aksoy, L., B. Cooil, C. Groening, T. Keiningham and A. Yalçın. 2008. “The Long-Term Stock Market Valuation of Customer Satisfaction.” *Journal of Marketing* 72(4), 105-122.
- Anderson, E., C. Fornell and S. Mazvancheryl. 2004. “Customer Satisfaction and Shareholder Value.” *Journal of Marketing* 68(4), 172-185.
- Bae, G., J. Jeong, H. Sun and A. Tang. 2002. “Stock Returns and Operating Performance of Securities Issuers.” *Journal of Financial Research* 25(3), 337-352.
- Barber, B. and J. Lyon. 1996. “Detecting Abnormal Operating Performance: The Empirical Power and Specification of Test Statistic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41(3), 359-399.
- Barber, B. and J. Lyon. 1997. “Detecting Long-Horizon Abnormal Returns: The Empirical Power and Specification of Test Statistic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43(3), 341-372.
- Capraro, A. and R. Srivastava. 1997. “Has the Influence of Financial Performance on Reputation Measures Been Overstated?” *Corporate Reputation Review* 1(1), 86-93.
- Chan, L., J. Lakonishok and T. Sougiannis. 2001. “The Stock Market Valuation of Research and Development Expenditures.” *Journal of Finance* 56(6), 2431-2456.
- Choe, H., R. Masulis and V. Nanda. 1993. “Common Stock Offerings Across the Business Cycle: Theory and Evidence.” *Journal of Empirical Finance* 1(1), 3-31.
- Chung, K. and S. Pruitt. 1994. “A Simple Approximation of Tobin’s q.” *Financial Management* 23(3), 70-74.
- Daniel, K. and S. Titman. 2006. “Market Reactions to Tangible and Intangible Information.” *Journal of Finance* 61(4), 1605-1643.

- Demsetz, H. and B. Villalonga. 2001. "Ownership Structure and Corporate Performance." *Journal of Corporate Finance* 7(3), 209-233.
- Eberhart, A., W. Maxwell and A. Siddique. 2004. "An Examination of Long-Term Abnormal Stock Returns and Operating Performance Following R&D Increases." *Journal of Finance* 59(2), 623-650.
- Fornell, C. 1992. "A National Customer Satisfaction Barometer: The Swedish Experience." *Journal of Marketing* 56(1), 1-21.
- Fornell, C., S. Mithas, F. Morgeson and M. Krishnan. 2006. "Customer Satisfaction and Stock Prices: High Prices, Low Risk." *Journal of Marketing* 70(1), 3-14.
- Gruca, T. and L. Rego. 2005. "Customer Satisfaction, Cash Flow, and Shareholder Value." *Journal of Marketing* 69(3), 115-130.
- Hansen, R. and C. Crutchley. 1990. "Corporate Earnings and Financing: An Empirical Analysis." *Journal of Business* 63(3), 347-371.
- Hauser, J., D. Simester and B. Wernerfelt. 1994. "Customer Satisfaction Incentives." *Marketing Science* 13(4), 327-350.
- Healy, P. and K. Palepu. 1990. "Earnings and Risk Changes Surrounding Primary Stock Offers."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28(1), 25-48.
- Ittner, C. and D. Larcker. 1998. "Are Nonfinancial Measures Leading Indicators of Financial Performance? An Analysis of Customer Satisfaction."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36, 1-35.
- Ittner, C., D. Larcker and D. Taylor. 2009. "Commentary - The Stock Market's Pricing of Customer Satisfaction." *Management Science* 28(5), 826-835.
- Jacobson, R. and N. Mizik. 2009. "The Financial Markets and Customer Satisfaction: Reexamining Possible Financial Market Mispricing of Customer Satisfaction." *Management Science* 28(5), 810-819.
- Jung, H. 2008. "Improved Testing Procedure for Long-Horizon Event Studies in the Korean Stock Market." *Asia-Pacific Journal of Financial Studies* 37(5), 765-811.
- Kosowski, R. 2011. "Do Mutual Funds Perform When It Matters Most to Investors? US Mutual Fund Performance and Risk in Recessions and Expansions." *Quarterly Journal of Finance* 1(3), 607-664.
- Loughran T. and J. Ritter. 1995. "The New Issues Puzzle." *Journal of Finance*

50(1), 23-51.

Loughran, T. and J. Ritter. 1997. "The Operating Performance of Firms Conducting Seasoned Equity Offerings." *Journal of Finance* 52(5), 1823-1850.

McLaughlin, R., A. Sadieddine and G. Vasudevan. 1996. "The Operating Performance of Firms Conducting Seasoned Equity Issuers: Free Cash Flow and Post-Issue Performance." *Financial Management* 25(4), 41-53.

O'Sullivan, D., M. Hutchinson and V. O'Connell. 2009. "Empirical Evidence of the Stock Market's (Mis)Pricing of Customer Satisfac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Research in Marketing* 26(2), 154-161.

Spiess, D. and J. Affleck-Graves. 1995. "Underperformance in Long-Run Stock Returns Following Seasoned Equity Offering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38(3), 243-267.

Wei, A., F. Xie and S. Zhang. 2005. "Ownership Structure and Firm Value in China's Privatized Firms: 1991-2001." *Journal of Financial and Quantitative Analysis* 40(1), 87-108.

Abstract

Customer Satisfaction and Corporate Performance

Yong-Hyeon Kim ■ Hanyang Cyber University

Nam-Gon Kim ■ Dongduk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explores the relationship between customer satisfaction and corporate performance by examining whether the annual Korea Customer Satisfaction Index(KCSI) list of "Excellent Customer Satisfaction Companies(ECSC)" is value generating. Current study uses the three performance measures of stock returns, operating performance, and Tobin's Q. Two proxies of stock returns are used: The ratio of the end of year to the beginning of year stock prices(EBR) and the buy-and-hold abnormal returns(BHAR). The operating performance is defined as the ratio of earnings before interest, taxes,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 to total assets. Tobin's Q is defined as the sum of market value of common stocks plus preferred stocks and book value of bonds divided by total assets. Also, this paper deliberately employs random-effects panel regression models with 1-year lag to alleviate the endogeneity problem.

The annual KCSI lists from the Korea Management Association Consulting(KMAC) from 2008 to 2018 are used. The three performances of sample firms are compared with those of matching firms which are selected by the methodologies of Barber and Lyon(1996 & 1997).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the ECSC firms have statistically insignificant performance of stock returns, operating performance, and Tobin's Q compared with the matching firms. In addition, stock returns, operating performance and Tobin's Q of the ECSC firms over the comparable firms are statistically insignificant in all aspects of economic states. Moreover, the results of panel regression models clearly show that the customer satisfaction factor has nothing to do with the performance measure of Tobin's Q. This suggests that investors in the capital market may be more directly affected by factors such as investment decisions, financing decisions, dividend and share repurchase decisions, mergers

& acquisitions than the corporate customer satisfaction factor.

In a nutshell, this paper shows that intangible asset of customer satisfaction factor does not have any positive effect on corporate performance, which is very similar to existing papers analyzed the hidden champion effect.

Key Words: Customer Satisfaction, Intangible Assets, Firm Performance,
Economic States, Endogeneity

팽창적 통화정책과 부와 소득의 불균등*

배재현 ■ 한국금융연구원**

빈기범 ■ 명지대학교***

박경국 ■ 금융감독원****

〈국문요약〉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을 포함하여 전세계적으로 위기 극복 및 경기 부양을 위한 팽창적 통화정책이 크게 부각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팽창적 통화정책의 부수적 효과로 나타날 수 있는 자산가격 채널을 통한 경제적 불균등에 주목하였다.

본 연구에서 통화량의 시차 및 누적효과를 고려한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통화량의 증가는 경제적 불균등 지수로 사용한 도시2인이상(또는 전국2인상) 전체가구 총소득 및 근로소득의 소득분위배수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통화량의 증가는 중장기적으로 3년 이상의 시차를 두고 주식 및 부동산가격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팽창적 통화정책으로 자산 보유 계층의 부는 불균등하게 증가한다.

통화당국은 통화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팽창적 통화정책의 부작용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통화정책, 통화량, 자산가격, 경제적 불균등

* 본 연구는 주저자인 배재현의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석사 학위 논문에서 중요한 내용을 발췌하고 수정·보완하여 재작성 하였다. 남아 있는 오류는 전적으로 교신저자인 빈기범의 책임이다.

이 논문은 2020년도 명지대학교 일반교원연구비 지원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주저자,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원 (E-mail: 01073087237@daum.net)

*** 교신저자,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E-mail: bink1@mju.ac.kr)

**** 금융감독원 보험리스크제도실 수석조사역 (E-mail: ratshorn@naver.com)

I. 서 론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은 경기 부양을 위해 지속적으로 통화 공급을 크게 늘리는 팽창적인 통화정책을 시행하였다. 한국의 경우에도 2008년 8월 7일 기준금리가 5.25%에서 2009년 2월 12일 기준금리가 2%가 될 때까지 총 6번의 금리인하가 있었다. 이는 당시 경제적 위기상황에 대응하고 국제적 양적 완화 정책에 대응하는 조치였을 것이다. 한편, 2010년 7월 9일에는 기준금리가 0.25%p 인상되었고, 2011년 6월 10일 기준금리가 3.25%에 도달할 때까지 총 5번의 금리 인상도 있었다. 그럼에도 2012년 7월 12일 기준금리 0.25%p 인하를 시작으로 2020년 3월 17일 기준금리가 0.75%에 이르며 전반적으로 금리가 인하되었다.¹⁾ 이처럼, 국내 통화정책도 2011년 6월부터 본 연구의 대상 기간인 2018년까지 경기부양 목적의 팽창적 통화정책 기조로 이어지고 있다.

각 국가마다 팽창적 통화정책은 경기부양을 위한 우선적 정책적 대응이다. 하지만, 팽창적 통화정책의 경기부양 효과를 떠나 그것이 유발할 수 있는 부수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의가 충분하지 않다. 본 연구는 팽창적 통화정책이 거시 경제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여파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통화량의 증가가 소득 불균등 및 자산가격 상승에 단기·중기·장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기존 국내 선행연구는 자료 관찰의 단위 주기마다 그 주기로 관찰된 단 하나의 관찰치를 사용하는 통상적인 시계열 회귀분석 방식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 실증분석의 중요한 차이점은, 예를 들어 (t-3)기부터 (t-1)기까지의 3기간 소득이 (t-2)기부터 t기까지 3기간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도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²⁾ 이는 소위 “중첩 시간 하의 시간 집계(temporal aggregation with overlapping intervals)” 방식으로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고 분석하는 것이다. 국내 시계열 분석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은 방식이지만, 해외 문헌에서는 자주 이용되어 왔고 그 효시가 Hansen and Hodrick(1980)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방식을 차용하여 설명변수인 통화량 M1 또는 증가율과 종속변수인 경제적 불균등 지수 및 자산가격 지수 또는 증가율에 대하여 여러 분기 이동평균평균치를 사용한다. 이 경우, 자연스럽게 자기상관관계가 발생하는데 이를 감안하여 표준오차 계산시 Newey-West 방식(Newey and West 1987)을

1) 2020년 5월 28일 한국은행 금통위는 금리 인하를 단행하여 기준 금리가 0.5%이다.

2) 기존의 통상적 시계열 연구에서는 t기의 소득과 t기의 소비, (t-1)기의 소득과 t기의 소비의 관계 등을 분석하였다.

준용하였다. 본고의 실증분석 결과, 통화량의 증가는 단기적으로 경제적 불균등을 악화시키고, 중장기적으로 자산가격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단기적으로는 상위계층의 소득을 하위계층보다 더욱 빠르게 증가시킨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자산가격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 이는 자산 보유가 상대적으로 큰 계층의 부를 더욱 빠르게 증가시킬 수 있다.

해외 연구에서는 국내 학계와 달리 통화정책의 부수적 효과에 대해서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 Ampudia et al.(2018)은 EURO 경제에서 팽창적 통화정책이 소득과 부의 불균등 정도를 완화한다고 주장하였다. Furceri et al.(2018)는 팽창적 통화정책이 단기적으로 부의 불균등을 증가시키지만, 중기적으로는 부의 불균등을 감소시킨다고 주장하였다. Inui et al.(2017)은 일본에서 2000년대 이전의 노동자 가구만 한정할 경우 통화량이 증가하면 소득 불균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가장 최근 자료 및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하면 앞서 언급한 통화량 증가가 소득 불균등에 미치는 영향을 거의 찾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팽창적인 통화정책의 부수적 영향과 관련하여 해외에서는 이미 논쟁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동 주제에 대해서 아직 연구나 논의가 활발하지는 않다. 본 연구와 가장 유사한 연구로 박종욱(2018)과 최지욱(2017)을 들 수 있다. 박종욱(2018)은 VAR 모형을 이용하여 통화정책이 소득 불균등에 미치는 기여도가 작다고 주장하였다. 최지욱(2017)은 분위회귀모형(quantile regression)을 이용하여 양(+)의 이자율 충격 발생시, 상위소득에 비해 하위소득의 음(-)의 충격효과가 크다는 실증분석을 제시하였다. 한편, 안재욱(2009)은 팽창된 통화량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이로 인해 소득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주장한 바 있다.

역사적으로 통화는 경제성장을 이상으로 증가되어 왔다.³⁾ 통화 증가가 총 소득 증가에 수반되는 현상이지만 소득에 비해 크게 증가해 왔다. 통화 증가가 영향을 미치는 채널로 Mishkin(1995)은 금리경로, 자산가격경로, 환율경로, 신용경로, 기대경로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많은 통화정책 경로 중 본고에서 “자산가격경로”에 주목하는 이유는 소비재(consumption goods)가 아닌 자산(asset)이 가진 특성 때문이다. 예컨대, 주식 및 부동산은 생산을 통해 생겨나는 것이 아니므로 총량(총공급)을 늘리는 것이 상당히 한정적이다. 자산 순공급은 단기간의 변화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에 통화 증가에 의한 유동성 팽창시 자산가

3) 한국의 경우 2000년부터 2018년까지 평균 연간 경제성장률은 4.1%이며, 통화량 M1의 평균 연간 증가율은 9.3%이다. 또한, 1990년부터 2018년까지 평균 연간 경제성장률은 5.1%이며, 통화량 M1의 평균 연간 증가율은 12.1%이다.

격상승이 물가상승보다 클 수 있다. 다만, 물가는 통상 추세를 지니지만 상승폭이나 그 변동성이 크지 않은 반면, 자산은 자산시장에서의 수요 변화에 따라 가격이 크게 하락 또는 폭락하기도 하는 큰 변동성 양상을 보인다. 아울러, 자산은 전 국민이 균등하게 보유할 수 없고, 실제로 자산을 많이 소유한 사람은 말 그대로 ‘자산가’이다. 만약 물가상승보다 자산가격상승이 더욱 크다면 자산가인 ‘부유층’의 부와 소득은 자산 소유가 적거나 없는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욱 크게 늘어나게 된다. 이에 자산가격의 상승은 ‘부의 격차’를 유발하거나 악화시킨다. 자산에서 나오는 소득(이자, 배당, 임대료 등)까지 감안하면 ‘소득격차’는 더욱 악화될 수 있다.⁴⁾

이러한 가설은 본고에서 처음 제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 기원은 Adam Smith 이전의 Richard Cantillon(1680s-1734)의 저술에서 찾을 수 있다. 그의 주요 저서로 1730년 즈음 저술되고, 1755년에 출판된 *Essai sur la Nature du Commerce en General*(*Essay on the Nature of Trade in General*)이 있다.⁵⁾ Cantillon은 이 저서에서 통화의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그 중 ‘상대적 인플레이션(relative inflation)’ 또는 ‘Cantillon Effect’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통화량 증가에 대해서 경제 내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상품에 대한 각기 다른 가격 상승을 의미한다. Cantillon은 ‘통화는 중립적이지 않다(non-neutral money).’고 주장한다. 만일 통화 증가로 인한 ‘가격’의 상승이 모든 상품, 재화, 서비스, 자산, 노동 등에서 균등하게 일어난다면 통화는 중립적이다. 그러나, 경제 각 생산요소 및 산출물 가격에 불균등한 영향을 미친다면 실물 경제에 대한 영향은 물론 경제 전반적인 분배 구조 즉 ‘경제적 불균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통화정책의 부수적 효과로 발생될 수 있는 경제적 불균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그 중 주식과 부동산 같은 대표적인 자산군에 한정하여 분석한다.

4) 본고에서 세금 문제는 주된 논의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근로소득에 비해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은 세율이 낮거나 면제가 되기도 한다. 또한, 근로소득은 유리할 지갑이라는 말이 있듯이 과세 당국에서 명확하게 파악하지만, 임대소득, 이자소득 등 자산으로부터 나오는 소득은 과세 당국이 파악하기 어렵다.

5) 이 저서에 대해서 제본스(William Stanley Jevons)는 ‘정치경제학의 요람(Cradle of political economy)’이라고 높게 평가하기도 했다.

II. 선행연구

통화공급 확대가 경기부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Bernanke(2012)는 미국 Fed의 1차 양적완화와 2차 양적완화를 통해서 미국 GDP의 3% 성장 및 민간 고용을 2백만명 정도 증가시켰다고 주장하였다. Borio & Disyatat(2010)은 팽창적 통화정책이 총수요의 하락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되지만, 중앙은행이 큰 재무 위험을 감수할수록 장기적으로 독립적인 운용과 신뢰 가능한 물가안정의 위험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Gambacorta et al.(2014)은 팽창적 통화정책이 일시적으로 경기를 활성화 시킬 수 있지만, 필연적으로 경기 호황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한국금융연구원(2012)은 Moody's Analytics와 Equifax의 '신용양극화(credit divide)로 인하여 미국 연준이 시행한 팽창적 통화정책의 경기부양 효과가 상쇄된다'는 주장을 소개하였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미국에서 금융위기 이전에는 저신용자들에게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약 50% 공급되었지만, 2011년에는 약 10%만 공급되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로 인해 오히려 저금리를 저소득층이 사용할 수 없고,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고소득층에서 저금리의 혜택을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이는 팽창적 통화정책이 경기부양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했는지라도 부와 소득의 불균등을 유발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팽창적 통화정책을 크게 부각시킨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도 Romer & Romer(1998)는 통화정책이 빈곤과 경제적 불균등에 대해 미치는 장단기적인 영향을 분석하였다. 미국의 1969-1994년의 시계열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단기적 관점에서 팽창적인 통화정책이 저소득층의 경제적 상황을 개선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들은 통화정책의 장기적 효과를 규명하기 위해 66개 국가의 횡단면 자료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저소득층의 삶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것은 팽창적인 통화정책 보다 오히려 낮은 인플레이션과 안정적인 총수요의 증가라고 주장하였다.

네덜란드 중앙은행의 Panetta(2015)는 팽창적 통화정책이 자산가격 경로 채널에서는 주식과 같은 금융자산과 부동산의 가격을 상승시킨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팽창적 통화정책이 임금 채널에서 성공적으로 작용하게 되면 저소득층의 고용과 임금을 유지할 수 있게 하여 결과적으로는 불평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 개연성도 지목하였다. 결국 팽창적 통화정책의 순분배효과를 사전에 예측하는 것은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Colciago et al.(2019)은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이

소득 불균형에 미치는 영향은 불명확하다고 하였다. 즉, 팽창적 통화정책이 경제 활동을 자극하여 소득 불균형이 다소 감소할 수도 있고, 팽창적 통화정책이 이자율과 자산가격의 방향에 영향을 주어 불균등이 오히려 심화될 수도 있다고 하였다. 특히, 중앙은행의 통화 발행을 위한 대규모 자산 매입이 자산가격의 상승을 촉발시켜 부의 불평등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Deutsche Bundesbank(2016)은 가계재정패널을 활용한 부(wealth)에 대한 연구 결과, 2010-2014년 기간 동안 비전통적인 양적완화 정책이 부의 재분배 측면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하였다. Bunn et al.(2018)는 2008-2014년 기간에서 영국을 대상으로 팽창적인 통화정책이 분배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통화량이 증가하면 지니계수는 미미하게 감소하는 것을 발견했다. 다만, 통화량 증가는 연령이 다른 집단마다 서로 다른 효과가 발견되었다. 예컨대, 젊은 층 가구는 금융위기 기간 동안 실질임금이 전반적으로 떨어졌으나 노년층 가구에 대비해서는 실질임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이와 달리 부의 측면에서는 노년층 가구가 보유한 주식과 주택의 실질가격은 2007년과 2014년을 비교했을 때 오히려 2014년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긴축적 통화정책의 부수적 효과를 제시한 Coibion et al.(2017)은 미국에서 긴축적 통화정책이 경제적 불균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바 있다. 분석 결과 저소득 가구는 정부 보조금과 같은 이전소득이 중요하지만, 상위 1%에 해당하는 고소득 가구의 금융소득이 불균형을 일으키는 요인이 된다고 주장한다.

Kim(2019)은 미국의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통화정책에 의한 상품 가격의 상대적 인플레이션을 연구하였다. 그 결과, 통화정책이 고품질 브랜드 소비에 약 4배 더 큰 영향을 주며, 부유한 사람들은 팽창적 통화정책으로 더 많은 혜택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Cravino et al.(2020)은 미국에서 고소득 가구가 소비하는 상품 가격은 중간소득 가구가 소비하는 상품보다 더 경직적이고 변동성이 적다고 주장한다. 이는 고소득 가구의 소비자 물가지수(CPI)는 통화충격에 덜 반응하는 요인이 된다고 언급한다. 분석결과로 통화정책 충격 이후 소비자물가지수(CPI)에 대한 고소득 가구의 반응은 중간소득 가구보다 약 1/3정도 작게 나타났다.

국내 연구로서 김영도(2017), 이근영(2007) 및 남광희(2006) 등은 통화정책이 자산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었다. 이와 달리, 자산가격 변동과 경제적인 불균형을 살펴본 연구로 이철승·정준호(2018), 이선호·황진영(2017) 및 전병유(2016) 등이 있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팽창적 통화정책이 궁극적으로 경제적 불균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와 유사한 관점의 국내 연구로 박종욱(2018) 및 최지욱(2017)은 VAR 모형으로 분석하기도 했다.

본 연구는 기존 다수의 선행연구와 달리, 설명변수로 통화량 M1 또는 그 증가율의 과거 12분기(3개년) 이동평균값 및 그것의 시차변수를 사용하였고, 종속변수로 소득분위배수 및 주식과 부동산가격지수 또는 각 증가율의 과거 4분기(1개년) 이동평균값을 사용하였다. 이는 앞서 언급한 중첩 시간 하의 시간 집계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1년 주기로 관찰되는 시계열 자료가 있다고 하여 그 자료가 나타내는 경제 현상이 1년 단위로 시작(1월 1일에 시작)하고 끝나는(12월 31일에 종료) 것으로 인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1년이라는 것은 달력에 근거한 제도적 시간에 불과하다. 경제 현상의 기본적인 시간 단위가 달력 시간의 1년 일 리 없다. 중첩된 시간 하의 서로 다른 변수간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한 변수의 특정 시점의 변화가 아닌 단위 기간 이상의 시간 길이에 따라 누적된 영향이 곧바로 또는 시차를 두고 다른 변수의 역시 누적된 변화를 유발할 수도 있다.

연도별 자료와 VAR 모형으로 분석하는 것은 그러한 거시 변수간 중첩적, 시차적, 누적적, 점진적 영향 관계를 분석하는데에는 한계가 있다. 앞서 언급한 VAR 모형을 이용한 기존 연구는 그러한 한계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예를 들어, 경제 현상이 연도 단위로 영향을 미쳐 (t-k)년 통화량이 t년 소득 분배나 자산가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통상적인 VAR 분석에서는 통화정책 또는 통화량과 소득 분배 또는 자산 가격간 관계가 잘 포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요 설명변수와 종속변수에서 중첩되는 시간하의 이동평균값을 사용한다.

III. 시계열 추이 분석

1. 통화량, GDP 및 물가의 각 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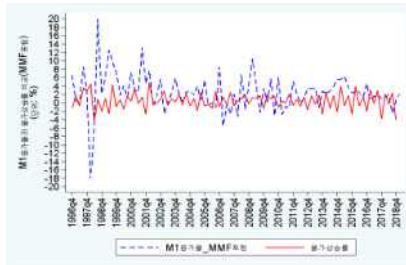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에서 제공하는 통화량 M1은 1996년 9월부터 산출시 MMF를 포함하였다가 2005년 11월부터 익일환매제도가 적용된 법인 MMF는 제외하였다. 또한, 2007년 3월에는 미래가격제가 도입된 개인MMF도 제외가 되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통화량 M1의 통일성을 위해서 MMF를 1996년 3분기부터 2018년 4분기까지 포함하는 시계열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다.

<그림 1>은 1996년 4분기부터 2018년 4분기까지의 MMF를 포함한 통화량 M1증가율, 물가상승률 및 경제성장률을 비교한 그림이다. 교환항등식 $M \times v = P \times 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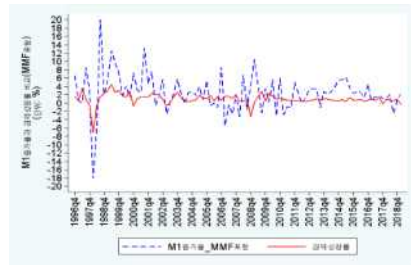
를 고려하면 통화 유통속도 v 가 장기적으로 안정적이란 전제하에 통화 증가율은 물가상승률과 생산량(GDP)증가율(즉, 실질경제성장률)의 합과 동일해야한다. <그림 1>의 통화량 M1증가율은 MMF를 포함한 통화량 M1의 분기별 전분기 대비 증가율이며, 물가상승률은 GDP디플레이터의 분기별 전분기 대비 증가율, 경제성장률은 실질GDP의 분기별 전분기 대비 증가율이다.

〈그림 1〉 MMF포함 M1증가율과 물가상승률 및 경제성장률의 시계열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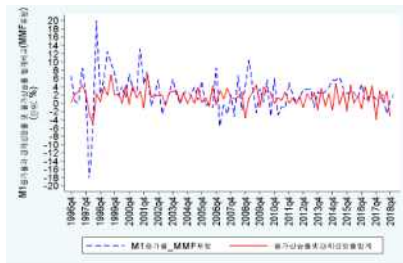
(a) M1증가율과 물가상승률 비교



(b) M1증가율과 경제성장률 비교



(c) M1증가율과 물가상승률 및
경제성장률의 합계 비교



- 1) 통화량 M1(MMF를 포함)은 월말잔을 사용하여 3개월 평균값을 분기 통화량으로 산출함. 통화량 M1증가율은 분기별 전분기 대비 증가율
- 2) 물가상승률은 GDP디플레이터의 분기별 전분기 대비 상승률, 경제성장률은 실질GDP의 분기별 전분기 대비 성장률
- 3) 통화량 M1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이외 자료는 국가통계포털(KOSIS) 자료를 사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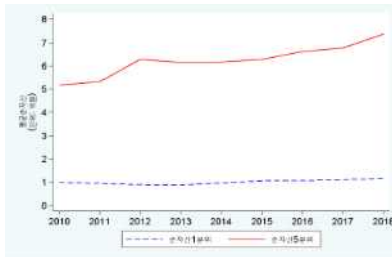
2. 부 및 소득 불균등 시계열 추이

이 절에서는 국가통계포털(KOSIS)의 순자산5분위 자료 및 소득10분위 자료를 활용하여 경제적 불균등(부의 불균등, 소득 불균등)의 추이를 파악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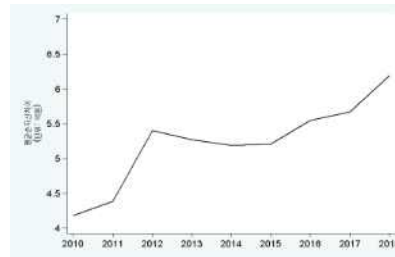
<그림 2>에서는 순자산1분위 집단과 순자산5분위 집단의 평균 순자산을 비교하여 나타냈다. <그림 2>에서 자료 관찰기간은 2010-2018년이다. (a)를 보면 순자산1오분위 집단의 평균 순자산은 2010년 9,900만원에서 2018년 1억 1천만원으로 1천 1백만원 증가하였다. 반면 순자산5오분위 집단의 평균 순자산은 2010년 5억 1천만원에서 2018년 7억 3천만원으로 2억 2천만원 증가하였다. (b)와 (c)를 보면 순자산1오분위 집단의 평균값과 순자산5오분위 집단의 순자산 차이는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와 같이 비율로 살펴보면, 2010년 5.2배에서 2012년에 7배 수준으로 순자산 격차가 더욱 크게 확대되었고, 이후 2015년까지 6배로 하락하다가 다시 증가한다.

<그림 2> 순자산1오분위 집단과 5오분위 집단의 평균 순자산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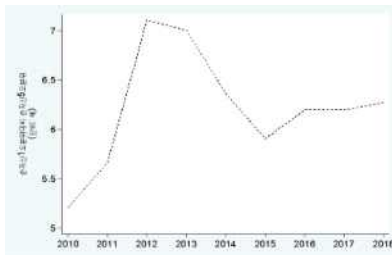
(a) 순자산1오분위와 5오분위 집단의
평균 순자산 추이



(b) 순자산1오분위와 5오분위 집단의
순자산 차이



(c) 순자산1오분위와 5오분위 순자산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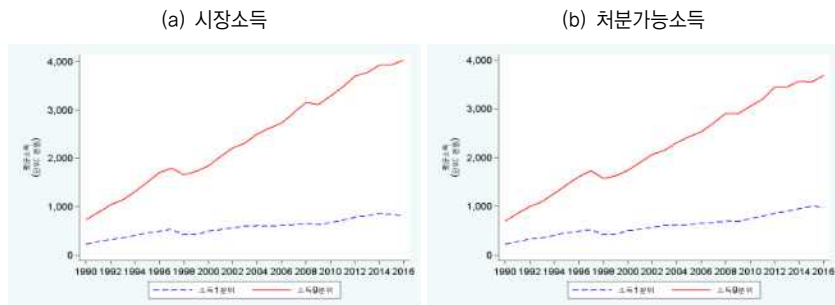
- 1) 순자산(명목) = 순자산 분위별 가구당 평균 자산 - 순자산 분위별 가구당 평균 부채
- 2) 순자산은 명목금액이며, 조사년도 3월말 기준 자료임
- 3) 순자산1오분위와 5오분위 집단의 순자산 차이는 산술적 차이를 의미함
- 4) 2018년은 잠정치임
- 5) 국가지표체계(e-나라지표) 자료를 사용함

<그림 3>은 1990-2016년 기간에서 소득1십분위수와 9십분위수를 비교하여 나타냈다. 여기서 <그림 4>의 (a)열은 도시 2인 이상 가구의 시장소득 기준이고, (b)열은 도시 2인 이상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그린 것이다.⁶⁾

<그림 3>의 P9는 소득 분포에서 9번째 십분위수, P1은 1번째 십분위수를 나타낸다. (a)와 (b)를 보면, P9가 P1보다 가파르게 상승한다. (a)열 및 (b)열의 그림을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P1과 P9의 차이는 점차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컨대, (a)를 보면 시장소득 기준으로 1990년 월 평균 50만원 차이에서 2016년 월 평균 320만원 이상의 차이로 그 격차가 더욱 커졌다. 연간 소득으로 환산하면, 1990년 연간 600만원의 소득 차이가 2016년에 들어서 연간 3,840만원의 소득 격차가 있는 셈이다. (a')를 보면, 배수로는 2016년에 약 5배 정도 차이가 있다. (b)열의 처분가능소득으로 보아도 그 결과는 유사하다.

<그림 3>에서 차이보다는 배수에서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 차이의 변화가 잘 드러난다. 그 배수가 줄어든 시기는 1997년 경제위기 이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이다. 하지만, 다시 상승하여 그 이전 최고 수준보다도 더욱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3〉 연도별 소득 1십분위수와 9십분위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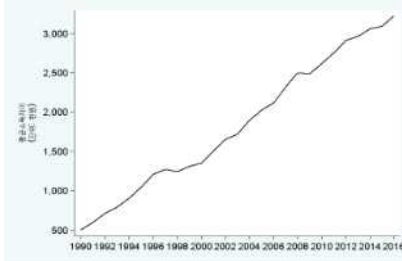


6)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가계동향조사에서 시장소득 및 처분가능소득의 의미는 아래와 같다. 특히, 가계금융복지조사와 다르게 사적이전지출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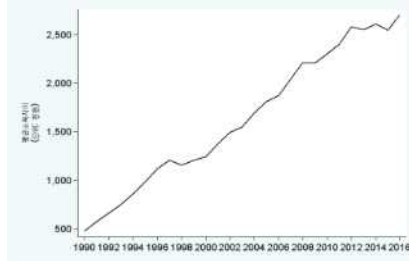
(가계동향조사) 시장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사적이전소득

(가계동향조사) 처분가능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사적이전소득 +
공적이전소득 - 세금 - 공적연금 - 사회보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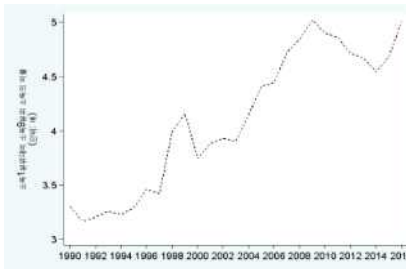
(a') 소득9십분위수와 소득1십분위수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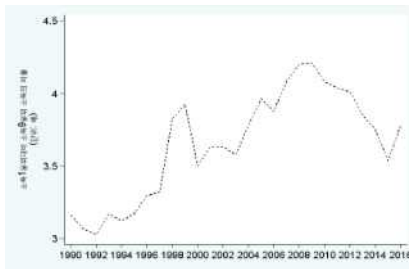
(b') 소득9십분위수와 소득1십분위수의 차이



(a'') 소득1십분위수 대비 소득9십분위수
소득의 비율



(b'') 소득1십분위수 대비 소득9십분위수
소득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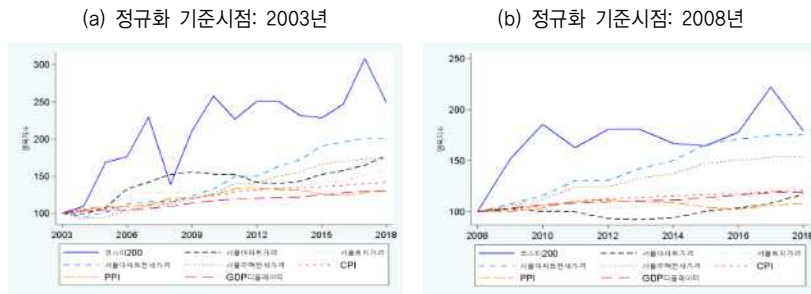
- 1) 국가통계포털(KOSIS) 에서 도시 2인이상 가구기준으로 산출된 소득분위 자료를 사용함
- 2) 소득9십분위수와 소득1십분위수의 차이는 9분위 소득과 1분위 소득의 산술적 차이를 의미함
- 3) 소득9십분위수는 9분위 소득에서 최상위 값, 소득1십분위수는 1분위 소득에서 최상위 값을 의미함

3. 자산가격과 물가상승률 비교

<그림 4>는 자산가격과 물가의 명목지수의 동일 시점 값을 동일 값으로 정규화하여 비교한 그림이다. 모든 계열에서 비교를 위해 2003년 또는 2008년 시점에서 초기값을 100으로 정규화하였다. (a)를 보면, 물가(PPI, CPI, GDP디플레이터), 서울 아파트 가격, 서울 토지 가격,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 서울 주택 전세 가격, KOSPI200 주가 지수 모두 전반적으로 상승한다. 다만, KOSPI200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된 2008년 크게 하락하지만 2010년에 이미 원래 수준 이상으로 상승한다. 그리하여, 비교 대상 가격 중 KOSPI200이 가장 높은 상승을 기록

하였다. 2003년 수준에 비해 약 3배까지도 상승하였다. 2008년의 지수 값을 100으로 정규화하여 그린 (b)에서도 질적으로 유사한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림 4〉 주식, 부동산 가격 지수 및 물가지수 비교



- 1) 모두 명목지수이며 2003년의 값을 100으로 정규화함
- 2) 코스피200지수, 서울아파트가격, 서울아파트전세가격, 서울주택전세가격, 서울토지 가격은 연말 자료
- 3) GDP디플레이터, CPI 및 PPI는 월말 값을 해마다 평균함
- 4) 부동산 관련 지수는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r-one)에서, 이외 자료는 KOSIS에서 입수

<그림 4>를 다시 살펴보면, CPI, PPI, GDP 디플레이터의 증가율이 가장 낮은 수준이다. 부동산 관련 지수 및 주가 지수는 이들 물가지수의 상승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으로 상승한다. 서울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던 약 2008-2012년에 전세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아파트 보유자의 아파트 가격 하락에 따른 손실을 전세가 상승으로 일부 보완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서울 아파트 가격 및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 지수는 2003년 대비 약 1.5-2배 정도 상승하였다. 지면상 생략하지만, 명목지수가 아닌 실질지수(GDP디플레이터로 나누고 100을 곱)로 비교해도 유사한 결과를 얻는다.

물가는 실질GDP 즉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 실물 1단위의 가격이다. 균형적으로는 물가와 자본재 가격의 상승률, 임금 상승률은 동일해야 한다. 현실에서 임금은 보통 예상되는 물가상승률을 기반으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다. 실질구매력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자본재인 자산 가격이 실질구매력의 유지 이상으로 증가한다면, 그 자본재나 자산을 큰 규모로 보유한 이(이들은 경제 전반적으로 소수의 실질구매력 역시 유지 이상으로 증가하는 것이다. 즉 명목가치가 아닌 실질가치로 자산 보유자의 부가 증가한다. 이러한 현상은 자산으로부터의 수

익률이 실질GDP 상승률보다 높은 결과를 초래한다. 자산으로부터의 수익을 근로나 생산으로 따라갈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물가상승률 이상의 자산가격 상승이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면, 부와 소득 양면에서 불균등이 심화될 수 있다.

IV. 실증분석

앞서 통화량, 물가, 자산가격 지수, 분위 소득 또는 분위 부의 차이 및 배수 등에 대한 시계열 추이를 제시하였다. 이 장에서는 시계열 회귀분석에 기반하여 통화량이 자산가격이나 경제적 불균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1. 방법론 및 자료

본고의 분석을 위하여 연도별 자료 및 분기별 자료가 모두 입수 가능하지만, 이 장에서는 분기별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 한다. 연도별 자료 분석 결과도 질적으로 유사한데, 지면상 연도별 자료 분석 결과를 생략하지만 독자의 요청시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 관찰 주기별 단 하나의 관찰치에 의존하는 통상적인 시계열 회귀분석의 자료 이용 방식이 본 연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달력 시간은 제도적 시간 구분에 불과하다. 경제 변수 간 관계가 그러한 달력 시간의 틀에 맞추어 형성된다고 보기 어렵다. 물론, 국민경제 전체적인 소득과 소비의 관계를 시계열 자료로 분석한다면, 금년도 소비는 금년도 소득 또는 전년도 소득에 의해 영향을 받는 관계를 설정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t-2)$ 년부터 t 년까지 3년간 소득이 $(t-1)$ 년부터 t 년까지의 2년간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국민경제적 소비와 소득은 지속적이면서 연속적으로 순환되므로, 특정 기간(주로 자료 관찰 주기)을 단위로 관찰된 값들 간의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도 매우 자의적인 가정일 뿐이다.

Hansen & Hodrick(1980)은 앞서 언급했듯이 증첩시간 하의 시간 집계 방식을 사용한 효시 연구이다. 이들은 자료 관찰 빈도(data observation frequency)가 선도환과 현물환이 다르고(후자가 전자에 비해 높음), 예측의 주기는 길어서 이 방식을 사용하였다. 특히 표본크기를 늘리기 위한 방편으로 증첩시간 하의 시간 집계 방식을 사용하면서 GLS 추정 방식을 제시하였다. 한편, Harri &

Brorsen(1998)은 1996년에 *Journal of Finance*, *American Economic Review*, *Journal of Futures Markets*의 3가지 주요 학술지에서 중첩시간 하의 시간 집계 방식에 따른 연구가 각각 26편, 14편, 19편이 발표되었고, 그 중 각각 8편, 3편, 3편에서 본고의 방식과 마찬가지로 OLS 후 Newey-West 방식으로 표준오차를 계산한 연구라고 보고하였다. 이들은 Hansen & Hodrick(1980)의 GLS 방법론도 HAC (Heteroscedasity and Autocorrelation Consistent) 추정량 중 하나로 보았다. 중첩시간 하의 시간 집계 방식(overlapping aggregation data, rolling period data)에 관한 다양한 연구는 Clark & Coggin(2011)에 소개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통화량이 주요 설명변수, 자산가격 및 소득 불균등이 주요 종속변수이다. 모두 저량 변수이다. 이들 변수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분기 1개 관찰치(주로 기말 관찰치)에는 계절성(seasonality)도 있고 잡음(noise)도 있다. 그러한 값이 통화량, 유동성, 자산가격, 소득 불균등의 양상을 온전히 포착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정부와 중앙은행을 포함한 모든 경제 주체가 분기 단위로 시간과 경제 상황을 인식하고 경제 행위를 시작하고 종결하는 것도 아니며, 경제 현상이 분기 단위로 인식되고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⁷⁾ 따라서, 분기 내 1개 값으로 관찰되는 변수 x_t 나 x_{t-l} 이 역시 분기 내 1개 값으로 관찰되는 변수 y_t 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설정하는 것도 포착하기도 어려운 일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동평균을 이용하여 주요 설명변수를 과거 여러 분기 평균치(즉, 이동평균) $X_t = \frac{x_t + x_{t-1} + \dots + x_{t-(m-1)}}{m}$ 이나 $X_{t-l} = \frac{x_{t-l} + x_{t-l-1} + \dots + x_{t-l-(k-1)}}{k}$ 로 사용하며 마찬가지로 종속변수도 과거 여러 분기 평균치 $Y_t = \frac{y_t + y_{t-1} + \dots + y_{t-(s-1)}}{s}$ 를 사용하여 실증 분석을 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의 방식으로 자료를 이용하면 종속변수가 이동평균이므로 오차항이 자기상관관계를 갖게 된다. 이 경우 Newey-West 방식(Newey and West, 1987)으로 표준오차를 보정하면 된다.

경제 시계열은 수준 변수(또는 로그 수준 변수)를 분석하는 것이 옳은지 차분(또는 증가율) 변수를 분석하는 것이 옳은지 사전적으로도 판단하기 어렵다. 단위근 검정(unit root test)은 확률적 추세가 들어간 특정 모형에 기반한 비정상성

7) 이는 연도별 자료를 사용하더라도 마찬가지다. 1년에 분기보다 긴 기간이지만 1년이라는 것도 제도적 달력 시간의 틀에 불과하다.

검정이다. 다른 양상의 비정상성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므로, 단위근 검정이 연구자에게 주는 정보는 크지 않다.⁸⁾ 단위근에 대한 경제적 해석도 충격의 지속성(persistence) 정도에 불과하다. 시계열 수준 변수를 OLS 방법으로 회귀분석할 경우 이른바 가성회귀(spurious regression)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지만 추정 후 잔차가 정상적이라면 수준 변수에 의한 회귀분석도 정당화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로그 수준 변수와 그 차분인 로그 차분(증가율) 변수를 종속변수로 하는 분석을 모두 수행할 것이다. 로그 수준 변수의 경우 종속변수 및 통화량에 대해서 'ln(수준변수의 이동평균)'을 사용하고, 증가율 변수 분석에서는 '(증가율 변수의 이동평균)'을 사용한다.

경제적 불균등을 나타내는 다양한 지표가 있지만 본고에서는 시계열의 길이를 감안하여 가장 많은 시계열 자료의 확보가 가능한 지표를 선정하여 분석한다. 이에 '가계동향조사'에서 나오는 도시2인 이상 또는 전국2인 이상 전체가구의 총소득과 근로소득의 각 분위 집단의 정보를 사용할 것이다.⁹⁾ 전자는 1996년 3분기부터 2019년 1분기까지, 후자는 2003년 1분기부터 2019년 1분기까지의 분기별 시계열 자료를 얻을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이들 소득의 10분위 집단에서 최상위 및 최하위 집단의 소득 배수를 경제적 불균등 지표로 활용할 것이다. 예를 들어, S90은 소득 10분위의 10개 집단 중 가장 높은 10분위 집단의 평균 소득이고, S10은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 집단의 평균 소득인데, S90/S10을 본고에서는 '분위소득배수'로 정의하여 사용한다. 강건성 검증을 위하여 S80/S20로 표시하는 분위소득배수도 사용하는데, 여기서 S80은 소득이 높은 집단 우선 순서로 두 번째 집단의 평균소득, S20은 소득이 낮은 집단 우선 순서로

8) 시계열에 내재된 비정상성의 양상은 다양하다. 그 원인이 추세(trend)일 수도 있고, 시간에 따른 구조적 변화(structural change)일 수도 있다. 또는 특정 임계치(threshold)를 중심으로 한 구조 변화일 수도 있다. 추세가 원인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확정적 추세(deterministic trend)인지 확률적 추세(stochastic trend)인지 분간하기 어렵다.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단위근 검정(예를 들어, ADF 검정)은 순전히 확률적 추세를 고려한 제한적 모형에 근거한다. 확률적 추세 계열 중에서도 이른바 Hodrick-Prescott 필터와 같이 저주파 필터링을 해야 정상성을 갖는 순환 변동치가 얻어지는 경우도 있다. 아울러, 하나의 모형에서 일부 변수는 수준 자체이고 다른 일부 변수는 차분한 것이라면 추정 결과의 해석도 명확하지 않다. 수준이 증가하는 것과 차분이 증가하는 것은 엄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9) 이 자료에서 총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및 이전소득의 합인 경상소득과 비경상소득의 합이다. 토지 임대료는 재산소득에 포함되고, 오피스텔 및 주택 등과 같은 다른 부동산 자산의 임대료는 사업소득에 포함된다. 이자 및 배당소득과 같은 금융자산에서 얻는 소득은 재산소득으로 계상된다. 결국, 총소득은 노동을 통해 얻는 근로소득 이외에 주식 및 부동산 자산에서 얻는 소득을 일정 부분 포함한다.

두 번째 집단의 평균소득을 의미한다. 이들 분기별 관찰치에 대해서 4분기 이동 평균을 종속변수로 사용한다.

다른 주요한 종속변수는 자산가격인데, 이러한 자산가격 지표로는 주식 자산을 대리하기 위해 KOSPI, KOSPI200 지수를 사용하고, 부동산 자산을 대리하기 위해 서울아파트가격지수, 지방아파트가격지수, 전국아파트가격지수, 서울토지가격지수, 지방토지가격지수, 전국토지가격 지수 등을 사용할 것이다. 앞서 경제적 불균등 지표와 마찬가지로 분기별 관찰치에 대해서 4분기 이동평균을 종속변수로 사용한다.

주요한 설명변수는 통화량 M1이다. 우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통화량 M1은 집계 방식의 통일성을 위하여 MMF를 포함한 값을 사용한다. 이러한 방법은 현재 공식적인 M1 집계 방식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익일 환매되는 MMF는 유동성이 매우 높은 자산이므로 통화 유동성에 포함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통화량 M1의 분기별 관찰치는 월말값의 평균값으로 취한다. 그런 후, 통화량 M1의 잠재적인 단기, 중기, 장기 효과를 감안하여 과거 12분기, 그 이전 12분기, 다시 그 이전 12분기의 이동평균을 설명변수로 사용한다.

통제변수로는 경제적 불균등에 관한 분석에서는 실질GDP, GDP대비총재정지출 및 실업률을 사용하였다. 자산가격 분석에서는 실질GDP, 실질실효환율 및 통화안정증권(1년물) 금리를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자료는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서 추출하였다. 다만, 통화량 M1과 통화안정증권(1년물) 금리는 한국은행 통계시스템(ECOS)에서 추출하였고, 아파트가격 및 토지가격지수 등의 부동산 가격 관련지수는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r-one)에서 입수하였다. 주가지수는 한국거래소(KRX) 홈페이지에서 얻을 수 있다.

2. 통화량이 경제적 불균등에 미치는 효과 분석

(1) 수준변수 분석

도시2인 이상 전체가구의 총소득 및 근로소득에서 분위소득배수 $S90_t/S10_t$ 또는 $S80_t/S20_t$ 및 전국2인 이상 전체가구의 총소득 및 근로소득에서 분위소득배수 $S90_t/S10_t$ 또는 $S80_t/S20_t$ 를 분석한다. 종속변수는 이들 변수에 대해서 4개 분기 이동평균의 로그값이다. 주요 설명변수는 통화량 M1으로 총 12분기의 이동평균 값을 사용하였다. 즉, M1의 시차 및 누적된 중장기적 효과를 감안하여 다음의 3

가지를 함께 각각의 설명변수로 고려한다.

$$\begin{aligned}
 \bullet \ln M1_t^s &= \ln \left(\frac{M1_t + M1_{t-1} + \dots + M1_{t-11}}{12} \right) \\
 \bullet \ln M1_t^m &= \ln \left(\frac{M1_{t-12} + M1_{t-13} + \dots + M1_{t-23}}{12} \right) \\
 \bullet \ln M1_t^l &= \ln \left(\frac{M1_{t-24} + M1_{t-25} + \dots + M1_{t-35}}{12} \right)
 \end{aligned}$$

※ 위에서 $M1_t$ 는 t 기의 M1을 의미

통제변수로 로그 실질GDP, 로그 GDP대비재정총지출 및 실업률 증감을 고려하며, 분기별 효과를 반영하기 위해 분기별 더미로 통제하였다. 아울러, 경제위기 시기를 통제하기 위해 IMF위기 1997-1998년, 카드채 사태 2003-2004년, 글로벌 금융위기 2007-2008년에 1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를 설명변수에 추가하였다. 계수는 OLS로 추정하고 잔차의 계열 상관을 고려하여 HAC 공식으로 표준오차를 산출하였다. 나아가, 가성회귀 여부를 진단하기 위해 잔차에 대한 단위근 검정 결과도 함께 제시한다.

추정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주요 변수인 통화량의 경우 유의하지 않거나 양의 값으로 유의하게 나왔다. 모형 (1)은 $\ln M1_t^l$, 모형 (3)은 $\ln M1_t^s$ 와 $\ln M1_t^l$, 모형 (4)는 $\ln M1_t^s$, 모형 (6)은 $\ln M1_t^s$, 모형 (7)은 $\ln M1_t^s$, 모형 (8)은 $\ln M1_t^s$ 와 $\ln M1_t^m$ 의 계수가 양의 값으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이들 변수 및 종속변수가 모두 이동평균이므로 그 계수 추정치를 명확하게 해석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모형 (3)은 통화량이 단기적으로(12분기 이동평균) 또는 장기적으로(24분기 전 12분기 이동평균) 지난 4분기간 평균 도시2인 이상 전체가구 $S90_t/S10_t$ 를 더 증가시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방향성으로는 통화량 증가가 소득 불균등을 더욱 악화시킨 것이며, 그 효과는 단기적, 장기적인 반응으로 나타난 것이다. 각각 로그를 취했으므로, 지난 12분기 통화량 M1의 이동평균이 1% 증가시 지난 4분기간 평균 도시2인 이상 전체가구 $S90_t/S10_t$ 를 0.76% 증가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24분기 전 통화량 M1의 12분기 이동평균이 1% 증가하면, 지난 4분기간 평균 도시2인 이상 전체가구 $S90_t/S10_t$ 가 0.8%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외생 통제변수로 모형에 설명변수로 포함된 변수들은 실질GDP, 재정지출, 실업률 등을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 이들 변수는 소득 분배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

칠 개연성이 있는 변수들이다. 재정지출이나 실업율은 모든 모형설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실질GDP는 음(-)의 값으로 유의하다. 이는 경제성장에 따라 소득 불균형이 개선됨을 의미한다.

한편, <표 1>에는 각 통화량 변수 $\ln M1_t^s$, $\ln M1_t^m$, $\ln M1_t^l$ 의 계수 합에 대한 유의성 검정결과도 수록되어 있다. 이들 계수 합은 통화량의 분위소득배수에 대한 단기, 중기, 장기적 효과의 합이다. 모든 모형설정에서 그 합은 예외 없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잔차에 대한 Dickey-Fuller 검정 결과는 모형 (5)와 (6)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형에서는 잔차에 '단위근이 있다는 귀무가설을 비교적 강하게 기각한다.

전반적으로 <표 1>에서 통화량의 증가는 소득 불균등을 악화시키며, 그 효과는 단기, 중기, 장기에 걸쳐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추론할 수 있다.

<표 1> 통화량의 분위소득배수에 대한 단기, 중기, 장기 효과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

로그 수준 변수

	도시2인 이상 전체가구 로그총소득 S90 _t /S10 _t	도시2인 이상 전체가구 로그총소득 S80 _t /S20 _t	도시2인 이상 전체가구 로그 근로소득 S90 _t /S10 _t	도시2인 이상 전체가구 로그 근로소득 S80 _t /S20 _t	전국2인 이상 전체가구 로그 총소득 S90 _t /S10 _t	전국2인 이상 전체가구 로그 총소득 S80 _t /S20 _t	전국2인 이상 전체가구 로그 근로소득 S90 _t /S10 _t	전국2인 이상 전체가구 로그 근로소득 S80 _t /S20 _t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모형 (5)	모형 (6)	모형 (7)	모형 (8)
$\ln M1_t^s$	0.1636 (0.20)	0.2183 (0.16)	0.7615** (0.38)	0.3876* (0.20)	0.2499 (0.20)	0.2690* (0.15)	0.9275** (0.44)	0.5035** (0.22)
$\ln M1_t^m$	0.5513 (0.52)	0.4163 (0.39)	0.8376 (0.96)	0.7920 (0.50)	0.5284 (0.51)	0.4619 (0.38)	1.0675 (1.08)	0.9337* (0.52)
$\ln M1_t^l$	0.4061* (0.24)	0.2342 (0.18)	0.7982* (0.44)	0.2216 (0.23)	0.2242 (0.23)	0.1069 (0.17)	0.4141 (0.48)	-0.0288 (0.24)
로그실질 GDP _t	-2.8973*** (0.94)	-2.1297*** (0.74)	-5.1803*** (1.63)	-2.8504*** (0.77)	-2.7075*** (0.89)	-2.0985*** (0.68)	-5.2530*** (1.73)	-2.9079*** (0.81)
로그GDP대비 재정총지출 _t	-0.0589 (0.08)	-0.0600 (0.06)	-0.0303 (0.15)	-0.0133 (0.08)	-0.0280 (0.08)	-0.0392 (0.06)	0.0316 (0.16)	0.0037 (0.09)

	도시2인 이상 전체가구 로그총소득 S90 _t /S10 _t	도시2인 이상 전체가구 로그총소득 S80 _t /S20 _t	도시2인 이상 전체가구 로그 근로소득 S90 _t /S10 _t	도시2인 이상 전체가구 로그 근로소득 S80 _t /S20 _t	전국2인 이상 전체가구 로그 총소득 S90 _t /S10 _t	전국2인 이상 전체가구 로그 총소득 S80 _t /S20 _t	전국2인 이상 전체가구 로그 근로소득 S90 _t /S10 _t	전국2인 이상 전체가구 로그 근로소득 S80 _t /S20 _t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모형 (5)	모형 (6)	모형 (7)	모형 (8)
실업률증감 _t	-0.0199 (0.03)	-0.0142 (0.02)	-0.0302 (0.06)	-0.0117 (0.03)	-0.0215 (0.03)	-0.0137 (0.02)	-0.0395 (0.07)	-0.0142 (0.04)
상수	25.1404*** (7.03)	17.9497*** (5.53)	38.4172*** (12.20)	20.5414*** (5.94)	24.1039*** (6.73)	17.8509*** (5.14)	38.9437*** (12.95)	21.0701*** (6.26)
분기더미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위기더미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표본크기	55	55	55	55	55	55	55	55
표본기간 (원 분기별 자료 기준)	2005.2Q - 2018.4Q	2005.2Q - 2018.4Q	2005.2Q - 2018.4Q	2005.2Q - 2018.4Q	2005.2Q - 2018.4Q	2005.2Q - 2018.4Q	2005.2Q - 2018.4Q	2005.2Q - 2018.4Q
F [P-값]	14.73 [0.0000]	6.48 [0.0000]	25.99 [0.0000]	24.44 [0.0000]	6.53 [0.0000]	5.49 [0.0000]	6.44 [0.0000]	9.84 [0.0000]
lnM1 _t ^s , lnM1 _t ^m , lnM1 _t ^l 각 계수의 합 [F-값에 대한 p-값]	1.1210*** [0.0000]	0.8688*** [0.0059]	2.3973*** [0.0001]	1.4012*** [0.0002]	1.0025*** [0.0069]	0.8377* [0.0574]	2.4090** [0.0209]	1.4083*** [0.0012]
잔차에 대한 Dickey-Fuller 검정통계량	-3.457***	-3.191***	-3.815***	-3.898***	-1.594	-1.066	-1.797*	-1.654*

- 1) 종속변수는 도시2인이상 또는 전국2인이상 전체가구 총소득 및 근로소득의 4개 분기 이동평균이다.
- 2) 괄호 ()의 수치는 Newey-West 강건 표준오차를 나타낸다. Newey-West 추정시 과거 시차는 3으로 설정하였다.
- 3) $\ln M1_t^s = \ln \left(\frac{M1_t + M1_{t-1} + \dots + M1_{t-11}}{12} \right)$, $\ln M1_t^m = \ln \left(\frac{M1_{t-12} + M1_{t-13} + \dots + M1_{t-23}}{12} \right)$,
 $\ln M1_t^l = \ln \left(\frac{M1_{t-24} + M1_{t-25} + \dots + M1_{t-35}}{12} \right)$
- 4) 위기더미는 IMF위기 1997-1998년, 카드채 사태 2003-2004년, 글로벌 금융위기 2007-2008년에 1의 값을 갖는다.
- 5) *, **, ***는 각각 양측 10%, 5%,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낸다.
- 6) Dickey-Fuller 검정통계량의 1% 임계치는 약 -2.6, 5% 임계치는 약 -1.95, 10% 임계치는 약 -1.61

(2) 증가율 변수 분석

각 시계열의 잠재적 비정상성을 감안하여 수준변수나 로그 수준변수가 아닌 증가율 변수(즉 로그 차분)를 회귀분석 하였다. 종속변수는 앞서와 마찬가지로, 종속변수는 도시2인이상 전체가구 또는 전국2인이상 전체가구의 총소득 및 근로 소득 $S90_t/S10_t$ 또는 $S80_t/S20_t$ 의 분기간 증가율의 4개 분기 이동평균이다.

통화량 역시 M1증가율의 이동평균을 사용하였는데, 총 12분기의 이동평균값을 사용하였다. 각 단기, 중기, 장기 효과를 감안하여 아래의 3가지 변수를 설명 변수로 고려한다.

$$\begin{aligned} \bullet R_t^s &= \frac{r_t^{M1} + r_{t-1}^{M1} + \dots + r_{t-11}^{M1}}{12} \\ \bullet R_t^m &= \frac{r_{t-12}^{M1} + r_{t-13}^{M1} + \dots + r_{t-23}^{M1}}{12} \\ \bullet R_t^l &= \frac{r_{t-24}^{M1} + r_{t-25}^{M1} + \dots + r_{t-35}^{M1}}{12} \end{aligned}$$

※ 위에서 r_t^{M1} 은 t 기의 전기 대비 M1의 증가율을 의미

기타 통제변수로 실질GDP 증가율, GDP대비재정총지출 증가율 및 실업률 증감 및 분기더미, 위기더미를 고려한다. 모든 증가율의 단위는 %이다.

<표 2>의 추정 결과를 살펴보면, 통화량 증가율 변수는 대부분에서 유의하지 않다. 다만, 모형 (4)와 (8)에서 변수 R_t^m 의 계수가 양의 값으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왔다. 모형 (4)의 경우 12분기 전 12분기 M1 증가율 이동평균이 1% 포인트 증가하면, 지난 4개 분기간 평균 도시2인이상 전체가구 $S80_t/S20_t$ 가 1.39% 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통화량 증가에 따른 소득 불균등 악화에 대한 증거로 증가율 변수 분석의 결과는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다. 하지만, 앞서 로그 수준 변수 분석, 증가율 변수 분석에서 공히 통화량 증가로 인해 분위소득배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소득 불균등을 개선하는 방향)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결과는 없다. 아울러, 각 통화량의 단기, 중기, 장기 영향을 나타내는 계수의 합도 양의 값이긴 하지만 유의하지는 않다. 기타, 통제 변수도 모두 유의하지 않다. 유의하지 않더라도 통제할 필요는 있다고 판단된다.

〈표 2〉 통화량의 분위소득배수에 대한 단기, 중기, 장기 효과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
로그 차분(증가율) 변수

	도시2인 이상 전체가구 총소득 S90/S10 증가율 _t	도시2인 이상 전체가구 총소득 S80/S20 증가율 _t	도시2인 이상 전체가구 근로소득 S90/S10 증가율 _t	도시2인 이상 전체가구 근로소득 S80/S20 증가율 _t	전국2인 이상 전체가구 총소득 S90/S10 증가율 _t	전국2인 이상 전체가구 총소득 S80/S20 증가율 _t	전국2인 이상 전체가구 근로소득 S90/S10 증가율 _t	전국2인 이상 전체가구 근로소득 S80/S20 증가율 _t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모형 (5)	모형 (6)	모형 (7)	모형 (8)
R_t^s	0.1829 (0.65)	0.2694 (0.41)	0.7847 (1.38)	0.4256 (0.85)	0.1299 (0.70)	0.2439 (0.43)	0.8771 (1.53)	0.4735 (0.96)
R_t^m	0.9756 (0.69)	0.7532 (0.47)	1.9931 (1.35)	1.3893* (0.78)	0.9746 (0.68)	0.7823 (0.47)	2.3416 (1.40)	1.6019* (0.83)
R_t^l	-0.1496 (0.65)	-0.1379 (0.44)	-0.6374 (1.25)	-0.8682 (0.77)	-0.4457 (0.68)	-0.3766 (0.46)	-1.5663 (1.45)	-1.2920 (0.85)
실질GDP증가율 _t	-0.2692 (0.16)	-0.1535 (0.09)	-0.3267 (0.37)	-0.0037 (0.19)	-0.1370 (0.17)	-0.0844 (0.10)	0.0418 (0.38)	0.1663 (0.21)
GDP대비재정총 지출증가율 _t	0.0156 (0.02)	0.0029 (0.01)	0.0448 (0.04)	0.0048 (0.03)	0.0187 (0.02)	0.0051 (0.01)	0.0429 (0.05)	0.0095 (0.03)
실업률증감 _t	-1.3877 (1.70)	-0.7416 (1.14)	-2.1723 (3.60)	-0.4817 (2.18)	-1.5030 (1.72)	-0.8007 (1.14)	-2.3146 (4.06)	-0.7469 (2.42)
상수	-0.1195 (2.52)	-0.3529 (1.72)	-1.3475 (4.68)	-0.7031 (2.84)	0.0964 (2.41)	-0.1776 (1.65)	-1.1850 (4.80)	-0.8772 (3.16)
분기더미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위기더미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표본크기	54	54	54	54	54	54	54	54
표본기간 (원 분기별 자료 기준)	2005.3Q - 2018.4Q	2005.3Q - 2018.4Q	2005.3Q - 2018.4Q	2005.3Q - 2018.4Q	2005.3Q - 2018.4Q	2005.3Q - 2018.4Q	2005.3Q - 2018.4Q	2005.3Q - 2018.4Q
F [P-값]	1.78 [0.0946]	1.32 [0.2533]	1.56 [0.1532]	2.06 [0.0502]	1.48 [0.1811]	1.47 [0.1843]	2.11 [0.0442]	1.81 [0.0881]
R_t^s , R_t^m , R_t^l 각 계수의 합 [F-값에 대한 p-값]	1.0089 [0.3476]	0.8847 [0.2012]	2.1404 [0.3129]	0.9466 [0.1964]	0.6588 [0.4100]	0.6496 [0.1897]	1.6524 [0.2191]	0.7833 [0.1200]

- 1) 종속변수는 도시2인이상 또는 전국2인이상 전체가구 총소득 및 근로소득 분기별 증가율의 4개 분기 이동평균이다.
- 2) 괄호 ()의 수치는 Newey-West 강건 표준오차를 나타낸다. Newey-West 추정시 과거 시차는 3으로 설정하였다.
- 3) $R_t^s = \frac{r_{t-12}^{M1} + r_{t-11}^{M1} + \dots + r_{t-11}^{M1}}{12}$, $R_t^m = \frac{r_{t-12}^{M1} + r_{t-13}^{M1} + \dots + r_{t-23}^{M1}}{12}$, $R_t^l = \frac{r_{t-24}^{M1} + r_{t-25}^{M1} + \dots + r_{t-35}^{M1}}{12}$
- 4) 위기더미는 IMF위기 1997-1998년, 카드채 사태 2003-2004년, 글로벌 금융위기 2007-2008년에 1의 값을 갖는다.
- 5) *, **, ***는 각각 양측 10%, 5%,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낸다.

4. 통화량이 주식 및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효과 분석

이 절에서는 앞서 사용했던 방법론을 준용하고 동일한 모형에서 변수들을 바꾸어 통화량이 주식 및 부동산 자산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실증분석 한다. 마찬가지로 로그 수준 변수 및 로그 차분(증감율) 변수를 분석한다.

(1) 수준변수 분석

자산가격 지수로 주식 시장을 대리하기 위해 KOSPI 및 KOSPI200 지수를 활용하고, 부동산 시장을 대리하기 위해 서울아파트가격지수, 지방아파트가격지수, 전국아파트가격지수, 서울토지가격지수, 지방토지가격지수, 전국토지가격지수 등을 사용한다.¹⁰⁾ t 기의 가격 지수를 P_t 라고 할 때, 종속변수는 과거 4기 이동평균에 로그를 취한 $\ln((P_t + P_{t-1} + P_{t-2} + P_{t-3})/4)$ 이다. 한편, 앞서 통화량에 대해서 정의한 $M1_t^s$, $M1_t^m$, $M1_t^l$ 은 동일하다. 통제변수로 로그 실질GDP, 로그 실질실효환율, 통안채 1년물 금리 증감, 분기더미, 위기더미를 고려하였다. 추정 결과는 아래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에서 보면, 설명변수 $\ln M1_t^m$, $\ln M1_t^l$ 이 많은 모형에서 양의 값으로 유의하다. 예외적으로 지방아파트가격지수가 종속변수인 모형 (4)에서는 음의 값으로 유의하다. 또한 이들 $\ln M1_t^s$, $\ln M1_t^m$, $\ln M1_t^l$ 3가지 변수 계수의 합은 모형(1)과 모형(4)를 제외하고 모두 양의 값으로 유의하다. 잔차에 대한 Dickey-Fuller 검정 통계량은 모형 (7)에서만 유의하지 않다. 나머지 모형에서는 모두 잔차의 단위근 존재를 기각한다.

<표 3>에서 모형 (3)을 추정 결과를 바탕으로 해석해 보자. 12분기 전 통화량 M1의 12분기 이동평균이 1% 상승하면, 금기의 과거 4개 분기간 평균 서울아파트 가격 지수는 0.6% 상승한다. 아울러, 24분기 전 통화량 M1의 12분기 이동평균이 1% 상승하면, 금기의 과거 4개 분기간 평균 서울아파트 가격 지수는 0.7% 상승한다. 통화량의 증가가 시차를 두고 중기적, 장기적으로 서울아파트가격을 상승시키는 것이다. 주식시장을 대리하여 주가지수를 사용한 모형 (1)에서는 24분기 전 통화량 M1의 12분기 이동평균이 1% 상승하면, 금기의 과거 4개 분기간 평균 KOSPI 지수는 0.8% 상승하는 것으로 나왔다. 모형 (2)로부터 24분기 전 통화량 M1의 12분기 이동평균이 1% 상승하면, 금기의 과거 4개 분기간 평균

10) 모든 자산가격 지수는 GDP 디플레이터로 디플레이트하여 실질가격지수가 되도록 하였다.

KOSPI200 지수는 1.2% 상승한다. 통화량의 증가가 시차를 두고 장기적으로 주가를 상승시키는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추가로 중요한 사실은 통화량의 증가가 단기적으로 예외 없이 주가나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킨다는 증거가 없었다. 그 효과는 시차를 두고 나타난다. 이러한 시차의 존재는 유동성 여력이 높아 자산 보유 기간이 긴 부유층에게 자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아울러, 지방아파트가격지수에는 통화량이 중기적으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는 통화 유동성의 확대가 서울과 지방간 아파트 가격을 더욱 괴리시키는 요인임을 시사한다. 최근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이 강세에도 불구하고 지방 아파트 가격은 하락하는 현상과도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표 3〉 통화량의 자산가격에 대한 단기, 중기, 장기 효과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
로그 수준 변수

	로그실질 코스피 지수 _t	로그실질 코스피200 지수 _t	로그실질 서울 아파트 가격지수 _t	로그실질 지방 아파트 가격지수 _t	로그실질 전국 아파트 가격지수 _t	로그실질 서울토지 가격지수 _t	로그실질 지방토지 가격지수 _t	로그실질 전국토지 가격지수 _t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모형 (5)	모형 (6)	모형 (7)	모형 (8)
$\ln M1_t^s$	-0.3311 (0.32)	-0.2329 (0.36)	0.1666 (0.19)	-0.1269 (0.18)	-0.0337 (0.06)	0.0367 (0.05)	-0.0407 (0.05)	0.0405 (0.03)
$\ln M1_t^m$	-0.5401 (0.61)	-0.6845 (0.69)	0.5910* (0.31)	-0.6852** (0.31)	-0.0128 (0.10)	0.4966*** (0.08)	0.3086*** (0.03)	0.3673*** (0.05)
$\ln M1_t^l$	0.7987* (0.40)	1.2021** (0.53)	0.7010** (0.30)	0.0430 (0.30)	0.3402*** (0.12)	0.0559 (0.08)	0.1892*** (0.06)	-0.0018 (0.06)
로그실질GDP _t	0.8452 (1.73)	-0.2839 (2.16)	-3.4876*** (0.76)	2.3925*** (0.82)	-0.4421 (0.43)	-1.1853*** (0.28)	-0.6312*** (0.13)	-0.8490*** (0.22)
로그실질 실효환율 _t	0.6456* (0.33)	0.8818** (0.39)	0.0113 (0.25)	0.2011 (0.21)	0.0731 (0.10)	0.0116 (0.07)	-0.0278 (0.02)	0.0409 (0.05)
통화안정증권 (1년물)증감 _t	-0.0295 (0.03)	-0.0261 (0.04)	0.0263* (0.01)	-0.0534*** (0.02)	-0.0153*** (0.00)	-0.0032 (0.01)	-0.0102 (0.01)	-0.0047 (0.00)
상수	-5.0201 (12.12)	1.6991 (15.38)	30.1489*** (5.55)	-17.0040*** (6.22)	6.0571* (3.13)	11.9466*** (1.98)	6.7958*** (1.38)	9.8868*** (1.53)
분기더미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위기더미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미포함	포함
표본크기	55	55	55	55	55	55	26	55
표본기간 (원 분기별 자료 기준)	2005.2Q - 2018.4Q	2005.2Q - 2018.4Q	2005.2Q - 2018.4Q	2005.2Q - 2018.4Q	2005.2Q - 2018.4Q	2005.2Q - 2018.4Q	2012.3Q - 2018.4Q	2005.2Q - 2018.4Q

	로그실질 코스피 지수 _t	로그실질 코스피200 지수 _t	로그실질 서울 아파트 가격지수 _t	로그실질 지방 아파트 가격지수 _t	로그실질 전국 아파트 가격지수 _t	로그실질 서울토지 가격지수 _t	로그실질 지방토지 가격지수 _t	로그실질 전국토지 가격지수 _t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모형 (5)	모형 (6)	모형 (7)	모형 (8)
F [P-값]	17.23 [0.0000]	16.96 [0.0000]	14.27 [0.0000]	52.37 [0.0000]	75.62 [0.0000]	29.13 [0.0000]	404.19 [0.0000]	42.86 [0.0000]
$\ln M1_t^s$, $\ln M1_t^m$, $\ln M1_t^l$ 각 계수의 합 [F-값에 대한 p-값]	-0.0725*** [0.0043]	0.2845*** [0.0038]	1.4585*** [0.0000]	-0.7690*** [0.0056]	0.2937*** [0.0067]	0.5892*** [0.0000]	0.4570*** [0.0000]	0.4060*** [0.0000]
잔차에 대한 Dickey-Fuller검 정통계량	-5.096***	-4.739***	-4.460***	-3.838***	-4.162***	-4.972***	-1.407	-4.630***

- 1) 주가지수와 토지가격지수(서울 및 전국)는 1996년 3/4분기-2019년 1/4분기까지, 지방토지가격지수는 2011년 4/4분기-2019년 1/4분기까지, 아파트가격지수(서울, 지방 및 전국)는 2004년 1/4분기-2019년 1/4분기까지 각각 4분기씩 이동평균한 로그값이다.
- 2) 괄호 ()의 수치는 Newey-West 강건 표준오차를 나타낸다. Newey-West 추정시 과거 시차는 3으로 설정하였다.
- 3) $\ln M1_t^s = \ln \left(\frac{M1_t + M1_{t-1} + \dots + M1_{t-11}}{12} \right)$,
 $\ln M1_t^m = \ln \left(\frac{M1_{t-12} + M1_{t-13} + \dots + M1_{t-23}}{12} \right)$,
 $\ln M1_t^l = \ln \left(\frac{M1_{t-24} + M1_{t-25} + \dots + M1_{t-35}}{12} \right)$
- 4) 위기더미는 IMF위기 1997-1998년, 카드채 사태 2003-2004년, 글로벌 금융위기 2007-2008년에 1의 값을 갖는다.
- 5) *, **, ***는 각각 양측 10%, 5%,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낸다.
- 6) Dickey-Fuller 검정통계량의 1% 임계치는 약 -2.6, 5% 임계치는 약 -1.95, 10% 임계치는 약 -1.6

통화량이 과연 서울과 지방간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치는가 여부도 중요한 연구 대상이다. 앞서 언급한 Cantillon의 주장은 통화량 증가로 불균등한 가격 상승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물가에 비해 자산가격이 더욱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것도 그러한 현상으로 이해 가능하고, 부동산 자산군 내에서도 지역별(특히 서울과 지방)로 격차를 보이는 것도 그러한 현상이다. 만일, 그렇다면, 통화량 증가는 서민층과 부유층간 부와 소득의 불균등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서울과 지방 간 부와 소득 불균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표 4>에는 전국 또는 지방 대비 서울의 아파트 및 토지 가격 배수를 분석한 결과이다. 예를 들어, 모형 (4)의 종속변수는 서울아파트가격지수_t/지방아파트가격지수_t의 4개 분기 이동평균한 후의 로그 값이다. 결과를 보면, 모형 (1)-(4) 전반에 걸쳐 통화량의 중기적 영향을 나타내는 계수는 양(+)의 값으로 유의하다.¹¹⁾ 아울러, 모든 모형 설정에서 통화량의 단기, 중기, 장기적 영향을 나타내는 계수의 합은 양의 값으로 유의하다는 것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 4〉 통화량의 서울과 지방간 자산가격 배수에 대한 단기, 중기, 장기 효과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 로그 수준 변수

	로그실질 전국대비 서울아파트 가격지수 _t	로그실질 지방대비 서울아파트 가격지수 _t	로그실질 전국대비 서울토지 가격지수 _t	로그실질 지방대비 서울토지 가격지수 _t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ln M1_t^s$	0.2003 (0.19)	0.2935 (0.35)	-0.0038 (0.02)	0.1095* (0.05)
$\ln M1_t^m$	0.6038* (0.31)	1.2762** (0.56)	0.1293*** (0.03)	0.1318*** (0.03)
$\ln M1_t^l$	0.3608 (0.29)	0.6580 (0.56)	0.0577 (0.04)	-0.1329* (0.07)
로그실질GDP _t	-3.0455*** (0.80)	-5.8801*** (1.42)	-0.3363*** (0.10)	-0.3383** (0.14)
로그실질실효환율 _t	-0.0618 (0.22)	-0.1898 (0.42)	-0.0293 (0.03)	-0.0339* (0.02)
통화안정증권 (1년물)증감 _t	0.0416** (0.02)	0.0796** (0.03)	0.0014 (0.00)	-0.0043 (0.01)
상수	24.0918*** (6.06)	47.1529*** (10.76)	2.0598*** (0.71)	3.6606** (1.55)
분기더미	포함	포함	포함	포함
위기더미	포함	포함	포함	미포함
표본크기	55	55	55	26
표본기간 (원 분기별 자료 기준)	2005.2Q - 2018.4Q	2005.2Q - 2018.4Q	2005.2Q - 2018.4Q	2012.3Q - 2018.4Q
F	14.46	22.44	45.96	24.81
[P-값]	[0.0000]	[0.0000]	[0.0000]	[0.0000]
$\ln M1_t^s$, $\ln M1_t^m$, $\ln M1_t^l$ 각 계수의 합	1.1648*** [0.0009]	2.2276*** [0.0000]	0.1832*** [0.0000]	0.1083*** [0.0015]
[F-값에 대한 p-값]				
잔차에 대한 Dickey-Fuller검정통계량	-3.976***	-4.616***	-3.519***	-0.804

11) 예외적으로 모형 (4)에서 $\ln M1_t^l$ 은 음의 값으로 양측 10%에서 유의하다. 해당 모형은 잔차의 단위근 존재도 기각하지 못한다.

- 1) 주가지수와 토지가격지수(서울 및 전국)는 1996년 3/4분기-2019년 1/4분기까지, 지방토지가격지수는 2011년 4/4분기-2019년 1/4분기까지, 아파트가격지수(서울, 지방 및 전국)는 2004년 1/4분기-2019년 1/4분기까지 각각 4분기씩 이동평균한 로그값이다.
- 2) 괄호 ()의 수치는 Newey-West 강건 표준오차를 나타낸다. Newey-West 추정시 과거 시차는 3으로 설정하였다.
- 3) $\ln M1_t^s = \ln \left(\frac{M1_t + M1_{t-1} + \dots + M1_{t-11}}{12} \right)$, $\ln M1_t^m = \ln \left(\frac{M1_{t-12} + M1_{t-13} + \dots + M1_{t-23}}{12} \right)$,
 $\ln M1_t^l = \ln \left(\frac{M1_{t-24} + M1_{t-25} + \dots + M1_{t-35}}{12} \right)$
- 4) 위기더미는 IMF위기 1997-1998년, 카드채 사태 2003-2004년, 글로벌 금융위기 2007-2008년에 1의 값을 갖는다.
- 5) *, **, ***는 각각 양측 10%, 5%,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낸다.
- 6) Dickey-Fuller 검정통계량의 1% 임계치는 약 -2.6, 5% 임계치는 약 -1.95, 10% 임계치는 약 -1.61

(2) 증가율 변수 분석

<표 5>는 각 자산가격 지수의 증감율을 분석한 것이다. 종속변수는 각 자산가격 지수의 분기별 증가율의 과거 4분기 이동평균이다. 통화량에 관한 3가지 증가율 이동평균도 앞서 분석과 동일하다. 표를 보면, 앞서 분석된 내용과 질적으로 유사한 결과가 나온 것을 알 수 있다.¹²⁾ 예외가 있으나, 통화량 증감율은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주가 및 부동산 가격 증감율에 양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왔다. 아울러, R_t^s , R_t^m , R_t^l 계수의 합은 모형 (4)와 (5)를 제외하면 모두 양의 값으로 유의하다.

12) 증감율 분석에서는 증감율을 떨어뜨리는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가격 수준 자체를 떨어뜨리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증감율이 떨어지면서도 가격은 상승할 수도 있다.

〈표 5〉 통화량의 자산가격에 대한 단기, 중기, 장기 효과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
로그 차분(증감율) 변수

	실질 코스피 지수 증가율 _t	실질 코스피200 지수 증가율 _t	실질서울 아파트 가격지수 증가율 _t	실질지방 아파트 가격지수 증가율 _t	실질전국 아파트 가격지수 증가율 _t	실질서울 토지가격 지수 증가율 _t	실질지방 토지가격 지수 증가율 _t	실질전국 토지가격 지수 증가율 _t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모형 (5)	모형 (6)	모형 (7)	모형 (8)
R_t^s	0.3892 (0.53)	0.4510 (0.66)	0.8951*** (0.20)	-0.5752* (0.30)	0.1664 (0.25)	0.2855* (0.15)	0.1160 (0.07)	0.1818 (0.13)
R_t^m	0.4759 (0.46)	0.4563 (0.46)	1.0557*** (0.21)	-0.4831 (0.32)	0.2477 (0.24)	0.6226*** (0.13)	0.4698*** (0.07)	0.4672*** (0.10)
R_t^l	1.0224*** (0.32)	1.2641*** (0.31)	0.0330 (0.17)	0.0896 (0.23)	0.0442 (0.17)	-0.3141* (0.18)	0.0814 (0.12)	-0.2742* (0.15)
실질GDP 증가율 _t	1.7183*** (0.35)	1.6262*** (0.35)	0.1381** (0.07)	0.1638 (0.10)	0.1527* (0.09)	0.2494*** (0.09)	-0.2138 (0.12)	0.1827** (0.07)
실질실효환율 증가율 _t	0.1327 (0.12)	0.1196 (0.13)	0.0064 (0.03)	-0.0648* (0.03)	-0.0071 (0.03)	-0.0223 (0.02)	0.0344** (0.01)	-0.0209 (0.02)
통화안정증권 (1년물)증감 _t	1.8102* (1.04)	1.9719* (1.00)	-0.4180 (0.26)	0.3899 (0.39)	-0.1418 (0.30)	-0.1258 (0.25)	-0.5088 (0.32)	-0.0620 (0.20)
상수	-7.9882*** (1.98)	-8.2462*** (2.01)	-4.4009*** (0.94)	2.1920* (1.27)	-1.1732 (1.03)	-1.8034*** (0.65)	-0.4515 (0.52)	-1.1916** (0.52)
분기더미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위기더미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미포함	포함
표본크기	54	54	54	54	54	54	25	54
표본기간 (원 분기별 자료 기준)	2005.3Q - 2018.4Q	2005.3Q - 2018.4Q	2005.3Q - 2018.4Q	2005.3Q - 2018.4Q	2005.3Q - 2018.4Q	2005.3Q - 2018.4Q	2012.4Q - 2018.4Q	2005.3Q - 2018.4Q
F [P-값]	102.22 [0.0000]	87.74 [0.0000]	24.13 [0.0000]	1.84 [0.0814]	4.49 [0.0002]	7.99 [0.0000]	12.07 [0.0000]	4.95 [0.0001]
R_t^s , R_t^m , R_t^l 각 계수의 합 [F-값에 대한 p-값]	1.8875** [0.0149]	2.1713*** [0.0015]	1.9837*** [0.0000]	-0.9686 [0.2730]	0.4583 [0.7063]	0.5939*** [0.0005]	0.6671*** [0.0000]	0.3748*** [0.0006]

- 1) 추가지수와 토지가격지수(서울 및 전국)는 1996년 3/4분기-2019년 1/4분기까지, 지방토지가격지수는 2011년 4/4분기-2019년 1/4분기까지, 아파트가격지수(서울, 지방 및 전국)는 2004년 1/4분기-2019년 1/4분기까지 각각 로그차분증감율의 4분기씩 이동평균한 값이다.
- 2) 괄호 ()의 수치는 Newey-West 강건 표준오차를 나타낸다. Newey-West 추정시 과거 시차는 3으로 설정하였다.
- 3) $R_t^s = \frac{r_t^{M1} + r_{t-1}^{M1} + \dots + r_{t-11}^{M1}}{12}$, $R_t^m = \frac{r_{t-12}^{M1} + r_{t-13}^{M1} + \dots + r_{t-23}^{M1}}{12}$, $R_t^l = \frac{r_{t-24}^{M1} + r_{t-25}^{M1} + \dots + r_{t-35}^{M1}}{12}$
- 4) 위기더미는 IMF위기 1997-1998년, 카드채 사태 2003-2004년, 글로벌 금융위기 2007-2008년에 1의 값을 갖는다.
- 5) *, **, ***는 각각 양측 10%, 5%,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낸다.

V. 결 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을 중심으로 팽창적 통화정책이 중요한 화두였다. 양적완화라는 비전통적 통화 팽창 정책도 등장했다. 한국 경제에서도 전반적으로 통화는 팽창적인 기조를 유지해왔고, 2008년 이후로는 세계적 조류에 맞추어 파격적인 저금리와 통화팽창을 경험하게 된다. 물론 이러한 팽창적 통화정책의 목표는 경기 부양이다. 팽창적 통화정책에 팽창적 재정정책까지 결합되었다. 그러한 정부와 중앙은행의 팽창 정책의 경기부양 여부가 경제학에서 중요한 주제인 것은 분명하지만, 통화 팽창 정책이 일반 재화 대비 자산가격을 더욱 상승시키고, 결과적으로 경제적 불균등을 저해할 수 있는 개연성, 즉 그러한 팽창적 통화 정책의 부수적 효과(또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학계의 관심이 크지 않았다. 하지만, 2020년인 지금도 코로나19 위기와 함께 통화는 크게 팽창 중이고, 정부가 가계지원금을 지급할 정도로 심각한 경기침체이지만 주가와 부동산 가격은 다시 상승하고 있는 중이다.

통화가 중립적이라면 팽창된 통화는 인플레이를 유발하지만 모든 재화, 서비스, 자산들의 가격도 비례적으로 균등하게 인플레이션율만큼 상승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자산을 많이 보유한 계층과 그렇지 않은 계층 간 부와 소득의 격차는 더욱 커지게 된다. 본고의 실증분석 결과는 이를 뒷받침한다. 즉, 본 연구에서는 통화량의 누적적 증가는 시차를 두고 부와 소득의 불균등을 악화시키고, 주식이나 부동산 자산가격을 상승시킨다는 점을 지지하는 실증적 증거를 제시하였다. 팽창적 통화 정책의 경기 부양 효과로 인해 일반 서민 계층의 경제적 상황이 나아질 수는 있어도, 결국은 부유층과의 격차는 점차 더 벌어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자산가격 채널이 유발한다고 보았고, 이에 집중하여 분석하였다. 추가적으로, 통화량의 증가는 서울과 지방간 부동산 가격의 격차를 증대시킨다는 근거도 발견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정부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및 거시경제 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여겨진다. 점차 한국 경제에서도 부와 소득의 격차 및 불균등은 심화되어 가는 것은 분명하다. 서울과 지방간 부동산 자산가격 괴리도 진행 중이며 최근 그 현상이 더욱 부각되는 중이다. 모든 경제 정책에는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 단점(기회비용, 부작용)이 있다. 팽창된 통화는 어떠한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팽창적 통화정책의 부작용은 간과할 사안은 아닐 것이다. 그러한 부작용은 현 정부가 표방하는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 성장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게 한다.

참고문헌

국문 자료

- 김영도. 2017. “자산가격경로를 통한 통화정책의 유효성에 대한 고찰.” 『KIF연구보고서』 2017(12), 1-109.
- 남광희. 2006. “자산가격 변동과 통화정책.” 『경제연구』 24(3), 1-25.
- 박종욱. 2018. “Monetary Policy and Income Inequality in Korea.” 『BOK경제연구』 2018(27), 1-54.
- 안재욱. 2009. “통화팽창과 비생산적인 소득재분배.” 『한국경제연구원칼럼』 1-2.
- 이근영. 2007. “통화정책이 금융자산가격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 경우.” 『응용경제』 9(1), 37-64.
- 이선호·황진영. 2017. “한국의 금융시장 불안정성과 소득불평등: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을 중심으로.” 『재정정책논집』 19(2), 117-134.
- 이철승·정준호. 2018. “세대간 자산 이전과 세대 내 불평등의 증대 1990-2016.” 『동향과전망』 2018(104), 316-373.
- 전병유. 2016. “한국의 자산 불평등.” 『일간복지동향』 216, 18-27.
- 최지욱. 2017. “통화정책이 소득불균형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경제학석사 학위논문』 1-31.
- 통계청. 2019. “소득분배지표 이해하기.” 사회통계국 복지통계과.
- 한국금융연구원. 2012. “신용 양극화로 인한 경기부양 효과 감소: 미국 통화정책의 한계.” 21(27), 18-19.

영문 자료

- Ampudia, Dimitris Georgarakos, Jiri Slacalek, Oreste Tristani, Philip Vermeulen and Giovanni L. Violante. 2018. “Monetary policy and household inequality.” *ECB Working Paper* No. 2170, 1-38.
- Bernanke, B. 2012. “Monetary Policy since the Onset of the Crisis.” Remarks Delivered at the FRB Kansas City Economic Symposium, Jackson Hole, Wyoming, August 31.
- Borio, Claudio and Piti Disyatat. 2010. “Unconventional monetary policies: an appraisal.” *The Manchester School* 78, 53-89.
- Bunn, Philip, Alice Pugh, and Chris Yeates. 2018. “The distributional impact of monetary policy easing in the UK between 2008 and 2014.” *Working*

Paper No. 720, Bank of England.

- Clark, Steven P. and T. Daniel Coggin. 2011. "Are U.S. stock prices mean reverting? Some new tests using fractional integration models with overlapping data and structural breaks." *Empirical Economics* 40, 373-391.
- Coibion, O., Y. Gorodnichenko, L. Kueng, and J. Silvia. 2017. "Innocent Bystanders? Monetary policy and inequality."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88, 70-89.
- Colciago, Andrea, Anna Samarina, and Jakob de Haan. 2019. "Central bank policies and income and wealth inequality: A survey." *Journal of Economic Surveys* 33(4), 1199-1231.
- Cravino, Javier, Ting Lan, and Andrei A. Levchenko. 2020. "Price stickiness along the income distribution and the effects of monetary policy."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110, 19-32.
- Deutsche Bundesbank. 2016. "Distributional effects of monetary policy." *Deutsche Bundesbank Monthly Report*, 1-36.
- Furceri, Davide, Prakash Loungani, and Aleksandra Zdzenicka. 2018. "The effects of monetary policy shocks on inequality." *Journal of International Money and Finance* 85, 168-186.
- Gambacorta, Leonardo, Boris Hofmann, and Gert Peersman. 2014. "The Effectiveness of Unconventional Monetary Policy at the Zero Lower Bound: A Cross-Country Analysis." *Journal of Money, Credit and Banking* 46, 615-642.
- Harri, Ardian and B. Wade Brorsen. 1998. "The Overlapping Data Problem." Available at SSRN: <https://ssrn.com/abstract=76460>.
- Hansen, L.P. and R.J. Hodrick. 1980. "Forward exchange rates as optimal predictors of future spot rate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8, 829 - 853.
- Inui, Nao Sudo and Tomoaki Yamada. 2017. "The effects of monetary policy shocks on inequality in JAPAN." *BIS Working Paper* No. 642, 1-68.
- Kim, S. 2019. "Quality, price stickiness, and monetary policy." *Journal of Macroeconomics* 61, 103-129.
- Mishkin, F. 1995. "Symposium on the Monetary Transmission mechanism."

-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9(4), 3-10.
- Newey, Whitney K and Kenneth D. West. 1987. "A Simple Positive Semi-Definite, Heteroskedasticity and Autocorrelation Consistent Covariance Matrix." *Econometrica* 55, 703-708.
- Panetta, F. 2015. "The Distributional Consequences of Monetary Policy." *Remarks at Netherlands Bank* 20, 1-16.
- Romer, Christina and David Romer. 1998. "Monetary policy and the well-being of the poor." *NBER Working Paper Series* No. w6793, 1-64.

Abstract

Expansionary Monetary Policy and Wealth and Income Inequality

Jae Hyun Bae ■ Korea Institute of Finance

Ki Beom Binh ■ Myongji University

Kyoung Gook Park ■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8, central banks around the world have implemented an extremely expansionary monetary policy that significantly increases money supply to stimulate the economy. This is a common phenomenon on developed countries. Likewise, Republic of Korea has experienced a similar phenomenon. In this paper, we focus on the economic inequality which can be potentially caused by expansionary monetary policy. The empirical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increase in the amount of M1 seems to exacerbate the income inequality of total household income and earned income of cities(or nationwide). Second, the increase in the amount of M1 increases the stock and real estate prices over a period of three years or more over in the mid-long run. As a result, the wealth of the rich increased unevenly due to expansionary monetary policy. Thus, monetary authorities (or central banks) should examine and recognize the side effects of expansionary monetary policy, even if it stimulates the economic activities.

Key Words: Monetary policy, Money circulation volume, Asset price, Economic inequality

한국의 마그레브 연구 동향*

이한규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문요약〉

본 연구는 국내의 마그레브 연구 현황을 통해 토대연구의 문제점과 향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연구이다. 본고는 마그레브와 관련된 311편의 등재·등재후보지에 게재된 논문을 중심으로 '시기별 현황(372편)', '분야별 현황' 그리고 '주제별 현황'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마그레브 5개국(모리타니,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 리비아)에 관한 국내의 국가별, 분야별, 주제별 연구가 일부 국가와 일부 주제에 편중되어 있어 마그레브에 관한 국내의 토대연구 성찰이 절실하다. 특히 마그레브는 이슬람 문화권이지만, 아프리카 일부라는 점에서 국내 아랍(중동) 전공자들과 밀접히 연계되어 있음에도 '올타리식 연구'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마그레브 토대연구 활성화는 학제 간 연구가 우선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중요하다.

*주제어: 아프리카 지역연구, 마그레브, 이슬람 문화, 토대연구

I. 들어가기

2006년 이후 한국의 아프리카에 관한 관심이 학계, 시민사회 그리고 정부에서 활발해지면서 아프리카에 관한 연구가 질적·양적으로 성장하였으며, 이에 대한 성찰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조원빈 2012; 한건수 2013; 황규득 2016; 홍명희 2016). 아프리카는 55개 국가로 형성되어 있으며, 언어, 문화, 종교, 사회현상

* 본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5B8070773). 논문의 완성도를 위해 유익한 논평을 해준 세분의 심사위원에게 감사드린다.

** 한국외국어대학교 아프리카연구소 HK연구교수 (E-mail: afrleek@hanmail.net)

도 다양하며 이질적이라는 점에서 연구의 분야와 주제도 매우 다양하다. 현재 아프리카는 각 지역공동체 기구에 의해서 5개 지역으로 대략 나누어진다. 그중 북아프리카는 아랍연맹에 속하면서도 마그레브(Maghrerb)라는 지역적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마그레브 용어는 아랍어로 ‘해가 지는 나라’에서 유래하며, 초기에는 모로코, 알제리와 튀니지만을 마그레브 국가라고 하였으나 최근에는 모리타니, 리비아를 합쳐 ‘대마그레브’로 정의한다.¹⁾ 하지만 마그레브라는 단어가 국내에 본격적으로 널리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탈냉전 이후다. 대우가 1978년 리비아의 가리니우스(Garyounis) 의과대학 신축과²⁾ 대수로 공사 참여로 아프리카 진출에 대한 큰 이슈를 제공했지만, 국내 대중매체에서는 마그레브라는 용어보다는 ‘리비아’ 혹은 ‘중동 국가’에 더 익숙했다.³⁾ 하지만 21세기에 이제 마그레브는 또 다른 아프리카를 상징하고, 지역 특성을 나타내는 용어가 되었다.

2010년 아프리카에 ‘제2의 민주화 바람’을 일으킨 튀니지의 ‘채스민 혁명’은 마그레브 정치 지형을 바꾸어 놓았다.⁴⁾ 마그레브는 지정학적인 램 랜드 지역으로 유럽이 아프리카 중앙 랜드로 진출하기 위해 혹은 아프리카가 유럽내륙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전략 지역이다(Toumi 1988). 특히 마그레브는 이슬람 문화권으로⁵⁾ 유럽의 기독교 문화와 아프리카 다양한 문화가 교차하고 혼성하는 지역이다(Laroui 1993). 이러한 점에서 유럽, 특히 프랑스에서는 오래전부터 마그레브에 관한 학문적 연구가 꾸준히 활성화되었다.

- 1) 마그레브 국가들은 사회적·문화적·언어적·종교적 공통성이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유럽의 식민지배 경험을 바탕으로 역사적 공동운명체와 정치적·경제적 유대에 대한 열망이 있었다. 하지만 독립 이후에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체제를 유지하면서 언어와 종교 문화를 제외하고 공동연대를 위한 기반은 약해졌다(Laroui 1993).
- 2) 리비아 건설시장을 주도했던 대우건설은 1978년 가리니우스 의과대학 신축공사를 포함하여 주택과 도로 건설, 공장 건설 등의 프로젝트를 수행했는데 총 22억 달러였다(서기열 2019). 이 의과대학은 2011년 민주화 이후 벤가지(Benghazi) 대학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 3) 마그레브 용어가 제목으로 일반저널에서 처음 등장한 것은 1959년 5월호에 도마스 호지킨의 “佛蘭西와 마그립”을 소개한 『思想界』이다. 이후 1971년 대한무역진흥공사의 『무역진흥』에서 “마그레브(Maghreb) 諸國의 市場(튀니시아篇)”이 출간되었다. 그러나 학술논문의 제목에서 마그레브 용어가 사용된 것은 최진영의 연구가 대표적이다(최진영 1997).
- 4) 아프리카 ‘제1의 민주화 바람’은 1990년부터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에서 시작되었다.
- 5) 마그레브를 ‘중동’과 같은 범주에 포함하는 것은 지정학적 문제를 고려할 때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는 연구 영역의 다름 문제가 아니라 북아프리카인의 정체성 문제를 아프리카인의 입장으로 얼마나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자의 자세가 매우 중요함을 의미한다.

탈냉전 이후 국내의 아프리카에 관한 관심이 학계, 사회(NGO), 정부를 중심으로 증가하면서 학술연구, 학위 논문, 전문 혹은 교양서적 등의 질적·양적 생산이 늘어났다. 본 연구는 국내의 '마그레브 연구'에 더 나은 활성화와 지역 전문성을 높이고, 균형적인 토대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의 마그레브 연구 동향을 검토하고, 자료 제공, 학제 간 연구의 가능성 유추, 정부의 연구지원 정책 개선 등에 시사점을 주고자 한다. 특히 한국의 아프리카 지역연구를 전체 대륙이 아닌 지역권 사례 연구로 검토할 필요성에서 출발하였으며, 그 첫 시도가 북아프리카 마그레브 지역의 국내연구 현황 분석과 문제점, 해결 방안의 제시다. 특히 이러한 제시는 "여러분과 학문 연구자들이 서로의 방법론을 이해하고 보완해 나감으로써"(한건수 2013, 170) 건강한 마그레브 토대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의 마그레브 토대연구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 분석에 초점을 맞추어서 시기별, 분야별 그리고 주제별 연구 동향을 살펴본다. 더불어 본 논문이 향후 아프리카 권역별 연구 방향에 관한 논의의 시발점이 되고, 정부의 대외협력과 기업진출에 필요한 정책적 논의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II장에서는 현재까지 국내의 마그레브 권역별 연구가 없으므로 아프리카 전체를 대상으로 한 국내의 아프리카 지역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본 연구의 필요성을 살펴보았다. 분석의 틀로는 정량적 분석 방법론을 제시한다. III장에서는 372편 논문을 바탕으로 시기별, 분야별과 주제별 분석을 통해 국내의 연구 동향을 분석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국내의 사하라 이남 지역뿐만 아니라 마그레브 지역 토대연구 방법론과 방향에 도움이 될 연구 내용의 일부를 간략한 논평과 함께 소개한다. IV장은 국내의 마그레브 토대연구 진작을 위한 현재 연구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성찰과 본 연구의 문제점을 통해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논하고자 한다.

II. 선행연구검토 및 연구방법론

1. 선행연구검토

국내의 아프리카 연구 현황은 박원탁(1996)에 의해 처음으로 연구되었으나 최

근 들어 다시 조명되고 있다. 조원빈(2012)은 아프리카의 정치·경제 상황 그리고 한국과의 교역 관계와 관련하여 사회과학 분야를 중심으로 출간된 전문학술지, 학위 논문, 저서 등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저자는 주제가 다양해졌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인류학적으로 아프리카지역 연구 현황을 분석한 한건수(2013)는 분과학문으로 아프리카 연구가 어떠한 방법으로 이론적으로, 방법론적으로 발전해야 하는지를 논하였고, 국내연구의 ‘편향성’ 개선과 ‘초보적 사태’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또한, 홍명희(2016, 383)는 학위 논문과 학술논문 대부분이 개인적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초보적인 수준’에 있음을 비판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한건수와 마찬가지로 연구 분야의 편향성과 연구자들 간의 학문적 교류 문제를 국내의 아프리카 연구 향후 과제로 보았다. 황규득(2016)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한 국내의 아프리카 연구 동향을 세대별, 분야별, 지역별로 학술연구, 학위 논문, 저서 등을 바탕으로 분석하였는데 혹평하기도 하였다. 그에 따르면, 국내의 아프리카 연구(특히 학위 논문)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일관된 분석 틀과 개념화를 통한 연구이기보다는 서술적 방법을 통한 개론적 수준”(2016, 172)에 있다고 본다.

이처럼 아프리카 지역연구 성찰의 필요성이 다양하게 나타났지만, 이들 연구 대부분이 일부 분야(사회과학)와 일부 지역(사하라 이남)에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슬람 문화권 마그레브 지역을 같은 범주에서 논의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요컨대 마그레브는 언어적, 문화적, 사회적, 종교적 상황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과는 달라서 어느 정도는 분리되어 연구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최종철(2010)은 아프리카 전체가 아닌 알제리에 관한 국내연구 동향에 초점을 맞추어 누가 중요한 연구자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정치, 경제, 경제, 문학 및 문화, 역사(교육) 부분의 국내연구 동향을 연구자들의 논문 일부를 인용하면서, 정성적·정량적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저자는 ‘인문·사회과학적 기초연구’가 없이 연구가 이루어진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최종철 2010, 198).

중동 연구 현황에 관한 논문은 두 편이 생산되었다. 하병주(2002)는 “중동 연구의 새로운 지평” 논문에서 국내의 아랍 연구 분야의 연구 시스템 특징과 최근 동향 및 국내의 중동 연구 개발을 위한 솔루션에 관해 연구하였다. 하지만 북아프리카에 관해 어떤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논의는 크게 다루지 않았다. 다른 한편 안정국(2015)의 논문 “한국 중동학 현황에 관한 연구: 연구자 분석을 중심으로”는 국내의 6개 기관에 속한 연구자의 동향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저자는 중동 연구자들의 열악한 연구환경으로 인한 전공과 거의 또는 전혀 관련이 없는 분야에서 일한다는 점을 부각하였다. 이 연구는 중동 연구 개발을

위한 향후 지원과 지침을 제공하고 있지 특별하게 국내의 마그레브 연구 개발을 위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볼 때, 본 연구는 마그레브를 특화하여 국내의 연구 현황과 문제점을 제시하는 국내 첫 연구일 것이다.

2. 연구방법론

아프리카에 관한 국내연구는 다양하지만, 정량적인 측면에서 극심한 편차를 보인다. 예를 들어, 이집트는 등재·등재후보지에 게재된 논문이 아프리카연합 회원국 기준으로 55개국 중 310편으로 가장 많지만,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에리트레아, 스와질란드, 레소토, 세이셸, 코모로 국가에 관한 단일 연구는 한 편도 생산되지 않았다. 10편 이하의 국가가 32개로 아프리카 전체 국가의 58%를 차지한다. 국내의 한정된 아프리카 전문가로 인한 연구 인력 부족과 한국의 '선택과 집중' 대외정책(자원외교, 수출시장 확보, ODA 정책 등)으로 인한 일부 국가에 대한 편중이 주요한 요인이다(이한규 2009). 따라서 지역연구 현황에 관한 기존의 연구 결과가 과연 모든 아프리카 국가에도 해당하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아프리카 전체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 권역별 즉, 지역공동체 기구 회원국(북부, 중부, 동부, 서부, 남부)을 대상으로 지역연구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를 다른 권역으로 확대 연구하여 대륙 전체를 통시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⁶⁾ 아프리카는 '하나' 혹은 '몇몇 국가'로 설명되고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국내의 한정된 전문 인력과 정부의 열악한 연구 지원 그리고 아프리카 55개국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모든 국가를 연구할 수도 없으며, 이러한 연구를 수행한다고 해도 비능률적이거나 피상적일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권역별 연구 현황을 분석하고 발전시키면서 이러한 과정에서 연구되지 않은 분야 혹은 국가에 관한 토대연구의 필요성 및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권역별 지역연구는 두 가지 장점이 있다. 첫 번째는 권역에 속한 국가들 대부분

6) 아프리카에는 크고 작은 50개의 지역 기구들이 존재한다. 어느 정도 활성화된 주요 지역 기구로는 서아프리카 경제통합체(ECOWAS: 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s), 중남부아프리카 공동시장(ECCAS: Economic Community of Central African States), 중앙아프리카 경제통화 공동체(CEMAC: Communauté Économique et Monétaire de l'Afrique Centrale), 동아프리카 공동체(EAC: East African Community), 남부아프리카 개발공동체(SADC: South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 아랍마그레브연합(AMU: Arab Maghreb Union) 등이 있다(이한규 2015, 229-297).

분은 소지역 협력기구를 통해서 경제·정치적 협력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마그레브 지역은 사하라 이남의 지역과 달리 아랍문화와 언어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교연구를 통한 학제 간 공동연구가 가능하고 지역이해가 더 용이하다.⁷⁾ 두 번째는 지역공동체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연구 영역이 좁아지고, 이를 통해 심도 있는 연구가 가능하다. 또한, 현재 기능하고 있는 지역공동체 기구의 이해와 이를 통해 한국의 다자적 협력관계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기본적 목적은 권역을 중심으로 한 국내연구의 현황을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기존 아프리카 연구의 장단점을 보완하여 국내의 마그레브 토대연구에 대한 성찰을 가지기 위해서다. 이는 다른 지역의 연구 활성화에도 접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목적으로 국내의 마그레브 연구 현황을 ‘시기별 현황’, ‘분야별 현황’ 그리고 ‘주제별 현황’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를 위해 주로 전문가가 많이 이용하고 있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보다는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국회도서관 홈페이지 ‘전자도서관검색’을 이용하여 마그레브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취합하였다.⁸⁾ 첫 번째 과정에서는 마그레브와 마그레브 각 국가 이름의 키워드로 등재·등재후보지에 게재된 365편의 논문을 일차 취합하였다. 두 번째 과정에서는 365편 중 중복된 논문을 제외한 311편을 선정하여 이 논문들을 시기, 분야, 주제별로 정리했다.⁹⁾ 세 번째는 마그레브 연구의 ‘시기별 현황’ 작업을 위해 1955년부터 2019년까지 등재·등재후보지를 제외한 일반학술지에 게재된 541편의 논문 중 15쪽 이상의 논문 61편을 선정하였다.¹⁰⁾ 따라서 본 연구를 위해 최종적으로 취합한 논문은 총 372편이다.

하지만 372편 논문은 마그레브 연구의 ‘시기별 현황’ 분석에서만 활용하고, 분야 및 주제별 현황 파악에서는 등재·등재후보지에 게재된 311편의 논문만을 활

7) 일반적으로 아프리카 모든 국가 내에는 수십 개에서 수백 개의 민족집단이 있어 다양한 문화와 고유한 언어를 가지고 있다. 마그레브 지역도 예외는 아니다. 알제리는 33개, 모로코 42개, 모리타니 18개, 튀니지 16개, 리비아 12개 민족집단이 있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이 아랍문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아랍어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권역별 연구에서 강점이 있다. 반면 사하라 이남의 4개 권역별(동부, 서부, 중부, 남부) 연구에는 신중하고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

8) 일반 저서는 제외했으며, 석박사학위는 숫자만 제시하였다.

9) 중복의 대부분 경우는 여러 국가를 예시로 연구하거나, 마그레브를 제목으로 하지만, 부재로 국가 이름을 추가한 경우다.

10) 본 글에서는 등재·등재후보지와 일반학술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임의로 일반학술지(a)와 일반학술지(b)로 구분하였다. 일반학술지(a)는 15쪽 이상의 논문이다. 그러나 정부기관 혹은 정책 기관에서 발행한 정책 연구, 국가 혹은 현황 자료 중심의 학술지는 제외하였다. 단, 대학 혹은 대학 연구소 발행 논문은 포함하였다.

용한다. 왜냐하면, 일반학술지에 실린 61편의 논문은 연속성이 없고, 논문 편수가 많지 않아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없다. 끝으로 본 연구의 일차 목적은 정량적 평가지만, 분야 혹은 주제별 접근에서 시사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대표 논문 내용의 일부를 구체적인 분석 없이 개괄적으로 소개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취합한 모든 논문은 엄격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심사되어 등재·등재후보지에 게재된 것이라는 점에서 선별하여 개괄적으로 검토한 논문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성적 평가는 하지 않는다.

III. 국내의 마그레브 지역연구 현황

국내의 마그레브 지역연구는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기존의 사하라 이남 지역을 대상으로 한 분야별 연구 결과와는 차이가 있다(한건수 2013; 황규득 2016).

〈그림 1〉 국내의 아프리카 연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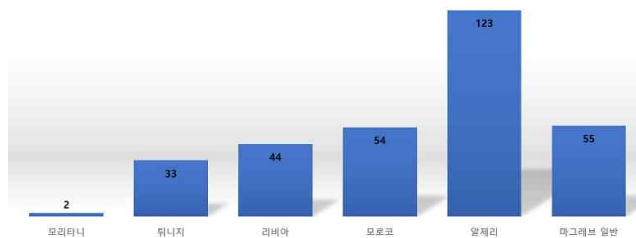
출처: 국회도서관 홈페이지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함.

석박사 학위 논문 생산은 마그레브 외 북아프리카 지역(이집트, 수단)이 191편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남아프리카 지역으로 141편, 그리고 마그레브 지역이 130편이다. 전반적으로 국내에서 일반인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마그레브 지역에 관한 연구가 다른 지역과 비교해 많이 연구되었다.

1. 국내의 시기별 연구 현황

마그레브 지역에 관한 시기별 연구 현황은 학술지 유형에 따라 다르다. 마그레브 지역연구에 대한 본 조사는 국회도서관 홈페이지에서 2019년 12월까지의 ‘등재지·등재 후보지’를 토대로 했다. 하지만, 한국연구재단의 등재지·등재후보지 시스템 도입은 1998년이라서 이전에 생산된 일부 학술논문이 현재 등재지·등재후보지에 게재된 논문과 비교해 질적·양적으로 큰 차이가 없음에도 본 연구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리비아에 관한 학술연구 조사에서 등재지·등재후보지에 총 44편이 있다. 그러나 ‘일반학술지’에는 3배가 넘는 191편이 생산되었으며, ‘일반학술지(a)’에 게재된 논문은 23편이며, ‘일반학술지(b)’에는 168편이 있다. 마그레브 전체로는 541편이 ‘일반학술지’로 생산되었고, 61편만이 15쪽 이상으로 학회, 대학 연구소, 기업협회, 정책연구소 등에서 출간되었다. 따라서 국내의 마그레브 연구 현황에서 한국연구재단이 연구실적 평가 대상으로 하는 등재지·등재후보지로 한정하는 경우, 1998년 이전의 연구실적이 반영되지 못하여 ‘연구 추세’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할 수가 없다.

〈그림 2〉 마그레브 국가별 연구 현황



출처: 국회도서관 홈페이지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함.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의 ‘시기별’ 연구 분석에서는 15쪽 이상의 일반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도 정량적으로 검토하였다. 일반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 학위 논문을 제외하고 65%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마그레브 지역에 관한 연구뿐만 아니라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에 관한 연구에서도 나타나는 일반적 현상이다.

‘일반학술지(b)’는 1955년에 思想界社에서 발행한 “모로코의 民族運動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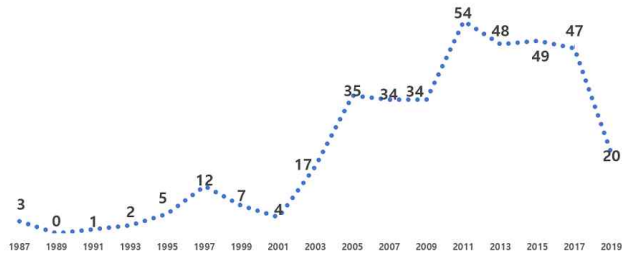
논문으로 총 6쪽이다.¹¹⁾ 반면, 첫 ‘일반학술지(a)’는 1979년 외무부가 발행한 “阿中東地域”이다. 하지만 이 연구는 학술적이라기보다는 정책 간행물이라는 점에서 김종수(1982)의 “국유화 사건 중재판단: 최근의 국제판례 연구의 일례: 리비아 국유화를 중심으로”를 첫 연구일 것이다. 최초의 학위 논문은 1969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으로 원철의 “獨逸 外交政策과 第一次 모로코 事件(1905),”이다. 이후 1997년에 생산된 최진영(1997)의 “마그립 지역의 다중언어 현상에 대한 연구”가 등재지·등재 후보지 기준으로 첫 번째 연구 성과물이다.¹²⁾ 저자는 튀니지, 알제리, 모로코에서 나타나는 이중언어현상(Bilingualism)의 사회·언어학적 특징을 연구하였다. 특히 현지 조사로 연구한 이 논문에서 저자는 “다중언어현상의 특성을 이중언어 사용성의 기준인 언어·사회·문화적 요소로 구분한 결과, 다언어사회에서 개인이나 언어 집단 간의 통합, 격리, 탈 문화화 등의 문화 변용의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이것은 언어와 집단 정체성 간의 관계는 정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요인에 따라 변한다는 사실”(최진영 1997, 92)을 보여주고 있다.

일반학술지(b)에 게재된 논문과 학위 논문을 제외하고 한국연구재단 등재·등재 후보지와 일반학술지(a)에 게재된 논문의 시기별 연구 동향은 <그림 3>과 같다. 총 372편을 대상으로 시기별 논문 현황을 보면(<그림 3>), 2000년대부터 마그레브에 관한 국내 연구가 양적으로 급격하게 상승하였다. 1970~1980년대에 총 3편의 논문이 생산되었는데 모로코(1편)와 리비아(2편)에 대한 것이다. 2000년 이전 논문이 일반학술지(a)에 게재된 것을 포함하면 27편이다. 특히 한국 정부는 모로코 및 이집트와 1960년대에 수교했고, 1980년대 수교한 리비아는 대수로 건설이라는 경제협력의 이해관계가 있으면서도, 세 국가 모두 학계 관심에서 벗어나 있었다.

11) 이 논문 제목은 국내 외국어 표기법과 맞지는 않지만, 원제목에 충실하기 위해서 저자가 표기한 명사 “모로코”를 그대로 반영하였다. 이와같이 유사한 표기가 분석 대상 논문에서 자주 발견된다. 예를 들어, ‘마그레브’가 ‘마그립’ 혹은 ‘마그렙’으로 표기되었다.

12) 연구재단의 등재·등재 후보지 제도는 이미 언급한 것처럼 1998년부터이지만, 국회도서관 자료 구분에는 ‘등재(후보) 학술지’로 분류되어 있다.

〈그림 3〉 시기별 연구 현황



출처: 국회도서관 홈페이지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함.

1987~1998년까지 사회과학 논문은 15편이 생산되었으며 경제 분야가 5편이다.¹³⁾ 그러나 대부분 연구가 정책 연구 중심이다. 인문과학 논문은 8편이다(<표 1> 참조). 국내의 마그레브에 관한 연구가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보다 10년 정도 늦은 2000년대부터이며 대부분 연구가 이 시기에 이루어졌다. 2000년 이전의 학술논문은 총 30편이지만, 이후 연구된 논문은 342편이다(<표 1>). 결과적으로 2000년대 마그레브에 관한 국내연구가 양적으로 증가하였다는 점에서 아프리카 전체를 대상으로 하면, 권역 연구에서 마그레브에 관한 국내 연구가 잘 진척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더욱이 1990년 이전에는 국제관계와 사회문제에 관한 연구가 한 편도 없었지만, 사회문제를 다룬 논문은 30편이 생산되었고, 국제관계와 관련한 연구 성과는 35편에 이른다. 1990년 이전에 2편이었던 언어에 관한 연구는 28편으로 증가하였다.

13) 이 부분에서 1998년으로 연도를 한정된 것은 한국연구재단의 등재지·등재 후보지 제도가 시행된 시기를 반영한 것이다.

〈표 1〉 마그레브 지역연구 성과의 주제별 현황

구분	사회과학				인문과학				기타	합계	%
	정치	국제	경제	사회	언어	문학	문화	역사			
1987-88	2	-	-	-	1	-	-	-	-	3	0.8
1989-90	-	-	-	-	-	-	-	-	-	0	0.0
1991-92	-	-	-	-	-	-	-	1	-	1	0.3
1993-94	-	-	1	-	-	-	1	-	-	2	0.5
1995-96	3	-	2	-	-	-	-	-	-	5	1.3
1997-98	5	-	2	-	1	1	1	2	-	12	3.2
1999-00	2	-	-	-	-	2	2	1	-	7	1.9
2001-02	-	-	1	-	-	1	1	1	-	4	1.1
2003-04	1	-	1	7	1	4	-	3	-	17	4.6
2005-06	6	3	7	6	3	2	5	3	-	35	9.4
2007-08	1	5	12	1	-	4	8	2	1	34	9.1
2009-10	2	1	4	3	5	7	10	2	-	34	9.1
2011-12	19	6	1	2	4	11	7	4	-	54	14.5
2013-14	6	8	7	2	5	10	7	2	1	48	13.0
2015-17	10	4	4	5	6	6	5	7	2	49	13.2
2017-18	9	5	6	3	4	4	9	5	2	47	12.6
2019	8	3	2	1	-	2	4	-	-	20	5.4
합계	74	35	50	30	30	54	60	33	6	372	100.0
%	19.9	9.4	13.4	8.1	8.1	14.5	16.1	8.9	1.6	-	100.0

출처: 국회도서관 홈페이지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함.

이처럼 국내의 마그레브 지역에 관한 총 372편의 논문 중 345편(92%)이 2000~2010년대에 생산된 것은 정부의 아프리카 정책이 학계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요인을 두 가지로 추정한다. 첫째, 한국은 할슈타인 원칙에 의해 적대 국가(북한 및 사회주의 국가)와 수교한 국가와는 수교하지 않았다. 탈냉전

이전, 마그레브 국가와 수교한 국가는 모로코(1962), 튀니지(1963) 그리고 리비아(1980)이고, 사회주의를 지향했던 알제리와는 1990년 그리고 이집트와는 1995년에 수교가 이루어졌다. 1982년 전두환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이 있었지만, 획기적인 외교 및 경제협력(리비아 제외)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국내의 아프리카 연구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¹⁴⁾ 이후 한국 정상으로는 24년 만인 2006년 노무현 대통령이 이집트, 알제리, 나이지리아를 순방하고, 처음으로 다자협력 포럼인 한-아프리카 포럼(Korea-Africa Forum)을 같은 해 11월 서울에서 개최하였다.¹⁵⁾ 이를 계기로 정부와 학계에서는 모리타니를 제외하고 알제리뿐만 아니라 다른 마그레브 국가에 관한 정책 개발 연구와 학술연구가 활성화되었다. 예를 들어, 한국 정부는 국내에서 마그레브 국가 중 학술적으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알제리와 1990년 수교를 했다. 하지만 2006년 노무현 대통령의 알제리 방문 이전까지 등재·등재 후보지에 게재된 논문은 17년 동안(1990~2006) 35편이다. 1년에 두 편의 논문이 생산되었다. 반면, 2006년 대통령의 아프리카 방문과 중동 및 북아프리카에서 민주화 바람이 서서히 불기 시작한 2007년부터 2019년 9월까지 109편의 논문이 생산되어 연간 8.3편의 논문이 출간되었다.

둘째, 다른 북아프리카와 함께 마그레브 국가들은 학문적 분류에서 중동으로 되어있다. 이러한 편제는 이렇다 할 연구 성과 없이 아프리카 전문 학자와 중동 전문 학자 간의 마그레브 지역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만 불러일으켰다. 1990년 이전 한국의국어대학교 중동연구소(1976), 한국중동학회(1979), 아프리카연구소(1982) 등이 설립되었지만, 1989년 이전까지 이들 연구소와 학회에서 발행된 마그레브 관련 논문은 한국중동학회에서 발행한 『韓國中東學會論叢』에 게재된 이규철(1987)의 논문 한 편뿐이다.¹⁶⁾ 물론 국내 아프리카 전문가가 극소수라는 점에서 이 시기에 연구가 많이 생산되지 못한 것도 있지만, 같은 시기에 중동 연구와 비교할 때¹⁷⁾ 마그레브 지역이 학문적으로 소외되거나 무관심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2009년 배재대학교 북아프리카 마그레브 연구소 창설, 2007년 한국

14) 전두환 대통령은 1982년 8월 한국 정상으로는 최초로 아프리카 4개국(케냐·나이지리아·가봉·세네갈)을 순방하였다. 하지만 할슈타인 원칙을 고수했던 박정희 정부의 반공 외교 정책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15) 한-아프리카 포럼은 2016년부터 3년마다 개최하였으며 제5차 한-아프리카 포럼은 2018년에 시행되었다. 그러나 이후 한-아프리카 포럼은 5년을 주기로 개최할 예정이다.

16) 본 논문은 같은 해에 같은 제목으로 『外大語文論集』에 게재되었다.

17) 1989년 이전까지 중동(북아프리카 지역 제외)에 관한 논문이 일반학술지(a)에 139편, 일반학술지(b)에 837편 게재되었다. 70년대의 중동 건설이 학계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한다.

연구재단의 지원(인문한국사업(HK))을 받은 부산외국어대학교 지중해 연구원과 2010년 한국외국어대학 아프리카연구소의 마그레브 연구, 한양대학교 신흥지역 지원 사업, 경희대학교의 토대연구 등은 마그레브 지역 관심에 영향을 미쳤다.

이미 언급했듯이, 국내연구에서 오래 소외된 아프리카, 특히 마그레브 지역연구가 증가한 것은 2006년 노무현 대통령의 알제리 방문과 한-아프리카 포럼 개최, 정부의 대외정책 변화 등이 중대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첫째, 정부가 본격적인 아프리카 진출을 모색하였으며 대통령이 아프리카 순방에 나섬으로써 학계 관심이 다양하게 증대했다.¹⁸⁾ 현지 경험과 상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국내 기업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기회가 늘어났고, 학문적 연구를 실용화하려는 움직임에도 영향을 미쳤다. 예를 들어, 한국외국어대학의 아프리카연구소가 국제개발협력력을 인문학적으로 접근하려는 노력이나 한양대학교 유럽·아프리카연구소가 사회과학적 연구를 통해 실용 학문으로 발전시키려는 움직임이다. 둘째, 1990년대까지만 해도 아프리카는 학문적 연구의 불모지로 해외지역연구의 주변화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한국연구재단의 다양한 프로젝트(인문한국학지원(HK), 토대연구, 중점연구소 지원, 신흥지역연구 등)는 그동안 학문적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전공 분야의 연구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아프리카 및 중동 전문가들에게 어느 정도 안정된 연구환경과 연구 동기를 제공하였다(<표 2>). 특히 이들 다수가 현지 조사를 통해 연구해왔다는 점에서 원천자료가 거의 없는 국내 상황에서 아프리카 토대연구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 그뿐만 아니라 아래와 같은 정부의 연구지원은 후속 연구 세대가 미래지향적으로 아프리카 혹은 마그레브에 관한 학업을 계속할 용기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표 2>는 아프리카와 중동에 관한 해외지역 연구 활성화가 2005년부터 본격화되어 많은 연구 결과물이 논문과 저서(역서 포함)로 생산되었음을 보여준다. 예컨대 인문학국학지원 사업에 참여한 부산외국어대 지중해지역원은 ‘지중해 지역의 문명 간 교류유형 연구’ 10년 사업을 통해서 약 159편의 논문을 생산하였는데, 마그레브 지역과 관련된 논문은 미미하지만 13편이다

18) 2006년 노무현 대통령의 아프리카 방문 이후, 정권마다 아프리카 순방이 지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한국 정상의 마그레브 국가 방문은 2006년 노무현 대통령의 알제리 방문 이후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상급으로는 최근 이낙연 국무총리가 12월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를 방문하였다.

〈표 2〉 정부(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 과제 성과

연구과제	연구 주제	연구 기간	해당 대학	성과	
				논문	저서
토대연구 지원	중동현대인물사전	2005.09- 2007.08	명지대학교	보고서	
	현대아프리카학사전	2015.09- 2018.08	경희대학교	14	22
	이슬람용어사전	2012.09- 2015.08	한국의국어 대학교	보고서	
인문학 육성지원	이슬람의 문명과 여성의 정체성	2001.06- 2002.06	한국의국어 대학교	3	3
인문학국학 지원	지중해지역의 문명간 교류유형 연구	2007.11- 2017.08	부산외국어 대학교	159	29
	중동연구의 세계적 거점	2009.11- 2012.08	단국대학교	36	-
	아프리카의 안과 밖의 교차	2010.09- 2020.08	한국의국어 대학교	진행 중	
	현대중동사회변동과 호모이스라미투스	2010.09- 2020.08	명지대학교	121	63
	중동연구의 토대와 소통	2007.11- 2010.08	한국의국어 대학교	보고서	
	아프리카칼로지	2009.11- 2012.08	한국의국어 대학교	중단 (보고서)	
	지중해문명교류학의 글로벌 허브 구축	2018.03- 2025.02	부산외국어 대학교	진행 중	
신흥지역연 구지원	아프리카 기본정보체계 및 파트너십 구축: 나이 지리아와 알제리를 중심 으로	2013.09- 2015.08	한양대학교	5	2
중점연구소 지원	아프리카에 대한 새로운 외교적 접근 모색	2018.09- 2021.08	한양대학교	진행 중	
개인연구 및 성과확산 지원	시간강사지원사업, 일반공 동연구지원, 학문후속세대 지원, 중점연구자지원 등	1998- 2016	-	38	

출처: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 ‘기초학문자료센터’를 바탕으로 작성함.

또한, 한국의국어대학 아프리카연구소가 진행하고 있는 인문학국학지원 과제인 ‘아프리카의 안과 밖의 교차: 아프리카학의 한국적 패러다임 구축’ 사업에서 마그레브 국가들에 관한 7편의 논문이 수행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개인 연구 및 성과확산지원’ 과제를 제외하고 위에 열거한 사업이 국내의 마그레브 연구에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국내 마그레브 지역에 관한 연구의 활성화는 정부(한국연구재단)의 지원과 무관하지 않은데 2000년이 분기점이다.

결과적으로 2000년 이후 국내의 마그레브 지역연구가 급증한 것은 정부의 아프리카 관심 증대와 정책 변화 그리고 이에 따른 중장기적 연구지원의 증가도 있지만, 국내 학자들의 관심 증대와 연구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별 그리고 주제별 편중 현상은 국내의 마그레브 토대연구가 분과학문으로 자리 잡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장기적 과제로 남아 있다.

2. 연구 분야별 현황

분야별·주제별 현황에서는 1997년 이전에 생산된 논문이 많지 않아 1998년 이후 등재지·등재후보지에 게재된 논문만을 대상으로 검토하였다. 아프리카 전체에 관한 분야별 연구에서는 정치·경제에 관한 주제가 많지만(홍명희 2016), 마그레브 지역연구에서는 다른 현상이 나타났다(<표 3>). 사회과학 분야는 크게 정치(법), 국제관계, 경제, 사회가 포함되었는데 147편의 논문이 생산되었다. 반면 언어, 문학, 문화, 역사를 포함한 인문과학 분야에서는 158편의 논문과 기타 주제(과학, 의학)에는 6편의 논문이 생산되었다. 결과적으로 국내의 아프리카 연구 현황을 연구한 일부 결과에서 우려하는 사회과학 분야의 편중 현상(한건수 2013, 173)은 마그레브 지역연구에서는 없으며, 반대로 인문과학 논문이 큰 차이는 아니지만 11편이 더 생산되었다.

〈표 3〉 분야별 연구 현황

구분	모리타니	모로코	튀니지	알제리	리비아	마그레브	합계	%
사회과학	1	26	20	39	36	25	147	47.3
	50.0	48.1	60.6	31.7	81.8	45.5		
인문과학	1	26	12	82	8	29	158	50.8
	50.0	48.1	36.4	66.7	18.2	52.7		
기타	-	2	1	2	-	1	6	1.9
	-	3.8	3.0	1.6	-	1.8		
합계	2	54	33	123	44	55	311	100.0
%	0.6	17.4	10.6	39.5	14.2	17.7		

출처: 국회도서관 홈페이지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함

국내의 마그레브 연구 선호 국가는 산유국 알제리로 전체 연구의 39%에 해당하는 123편 논문이 생산되었으며,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은 모리타니에 관한 연구는 2편이다(어순아 외 2011; 장훈태 2016). 한국의 모리타니와의 수교는 아프리카에서 북한과의 외교경쟁을 위해 1978년 모리타니와 수교했지만, 특수한 관계 없이 유지하다가 남한이 북한과의 외교경쟁에서 어느 정도 우위를 점하자 우리 공관이 철수한 곳이다. 사회과학과 인문과학 분야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사회과학 분야

〈표 4〉 사회과학 분야의 주제별 연구 현황

	모리타니	모로코	튀니지	알제리	리비아	마그레브	합계	%
정치 (법)	1	12	7	10	13	8	51	34.7
	100.0	46.2	35.0	25.6	36.1	32.0		
국제	-	2	2	5	20	4	33	22.5
	-	7.7	10.0	12.8	55.5	16.0		
경제	-	3	7	15	3	6	34	23.1
	-	11.5	35.0	38.5	8.3	24.0		
사회	-	9	4	9	-	7	29	19.7
	-	34.6	20.0	23.1	-	28.0		
계	1	26	20	39	36	25	147	
%	0.7	17.7	13.65	26.5	24.5	17.0		100.0

출처: 국회도서관 홈페이지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함.

(1) 정치 및 국제정치 주제

사회과학 분야에서 정치 주제를 다룬 연구가 147편 중 51편(34%)으로 가장 많으며 국제정치의 주제를 포함하면 57.2%를 차지한다. 그러나 각 국가와 관련해서는 주제에 따라 편차가 있다. 예컨대 리비아의 정치와 국제정치를 주제로 한 연구는 리비아 국가 관련 전체 논문에서 91%를 차지하고, 그다음으로 모로코가 53%를 차지한다. 반면, 리비아의 경우는 국제정치 주제가 55%를 차지하고, 모로코는 일반 정치가 46%를 차지한다. 논문 편수가 가장 많은 알제리의 경우, 국제정치를 주제로 한 논문은 5편(12%)뿐이다. 알제리 정치에 관한 국내의 학술적 관심이 미미함을 입증한다.

리비아의 경우, 국제정치 주제가 55%를 차지하는 이유는 카다피 정권 붕괴에 영향을 미친 2011년 2월 ‘리비아 혁명’ 이전의 연구로 리비아에 대한 미국과 프랑스의 영향력과 연관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카다피 정권이 붕괴한 이후에는 리비아 핵 문제가 중동 평화와 지중해 안보의 영향을 미치면서 리비아 재건과 핵 문제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국제관계 정상화에 관한 연구는 리비아의 핵 문제 해결과 신정권 수립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2018년 이후에 이루어졌다.

국제정치를 주제로 연구한 논문이 가장 적은 국가는 모로코와 튀니지로 총 2편이다. 이 두 나라는 알제리나 리비아처럼 지하자원(석유 혹은 천연가스)이 풍부하지 않아 선진국과의 우호적 혹은 비우호적 경제적 이해관계가 많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튀니지와 모로코는 냉전체제에서 온건한 비동맹주의를 견지하여 이념적 진영 논리에서 자유스러웠고,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의 활동이 통제되어 선진국(유럽과 미국)과의 적대적 마찰이 적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이 두 국가는 사실상 국제정치에서 좋은 나쁜 영향력 있는 행위자로 혹은 이해관계가 필요한 국가로 주목되지 못했다. 반면, 2006년 노무현 대통령의 알제리 방문과 한국의 대아프리카 정책 ‘선택과 집중’ 지역에 포함된(박영호 2003) 알제리에 관한 연구는 미미하게 증가한다. 2006년 이전까지는 국제문제를 다룬 논문은 전혀 없지만, 대통령의 순방 이후 2007년부터 생산된 논문은 총 5편이다. 대부분 논문이 구 식민종주국(프랑스와 이탈리아)이나 미국 혹은 대외 관계를 다루고 있다. 특히 국제정치 혹은 국제관계를 연구한 대부분 논문은 경제적 대외협력력을 다루고 있을 뿐, 마그레브 특유의 국제관계를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담론을 생산하지 못했다.

한 국가의 정치변화 혹은 변동을 포괄적으로 알 수 있는 일반정치를 주제로 연구한 논문은 리비아에 관련된 것이 13편(모로코 12편)으로 가장 많다. 국가의 주제별 분포에서는 모로코의 일반정치 주제 연구가 전체 논문의 46%를 차지고 그다음이 13편(36%)을 차지하는 리비아다. 모로코의 경우, 1990년에 모하메드 6세가 하산 2세로부터 왕위를 물려받고, 대대적인 정치·사회 개혁하면서 민주적인 정치변화가 나타난다.¹⁹⁾ 이는 주변국의 내정이 여전히 불안한 것을 고려할 때, 모로코 변화는 학문적 관심을 받기에 충분했다. 모로코의 일반정치를 주제로 한 12편의 논문 중 11편이 2010년 이후에 생산되었다(<표 4>).

일반정치에 관한 연구는 전반적으로 2010년 말~2011년 초 튀니지 ‘재스민 혁

19) 헌법개정, 입헌군주제 확립, 가족법 개혁, 모로코 토착 언어 베르베르어의 공용화 등이 대표적이다.

명' 이후, 민주화에 대한 학문적 관심으로 증가하였다. 51편의 논문 중 약 28편이 마그레브 민주화와 관련되었다. 하지만 일반정치를 주제로 한 논문 대부분이 민주화와 관련이 있음에도 대의정치의 기본인 정당에 관한 연구는 한 편도 생산되지 않았다. 국내 대학에 재직 중인 모로코 학자의 논문만이 있다(Bouchikhi 2016).

한 국가의 정치적 변화는 사회과학 연구자에게 매우 중요한 관심사이고 연구를 유발할 수 있는 변수다. 이러한 점에서 2011년부터 마그레브에서 본격화된 민주화에 관한 국내연구는 마그레브의 정치 현상을 이해하는 데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하지만 74편의 논문 중 한 연구자가 2편 이상의 논문을 생산한 것은 약 34편밖에 안 된다. 40편의 논문은 시대조류에 의해서 '일회성'으로 연구되었고,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정치 분야에 관련한 논문이 국내의 토대연구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다른 주제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2) 경제 주제

사회과학 분야에서 정치와 국제정치를 주제로 한 논문 다음으로 많이 연구된 주제는 경제다. 하지만 석유와 천연가스 그리고 인프라 투자 시장으로 주목을 받는 마그레브 지역을 고려하면, 경제를 주제로 한 논문은 34편(23%)으로 적은 편이다. 특히 리비아는 알제리와 함께 석유 수출국이며, 1977년 대우건설을 비롯하여 여러 국내 기업이 대수로 건설사업에 참여하면서 양국 간 경제협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런데 국내의 리비아 경제연구는 2005~2006년 3편만이 생산되었을 뿐이며 최근 10년 동안 한 편의 논문도 생산되지 않았다. 한국 정부와 국내 기업이 주목할 만한 자원이 없고, 건설 투자 시장이 좁은 튀니지 경제에 관한 연구는 오히려 7편, 모로코는 3편의 논문이 생산되었다. 그러나 산유국 알제리 경제에 관한 연구가 15편으로 38%를 차지한다. 하지만 알제리 정국이 튀니지 재스민 혁명으로 불안해지고, 한국 정부가 사하라 이남에 대한 진출을 확대·강화하면서 2013년부터 2019년 9월까지 6편의 논문만이 생산되었다. 나머지 9편은 2012년 이전에 연구된 것이다.

경제에 관한 대부분 연구는 정책적 성격(투자, 통상, 경험, 자원, ODA 등)이 강하고 미시경제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다는 점에서²⁰⁾ 연구의 성과가 한시적 참고용으로 끝나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점은 다른 마그레브 국가들의 경제연구에

20) 미시경제의 분야는 주로 수요와 공급, 소비자 이론, 기업이론, 시장이론 등이다.

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총 34편의 논문 대부분은 경제통상 혹은 투자 환경 요인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단 두 편의 논문만이 미시경제 문제를 어느 정도 다루고 있어(김중관 2006; 김성수 2015) 마그레브의 일반 기초 경제에 관한 연구는 상당히 미진하다.

(3) 사회문제

마그레브 사회·정치의 기반이 되는 사회에 관한 연구는 총 29편이 생산되었다. 사회 일상 혹은 구성원의 인지·감정·행태가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제와 현상을 다룬 주제는 다른 주제와 비교해 해당 국가의 정치적 상황이 연구 활동에도 크게 영향을 미친다(Almond 1980). 예를 들어, 정치적으로 혼란과 위기가 있는 리비아 사회에 관한 연구는 전무(全無)하고, 마그레브 국가에서 가장 많은 연구가 진행된 알제리 사회에 관한 연구는 9편으로 정치(국제관계)·경제 주제와 비교해 적은 편이다. 반면 마그레브 국가 중에서 가장 안정적인 입헌군주국 모로코에 관한 관심은 현 국왕 모하마드 6세 이후의 과감한 정치·사회 개혁으로 증가하여 최근까지 총 9편의 논문이 생산되었다.

사회 분야에서 여성과 혼인에 관한 연구가 55%(16편)를 차지하는데 이는 민주화 이후 이슬람 여성의 사회적·정치적 문제에 관심이 높아졌음을 입증한다(Ngoma-Binda 2012). 이들 논문은 여성들의 요구가 서구적인 것이 아닌 이슬람적인 것을 전제로 한다. 예를 들어, 이원삼(2004a, 71)은 “이슬람의 가족법, 여성 권리의 시각에서 본 개혁의 가능성: 모로코의 가족법 변화를 통한 고찰”이란 논문에서 “모로코 여성 권리의 시각에서 본 개혁의 가능성은 모로코의 가족법 변화의 현상 속에서 파악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모로코는 1990년대 들어서 가족법의 개정이 여러 차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여성 권리의 주장이 모하메드 6세의 모로코 개혁으로 이어졌다(이한규 2020).

특히 사회에 대한 주제는 시민의 일상과 깊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다른 주제와 비교해 현지 조사와 참여 관찰이 수행될 필요가 있다(Grawitz 2000). 이러한 점에서 김효정(2004), 이원삼(2004a; 2004b), 조희선 외(2004), 안정국(2018) 등의 연구는 매우 고무적이다. 또한, 유럽연합의 출범과 아프리카 전역의 정치적 불안으로 인한 이민 문제가 지중해 지역 안보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에 관련한 9편의 논문이 생산되었다. 하지만 현지 조사를 통한 분석이라기보다는 2차 자료와 통계를 이용한 분석이 대부분이다.

2) 인문과학 분야²¹⁾

인문과학 분야는 언어, 문학, 문화, 역사를 주제로 총 158편의 논문이 생산되었다. 문화 주제가 54편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문학이 49편, 역사는 28편, 언어가 27편으로 가장 적다(<표 5>).

〈표 5〉 인문과학 분야의 주제별 연구 현황

구분		모리타니	모로코	튀니지	알제리	리비아	마그레브	합계	%
인문 과학	언어	-	5	6	7	2	7	27	17.1
		-	19.2	50.0	8.5	25.0	24.1		
	문학	-	6	1	31	2	9	49	31.0
		-	23.1	8.3	37.8	25.0	31.1		
	문화	1	15	4	21	2	11	54	34.2
		100.1	57.7	33.4	25.6	25.0	37.9		
	역사	-	-	1	23	2	2	28	17.7
		-	-	8.3	28.1	25.0	6.9		
합계		1	26	12	82	8	29	158	
%		0.6	16.5	7.6	51.9	5.0	18.4	-	100.0

출처: 국회도서관 홈페이지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함.

인문과학 분야의 전체 논문에서 알제리와 관련된 연구가 51%(158편 중 82편)를 차지한다. 반면 모리타니를 제외하고 리비아에 관한 연구가 8편으로 가장 적다.

(1) 언어

언어는 인문학 연구에서 가장 중요하며 기본이다. 이에 대해 박충연(2017, 301)은 “언어는 인문학의 기반으로서 주체적이며 모든 문화의 상대적인 현상을 초월한 문화 현상의 보편적인 기반”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따라서 언어는 문화적 정체성뿐만 아니라 언어통합정책에도 영향을 미친다.

21) 본 연구자가 사회과학 연구자라는 점에서 인문과학 분야의 논문에 대한 분류와 해석에 있어서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에 사례 논문에 대한 분석보다는 소개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또한, 본 연구자의 주제별 분류에서도 인문과학 전문가와 의견이 상당히 다를 수 있다.

〈표 6〉 언어 분야의 주제별 연구 현황

구분	모리 타니	모로코	튀니지	알제리	리비아	마그레브	합계	%
언어 정책	-	1	4	5	-	-	10	37.0
사회 언어학	-	-	-	2	1	-	3	11.1
일반 언어학 ²²⁾	-	4	2	-	1	7	14	51.9
합계	-	5	6	7	2	7	27	100.0

출처: 국회도서관 홈페이지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함.

언어를 주제로 한 연구는 알제리와 마그레브 일반에 관한 것이 각 7편으로 제일 많고 리비아가 2편으로 가장 적다. 각 국가의 논문 편수 비율로 계산하면 언어 주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튀니지가 46%, 마그레브 일반 24%로 가장 많다(리비아는 제외).²³⁾ 알제리가 언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8%로 가장 낮다.

논문 27편 중 일반언어학 연구가 14편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언어 정책에 관한 논문이 10편이다. 사회언어학 관련 논문은 3편이다. 아랍어가 공용어인 마그레브 국가들은 유럽의 식민지배로 언어 문제가 정치·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특히 언어는 정체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27편 중 14편이 프랑스어와 연관하여 연구되었다. 정체성과 관련하여 윤용수(2012, 82)는 “알제리의 프랑스어 수용과 언어 정책” 논문에서 “프랑스 식민 정부의 언어 정책으로 인해 야기된 혼란으로 인해 알제리의 식민지 국민들은 프랑스 흉내 내기를 포함한 심리적 혼란을 겪으며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해 갔다”고 한다. 독립 이후 대부분 마그레브 사회에서 유럽어는 사회적 진출과 신분 상승의 기회로 작용했지만, 이로 인해 마그레브인들은 정체성의 혼란 혹은 상실의 대가를 치르고 있음이다.

특히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의 많은 엘리트는 식민지 언어인 프랑스어를 자신들의 중요하고 특별한 사회자본으로 여기고 있다. 이는 모든 마그레브 사회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이다(송근영 2017, 7).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22) 일반언어학 분류에는 음성학, 음운론, 문자학, 형태론, 통사론, 의미론, 화용론, 텍스트 언어학이 포함되어 있다.

23) 리비아의 인문과학 분야에서 각 주제에 관한 연구는 미미해서 유의미하지 않다(<표 6> 참조).

“2015년부터 개선된 교육개혁 내용에 따라 모로코 아동이 공교육 제도 안에서 학습하는 첫 언어 중에 외국어인 프랑스어는 포함된 반면 국가 공용어인 아마지그어는 제외되었다는 사실은 현 모로코 사회에서 프랑스어 습득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송근영 2017, 25).

마그레브 지역의 토착 언어연구 대부분은 지역 언어를 대상으로 해야 하지만, 6편이 언어 주제에서 마그레브 토대연구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하지만 마그레브 지역민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동부아프리카의 스와힐리어처럼- ‘마그레브 언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반면 다양한 언어가 마그레브 민족 수 만큼 존재한다는 점에서 토착어 연구의 어려움이 있다. 요컨대 언어에 관한 연구는 지역연구 전문가만이 할 수 있는 특수 학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 분야의 토대연구 발전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연구계획과 수행이 필요하다.

(2) 문학 연구

문학은 텍스트를 통해서 “시간과 공간의 한계에서 다소 벗어나서 경험과 지식을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공유”(김용현 2019, 237)하는 것으로 인간과 사회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인문학의 중요한 분야다. 문학을 주제로 연구한 논문이 158편 중 31%에 해당하는 총 49편으로 문화 주제 다음으로 인문과학 분야에서 중요한 부문을 차지하고 있다. 알제리 문학에 관한 연구가 31편으로 37%를 차지하고 있으며 47편이 프랑스어 사용국가와 연관되어 있다(리비아의 문학에 관한 논문 2편 제외). 물론 문학에 관한 주제로 연구된 논문 편수는 국가마다 상이하다. 예를 들어, 마그레브 일반에서 문학을 다룬 논문이 9편으로 31%를 차지하지만, 2편의 논문이 생산된 리비아의 경우는 25%를 차지한다.

49편의 논문은 크게 작가, 작품, 경향 등을 소재로 연구하였는데 작품 분석에 관한 연구가 38편으로 77%를 차지한다. 물론 알제리 문학에 관한 연구가 단연 많고 다양한 작품을 소개하고 있으며, 카뮈에 관한 연구가 5편이다. 그 외 작가 연구가 2편, 문학 경향이 7편, 그리고 1편의 논문이 사회와 관련하여 문학을 조명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은 마그레브 지역의 다양한 작가와 작품에 관한 폭넓은 연구는 미진한 편이다. 이에 대해서 김정숙(2009, 9)은 기존의 작품 혹은 작가 중심의 연구에서 탈피하고 “마그레브 프랑스어 문학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도모하는 예비 연구의 성격”으로 “문학의 경계와 정체성의 문제”를 살필 것을 강조하고 있다.

〈표 7〉 문학 분야의 주제별 연구 현황

구분	모리타니	모로코	튀니지	알제리	리비아	마그레브	합계	%
작품 해석	-	5	1	24	2	6	38	77.6
작가 연구	-	-	-	1	-	-	1	2.0
일반 문학	-	1	0	6	-	3	10	20.4
합계	-	6	1	31	2	9	49	100.0

출처: 국회도서관 홈페이지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함.

또한, 문학과 관련한 논문을 13편 생산한 진인혜는 아주 드물게 폭력 및 테러가 발생한 알제리에서 새로운 문학이 탄생하는 것에 주목하였다. 진인혜(2012, 426)에 따르면 테러의 “제1의 희생자는 지식인을 포함한 예술인 및 문인들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복을 두려워하며 절필하거나 해외로 이주한 작가들도 있었던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내전의 정치적, 역사적 복잡성과 일상의 공포를 폭로하여 내전의 비극을 형상화한 소설”로 탄생하였다고 한다. 현재 마그레브 지역에는 수십 개의 이슬람극단주의 단체가 활동하고 있는데 테러 결과의 일부를 문학적으로 해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마그레브 문학의 폭넓은 변화와 다양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튀니지, 리비아, 모로코 문학에 관한 연구도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특히 아랍어를 구사하는 국내 어문학 학자들의 적극적인 연구로 아랍 문학에 전반적인 연구가 도모될 필요가 있다.

(3) 문화 연구

문화와 관련한 연구는 범위가 넓고 다양하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 현지에서의 참여 관찰이 필요한 주제이기도 하다. 전체적으로 54편의 논문이 생산되어 마그레브 인문과학 분야에서 연구가 제일 많이 수행된 주제다.

알제리 문화를 주제로 수행된 논문은 54편 중 21편(38%)으로 가장 많고, 모로코가 15편(27%)으로 그다음을 차지한다. 알제리의 문화 주제에 관한 연구의 국가별 비중은 모로코의 언어와 문학 주제와 비교해 53%를 차지한다. 튀니지의 4편, 리비아의 2편, 모리타니의 1편으로 국가 간의 편차가 심하다. 문화와 관련한 주제는 <표 8>에서처럼 매우 다양하다.

〈표 8〉 문화의 주제별 연구 현황

구분	일반	만화	노래	영화 (연극)	민담 (신화)	종교	도시	미술	음악	복식	상업	계
모리 타니	1	-	-	-	-	-	-	-	-	-	-	1
모로코	4	-	1	-	2	1	4	1	-	1	1	15
튀니지	1	1	1	-	-	-	-	-	-	-	1	4
알제리	6	1	1	6	2	-	-	3	2	-	-	21
리비아	-	-	-	2	-	-	-	-	-	-	-	2
마그 레브	7	-	1	3	-	-	-	-	-	-	-	11
계	19	2	4	11	4	1	4	4	2	1	2	54
%	35.2	3.7	7.4	20.3	7.4	1.9	7.4	7.4	3.7	1.9	3.7	100.0

출처: 국회도서관 홈페이지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함.

문화 일반을 주제로 연구된 논문이 19편으로 35%를 차지한다. 문화 일반 주제는 다문화 미디어 담론, 문화 운동, 혼인문화, 여행, 기층문화, 도시문화 등 매우 다양하다. 그 다음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된 것은 영화(연극)를 소재로 한 논문으로 11편이 생산되었다.

황의갑(2013)은 영화 <사막의 라이언> 분석을 통해 리비아 베르베르족의 독립투쟁을 재조명했으며, 김승민(2009)은 영화 <중오>를 통해 프랑스 사회의 이민자 문제를 분석하면서 이민자들의 반감을 사실적으로 밝혀냈다. 반면 이명원(2008, 35)은 모로코와 튀니지 영화에 개관을 통해서 “영화라는 기층문화가 아랍인들의 공동체적 의식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는 점을 전제”하여 아랍 민중의 의식구조를 파악하려 했다. 알제리 문화 분야의 경우, 21편의 논문 중 영화 관련 논문이 6편으로 가장 많다. 조윤경(2010, 664)은 “알제리를 다룬 영화에 나타난 혼종적 정체성”이라는 논문에서 아프리카인의 디아스포라로 인한 정체성의 문제에 주목하여 두 편의 영화 <추방된 사람들>(2004)과 <영광의 날들>(2006)을 통해 ‘혼종적 정체성’의 의미를 규명하고 있다. 최근 들어 마그레브 영화문화 산업이 활발해 지고 있다는 점에서 영화를 통한 문화적 접근은 마그레브 문화를 재해석하는 데 있어 시의적절해 보인다.

특히 만화는 다른 분야와 달리 ‘상징을 통한 은유’로 사회현상을 해석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²⁴⁾ 만화를 소재로 한 두 편의 논문은 김세리(2017a; 2017b)에 의해 연구되었다. 저자는 튀니지 만화의 형성 과정과 만화가 어떤 과정을 통해 ‘봄’이 일어났는지 상세하게 다루었다. 저자가 “전통문화 속에서 금기시되던 시각 이미지, 특히 만화 매체”(김세리 2017a, 147)를 통해 ‘만화만의 문화적 정체성’을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문화 연구의 새로운 소재와 방법론을 제시했다고 본다.²⁵⁾

(4) 역사연구

역사를 주제로 연구한 논문은 17%에 해당하는 28편의 논문이 생산되었고, 알제리가 23편으로 82%를 차지한다. 각 국가에서 역사 주제가 차지하는 부분에서는 알제리 22편(26%)이다. 리비아가 2편으로 25%를 차지하지만, 논문 편수가 너무 적어 유의미하지 않다. 모리타니와 모로코 역사에 관한 국내연구는 전혀 없으며 튀니지 1편, 리비아와 마그레브 일반에 관련한 논문은 각 두 편이다. 국내에서 아프리카 역사에 관한 이해가 편협한 점에서 역사 연구가 절실히 보이는 부분이다. 특히 국내에는 아프리카 역사를 전공한 학자가 극소수라는 점에서 28편의 논문 중 25편이 서양사와 프랑스를 전공한 학자에 의해서 연구가 수행되었다. 중동 혹은 아랍 역사 전공자에 의해 수행된 마그레브 역사연구는 한 편도 없다. 역사에 관한 연구 대부분은 프랑스사 전공 학자에 의해 수행되었다. 소주제별로 살펴보면, 식민지와 관련된 것이 28편 중 24편으로 가장 많다. 하지만 고대 혹은 중세 시기의 주제는 전혀 연구되지 않았다. 현대사와 관련된 논문은 이재원(2012)의 “튀니지 제스민 혁명의 역사적 기원과 의의”라는 논문 한 편이다. 마그레브 역사에 관한 연구는 리비아를 제외하고 불어와 아랍어로 기록된 원천 자료가 많다는 점에서 아랍어에 능통한 중동 학자와 불어에 능통한 프랑스사 혹은 세계사를 전공한 학자 간의 기획 공동연구가 절실한 부분이다.

끝으로 인문과학 연구 동향에서 특별하게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프랑스 언어와 문학(문화)에 관련된 주제를 다룬 논문이 마그레브 전체 인문과학 분야의 39%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마그레브는 이슬람 문화권이라는 점에서 한편으로는 중동 연구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리비아를 제외하고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에 대한 프랑스 식민지배가 국내연구 경향에 영향을 미쳤다.

24) 손상익은 박사 학위 논문에서 만화의 기능을 “당대의 사회상을 묘사하거나 하고, 생활 속에서의 익살과 재치를 표현하며 때로는 사회 비판”으로 정의하였다(손상익 2005, 52).

25) 김세리는 만화 문화와 관련하여 총 5편의 논문을 생산했다.

이들 국가에서는 불어가 일상화되어 있어서 프랑스어에서 유학한 학자나 프랑스어를 구사하는 학자들에 의해 연구가 비교적 활성화되었다. 예컨대 인문과학 분야에서 알제리에 관한 논문이 82편인데, 프랑스어와 문학 혹은 역사와 관련된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은 50편으로 60%를 차지한다. 알제리의 인문과학 분야 연구는 불어권 학회지가 주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반면 마그레브 지역에 관한 논문 중 중동·아랍 관련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은 4편으로 상대적으로 적다. 프랑스 식민지배와 관련이 없는 리비아의 인문과학 분야에서는 불어권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은 한 편도 없다. 군주체제를 통해 이슬람 문화의 전통을 유지하며, 북아프리카 전통 이슬람의 보루인 모로코의 문화 분야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 불어권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은 7편이지만, 중동 혹은 아랍에 연구에 관련된 학회지 게재한 논문은 반대로 17편이다. 이러한 요인은 한편으로 아프리카 전공자의 대부분이 사하라 이남에 관한 연구에 치중되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불어나 아랍어를 구사하는 인문학 분야의 학자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인문과학 분야의 158편 논문 중에 40%에 해당하는 64편의 논문이 프랑스 지역 학회지에 게재되었으며 아랍 혹은 중동에 관련된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은 29편이다.

〈표 9〉 알제리 인문학 분야 학술지의 게재 현황

불어권	편수	아랍권(중동)	편수	아프리카/기타	편수
프랑스학연구	12	지중해지역 연구	1	한국아프리카 학회지	0
한국프랑스학논집	6	아랍어와 아랍문학	1	기타	30
프랑스문화예술연구	6	중동연구	1		
프랑스어문 연구	2	한국중동학회논문총	0		
불어불문학연구	12	한국이슬람 학회논문총	1		
불어문화권 연구	7	중동문제연구	0		
프랑스사연구	3				
프랑스문화연구	2				
합계	50	-	4	-	30
%	59.5	-	4.8	-	35.7

출처: 국회도서관 홈페이지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함.

물론 불어권 학회지에 게재한 연구자 모두가 불어를 구사한다고 단정하는 것은 아니다.²⁶⁾ 불어를 구사하는 연구자 중 일부는 아랍 혹은 중동에 관련된 학회

지를 포함하여 다른 학회지에도 논문을 게재한다. 그러나 알제리의 경우처럼 마그레브 관련 논문이 붙어온 학회지에 꾸준히 게재되고 있고, 그 결과가 인문과학 연구 증진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점이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연구 성향을 분석한 결과와는 상이하다(황규득 2016). 요컨대 프랑스와 관련된 학회지가 마그레브 인문학 연구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분과학문의 중요한 다른 학회지에 게재하지 않는 원인에 관한 연구는 연구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별도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IV. 나가기 : 문제점과 성찰

국내의 아프리카 연구가 본격화된 것은 2000년대 이후라는 점에서 국내 학계와 사회에 잘 알려지지 않은 북아프리카 일부 지역인 마그레브 연구 성과를 언급한다는 것은 시기상조일 수도 있다. 하지만 아프리카에서 마그레브가 차지하는 의미와 가치는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국내의 토대연구 발전을 위해서 마그레브 연구 현황을 검토할 필요는 있다. 마그레브는 지정학적으로 지중해를 두고 유럽과 다양한 분야에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붙어 사용국가가 5개국 중 4개국임). 또한, 문화적으로는 아프리카 전통문화와 이슬람 문화 그리고 유럽 문화가 교차하고 혼성하는 지역으로 아프리카의 '작은 아프리카'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5개국을 5개 권역(중·동·서·남·북부)으로 나누어, 그 중 일차적으로 마그레브 지역에 관한 국내의 연구 현황을 정량적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마그레브 토대연구에 필요한 시사점을 찾기 위해 몇몇 주요 논문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마그레브에 관한 연구는 다른 지역과 비교해 많이 수행되었다. 특히 국내의 아프리카 연구 현황에 대해서 일부에서 우려하는 사회과학 중심 연구 현상이 마그레브 연구에서는 미세하게 나타났다.

국내의 마그레브 토대연구에 관한 본격적인 시작은 아프리카에 대한 실용 외교가 본격화되는 2006년부터다. 대 아프리카 수교의 시작이 1960년대 40년이

26) 본 연구자가 언급한 아프리카 전문가란 일반적으로 아프리카 현지 혹은 국내외에서 아프리카에 관련된 연구로 박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를 의미한다. 하지만, 여기에 해당하지 않은 연구자는 아프리카와 관련한 연구 자격의 여부와 전혀 상관없다. 일부 학자 중에서는 아프리카를 전공하지 않았지만, 꾸준한 연구를 통해 아프리카 전문가로서 손색없는 연구를 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아프리카 전문 연구자가 극소수인 국내 상황에서 국내 마그레브 연구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학제 간 연구뿐만 아니라 신진학자의 출현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 준다고 볼 수 있다.

넘게 걸렸다. 2006년부터 14년 동안 매년 23편의 논문이 생산되었다는 점은 국내의 토대연구가 양적·질적으로 발전하고 있음이다. 하지만 마그레브 토대연구의 양적·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개선해야 할 문제가 많다.

1. 지역연구의 문제점

국내의 마그레브 연구는 시기별로 편차가 크고, 연구가 일부 국가에 편중하고 있으며, 사회, 언어 및 문화 주제는 지역연구의 중요한 테마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주제에 비해 연구가 미흡한 편이다.

시기별 현황에 있어서 2000년 이후 마그레브 지역연구가 급증한 것은 국내의 연구 발전을 위해서 긍정적이다. 특히 2010년대는 아프리카 ‘제2의 민주화’ 시기로 마그레브 지역의 민주화가 확산하면서, 정치, 국제관계 및 사회 분야는 물론 언어(사회만 2012), 문화(사회만 2015), 문학(정치용 2009; 진인혜 2012) 분야 등에서도 정치적 변화와 관련하여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시기별 연구의 장점이자 단점은 연구가 정부의 아프리카 관심 증대와 정책 변화 그리고 이에 따른 중장기적 연구지원의 증가에 전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연구자는 지역 전문가로서의 헌신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국가별 편중 현상은 국내의 마그레브에 관한 지속적인 학술적 관심과 해당국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연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알제리는 프랑스와 여러 면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고 프랑스에서 알제리에 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프랑스 지역에 관련된 국내 인문학자들의 관심과 연구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알제리에 연구가 편중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주제별 연구 경향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 물론 연구의 전문화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것이지만, 다른 북아프리카(튀니지, 모로코, 모리타니 등)에 관한 연구가 미진하고 주제의 편중성이 심한 것은 연구자가 지역연구 전문가로서보다는 더 ‘안전한 연구자’로 머물기 원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현지 조사를 통한 연구 성과에서도 나타난다.

대부분 연구가 2차 자료인 문헌을 중심으로 연구되고 있다는 점에서 현지 조사가 필요한 사회, 언어, 문화 분야의 연구는 미흡할 수밖에 없다. 이는 마그레브 지역뿐만 아니라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연구에서도 유사하다. 현지 조사는 지역연구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라는 점에서 연구자가 최대한 노력해야 함에도 현지 연구를 통한 논문 편수 결과는 여전히 미흡하다(한건수 2013, 179). 이에

대해 장용규(2020, 51)는 지역연구의 결과가 실용적이어야 한다면서도 “국내 아프리카 연구 결과물은 대체로 창의성이나 독창성이 결여되어 있다. 학술 결과물이 창의적이기 위한 전제 조건은 1차 자료의 확보에 있다”고 한다. 물론 국내의 다수 연구자가 마그레브 지역의 열악한 상황과 이질적 문화를 현지 연구의 한계로 여긴다면, 국내의 마그레브 토대연구는 더 발전할 수가 없을 것이다.

특히 연구가 지속하여 이어지지 못하고 일회성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 등재·등재후보지에 게재한 마그레브 관련 논문 311편 중 47%에 해당하는 148편이 일회성으로 끝나고 있다. 즉, 연구자가 한 편의 논문만 생산한 것이다. 이후에는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토대연구의 바탕은 여러 차례 걸친 연구의 결과를 통해 형성되어야 한다.

2. 성찰을 위한 제언

국내의 마그레브 연구가 분과학문으로 발전하고 토대연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국내의 연구환경과 전문가 수를 고려할 때, ‘마그레브 전공자’라는 카테고리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 대부분이 아프리카 전공자, 아랍(중동) 전공자, 불어권 지역 연구자 그리고 학문적 관심이 있는 학자가 자신들의 전공을 접목해 마그레브에 관해 연구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학제 간 공동연구를 통해 마그레브 연구에 대한 한국적 패러다임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연구소 혹은 연구단 간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연구의 다양화와 다변화를 통해 마그레브 지역의 토대연구를 축적해야 한다(최종철 2010, 198).

둘째, 등재지·등재 후보지에 게재된 연구논문은 자신의 전문 분야를 심화하는 목적도 있지만, 연구자의 취업, 승진, (정부, 학교, 기업) 연구 프로젝트 참여 자격 등의 절대적 기준이다. 특히 대학 연구 프로젝트를 제외하고, 정부와 기업의 연구 프로젝트는 주체 기관이 필요로 하는 연구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연구 지역과 주제의 다양성을 연구자가 스스로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마그레브에 관한 주제의 다양성과 다변화 해결에는 학자는 물론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2000년부터 한국연구재단이 중심이 되어 해외지역연구와 인문학 연구를 다양한 지원으로 장려하고 있다. 그러나 학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소외된 지역과 연구 분야를 한국연구재단이 설정하고 연구에 참여시켜 지속해서 연구할 수 있는 대책을 찾고, 이를 제도화해야 한다. 하지만 토대연구는 정책 연구와는 반드시 구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재원으로 현지 조사를 의무화하

는 방안도 필요하다.

셋째, 현재 마그레브에 관한 연구의 대부분은 개별 혹은 연구소 연구를 통해서 ‘울타리 식’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국내의 해외지역연구 활성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한국인문학지원’, ‘신흥지역연구지원’, ‘중점연구소지원’, ‘일반공동연구지원’, ‘토대연구지원’ 등은 더 확대하여 준비된 연구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한국의 아프리카, 특히 마그레브에 대한 학계나 사회의 관심을 유도하는 것은 국가의 대외정책이라는 점에서 순수학문으로만 발전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달리 말하면 국내의 마그레브 지역연구의 활성화에는 이미 언급한 것처럼 정부의 대외정책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06년 노무현 대통령이 마그레브 지역을 순방하였으며, 2018년 12년 만에 이낙연 총리가 정상급으로 마그레브 다수국가(모로코, 알제리, 튀니지)를 방문하였다. 이처럼 2006년 이후에는 정부와 학계의 마그레브 국가들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하지만 2010년 말 튀니지에서 발생한 ‘재스민 혁명’과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로 인한 정세 불안으로 마그레브 국가와의 대외 관계뿐만 아니라 연구도 소홀해졌다. 따라서 마그레브에 대한 선진 외교를 위해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중장기적 플랜으로 접근하면(이한규 2009, 306), 다양한 분야에서의 학문적 수요도 증가할 수 있다.

끝으로 국내의 토대연구 활성화를 위한 본 연구는 311편 논문(등재·등재 후보지)의 내용을 모두 정성적으로 분석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국내의 마그레브 지역연구 성찰이 과학적으로 완전하게 수행되지 못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으며, 이는 후속 연구에서 반드시 보완해야 할 것이다. 첫째, 분야 및 주제별 현황 자료를 국회도서관 자료만 이용함으로써 중앙국립도서관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RISS)의 자료를 교차 검색하지 않아 일부 자료가 누락하여 본 현황 연구에서 고려되지 못했다. 둘째, 마그레브 지역에 관한 주제별 분석을 더 심화하기 위한 내용분석과 평가가 미흡했다. 이러한 연구는 개인 연구가 아닌 학제 간 연구를 통해 각 주제에 대한 분과 전문가들의 협동 연구와 분석이 절대 필요하다. 셋째, 본 글이 과학적 논문으로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 혹은 주제와 관련된 전문가들의 연구 동향 및 방법론에 대한 분석이 고려되어야 한다. 311편의 논문 중 약 70%는 본 연구자의 전공 분야와 동떨어져 있다는 점에서 분석의 전문성과 객관성이 떨어지는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 넷째, 작성된 논문의 주제들이 연구자의 어떤 시대적 문제의식과 관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 이는 마그레브 지역연구의 문제점을 더 구체적으로 파악할 뿐만 아니라 개선 방안에도 효율적이다(예를 들어, 논문 게재를 위한 학회지 선택 성향).

앞에서 언급한 문제들은 마그레브 지역연구 현황에 관한 연구뿐만 아니라 사하라 이남 지역연구에도 예외는 아니다. 국내의 마그레브 토대연구를 발전·확산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연구환경의 제도적 개선과 연구자들의 자성적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참고문헌

국문 자료

- 김성수. 2015. “알제리의 적극적 노동시장 개입 정책과 그 함의.” 『漢陽法學』 50, 75-96.
- 김세리. 2017a. “튀니지에 도래한 ‘만화의 봄’: <이르판>(1965)에서 <랩 619>(2013)까지.” 『불어문화권연구』 27, 145-169.
- . 2017b. “알제리 만화의 형성과 전개: <엠키데슈M’quidech>로부터 FIBDA까지.” 『프랑스학 연구』 80, 147-168.
- 김승민. 2009. “영화 《증오》와 프랑스 사회의 이민자 문제.” 『한국프랑스학논집』 66, 305-320.
- 김용현. 2019. “문학연구의 패러다임 전환에 관한 소고: 독일 문예학을 중심으로.” 『독일언어문학』 85, 233-251.
- 김정숙. 2009. “마그레브 프랑스어 문학, 그 모호한 정체성과 위상.” 『불어문화권연구』 19, 9-28.
- 김중관, 장건. 2006. “신자유주의와 중동 경제체제의 변화에 대한 분석.” 『韓國中東學會論叢』 26(2), 59-79.
- 김효정. 2004. “튀니지 가족법에 대한 인식 조사 연구: 여성 관련 지도층 인사와의 인터뷰를 중심으로.” 『한국이슬람학회논총』 14(2), 143-175.
- 박영호. 2003. “한국의 對아프리카 수출확대방안 연구.” 『韓國아프리카學會誌』 17, 63-94.
- 박원탁. 1996. “아프리카 지역연구의 현황과 과제.” 『아프리카 研究』 8(9), 1-15.
- 박충연. 2017. “인문학의 기반으로서의 언어와 『인문언어』.” 『인문언어』 19(1), 299-322.
- 思想界. 1955. “모로코의 民族運動.” 『思想界』 3(10), 34-39.
- 사회단. 2015. “튀니지 재스민 혁명에서의 저항 노래에 관한 연구: 엘 제네랄(El Général)의 랩(Rap)을 중심으로.” 『아랍어와 아랍문화』 19(3), 1-35.
- . 2016. “혁명의 언어: 아랍 민주화 혁명에 나타난 시위 구호의 언어 및 수사 분석: 튀니지와 이집트를 중심으로.” 『아랍어와 아랍문화』 20(1), 1-35.
- 송근영. 2017. “21세기 모로코의 언어 상황: 다언어주의 실현을 위한 쟁점과 프랑스어의 전망.” 『프랑스어문교육』 58, 7-33.
- 손상익. 2005. “한국 신문시사만화사 연구: 풍자성과 사회 비판적 역할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 안정국. 2015. “한국 중동학 현황에 관한 연구: 연구자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 중동학회』 36(2), 187-213.
- _____. 2018. “모로코의 민족 간 혼종 혼인에 관한 연구.” 『중동연구』 36(3), 99-118.
- 어순아, 박진석. 2011. “아프리카 대륙에 위치한 프랑코포니 지역연구, 모리타니, 세네갈, 코트디부아르를 중심으로.” 『人文科學研究』 29, 177-214.
- 원철. 1969. “獨逸 外交政策과 第一次 모로코 事件.” 서울대학교 대학원.
- 윤용수. 2012. “알제리의 프랑스어 수용과 언어 정책.” 『아랍어와 아랍문학』 16(1), 55-85.
- 이규철. 1987. “모로코 아랍어의 음운 연구: 문어체 아랍어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중동학회』 7, 3-28.
- 이명원. 2008. “마그립 지역 영화를 통해 본 아랍인의 의식구조 연구.” 『중동연구』 27(1), 45-73.
- 이원삼. 2004a. “이슬람의 가족법, 여성권리의 시각에서 본 개혁의 가능성: 모로코의 가족법 변화를 통한 고찰.” 『지중해지역연구』 6(1), 67-111.
- _____. 2004b. “모로코 가족법 인식에 관한 조사 연구.” 『한국이슬람학회논총』 14(2), 115-141.
- 이재원. 2012. “튀니지 재스민 혁명의 역사적 기원과 의의.” 『서양사론』 113, 126-153.
- 이한규. 2009. “한국의 대아프리카 정책을 통해서 본 마그레브에 대한 외교 전략과 과제.” 『국제지역연구』 13(3), 343-366.
- _____. 2015. “아프리카 지역협력과 아프리카 연합(AU).” 조한승, 오영달, 김도희, 이한규. 『국제기구와 지역협력』. 서울: 오름, 229-297.
- _____. 2020. “탈냉전 이후, 모로코 여성사회단체의 사회적 공간과 재구성의 의미.” 『중동연구』 38(3), 1-38.
- 장용규 외. 2020. 『한국의 아프리카 지역연구: 성과와 전망』. 서울: 다해.
- 장훈태. 2016. “모리타니아이슬람공화국 문화의 다양성.” 『복음과 선교』 33, 125-171.
- 정지용. 2009. “알제리 대중음악 라이Rai에 나타난 저항의 역사.” 『불어불문학연구』 87, 427-463.
- 조원빈. 2012. “한국의 아프리카 연구 동향.” 『아시아 리뷰』 2(2), 129-148.
- 조윤경. 2010. “알제리를 다룬 영화에 나타난 혼종적 정체성: <추방된 사람들>(2004)과 <영광의 날들>(2006)을 중심으로.” 『프랑스문화예술연구』 32,

663-694.

- 조희선, 엄익란. 2006. “이혼에 관한 무슬림들의 인식과 실천: 카타르, 이집트, 모로코, 튀니지, 터키의 비교연구.” 『지중해지역연구』 8(2), 365-401.
- 진인혜. 2013. “테러와 폭력에 맞선 알제리 문학.” 『불어불문학연구』 91, 425-448.
- 최진영. 1997. “마그립지역의 다중언어현상에 대한 연구.” 『아랍어와 아랍문학』 1, 67-94.
- 최종철. 2010. “한국의 알제리 지역연구 현황.” 『국제지역연구』 19(2), 175-206.
- 하병주. 2002. “중동연구의 새로운 지평.” 『지중해지역연구』 4(1), 161-184.
- 한건수. 2013. “한국의 아프리카 지역연구: 주제별 현황과 방법론적 성찰.” 『아시아연구』 3(1), 159-193.
- 홍명희. 2016. “국내 아프리카 연구의 현황과 과제.” 『비교문화연구』 44, 373-391.
- 황규득. 2016. “한국의 아프리카 지역연구: 현황과 과제.” 『韓國아프리카學會』 47, 157-182.
- 황의갑, 김효정. 2013. “영화 ‘사막의 라이언’에 나타난 리비아 베르베르족의 독립투쟁과 이탈리아의 식민정책.” 『중동연구』 32(2), 83-104.

영문 자료

- Almond, Gabriel A. 1980. *Comparative Politics*, Boston: Little Brown.
- Bouchikh. 2016. “Monarchy and Religious Actors in Morocco.” 『중동연구』 35(1), 91-116.

불문 자료

- Grawitz, Madeleine. 2000. *Méthodes des sciences sociales*, Paris: Dalloz.
- Laroui, Abdallah. 1993. *L'histoire du Maghreb*, Paris: La Découverte.
- Ngoma-Binda, P. 2012. *Démocratie Femme et Société civile en Afrique*, Paris: L'Harmattan.
- Toumi, Mohsen. 1988. *Le Maghreb*, Paris: PUF(Que sais-je ?).

인터넷 자료

- 서기열. 2019. “대우건설, 리비아 건설공사 재개 5년 만에... 신규 발전소도 수주.” <https://www.hankyung.com/realstate/article/2019032110491>(2020/01/12 검색).

Abstract

Korean Research Trends in Maghreb Studies

Hankyu Lee ■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is is a basic study to explore the problems of the foundation study and the future direction through the recent research status on Maghreb in Korea. In this study, it was outlined 'the status of each period'(372 theses), 'the status of each area', and 'the status of each subject' focused on the listed 311 theses in the journals registered and the registration candidates. As a result, the studies by nation, field, and subject in Korea regarding the five countries of Maghreb were concentrated in some countries and some topics, so it is necessary for the examination of a foundation study on Maghreb. In particular, although Maghreb is an Islamic culture, but most of them are "limited research," even though it is closely linked to Arab (Middle East) majors in Korea since it is part of Africa. Therefore, an interdisciplinary research should be prioritized in order to activate the foundation study on Maghreb, and institutional support for this is also important.

Key Words: Regional studies in Africa, Maghreb, Islamic culture, Foundation studies.

정치적 자유주의와 모두스 비벤디: 국제정치의 불량국가 담론에 관한 연구*

민병원 ■ 이화여자대학교**

〈국문요약〉

이 논문은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시대적 변화와 정치철학적 논의가 오늘날 ‘불량국가’ 담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탐색한다. 특히 자유주의처럼 가장 완벽해 보이는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오늘날 국제정치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아울러 ‘불량국가’ 담론의 배경에 깔려 있는 정치적 자유주의의 논리적 구조가 어떤 면에서 문제를 안고 있는지, 그에 대한 비판의 근거는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또한 ‘모두스 비벤디(modus vivendi)’라는 절충적 해법에 대한 정치적 관심이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규명하기 위해 정치적 자유주의 및 정치적 현실주의의 이론을 비교한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탈냉전기 미국 외교정책의 문제를 자유주의와의 연계 속에서 살펴보고, 이어 그 기반을 형성해온 정치적 자유주의의 논리를 톨즈의 주장을 중심으로 짚어본다. 정치적 자유주의의 한계에 대한 정치적 현실주의의 비판을 다원주의의 관점에서 검토한 후에 ‘모두스 비벤디’ 개념이 이러한 논란 속에서 어떤 위상을 차지하는지에 대해서도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모두스 비벤디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정치적 논란이 자유주의 불량국가 담론과 더불어 어떤 함의를 지니고 있는가를 언급한다.

*주제어: 정치적 자유주의, 정치적 현실주의, 불량국가, 모두스 비벤디

I. 들어가는 말

정치의 본질에 관한 수많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자유주의는 인간의 자유라는

* 논문의 개선에 도움을 주신 심사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6S1A5A2A01024077).

**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E-mail: byomin@ewha.ac.kr)

가치를 보장하는데 최고의 이데올로기이자 제도로 간주되어 왔다. 20세기 후반에 들어와 냉전 체제가 종식되면서 자유주의는 모든 이념과 제도를 물리치고 당당하게 승자의 지위에 오른 것처럼 보였다. 국제정치에서도 자유주의 질서는 냉전 기간 내내 굳건하게 유지됨으로써 미래의 방향타처럼 간주되어 왔고, 지금도 존재하다. 하지만 탈냉전기의 상황은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위상을 크게 흔들었는데, 이러한 현상은 국내외적으로 동시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국내정치적으로 서구와 다른 체제들이 지속적으로 등장하면서 세계 곳곳에서 자유주의 체제가 과연 최선의 모델인지에 대한 의문들이 커졌다. 예를 들어 동아시아 발전국가의 등장이나 중국과 같은 권위주의적 동원체제가 산업화와 발전전략에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들이 제기되었다. 국제정치의 차원에서는 냉전기 동안 유지되어온 글로벌 거버넌스의 다양한 제도와 협력 구도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국제연합이나 유럽연합 등 다자주의적 장치들이 한계에 봉착했으며, 심지어 국가가 아닌 다양한 비국가 행위자들의 영향이 커지면서 유럽의 경험에 뿌리를 둔 전통적인 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더 이상 국제사회의 보편 이념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21세기에 들어와 강화된 미국 외교정책의 일방주의적 경향과 ‘악의 축’ 및 ‘불량국가’ 담론은 전통적 자유주의의 원칙에서 한참 벗어난 것으로서 비판의 대상이 되기 시작했다. 일부에서는 대단히 비(非)자유주의적 또는 반(反)자유주의적인 행태라는 비판이 일기도 했지만, 악의 축으로 지목된 국가들 또는 불량국가들에 대한 자유주의 국가들의 강압적 행태와 무력 사용은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본질에 대한 새로운 성찰을 요구해왔다. 정치철학 분야에서 롤즈의 정의론은 현실 정치의 이러한 시대적 변화와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 그의 자유주의 정치철학은 그동안 정치학에서 등한시해온 정의와 도덕의 문제를 다시 공론화하는데 크게 이바지했는데, 논쟁이 지속되면서 롤즈의 입장은 ‘정치적 자유주의’로 분명한 노선을 확립하게 된다. 특히 그의 ‘무법국가’ 담론은 부시 행정부의 ‘불량국가’ 담론과 거의 유사한 논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심지어 미국의 일방주의 외교정책에 대한 정치철학적 근거를 제공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다.

이 논문은 이러한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시대적 변화와 정치철학적 논의가 오늘날 ‘불량국가’ 담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탐색한다. 무엇보다도 이 논문은 자유주의처럼 가장 완벽해 보이는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오늘날 국제정치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이를 위해 ‘불량국가’ 담론의 배경에 깔려 있는 정치적 자유주의의 논리적 구조가 어떤 면에서 문제를 안고 있는지, 그에 대한 비판의 근거는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또한 ‘모두스 비벤디(modus vivendi)’

라는 절충적 해법에 대한 정치적 관심이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규명하기 위해 정치적 자유주의 및 정치적 현실주의의 이론을 비교한다. 우선 제2장에서는 탈냉전기 미국 외교정책의 문제를 자유주의와의 연계 속에서 살펴보고, 이어 제3장에서는 그 기반을 형성해온 정치적 자유주의의 논리를 롤즈의 주장을 중심으로 짚어본다. 이어 제4장에서는 정치적 자유주의의 한계에 대한 정치적 현실주의의 비판을 다윈주의의 관점에서 검토한 후에 ‘모두스 비벤디’ 개념이 이러한 논란 속에서 어떤 위상을 차지하는지에 대해서도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모두스 비벤디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정치적 논란이 자유주의 불량국가 담론과 더불어 어떤 함의를 지니고 있는가를 언급한다.

II. 탈냉전기 미국 외교정책과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한계

1990년대 이후 미국 외교정책에서 ‘적(enemy)’ 개념을 규정하는데 새로운 변화가 나타났는데, 무엇보다도 ‘악(evil)’의 개념과 ‘불량국가(rogue states)’ 담론이 교차 또는 결합되기 시작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외교정책에서 ‘적’을 규정하는 일은 자국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유지하면서 동시에 외부 세계의 위협에 대한 인식을 명확하게 구조화함으로써 폭력적인 대응도 정당화하는 효과를 겨냥한다. 이런 의미에서 ‘타자(others)’의 ‘일탈(deviance)’을 체계적인 수사로서 강조하는 것은 각국의 외교정책에서 그리 이상한 일은 아니다. 미국은 탈냉전기에 들어와 새롭게 부상하는 외부의 위협을 개념화하였는데, 특히 9/11 테러 이후에는 ‘악’과 ‘불량국가’ 수사를 통해 타자에 대한 낙인을 찍기 시작했다.

사실 1990년대 이전에도 미국 외교정책은 ‘기피국가(pariah state)’나 ‘무법국가(outlaw state)’ 등 타자에 대한 다양한 낙인 프레임에 의존하고 있었다. 하지만 부시 행정부에 들어와 ‘불량국가’라는 수사를 대규모로 활용함으로써 새로운 적에 대하여 강력한 부정적 이미지를 부과하였다. 이러한 개념화 작업을 통해 미국은 테러리즘이나 대량살상무기(WMD)와 같은 새로운 위협에 대한 관심을 제고함과 동시에 선제공격과 같은 적극적인 대응을 정당화하기 시작했다. 부시 행정부 이후의 미국 외교정책도 지속적으로 ‘악의 축(axis of evil)’ 담론과 ‘불량국가’ 수사에 의존해왔는데, 여기에서 ‘악’의 개념은 본래 종교적 맥락에서 유래한 것이라는 점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사실 ‘악’의 개념과 ‘불량국가’의 개념이 모두 국제사회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비합리적 행위자’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절대적인 부정의 상징인 ‘악’의 개념에 대비하여 ‘불량국가’의 개념은 상대적으로 느슨한 의미를 담고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적을 ‘불량국가’라고 칭할 경우 무력 대응의 대상이라는 것을 뜻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봉쇄나 평화 공존, 경제제재 등 한층 완화된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의미도 함축하고 있다(Geis et al. 2014, 466).

미국 외교정책에서 불량국가의 개념이 명확하게 규정된 적은 없었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속성이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어 왔다: 대량살상무기 개발, 테러리즘, 군사적 위협, 국제규범에 대한 도전. 이 중에서 대량살상무기와 테러리즘은 21세기에 들어와 더욱 중시되고 있다(O'Reilly 2007, 297). 그런데 이러한 기준들은 어떻게 해서 자유주의 질서를 위협하는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인식될 수 있었을까? 근대 이후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이와 같은 ‘악’ 또는 ‘불량국가’ 담론은 미국과 같은 자유사회가 도덕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전제 위에 가능한 것이었다. 자유주의 정치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서구 국가들의 대외적 활동무대가 확장되면서 국가들 사이의 관계, 즉 국제사회에서도 이러한 자유주의의 우월성이 널리 인정되어야만 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불량국가 담론은 자유주의 국가들 사이에 조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개발되었으며, 그렇지 못한 나라에 대해서는 ‘정의(justice)’를 구현하기 위한 전쟁도 불사할 수 있다는 ‘민주평화론(Democratic Peace Theory)’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후 미국 행정부는 ‘불량국가’라는 표현을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와 국제사회와의 갈등이 본격화되면서 미국의 이익에 도전하는 국가들을 겨냥하여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2019년 미국 국무장관 폼페이오(Michael Pompeo)는 미국이 처한 도전을 세계에 알려야 한다는 소위 ‘미국주의(Americanism)’를 주창하면서 이란, 중국, 북한 등의 ‘불량행동(rogue behavior)’을 언급한 바 있다.¹⁾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와 미중 무역갈등 등 최근의 현안들을 고려할 때 미국 행정부가 이와 같은 과거의 ‘불량국가’ 담론을 지속적으로 재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미트럼프 행정부에 들어와 미국의 위상에 대한 위기의식이 커지고 중간선거 등 국내정치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미국 외교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불량국가’ 담론에 대한 심층적인 탐구가 여전히 요구된다. 이에 따라 언론이나 학계에서도 ‘불량국가’ 담론에 대한 관심이 다

1) US Department of State, “Celebrating Americanism in Our Foreign Policy,” Speech by Secretary Michael Pompeo, August 27, 2019.

시 커질 수 있다.

그렇지만 21세기의 국제정치는 이러한 자유주의 기반의 불량국가 담론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미국의 일방주의 또는 패권주의 외교정책 성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서 불량국가 담론에 대한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Homolar 2010; Caprioli et al. 2005). 그렇다면 불량국가 담론을 가능케 한 자유주의 국제질서는 왜 세계인들을 설득하지 못하는 것일까? 자유주의 이데올로기는 지금까지 존재해온 어떤 이데올로기나 제도보다도 우월하다는 논리에 어떤 내적 문제가 있는 것일까? 자유주의의 불량국가 담론에 내재된 논리를 들여다보면, 불량국가가 국제사회의 규범에 순응하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다시 복귀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럴 경우 국제사회의 작동 원리와 규칙을 수립하고 그것의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가 있어야 할 터인데, 이는 당연히 자유주의 사회일 것이라는 전제가 불량국가 담론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이처럼 국내정치의 자유주의 논리와 국제정치의 자유주의 논리가 정합되지 못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판단 하에 다음 장에서는 자유주의 외교정책의 대외적 레토릭을 떠받치는 롤즈의 정치적 자유주의 논지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그 한계는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III. 정치적 자유주의와 불량국가 담론

1. 중첩적 합의를 기반으로 한 정치적 자유주의

롤즈의 정치철학은 20세기 후반의 자유주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는데, 무엇보다도 '정의'의 기준을 새롭게 체계화하고 도덕적 정치 구조를 가능케 해주는 형식적 도구들을 정비하는데 결정적인 출발점을 제공하였다. 하지만 1971년 발간된 그의 『정의론』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면서 현실성을 결여한 것이라는 비판이 일게 되었고, 롤즈는 1993년 『정치적 자유주의』를 발간하여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재정비하였다. 롤즈의 '정치적 자유주의'는 정의론이 형이상학적 도덕론에 머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현실주의적 유토피아(realistic utopia)'를 구축하기 위한 토대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Rawls 2017, 32). 롤즈가 이처럼 자신의 정의론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킨 데에는 무엇보다도 정치 현실에 대

한 고찰, 특히 ‘가치 다원주의’ 상황에 대한 고찰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비판의 역할이 컸다. 그는 포괄적 교리 또는 도덕적 신념체계가 복수로 존재하는 현실 정치로부터 어떻게 ‘질서정연한 사회(well-ordered society)’의 기초가 만들어질 수 있는지를 고민했던 것이다.

가치 다원주의(value pluralism)는 모든 가치 또는 포괄적 교리를 통합할 수 없다는 현실적 한계를 받아들인다. 즉 다양한 가치를 하나의 ‘보편적 가치체계’로 통합하기란 불가능하며, 이들 사이에 비교도 어렵다고 본다. 어떤 것이 더 나은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정한 가치가 모든 인간에게 본질적이고도 보편적으로 최적인 것이라는 판단을 포기한다.²⁾ 따라서 기존의 포괄적 교리들, 즉 다양한 종교나 도덕체계에서 주장하는 절대적 가치에 대한 확신을 비판한다(McCabe 2010, 25).³⁾ 롤즈는 자신의 정의론이 특정한 포괄적 교리를 지지하는 자유주의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가치 다원주의의 현실을 수용한다. 그에 의하면, 합당한 다원주의에서는 모든 구성원들이 부득불 ‘판단의 부담(burdens of judgment)’을 지닐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구성원 모두가 스스로 정당하다고 믿는 ‘포괄적 교리’에 따라 다른 구성원들의 포괄적 교리가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원주의를 유지하기 위해 이러한 경향 또는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는 의무감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적 자유주의에서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을 존중한다는 의무감은 곧 서로 다른 포괄적 교리, 특히 잘못된 것으로 판단될 수도 있는 근본 교리조차도 존중해주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다.

롤즈의 정치적 자유주의는 도덕적 또는 종교적으로 포괄적 교리들이 복수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질서정연한 사회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중첩적 합의’를 꼽는다. 서로 다른 교리를 추종하는 사회 구성원들이라 할지라도, 자신들이 소속된 사회의 기본 제도에 대하여 합의한다면 이는 ‘정의’를 위한 정치적 해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사회가 통약불가능한(incommensurable) 포괄적 교리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
- 2) 가치 상대주의가 초래할 사회적 협력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일종의 ‘중층적 다원주의(layered pluralism)’를 조심스럽게 제시하기도 한다(Moore 2009, 254). 이것은 가치를 공유하는 소수의 집단으로부터 협력이 시작된다면 도덕적 의무나 강압적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도 점진적으로 협력의 제도화가 가능할 것이라는 추론에 근거를 둔다(Axelrod 1984, 167-168).
 - 3)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치 다원주의가 상대주의나 주관주의(subjectivism)와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가치 다원주의에서는 객관적 이성에서 기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약요건 또는 선택적 합의가 가능하다고 본다(McCabe 2010, 25).

인간들의 삶에 있어서 서로 다른 의미, 가치, 목표가 대부분 상충되거나 갈등 관계에 놓여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서로 다른 교리 또는 신념체계 사이에 어떤 것이 더 우월한지를 가릴 수 있는 판단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도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롤즈는 서로 충돌하는 관념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중첩적 합의’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중시한다.

중첩적 합의는 보편적 원칙과 제도적 장치, 즉 사회의 ‘기본 구조(basic structure)’를 통해 정치적 차원에서 정당성을 갖춘 정의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회의 대다수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포괄적 교리에 대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의 포괄적 교리와 호환될 수 있다는 생각을 공유한다면 이러한 중첩적 합의는 가능하다. 즉 각자의 신념체계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받아들이고, 그 한계 안에서 신념체계가 서로 호환될 수 있다고 생각함으로써 도덕적 합의라는 난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중첩적 합의는 차이와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신념체계를 가진 사람들이 공존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도달하게 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롤즈는 중첩적 합의에 기반을 둔 정치적 자유주의가 ‘올바른 이유(right reasons)’에서 정치의 ‘정당성(legitimacy)’와 ‘안정성(stability)’을 보장할 수 있는 핵심 원리라고 보았다(Rawls 1993, 394).⁴⁾

그런데 여기에서 롤즈가 헌정 민주주의의 중요한 조건으로서 정치체제의 ‘정당성’에 대한 합의, 그리고 오랜 기간에 걸쳐 존속할 수 있는 ‘안정성’을 꼽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서로 다른 목적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도 ‘중첩적 합의’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그의 확신은 현실 정치적 합의를 넘어서는 ‘규범 사회’의 건설이 가능하다는 낙관론으로 이어졌다. 롤즈가 보기에 사회통합이 단지 이해관계의 수렴이나 정치적 협상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왕과 귀족, 중산층 사이에 집단적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사회계약이 이루어진다고 본 홉스(Thomas Hobbes)의 주장이 지닌 한계를 비판했는데, 이는 정의에 관한 ‘합당한(reasonable)’⁵⁾ 관념이 존재하는 사회라면 얼마든지 안정적인

4) 롤즈는 시민들의 합당한 덕성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중첩적 합의’의 개념에 비하여 ‘모두스 비벤디’는 일시적 이해관계에서 만들어진, 즉 ‘옳지 않은 이유’에서 비롯된 합의라고 보았다.

5) 롤즈는 합당성(reasonableness)의 개념이 합리성(rationality)와 다르다는 점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합당한 개인들은 자유롭고 평등한 이들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 하에서 서로 협동할 수 있는 사회체계를 열망하며, 이러한 상호성이 유지됨으로써 각 개인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보았다(Rawls 2016, 142). 이러한 개념은 공리주의에 기반을 둔 합리성의 개념과 다른 일종의 ‘공적 기준’을

사회 통합이 가능하다는 그의 신념을 기반으로 한 것이었다. 롤즈가 보기에, 인간은 홉스 이후 수백 년에 걸쳐 민주주의 사상과 헌정 질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왔고, 이를 바탕으로 민주주의의 이상과 가치를 존중하는 바람직한 정치제도를 만들어왔다(Rawls 1999, 422). 이런 점에서 그는 ‘중첩적 합의’의 관념이 그 규범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과 같은 다원주의의 환경 속에서 충분히 논의할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그는 ‘정의’에 대한 합당한 정치적 관념을 기반으로 사회의 안정과 통합이 가능할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러한 정치적 자유주의 관념은 20세기 후반 이후 자유주의 정치철학의 근간을 형성해왔는데, 롤즈는 1999년 발간된 『만민법』을 통해서 이러한 생각을 국제정치의 영역으로 확대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자유주의 정치이론의 확대는 그동안 현실주의 정치이론이 지배해오던 국제정치학 분야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고, 특히 탈냉전기 이후 미국 외교정책과 더불어 9/11 테러 이후의 공격적인 일방주의적 전환에도 큰 기폭제가 되었다. 무엇보다도 부시 행정부에 의해 시작된 ‘악의 축’ 레토릭과 ‘불량국가’ 담론은 롤즈의 정치적 자유주의 정치철학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과거 냉전 시기의 미소 간 대립 구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간 것인데, 특히 ‘불량국가’ 담론은 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국내정치 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규범을 지배하는 최종적인 기준이어야 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었다. 즉 자유주의 질서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제규범을 준수하지 않는 국가 또는 단체에 대한 공격이 정당하다는 논리로 이어졌는데, 롤즈의 정치적 자유주의는 이러한 논거를 지탱하는 핵심 원리를 제공한 것이다.

2. 롤즈의 모두스 비벤디 비판과 불량국가 담론

이상과 같이 롤즈의 ‘중첩적 합의’ 개념은 가치 다원주의라는 현실적 제약 하에 자유주의의 도덕적 기준을 수립하기 위한 고민의 결과였다. 공적 이성을 갖춘 합당한 시민들은 이러한 중첩적 합의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다원주의 상황에서도 정당하면서 안정적인 제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핵심 논지였다. 이런 점에서 중첩적 합의 기반의 정치적 자유주의는 임시적인 타협책을 뜻하는 ‘모두스 비벤디’와는 분명 다른 것이었다. 롤즈에 따르면, 모두스 비벤디는 사람들이 서로 싸우지 않고 공존하기 위해 특정한 원칙이나 관행에 합의하는 경우로서, 근대 유럽의 종교적 관용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았다. 하지만 이러한

중시하고 있다.

종류의 합의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그의 견해였다. 종교 간의 차이에 대한 합의가 단기간의 평화를 가져오기는 했지만, 상황이 바뀌어 특정한 종교가 지배할 경우 이러한 합의는 곧바로 무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즉 모두스 비벤디는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폭넓고 사려 깊은 논의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권력관계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과정에서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한 임의적인 타협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롤즈는 다원주의적 상황에서 오로지 '현상유지(status quo)'만을 목표로 하는 모두스 비벤디보다는 한층 더 진지하면서도 안정적인 '중첩적 합의'에 따른 해법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Martin 2015, 589).

그렇다면 롤즈의 중첩적 합의 개념이 국제사회에는 얼마나 잘 적용될 수 있을까? 그가 『만민법』에서 전개한 논리에 따르면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이것이 가능하다고 본다. 즉 자유사회와 '적정 수준의 사회'로 이루어진 '질서정연한 사회' 구성원들 간에는 마찬가지로 이러한 합의가 작동하며 그 결과가 '만민법'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회 또는 국가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대응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롤즈는 국제사회에 존재하는 5가지 유형의 사회 또는 국가를 구분하고, 그중에서도 '무법국가(outlaw states)'에 대해서는 강한 어조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그에 따르면, 무법국가는 '질서정연한 사회'의 '만민법'을 준수하지 않는 국가를 가리킨다.⁶⁾ 특히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는 안 된다는 '불가침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심각한 정도로 '인권'을 준수하지 않는 나라를 무법국가로 규정했다. 이러한 무법국가들은 자신들의 목표를 추구하기 위하여 만민법이 설정한 합당한 제약을 따르지 않으려 한다. 롤즈가 '이상적 이론(ideal theory)'에서 그렸던 '만민사회'는 자유주의를 구현하는 '자유사회', 그리고 자유주의적이지는 않지만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하면서 다른 나라를 침략하지 않는 '적정 수준의 사회(decent society)'로 구성된다. 이에 비하여 무법국가는 스스로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합리적' 행위자일 수는 있지만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들을 배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합당한' 행위자는 아니다.

이러한 무법국가에 대하여 만민법을 준수하는 '만민사회'는 정치적, 경제적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경우 전쟁도 불사할 수 있다.

6) 롤즈는 그의 『만민법』에서 국제사회의 구성원을 유형별로 구분하면서 '국가' 대신 '사회'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는 인간의 삶을 증진하는 데 있어 국가가 매우 미흡한 정치체라는 그의 사회철학을 바탕으로 한다. 그런데 그는 유독 '무법국가'에 대해서는 '국가'라는 표현을 덧붙이고 있는데, 이것은 그만큼 국제사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단위체로서 국가의 성격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무법국가에 대한 이와 같은 롤즈의 대응논리는 ‘정의의 전쟁(just war)’ 논리를 바탕으로 한다. 롤즈는 ‘질서정연한 사회’에 적용되는 만민법이 더 이상 적용될 수 없는 나머지 지역에 대한 정의론을 ‘비이상적(non-ideal) 이론’이라고 불렀다. 특히 국제사회의 규범을 준수하지 않는 무법국가에 대하여 정의로운 전쟁을 수행할 수 있다는 그의 주장은 비이상적 이론의 핵심을 이룬다. 무법국가에 대한 자유사회의 전쟁 권리가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권에 대한 준수가 필수적이다. 다시 말해 자국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다른 나라 국민의 인권도 존중하는 사회만이 정당한 전쟁을 치를 권리를 갖는다는 것이 그의 견해였다.

물론 롤즈는 인권에 대한 존중 이외에 실제로 무법국가에 대하여 정당한 무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요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것은 국가의 무력 사용이 정당하면서도 항구적인 평화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며, 무력 사용을 하는 경우일지라도 전쟁 결정에 책임이 없는 적국 민간인들에 대한 공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제2차 세계대전 초반 전세가 매우 불리한 상황에서 독일의 승기를 꺾기 위한 연합국의 공습은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 롤즈의 생각이었다. 이는 예외적으로 민간인에 대한 공격이 허용될 수 있다는 국제법의 ‘최고 비상상황(supreme emergency)’ 개념과 일맥상통한다. 하지만 롤즈는 전세가 연합국에 유리해진 상황에서 드레스덴에 대한 무차별 폭격은 더 이상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라고 보았고, 마찬가지로 이유에서 일본의 도시에 대한 미국의 대규모 폭격과 원폭 투하 역시 무리한 판단이었다고 비판했다(Rawls 2017, 152-153).⁷⁾

롤즈는 포괄적 교리 사이의 중첩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통합이 ‘단순한(mere)’ 모두스 비벤디에 비교하여 훨씬 더 안정적인 해법이라고 확신하였다. 그는 모두스 비벤디가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국가들 사이에 협상을 통해 도달하는 ‘균형점(equilibrium)’이기 때문에 결코 신뢰할 수도 없고 안정적이지도 않다고 보았다. 이러한 모두스 비벤디는 그것이 합의되는 시점의 현실적 세력균형을 반영하지만, 만약 세력균형에 변화가 생길 경우 각각의 국가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모두스 비벤디를 포기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모두스 비벤디는 상황에

7) 롤즈는 무법국가의 엘리트 집단을 ‘범죄자’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인권 위반이나 무력공격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논의하지 않고 있다(Lefkowitz 2015, 379). 한편 롤즈는 냉전기의 대결구도 속에서 일정한 수의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 무법국가들이 자유사회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이유였다.

따라 매우 불안정한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변화하는 이해관계에 따라 언제든지 붕괴될 수도 있다. 이에 비하여 ‘중첩적 합의’는 훨씬 더 강력한 도덕적 목표와 더불어 사람들의 공적 생활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더 나은 조건이며 더 안정적인 결과를 보장한다는 것이 롤즈의 견해였다(Rawls 1999, 432-433).

결국 정치적 자유주의 관점에서는 모두스 비벤디를 흡스적 공존 모델에 가까운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⁸⁾ 공통의 가치관이 없더라도 서로 공존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 때문에 자제력을 행사할 수 있고, 이것이 호혜적으로 작동할 경우 모두스 비벤디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롤즈와 마찬가지로 자유주의 정치철학자인 포게(Thomas Pogge)도 모두스 비벤디가 다원주의에 대한 잠정적 해법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그는 모두스 비벤디가 당사자들 각자의 도덕적 관념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이것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평화적이거나 정당한 것으로 인정 받기 어렵다고 보았다. 모두스 비벤디의 합의는 공포와 불신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진정한 평화를 보장할 수 없으며, 국가들 사이에 이해관계나 권력균형의 변화가 생길 경우 모두스 비벤디를 변경하려는 시도가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모두스 비벤디는 여기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의 권력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에 따라 그 성격이 좌우되며, 많은 경우 각국 국내사회의 압력으로 인하여 불안정성이 고조되곤 한다. 또한 적대국 간에 모두스 비벤디가 합의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비도덕적 고려와 전략적 의지로 인하여 단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Pogge 1987, 430-431).

이런 점에서 롤즈의 무법국가론은 모두스 비벤디적 해법을 거부하는 미국 외교정책의 성향과 매우 닮았다. 특히 다른 가치관을 지닌 비(非)자유주의 사회, 특히 무법국가나 불량국가를 국제사회의 규범을 위협하는 존재로 간주하고 그에 대한 불관용을 주장하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처럼 미국 외교정책의 불량국가 담론이 궁극적으로 롤즈의 정치적 자유주의 및 만민법 사상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고 보며, 그 근거로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논거를 제시한다. 첫째, 롤즈의 무법국가 개념이나 부시 행정부의 불량국가 개념은 모두 외교정책의 이데올로기적 신념체계를 가리키고 있다. 외교정책에서 이러한 신념체계가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큰데, 레이건 행정부 당시 소련을 ‘악의 제국(evil empire)’로 불

8) 흡스의 사회계약 모델에서 무제한적인 전쟁을 회피하기 위한 최초의 노력은 행위자 간에 기대하는 ‘상호 조정된 자제(coordinated self-restraint)’이다. 이러한 자제는 명시적일 필요가 없으며, 쌍방 간에 특정한 가치 체계를 전제로 하지 않아도 된다. 단지 상대방의 이익, 역량, 상황에 대한 인식과 그것을 기반으로 한 호혜적인 행동을 통하여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흡스식 모델의 특징이다(Pogge 1987, 427).

렸던 것과 같이 적대국가를 이데올로기적 공포의 근원지로 간주하려는 성향은 언제나 존재해왔다. 9/11 테러 이후의 '불량국가' 담론 역시 강한 이데올로기적 신념체계의 성격을 띠는데, 이는 롤즈가 『만민법』에서 스페인제국이나 나치 정권을 '무법국가'의 사례로 언급했던 것과 유사한 맥락을 지닌다(Doyle 2015, 268-269).

둘째, 롤즈의 무법국가 담론은 부시행정부 당시의 불량국가 담론에 비해 한층 더 계몽적이고 세련된 것이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 고전 자유주의의 틀 내에서 구체적인 '악'을 대상으로 한 정치적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역사 속의 자유주의는 본래 보편적 세계관을 지향하기보다도 실천 가능한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신정체제, 절대주의, 도그마주의 등 비판의 '대상'을 명시해왔는데, 롤즈는 나폴레옹이나 히틀러의 정권을, 그리고 부시 행정부는 이란, 이라크, 북한 정권을 그러한 대상으로 꼽고 있다(Geuss 2005, 24-25 & 34). 셋째, 부시행정부의 불량국가 개념은 롤즈의 『만민법』에서 제시한 '무법국가'의 기준을 채택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이단아를 규정하는데 동조하고 있다. 기존에는 국제연합 헌장 2조와 같이 국가의 영토적 통합성과 정치적 독립성을 위협하는 경우를 '불량국가'의 기준으로 삼았는데, 롤즈의 무법국가 개념에는 자국 국민을 어떻게 다루는가의 국내정치적 기준이 추가로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곧 '인권'의 문제가 불량국가를 결정하는 또 다른 근거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변화인데, 그 기원은 바로 롤즈의 『만민법』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다(Prebble 2005, 26-27). 결국 부시 행정부의 불량국가 담론과 일방주의적 외교정책에 담긴 자가당착적인 모습은 바로 이러한 자유주의 정치철학 전통과 개념들 내부에 잠재된 딜레마를 이어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IV. 정치적 현실주의와 모두스 비벤디

1. 자유주의의 한계와 정치적 현실주의

이상에서 논의한 바와 같은 맥락에서 현대의 마지막 이데올로기라고도 일컬어지는 자유주의가 국제정치질서를 유지하는데 한계에 도달했다는 비판이 줄을 이어왔다. 냉전의 종식과 더불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유일한 대안이 되었다는 설부터는 판단도 있었지만, 오늘날 이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거의 없다. 자유주의는

500여 년의 역사 속에서 형성된 정치철학으로서, 개인들이 사회계약을 통해 공동체를 이룬다는 가상의 시나리오에서 그 정당성을 구축해왔다. 그렇지만 현실의 정치는 자유주의를 기획했던 초기 철학자들이 구상했던 것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으며, 자유주의 체제에서 나타나는 많은 부작용들은 더욱 악화일로에 있다. 자유주의가 언뜻 보기에 점점 확산되고 완전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유주의는 스스로의 내적 모순을 안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지속 불가능한 수준에 다다르고 말았다. 자유주의는 반항하는 사람들을 더욱 강하게 통제하면서 한층 더 자유주의적인 원칙과 실천을 강요하려 하기 때문이다(Deneen 2019, 21-24).

자유주의의 종말을 진단하는 학자들은 공산주의의 종말이 자유주의의 동반 쇠퇴를 가져왔다고 지적한다. 공산주의나 자유주의 모두 근대 계몽주의 기획의 산물로서, 도달할 수 없는 이상향만을 그려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유토피아적 이데올로기는 현실정치와 부합하지도 않았고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했다. 오히려 반자유주의적이며 인종차별적이고 전체주의적인 성향을 강화해왔으며, 유토피아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야만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을 휘두르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20세기 후반부터 세계를 휩쓸고 있는 신보수주의 물결과 세계화, 종교적 근본주의는 모두 계몽주의 정신의 지나친 확장과 왜곡에 그 기원을 둔다(Gray 1995, xiv-xvii). 이러한 계몽주의의 병폐에 대하여 세계 곳곳에서 특수주의, 호전적 종교, 인종적 편향성 등의 반발이 일어나는 현상을 이해하기란 그리 어렵지 않다. 현실의 국제정치가 다원주의 성향을 강화해가고 있는 만큼이나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강박증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다원주의라는 현실 정치의 조건 하에서 자유주의의 원리가 좌절했던 역사적 경험은 바이마르(Weimar) 공화국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등장한 독일 공화국은 다양한 정치적 의견이 공존하는 다원주의 체제를 통하여 특정한 세계관과 인간상이 모든 사회를 지배하지 못하게끔 하였다. 당시 구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허용된 유일한 원칙은 모든 대립적 의견 사이에 평화로운 공존을 도모해야 한다는 규범뿐이었다. 이러한 메타규범은 롤즈가 ‘포괄적 교리’라고 불렀던 일반적인 신념체계 중의 하나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규범들의 존재와 관계를 규정하는 ‘규범의 규범’이었다. 바이마르의 자유주의 사회에서 두드러진 한 가지 특징은 ‘절대적 진리’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생활형식으로서 자유주의는 결코 최선의 가치가 아니며, 가능한 여러 이념 중의 하나로서 단지 상대적인 것일 뿐이었다(Safranski 2017, 348-349).⁹⁾

9) 켈젠(Hans Kelsen)은 이런 점에서 형이상학적이며 절대주의적인 세계관은 귀족적인 것

이런 역사적 경험을 고려할 때 롤즈의 이론에 대한 자유주의 정치철학 내부의 비판과 논란은 롤즈의 위상을 재검토하는데 큰 시사점을 준다. 롤즈의 『정의론』에 이어 1998년에 발간된 『만민법』은 그의 자유주의 정치철학 기획의 정점에 도달한 것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주의 진영 내부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예를 들어 포게(Thomas Pogge)나 뷰캐넌(Allen Buchanan)은 롤즈의 『만민법』이 그의 초기 정의론과 일맥상통하지 않으며, 자유주의적 원칙을 구현하는데 여전히 미흡하다고 비판하였다. 특히 약자에 대한 원조 등 더욱 평등한 국제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중앙집중적 제도를 위한 구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Pogge 2004; Buchanan 2000). 슈클라(Judith Shklar)와 같은 자유주의자들 역시 자유주의의 역사적 기원이 ‘공포(fear)’에 기원하고 있다는 점을 롤즈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Shklar 1989). 바이츠(Charles Beitz)와 쿠퍼(Andrew Kuper)도 롤즈가 ‘만민’ 개념에 치중하는 바람에 자유주의의 기초인 ‘개인’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논의하지 못했으며, 특히 ‘인권’을 너무 좁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집중 비판하였다(Beitz 2000, 683-684; Kuper 2000, 641-642).

한편 이러한 비판에 대하여 롤즈 이론의 범위와 성격을 재규정하려는 작업도 이루어졌는데, 대체로 롤즈의 자유주의 기획이 제한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되었다. 예를 들어 롤즈의 『만민법』이 충분한 국제사회의 정의론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대하여 롤즈의 의도가 국제사회의 기본구조를 구축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공리주의 접근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었다는 점이 부각되었다(Freeman 2007, 455-456; Wellman 2012). 이와 더불어 롤즈의 기획이 개인의 자유에 초점을 맞춘 ‘포괄적 자유주의(comprehensive liberalism)’가 아니라 ‘관용’의 가치를 강조하는 ‘정치적 자유주의’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관성을 지니고 있다는 견해도 경청할 만하다(Tan 2000, 45). 또한 롤즈의 『만민법』이 국제사회에서 ‘이상적 사회’보다도 ‘비이상적 사회’에 관한 이론의 토대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여러 비판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의의를 지닌다는 시각도 호응을 얻고 있다(Nili 2010).

한편 자유주의 정치철학의 문제점을 파고든 현실주의는 롤즈의 정의이론이나 정치적 자유주의에 내재된 문제점들을 근본에서부터 비판해왔다.¹⁰⁾ 즉 자유주의

이라고 규정하고, 민주주의의 전제조건으로서 비판적이면서 상대주의적인 세계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10) 이러한 정치적 현실주의는 국제정치이론 분야에서 카아(E. H. Carr)가 제시했던 주장과 맥락을 같이 하는데, 일부 학자들은 현실주의가 19세기의 유토피아주의에 대한 대

를 한층 더 정교한 이론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현실주의적 접근을 통한 기반 확충이 요구된다고 보는 것이다. 다만 정치적 현실주의는 여타의 이데올로기와 동등한 수준에서 경쟁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자유주의나 사회주의, 마르크스주의, 무정부주의, 파시즘 등 다양한 정치적 프로그램들이 특정한 지향점을 가진다는 점에서 일종의 정치적 ‘기획(programme)’인 반면, 현실주의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현실주의는 사회 제도의 구조, 실천, 가치 등에 대한 새로운 디자인을 내세우지 않으며, 오로지 현실에 존재하는 정치적 불일치의 문제와 더불어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측면에 대해서만 관심을 보인다. 이런 맥락에서 정치적 현실주의는 자유주의가 정치적 현실의 제 측면, 즉 불일치와 다원주의, 사회의 기본 제도 등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했다는 점을 비판하고 있다(Sleat 2013, 9).¹¹⁾

롤즈의 『정의론』이 정치철학의 ‘부활’을 상징하는 업적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계몽주의 기획이 붕괴되어 가는 시점에 전통적인 정치철학의 과제에 대한 관심을 다시금 불러 일으켰기 때문이다(Gray 1995, 1-2). 그는 칸트의 의무론적 접근을 기반으로 하여 자유주의 도덕을 새롭게 정립했다. 하지만 그의 노력은 현실 정치와 동떨어졌다는 비판에 직면했는데, 이는 전통적 자유주의자들이 ‘추상적 개인주의(abstract individualism)’라는 형이상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기인한다. 이러한 자유주의 사고는 역사성을 결여하고 있으며, 삶의 현장을 치열하게 탐구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무엇보다도 다양성이 공존하는 모습, 즉 ‘역사적 공동체’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함으로써 정치적 삶을 공허한 것으로 치부해온 것이다. 세상에는 무수히 많은 도덕적 가치와 포괄적 교리들이 존재하지만, 이들 사이에 극복할 수 없는 ‘통약불가능성’으로 인하여 도덕이나 정치의 이론화가 거의 불가능하다. 롤즈의 만민법과 무법국가론에 드러났듯이, 정치적 자유주의는 이러한 차이에 대하여 정면 대응을 주문해왔다. 자유주의의의를 지키기 위한 무력 사용을 정당화한 것이다. 그리하여 칸트가 표현한 것처럼, “굽어진 나무줄기(crooked timber)’와도 같은 인류의 다양한 삶을 ‘곧은 것(straight thing)’으로 만들기 위해 자유주의 정치철학은 강압에 의존해온 것이다(Berlin 1990, 18-19).¹²⁾

안일 필요는 없다고 보았으며 양자 사이에 절충적인 입장을 필요하다고 보았다(Sleat 2013, 4).

11) 정치적 현실주의는 롤즈와 드워킨(Ronald Dworkin) 등 영미계의 ‘전통 자유주의 이론(high liberal theory)’을 주된 비판의 대상으로 삼는다. 윌리엄즈(Bernard Williams)와 던(John Dunn), 게우스(Raymond Geuss), 그레이(John Gray) 등이 현실주의자로 분류되고 있다(Galston 2010, 385-386).

12) 베린(Isaiah Berlin)은 진리가 아름다운 것이라는 톨스토이의 표현에도 불구하고, 진리

현실주의자들은 정치적 삶에 불가피하게 존재할 수밖에 없는 ‘강압’의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고 있는데, 이는 현실 정치의 ‘갈등’이 결코 제거될 수 없으며 그 때문에 정치권력이 행사되는 방식이 중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¹³⁾ 자유주의자들은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불편부당한 원칙을 찾아가는 과정이 정치의 핵심이라고 본다. 하지만 현실주의자들은 정치의 본질이 ‘지배’에 있으며, 사회적 다양성 속에서 질서를 추구하는 것이 그 목표라고 본다. 현실 정치는 결국 비(非)도덕적 과정이며, 롤즈가 제시했던 ‘공적 이성(public reason)’보다 훨씬 더 적나라하고 치열한 ‘비(非)이성의 간계(cunning of unreason)’에 가깝다고 보는 것이다(Stears 2007, 540-541).

또한 정치적 현실주의자들은 가치 다원주의에 대한 자유주의자들의 인식이 피상적이라고 비판한다. 롤즈를 포함한 자유주의자들은 다양한 의견이 대립하는 현실 정치의 상황이 합리적 고려와 심의 민주주의적 의견 교환을 통해 공유 가치의 영역을 찾아낼 수 있다는 낙관론을 펼치고 있는데, 이러한 기대가 지나치게 과장되었다는 것이다. 롤즈가 받아들였던 포괄적 교리의 다양성은 자유주의자들의 생각보다도 훨씬 더 심각하고 해결이 쉽지 않기 때문에 현실주의자들은 이러한 상황을 ‘심층적 다양성(deep diversity)’으로 간주한다(Stears 2007, 541-542). 이에 대하여 자유주의자들은 ‘공적 이성’을 지닌 사람들 사이에 다른 포괄적 교리를 인정하고 스스로의 포괄적 교리를 제한함으로써 중첩적 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현실주의자들은 이러한 ‘인정’과 ‘제한’이 사실상 하나의 ‘합의’라는 점을 지적한다. 그들이 보기에 이러한 합의에 도달하는 ‘과정’ 자체가 정치적 실천이다. 그만큼 자유주의자들이 전제조건으로 받아들였던 ‘합의’에 비하여 현실의 정치적 ‘합의’는 훨씬 더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자유주의가 내세우고 있는 ‘정의’의 가치가 정치적 현실주의에서 상대적으로 높이 평가 받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그것이 지나치게 이상적인 목표를 지향하기 때문이다. 인류 최초의 사회계약에 관한 흄스적 가상 담론은 이러한 한계를 잘 드러낸다. 그에 따르면, 무정부상태에 처한 ‘최초의 인간’은 무엇보다도 질서, 보호, 안전, 신뢰, 협력의 조건을 창출하는데 노력했을 것이었다. 그 당시

라는 것이 그렇게 엄격하고 완전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는 도덕적 기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며, 칸트의 정언명령과 같은 이상적 기준을 현실 정치에 부과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이어진다(Berlin 1990, 19).

13) 강압의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었던 현실주의 사고는 프리드리히 니체, 막스 베버, 칼 슈미트의 정치철학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오늘날 코넬리(William Connolly), 무페(Chantal Mouffe), 그레이 등 자유주의에 비판적인 학자들의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Stears 2007, 534).

에는 정의나 추상적 도덕보다도 이러한 생존지향적 가치들이 더 중요했을 터인데,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다른 가치들을 추구할 수 없었을 것이다. 윌리엄즈는 이러한 문제, 즉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의 문제를 '최초의 정치적 문제(first political question)'라고 불렀다. 그리고 이러한 조건을 충족해야만 권위의 '정당화(legitimation)'가 이루어질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았다(Williams 2005, 3-4).¹⁴⁾ 이러한 '최초의 정치적 문제'란 정치적 권위를 받아들여야만 하는 신민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지의 문제로서, 그에 대한 해답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달리 나타날 수밖에 없다(Rossi and Sleat 2014, 693).¹⁵⁾

이러한 속성은 정치적 현실주의가 보편적인 원칙과 도덕적 가치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본래 정치적 자유주의는 대체로 보편적 원칙을 먼저 수립하고 나서 그에 부합하는 제도와 실천이 따라야 한다고 본다. 정치제도와 질서의 정당성이 그러한 원칙에서 비롯된다고 전제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치적 현실주의에서는 실제 현실에서 작동하고 있는 제도와 실천이 오히려 정치적 교리나 도덕의 정당성을 제공해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즉 정치제도와 실천이 원칙을 실행하는 장치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것의 구조와 형태가 교리와 도덕의 관념을 정당화시켜준다는 것이다(Sangiovanni 2008, 137-138). 그런 만큼 정치적 현실주의는 '상황의존성(contingency)'와 '실천'에 주안점을 두면서 그동안 정치적 자유주의가 제대로 다루지 못했던 현실 정치의 측면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2. 모두스 비벤디와 실천의 정치학

이상의 논의와 같이, 정치적 현실주의자들은 정치적 자유주의가 현실 정치의 중요한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다고 비판해왔다. 그들은 롤즈나 드워킨과 같은 자유주의자들을 '고상한 자유주의(high liberalism)'로 치부하면서 유토피아

14) 정치적 현실주의자인 윌리엄즈는 사회계약의 결과로서 등장한 '국가'의 임무는 이러한 '최초의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었고, 그로부터 '기본 정당화 요구(basic legitimation demand)'가 충족될 수 있다고 보았다(Williams 2005, 4).

15) 정치적 현실주의는 사람들 사이의 집단적 결정에 대한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조건으로서 '정당성'에 더 초점을 맞춘다. 자유주의자들이 공적 이성과 보편적 도덕을 바탕으로 한 합의 도출에 몰두했다면, 현실주의자들은 법제도와 권위를 통해 그러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조건을 설정하는 데 더 집중해왔다(Rossi and Sleat 2014, 692).

적인 생각을 벗어나 정치적으로 실현 가능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인간 사회에 상존하는 정치적 갈등이나 이해관계의 충돌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상시적으로 중재 또는 견제하는 정치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즉 롤즈가 주목했던 ‘가치 다원주의’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하며 정치적 현실의 핵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정치적 현실주의의 입장이 두드러진다. 모두스 비벤디 개념이 개인들 사이의 공존과 정치적 타협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자유주의적 요소를 담고 있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다원주의, 즉 정치적 ‘불일치’에 대하여 전통적인 자유주의자들보다는 현실주의자들이 더 신중하게 대응한다는 점에서 양자 간에 차이가 드러난다. 특히 모두스 비벤디는 사회의 다양한 의견들이 서로 호환되지 않는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러한 다원주의적 현실로부터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출발점으로 삼는다.

그만큼 모두스 비벤디 개념은 완벽한 포괄적 교리 또는 이상적인 합의를 지향하는 대신에 ‘평화’와 ‘안정’의 조건을 어떻게 현실 정치에서 구현할 수 있는가에 관한 고민의 결과이다. 달성할 수 없는 형이상학적 정의의 기준에 얽매이기보다는, 최소한의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말하자면 ‘최선의 가치’보다 ‘차선의 현실적 대안’을 모색하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모두스 비벤디는 서로 다른 포괄적 교리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들을 통합하려는 환상을 버리고 현실의 차이와 갈등을 조정하고 타협하도록 도와주는 ‘정치적 기능’을 요구한다. 정치의 본질이 궁극적인 이상향을 구축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갈등과 불안정을 극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현실주의 관점에서 이러한 모두스 비벤디를 통한 평화와 안정이야말로 실현 가능한 종착점일 수 있다. 정치는 ‘정의’보다 ‘질서’를 더 중시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정치적 기능’은 복수의 포괄적 교리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에서 요구되는 사회적 기능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정치적 현실주의는 ‘정치’가 독자적이고 독립적인 규범을 만드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Galston 2010, 386-388).

이처럼 ‘차이’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정치적 현실주의는 ‘모두스 비벤디’의 해법을 중시해왔다. 가치 다원주의의 문제가 전면에 부상하면서 자유주의 정치 철학이 곤경에 처해왔고, 이를 타파하려던 롤즈의 정치적 자유주의가 한계를 드러내면서 모두스 비벤디 개념을 통한 절충적 해법을 마련하는 작업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처럼 모두스 비벤디 개념은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매우려는 절충적 성격을 띤다. 또한 인간의 ‘좋은 삶’이나 절대적인 도덕을 지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반(反)유토피아적’이다. 모두스 비벤디 개념을 통해 추구하는 목표는 사람들 사이에 ‘받아들여질 수 있는 타협(acceptable compromise)’에 있다

(McCabe 2010, 126). 이러한 타협을 추구하는 시민들은 그들의 정치적 삶에서 절대적이고 추상적인 도덕 원리를 준수하기보다 안정적인 질서를 더 원한다. 포괄적 교리가 통용되는 이상적인 사회보다는 실현 가능한 ‘차선(second best)’의 해법에 합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모두스 비벤디는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해법으로서, 서로 다른 의견이나 포괄적 교리 사이에 불일치와 갈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모두가 평화롭고 안정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이다(Wendt 2016, 353). 보편적인 도덕 기준에 합의할 수는 없지만, 정치적 타협을 통하여 가능한 범위 안에서 ‘최소한의 도덕 기준’을 제시하고자 노력하기 때문이다.¹⁶⁾

모두스 비벤디는 결국 인간의 삶에 다양한 방식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러한 한계를 무리하게 넘어서려고 하지 않는다. 또한 이러한 삶의 방식들 사이에 우위를 가리는 것이 불가능하며, 어떤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데 공감한다. 물론 각각의 사람들이 서로 다른 삶의 방식에 속해 있다는 사실이 곧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Gray 2000, 5).¹⁷⁾ 왜냐하면 모두스 비벤디 개념이 정치적 현실주의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자유주의의 가치 자체를 방기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경우 타협을 통한 모두스 비벤디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최소한의 도덕기준(minimum moral standard)’이 갖추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통치의 책임성, 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압적이지 않은 개인의 선택 등이 이러한 최소한의 기준에 해당한다(McCabe 2010, 138). 또한 모두스 비벤디가 자국 국민들을 잔인하고 비참하게 대하는 정권들과의 ‘부패한 타협(rotten compromise)’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커져 왔다(Margalit 2010, 1-2). 모두스 비벤디가 최소한의 인도주의적인 선악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여기에는 용기, 실천, 타인에 대한 동정과 같은 ‘보편적 선’을 추구하거나 제노사이드나 노예제도 등 ‘보편적 악’을 피해야 한다는 조건들이 포함되기도 한다(Gray 2000, 8).

또한 모두스 비벤디 개념을 선호하는 현실주의자들은 다원주의 상황에서 도

16) 롤즈의 관점에서는 모두스 비벤디가 전략적이고 불안정한 해법으로서 언제든지 붕괴될 수 있는 임시적인 합의라는 점을 부각시키는 반면, 현실주의자들은 대부분 모두스 비벤디가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안정과 평화를 위한 차선책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포괄적 자유주의와는 다른 도덕적 위상을 지닌다고 주장한다. 여기에는 그레이, 호튼(John Horton), 맥케이브(David McCabe) 등이 포함된다(Wendt 2016, 365).

17) 그레이의 가치 다원주의는 가치에 대한 회의론이나 주관주의 또는 상대주의와 다르다. 호튼(John Horton)에 따르면, 가치 다원주의는 윤리적 기준이 없다 할지라도 오류를 인식할 수 있다는 일종의 비(非)현실주의(irrealism)에 가깝다(Horton 2006, 158).

덕적 가치의 순위를 매길 수 없다 할지라도, 최소한 선악의 구분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는 곧 모두스 비벤디가 완전한 도덕 기준을 전제로 하지는 않더라도 가급적 도덕적 '선'에 근접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으며, 나아가 공적 정당성을 확보함으로써 공동체의 안정을 도모하려 한다는 점에서 그 도덕적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Wendt 2016, 352). 결국 정치적 현실주의자들은 모두스 비벤디의 철학이 롤즈가 평가절하했던 것처럼 그렇게 권력지향적이거나 이해타산적인 것으로서 비난받아야 할 것이 아니라고 본다. 오히려 모두스 비벤디는 정치적 타협을 통해 도달해야 하는 상당한 수준의 성과라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다(Westphal 2019, 3).

현실 정치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은 자신들의 이상적 규범에 집착하기보다는 다른 규범에 속한 상대방과의 협상을 통해 일정한 타협점에 도달하려는 자세를 가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완벽한 일방적 만족을 추구하려 하기보다는 사회적 평화(social peace)를 위하여 타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본다. 롤즈가 '중첩적 합의'를 통해 도달하려는 목표를 모두스 비벤디는 '타협'을 통해 도달하려 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일반적으로 '타협'은 어떤 결정 또는 협상을 통해 이루어지는 과정이나 결과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여기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은 자신들의 원칙이나 목표를 수정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러한 준비는 곧 자신들과 다른 신념을 가진 상대방과 공존하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도덕적 타협'에 해당한다. 무엇보다도 현실주의 입장에서는 타협을 통한 모두스 비벤디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그것이 강압을 통해 이루어지지 말아야 하고, 순수하게 전략적인 고려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Zanetti 2011, 425-426).

이런 점에서 정치적 현실주의가 내세우는 모두스 비벤디는 자유주의자들이 상정하는 타협에 비해 훨씬 더 포괄적인 타협의 개념을 제시한다. 정치의 본질이 타협에 있다는 생각은 이미 고대로부터 지속되어온 것인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사회적 동물'로서 인간이 '합의(consent)'를 통하여 서로의 차이와 갈등을 조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정치적 현실주의자들에 따르면, 이러한 합의는 오로지 동질적인 집단 내에서만 가능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강압'이 부과될 수밖에 없다.¹⁸⁾ 부시 행정부의 '악의 축' 레토릭이나 '불량국가' 담론도 이러한 '강

18) 이런 점에서 정치적 현실주의자들은 롤즈의 주장이 단지 절반만 맞다고 본다(Galston 2010, 391). 합의를 통해 질서정연한 사회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동질적 집단 내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롤즈의 만민법에서 상정하고 있는 '무법국가'는 '합의'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견제 또는 전쟁의 대상이 된다. 즉 이러한 무

압의 행사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롤즈의 무법국가론조차도 ‘정의의 전쟁’ 개념을 바탕으로 한 강제적 타협을 공공연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은 자유주의자들의 타협 개념이 얼마나 좁은 범위 내에서 규정되는 것인지를 잘 보여준다. 사실 국제질서에 관한 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은 ‘무정부상태(anarchy)’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 ‘독재(tyranny)’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논리로 이어질 수 있다. 국제질서의 자유주의에 대한 합의가 충분한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아무리 자유주의 레토릭을 구사하더라도 일방적인 무력행사와 강압은 국제정치의 독재와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모두스 비벤디 개념은 그 성격상 ‘실천지향적(prudential)’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서로 호환되지 않는 포괄적 교리를 가진 사람들에게 강압을 통해 보편적 가치를 부과하기보다는 그들 사이에 어떻게 평화적 공존이 가능한지에 관심을 가진다. 각자의 규범틀 내부에서는 절대로 도달할 수 없는 질서정연한 정치적 삶이야말로 모두스 비벤디 개념에 담긴 궁극적인 목표인 것이다. 따라서 모두스 비벤디 사고는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도덕 이론을 지향하지 않으며, 정치 ‘질서’ 자체를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꼽는다. 불안정한 현실에서 획득할 수 있는 대안을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현실주의에서 추구하는 모두스 비벤디의 최대 덕목이다. 모두스 비벤디가 임시변통의 가치나 도덕, 교리에 머물지라도, 그것이 사회갈등을 해소하고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기여한다면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의 현실적인 삶에 있어서 이성에 기반을 둔 최고의 형이상학적 가치가 아니라 안정과 평화가 더 절실하기 때문이다(Sleat 2013, 95-97). 이런 점에서 국제정치의 자유주의적 불량국가 담론이 가진 한계가 여실히 드러난다. 그것은 서로 다른 포괄적 교리의 공존을 추구하기보다 포괄적 교리의 비대칭적 우월감을 바탕으로 한 ‘강압’의 외교정책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V. 결론: 모두스 비벤디의 국제정치적 함의

자유주의의 가치는 계몽주의 이후 인간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새로운 이정표를 세움으로써 인류 역사에 큰 영향을 미쳐왔다. 하지만 유럽 대륙 내에서만 통용되어온 이러한 자유주의의 기조는 근대 후기에 들어와 제국주의적 팽창과 함

법국가를 대하는 데 있어 ‘강압’만이 유일한 대안이 된다.

께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다른 삶'의 방식을 자유주의에서 어떻게 포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었지만, 자유주의 세계관은 유럽과 비유럽의 경계선을 넘지 못한 채 이분법적 논리에 머물러 있었다. 이는 곧 유럽 중심의 자유주의 철학이 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어졌고, 20세기를 거치면서 이러한 현상은 더욱 악화되었다. 특히 냉전 이후의 국제정치 공간이 확장되고 삶의 다양한 방식을 인식해야 한다는 '다원주의'가 강화되면서 전통적인 자유주의의 논리에도 커다란 변화가 요구되기 시작했다. 부시 행정부의 일방주의 외교정책과 불량국가 담론이 국제사회의 충분한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 상황은 이러한 정치질서의 변화에 기인한다.

롤즈의 정치적 자유주의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의 요구에 대한 자유주의 진영의 '현실정치적' 대응이었다. 하지만 그의 '정치적 자유주의'는 세계가 요구하는 다원주의 시대의 삶을 규정하는데 충분한 해답이 되기 어렵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탈냉전기 국제정치의 무대에 새롭게 등장한 제3세계 국가들과 탈사회주의 진영, 그리고 비(非)서구국가들로 인하여 더 이상 자유주의가 '문명표준'의 원칙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게 된 것이다. 정치적 자유주의는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려는 자유주의의 적극적 '재(再)이론화'의 산물이었지만 탈냉전기의 국제정치는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무엇보다도 롤즈의 정치적 자유주의는 자유주의적인 '질서정연한 사회'와 그렇지 않은 사회를 구분하고, 후자에 대한 전자의 강압적 대응을 정당화함으로써 이론적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런 맥락에서 새로운 관심을 끌기 시작한 모두스 비벤디 개념은 자유주의자들이 처한 이론적 한계를 넘어서고 현실주의자들이 도모했던 안정과 질서를 가능하게 해주는 하나의 해법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개념적 논의가 주로 정치적 현실주의자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지만, 정치적 자유주의자들도 모두스 비벤디의 가치를 소극적으로나마 인정하고 있다. 중요한 차이는 모두스 비벤디가 얼마나 도덕적 가치를 지향하는가에 달려 있다. 사실 롤즈는 모두스 비벤디를 마키아벨리식의 타협, 즉 권력정치와 이해관계의 산물로서만 인식했다. 하지만 현실주의자들의 지적처럼 우리가 완벽한 도덕적 기준보다 현실의 안정과 평화를 더 중시한다면, 분명 포괄적 자유주의나 정치적 자유주의가 제시한 것보다 훨씬 더 바람직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정치적 현실주의는 자유주의가 지향하는 보편적 도덕 기준, 즉 '옳음(right)' 대신에 다소 불완전하더라도 질서와 평화, 안정을 가능하게 해주는 '좋은(good)'의 가치를 더 선호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적 이상은 과거에 비해 ‘온건한(modest)’ 것이어야 하고 규범적으로 ‘제한적(limited)’ 차원에 머물러야 한다. 이러한 접근법은 자유주의의 핵심적 가치라고 할 수 있는 ‘보편적 합의’에 대한 열망을 포기해야만 가능하다(Horton 2006, 156; Gray 2000, 2). 물론 모두스 비벤디의 형식과 내용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보편적인 법칙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모두스 비벤디의 정치적 효율성과 정당성은 오로지 그것이 작동하는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된다. 롤즈는 이러한 ‘상황의존성(contingency)’으로 말미암아 모두스 비벤디가 언제든 위반될 수 있으며 불안정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이러한 불안정성이야말로 정치의 본질이라는 현실주의의 주장 또한 무시할 수 없다. 환경이 바뀔 때마다 모두스 비벤디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변경하는 일이야말로 정치의 본래적 기능이기 때문이다.

또한 현실주의자들은 모두스 비벤디가 자유주의의 추상적 원칙에 비하여 훨씬 더 나은 결과를 가져다주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자유주의의 경우 보편적 권위에 대한 신념을 지향하지만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확실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에 비해 모두스 비벤디의 경우에는 최소한의 도덕적 가치를 유지하면서 정당성과 안정성이라는 정치적 삶의 조건을 충족하는데 더욱 효과적이다(Gray 1998, 33). 그렇다면 탈냉전기의 자유주의적 ‘불량국가’ 담론은 지나치게 이상적인 기준에 얽매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특정한 규범체계에서 벗어난 국가들을 혼내고 가르쳐야 한다는 일종의 가부장적 환상에 빠져 있다. 국내정치의 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이룩해온 성과를 국제정치에 그대로 적용하면서 드러난 이러한 간극에 대하여 충분한 정치철학적 성찰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미래의 국제질서에서 혼란을 제거하기는 결코 쉽지 않다. 모두스 비벤디의 논의는 이런 점에서 자유주의 이후의 국제질서를 논의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 Axelrod, Robert. 1984. *The Evolution of Cooperation*. New York: Basic Books.
- Beitz, Charles. 2000. "Rawls's Law of Peoples." *Ethics* 110(4), 669-696.
- Berlin, Isaiah. 1990. *The Crooked Timber of Humanity: Chapters in the History of Ideas*. London: John Murray.
- Buchanan, Allen. 2000. "Rawls's Law of Peoples: Rules for a Vanished Westphalian World." *Ethics* 110(4), 697-721.
- Caprioli, Mary and Peter Trumbore. 2005. "Rhetoric versus Reality: Rogue States in Interstate Conflict,"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49(5), 770-791.
- Deneen, Patrick. 2019[2018]. *Why Liberalism Failed* 이재만 옮김. 『왜 자유주의는 실패했는가?』. 서울: 책과함께.
- Doyle II, Thomas. 2015. "When Liberal Peoples Turn into Outlaw States: John Rawls' Law of Peoples and Liberal Nuclearism." *Journal of International Political Theory* 11(2), 257-273.
- Freeman, Samuel. 2007. *Rawls*. London: Routledge.
- Galston, William. 2010. "Realism in Political Theory."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Theory* 9(4), 385-411.
- Geis, Anna and Carmen Wunderlich. 2014. "The Good, the Bad, and the Ugly: Comparing the Notions of 'Rogue' and 'Evil' in International Politics." *International Politics* 51(4), 458-474.
- Geuss, Raymond. 2005. *Outside Ethic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Gray, John. 1995. *Enlightenment's Wake: Politics and Culture at the Close of the Modern Age*. London: Routledge.
- Gray, John. 1998. "Where Pluralists and Liberals Part Company." *International Journal of Philosophical Studies* 6(1), 17-36.
- Gray, John. 2000. *Two Faces of Liberalism*. New York: Polity.
- Homolar, Alexandra. 2010. "Rebels without a Conscience: The Evolution of the Rogue States Narrative in US Security Policy,"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17(4), 705-717.
- Horton, John. 2006. "John Gray and the Political Theory of Modus Vivendi." *Critical Review of International Social and Political Philosophy* 9(2), 155-169.
- Kuper, Andrew. 2000. "Rawlsian Global Justice: Beyond The Law of Peoples

- to a Cosmopolitan Law of Persons." *Political Theory* 28(5), 640-674.
- Lefkowitz, David. 2015. "Just War Theory." In *The Cambridge Rawls Lexicon* edited by Jon Mandle and David Riedy, 377-381.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argalit, Avishai. 2010. *On Compromise and Rotten Compromise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Martin, Rex. 2015. "Overlapping Consensus." In *The Cambridge Rawls Lexicon*, edited by Jon Mandle and David A. Reidy, 588-593.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cCabe, David. 2010. *Modus Vivendi Liberalism Theory and Practi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oore, Matthew. 2009. "Pluralism, Relativism, and Liberalism." *Political Research Quarterly* 62(2), 244-256.
- Nili, Shmuel. 2010. "A Poggean Passport for Fairness? Why Rawls' Theory of Justice Did Not Become Global." *Ethics and Global Politics* 3(4), 277-301.
- O'Reilly, K. P. 2007. "Perceiving Rogue States: The Use of the 'Rogue State' Concept by U.S. Foreign Policy Elites." *Foreign Policy Analysis* 3, 295-315.
- Pogge, Thomas. 1987. "International Relations as a Modus Vivendi." *Proceedings of the Annual Meeting of Americ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81, 426-439.
- Pogge, Thomas. 2004. "The Incoherence Between Rawls's Theories of Justices." *Fordham Law Review* 72, 1739-1759.
- Preble, Christopher. 2005. "The Bush Doctrine and 'Rogue' States." *Foreign Service Journal* (October), 25-30.
- Rawls, John. 1999[1987]. *Collected Papers*. Edited by Samuel Freema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Rawls, John. 2016[1993]. *Political Liberalism* 장동진 옮김. 『정치적 자유주의』. 파주: 동명사.
- Rawls, John. 2016[2001]. *Justice as Fairness: A Restatement*. 김주희 옮김. 『공정으로서의 정의』. 서울: 이학사.
- Rawls, John. 2017[1999]. *The Law of Peoples*. 장동진·김만권·김기호 옮김. 『만민법』. 파주: 동명사.

- Rorty, Richard. 1991. *Objectivity, Relativism and Truth Philosophical Papers*, Volume 1.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ossi, Enzo and Matt Sleat. 2014. "Realism in Normative Political Theory." *Philosophy Compass* 9/10, 689-701.
- Safranski, Rüdiger. 2017[1994]. *Ein Meister aus Deutschland Heidegger und eine Zeit*. 박민수 옮김. 『하이데거』. 서울: 북캠퍼스.
- Sangiovanni, Andrea. 2008. "Justice and the Priority of Politics to Morality." *Journal of Political Philosophy* 16(2), 137-164.
- Shklar, Judith. 1989. "The Liberalism of Fear." In *Liberalism and the Moral Life* edited by Nancy Rosenblum, 21-38.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Sleat, Matt. 2013. *Liberal Realism A Realist Theory of Liberal Politics*.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 Stears, Marc. 2007. "Review Article: Liberalism and the Politics of Compulsion."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7, 533-553.
- Tan, Kok-Chor. 2000. *Toleration, Diversity, and Global Justice*. University Park: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 Wellman, Christopher. 2012. "Reinterpreting Rawls's The Law of Peoples." *Social Philosophy and Policy* 29(1), 213-232.
- Wendt, Fabian. 2016. "The Moral Standing of Modus Vivendi Arrangements." *Public Affairs Quarterly* 30(4), 351-370.
- Westphal, Manon. 2019. "Theorizing Modus Vivendi." In *The Political Theory of Modus Vivendi*, edited by John Horton et al. eds., 1-27. Cham: Springer.
- Williams, Bernard. 2005. *In the Beginning Was the Deed: Realism and Moralism in Political Argumen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Zanetti, Véronique. 2011. "Justice, Peace and Compromise." *Analyse and Kritik* 2, 423-439.

Abstract

**Political Liberalism and Modus Vivendi:
The Discourse of Rogue State in International Relations**

Byoung Won Min ■ Ewha Womans University

This paper investigates what impacts the changes of international relations and political philosophy have on the discourse of rogue states. Its focus is on how liberalism has revealed limitations in international relations. What kind of problems liberalism has in its internal logic will also be discussed in terms of its relations to the discourse of rogue states. The eclectic solution of the modus vivendi will be introduced on the comparison of political liberalism and political realism. Some historical backgrounds of American foreign policy and the fundamentals of political liberalism are to be presented in the first section. Then follows limits of political liberalism and the challenges of political realism regarding the concept of modus vivendi, with some final comments on the implications of modus vivendi for the liberal discourse of rogue states.

Key Words: Political Liberalism, Political Realism, Rogue States, Modus Vivendi

유럽 난민 위기: 문제정의 오류와 결과*

김성진 ■ 덕성여자대학교

〈국문요약〉

이 글의 목적은 유럽 난민 '위기'와 관련해 난민정책 및 제도들 간의 상충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난민 위기의 성격을 분석하는 데 있다. 난민 위기는 대규모 유입과 혼합이동을 통해 그 성격을 분석할 수 있으나 이러한 성격이 난민보호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어떠한 문제를 야기하는지에 대한 분석은 많지 않다.

유럽은 코소보 사태 이후 대규모 난민유입에 대비하기 위해 EU지침을 통해 기본적인 정책 조율을 추진해왔다. 임시보호조치는 그 대표적인 사례로 스웨덴을 포함해 많은 EU국가들이 시행하고 있으며, 대규모 유입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심사과정의 지연에 대비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합이주 과정에서 난민과 이주자 속성이 같이 나타나면서 기존의 차단과 보호를 나누는 정책의 답습은 효율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보호대상의 성격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부족함을 보여주고 있다. 시리아 난민 위기는 난민 정의의 수정은 물론, 개발협력정책의 내실화 등으로 난민 발생요인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난민보호관련 국제적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주제어: 시리아 난민, 유럽 난민 위기, 혼합이주, 난민정책, 문제정의 오류

I. 서 론

이 글의 목적은 유럽 난민 위기, 특히 난민보호와 관련된 정책과 제도들 간의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6S1A5A2A01024965).

** 덕성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전공 교수 (E-mail: skimgla@duksung.ac.kr)

상충과 그 결과를 살펴봄으로써 현 난민 위기의 성격을 분석하는 데 있다. 시리아 내전으로 촉발된 유럽내 시리아 난민 위기는 다양한 측면에서 정의될 수 있다. 첫째 무엇보다 대규모 난민의 유입에 따라 난민보호에 큰 위기가 발생하였다. 특히 시리아 난민은 지중해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망 및 실종자가 발생함으로써 인도주의적 문제를 심각하게 야기하였다. 둘째, 시리아 난민문제는 유럽 국가들의 난민접수·지원정책을 조율하는 데 실패함으로써 난민 위기가 증폭되었다는 점에서 난민정책 조율의 위기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시리아 난민 '위기'는 종종 난민에 의한 위기라기보다 정책 조율의 실패에 따른 위기라고도 일컬어진다. 기존의 많은 연구는 이 두 차원의 위기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난민 위기를 야기하는 보다 근본적인 차원의 문제, 즉 '문제정의 오류'와 이로 인한 난민보호 정책과 규범의 상충을 분석함으로써 유럽 난민 위기를 다른 각도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2011년 3월 시리아 내전이 발발한 이후 시리아 난민은 2011년 7월 인접국인 요르단으로의 유입을 시작으로 터키, 레바논, 이라크, 이집트, 북아프리카 등 주변 국가들로 확대되었다. 2011년 8월 8천 명 수준이었던 난민은 2013년 1월 1백만 명, 2013년 9월 2백만 명, 2014년 9월 3백만 명, 2015년 7월에는 4백만 명, 2017년 12월 5백만 명에 달하였다(UNHCR data). 유엔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 for Refugees: UNHCR) 자료에 따르면 2019년 3월 현재 시리아 난민은 약 569만 명으로 최고치에 달했다.¹⁾

시리아 난민의 급증과 인명손실, 시리아 내전 상황에서 대두된 ISIS 성장과 유럽내 테러 증가, 대규모 난민 유입에 따른 유럽내 극우정당의 성장 등으로 관심의 초점이었던 유럽 난민위기는 2016년 3월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과 터키 사이에 난민협약 체결, EU 회원국내 난민 분산, 그리고 북아프리카 국경관리 강화 및 난민센터 지원 등의 조치가 마련되고 있다. 과연 이러한 조치는 현재의 위기상황에 대한 적절한 정책이며, 정확한 상황인식에 기초하고 있는가?

무엇보다 기존연구에서 난민유입과 그 파장, 그리고 부분적으로 난민보호정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듯하며, 위기상황의 성격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기존연구는 난민의 원인과 해결책 연구(이병하 2017), 난민에 대한 인식과 정치화(오혜민 2019; 정다숨·권순희 2019; 송영훈 2018; 이병하 2018), 난민문제의 안보화 및 테러문제와의 연계(송영훈 2014; 박단 2016; 송영훈 2016; 송영훈 2014), 난

1) 시리아 난민은 2017년 5백만 명을 기록한 이후 다소간의 증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기 수준이 지속되고 있다. 시리아 난민 수의 변화에 대해서는 UNHCR 자료 <https://data2.unhcr.org/en/situations/syria> 참조(2020/04/02 검색).

민법과 제도의 개선(김용철 2019; 김종세 2019; 이은채 2019; 김대근 외 2017), 해상난민관련 국제규약과 차단활동 등에 대한 연구(강우현 2019; 이기범 2015)가 이루어졌다. 또한 난민정책과 현안에 대한 EU(이형석 2019), 독일(Knuth 2019; 이용일 2018; 이승현 2016), 영국(국민호 · 양연희 2019; 김성진 2016a), 프랑스(임지영 2019; 심성은 2019; 박선희 2016), 캐나다(민지원 2019), 터키(김중관 2016), 그리고 라틴아메리카(손지혜 · 윤인진 2019)와 아프리카(한준성 2019; 정희을 외 2019) 등 국가들에 대한 개별 연구와 비교연구(송영훈 2018a; 오현주 2018; 이병렬 · 김희자 2011)가 진행되었다.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에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난민에 대한 연구는 난민 문제의 심각성과 우려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포괄적인 연구에도 불구하고 난민 위기, 특히 시리아 난민 위기의 배경 혹은 요인에 대한 분석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시리아 난민은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수적으로 능가하고 단일 난민으로 최대 규모가 되었다. 단순히 수적 증가가 시리아 난민 위기의 원인인가? 왜 시리아 난민의 유입은 아프가니스탄 난민의 유입 때보다 심각한 위기를 낳고 있는가?

시리아 난민 위기의 배경으로는 유럽내 난민정책의 조율 실패와 함께 시리아 내전의 지속과 난민 증가, 난민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터키의 상황, 이미 대규모 난민이 유입된 시리아 인접국의 재정적 어려움, 유럽행을 결정할 수 있는 수준의 난민의 충분한 재정능력, 유럽행 경로의 공유 · 전파 등이 언급되기도 한다.²⁾ 이러한 요인들이 세부적으로 시리아 난민의 대규모 유입에 영향을 주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문제는 이러한 요인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문제정의 오류’ 개념을 사용해 시리아 난민사태의 변화와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난민(보호)정책의 지속이 어떠한 문제를 낳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은 시리아 난민 위기의 한 단면을 보여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난민보호정책의 보완을 위해서도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문제정의 오류’ 개념을 살펴보고, 실제로 유럽의 시리아 난민위기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Syrian Refugee Crisis: Why Has it Become So Bad?” *The Guardian*, 4 September 2015,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5/sep/04/syrian-refugee-crisis-why-has-it-become-so-bad> (2020/04/02 검색).

II. 문제정의와 위기

정책은 “특정한 사회문제의 해결을 목적으로 이를 수행하기 위해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하는 공공기관의 계획적 행동”(Lasswell and Kaplan 1970, 70-75, 은재호 2007, 243-244 재인용)이라고 할 수 있다. 특정 사회문제에 대한 정책은 현 사태에 대한 ‘문제정의’, 정책목표와 정책의 우선순위 설정, 정책의 실행과 평가, 그리고 정책의 조정 등의 과정 등을 거치며 변화하게 될 것이다. 합리적 종합이론(rational comprehensive theory)에 따르면 정책결정과정은 달성해야 할 목표나 가치의 정의, 목표 달성을 위한 가능한 대안 모색, 각각의 대안에 대한 비용, 편익, 능력 분석, 각각의 정책이 가져올 결과 분석, 그리고 비교된 대안 가운데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을 선택하는 과정이다(문경삼 1996, 2). 그러나 이러한 합리모델은 가치와 사실, 수단과 목적의 구분이 불분명하고, 무엇보다 목적 설정 자체도 누구를 위한 목적이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모든 대안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의사결정이 내려진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의사결정을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점진적 결정모델이 제시되었다(문경삼 1996, 694-695).

정책결정에 대한 분석은 정책변동에 대한 분석으로 이어졌다. 정책들은 정치, 경제, 사회적 정책환경의 변화, 쟁점의 성격 구조 및 영향 범위 변화, 정책결정 관련 행위자 간의 상호작용의 변화, 정책 능력의 변화에 따라 수정·변화하게 된다.³⁾ 정책 변화에 대한 기존연구는 점진주의와 경로의존성 등 점진적 정책변동에 초점을 맞춘 연구와 전문가 집단내 지식과 패러다임 변화가 급격한 변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학습모델 등과 같이 정책 변화 유형-예를 들어 일상적 점증주의적 변화, 새로운 정책수단 개발, 정책 패러다임 변동 등-에 초점을 맞춘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전문가 집단내 패러다임 변화가 어떻게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로 이어지는지를 미시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은재호 2009, 245-246).

이와 관련해 ‘문제정의적 접근’(definitional approach)은 무엇보다 정책결정이 문제해결 과정이기 전에 앞서 문제에 대한 인식과 정의를 포함하며, 이는 정책대상으로서의 ‘문제’가 구성주의적 접근에서와 같이 객관적 실체가 아니라, 정책결정

3) 정책결정 네트워크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서는 김영중, “사회정책결정과정의 정책 네트워크 비교분석: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비정규직근로자보호법 제정과정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20권 2호(2009), pp. 241-268, 245-247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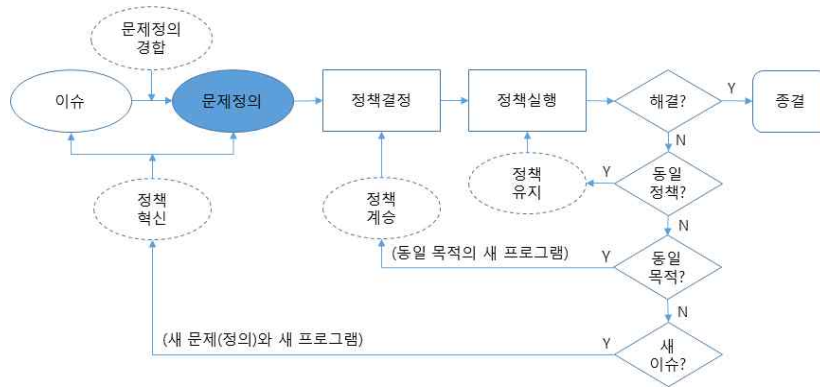
과정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의 결과, 즉 사회적 구성물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경우 문제정의의 정당성은 어떤 사실에 대한 정책결정과정에 개입된 다양한 행위자들 사이의 합의로 산출되며,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결정과정은 정의과정에서 당위성을 확보한 ‘문제’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으로 인식된다. 이러한 접근에서 정책변동은 문제의 사실관계 변화와 이에 따른 문제정의의 변화, 혹은 기존의 복수의 문제정의 가운데 기존에 정당성을 획득했던 문제정의의 정당성 상실과 다른 문제정의의 정당성 확보에 따라 야기될 수 있으며, 정책의 변화 속도는 새로운 문제정의가 정당성을 확보하는 속도와 연동된다(은재호 2009, 260).

정책변동에 대한 분석에서 문제정의와 함께 주목받는 변수는 구조화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⁴⁾ 다양한 행위자들의 문제정의와 이러한 문제정의의 상호작용과 정책변동을 분석한 연구들의 경우 구체적으로 다양한 행위자들의 문제정의를 비교·제시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되기도 한다. 이러한 점에서 구조화는 가치에 대한 합의와 이러한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수단에 대한 합의로 나뉠 수 있으며, 구조화의 수준은 가치와 수단에 대한 합의가 낮은 ‘학습형’, 가치에 대한 합의가 높고 수단에 대한 합의는 낮은 ‘협상형’, 가치에 대한 합의는 낮지만 수단에 대한 합의는 높은 ‘수용형’, 그리고 가치와 수단에 대한 합의가 높은 ‘규칙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정창호 2013, 244).

이러한 논의는 문제정의와 이에 의해 촉발될 수 있는 정책변동—새로운 문제발굴과 정책적 개입이 진행되는 정책혁신(policy innovation), 동일 목적하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하는 정책계승(policy succession), 그리고 동일목적과 프로그램으로 변화에 적응하는 정책유지(policy maintenance), 그리고 정책목적 달성이나 파기에 따른 정책종결(policy termination)—을 보여주고 있다(은재호 2007, 244).

4) 구조화가 잘 된 문제는 의사결정자가 1인 또는 소수이고, 대안이 고정되어 있으며, 효용과 가치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며, 결과가 확실한 문제이다(Dunn 1994, 73, 정창호 2013, 242 재인용)

〈그림 1〉 문제정의와 정책변동의 성격



문제정의와 정책변동과 관련된 논의는 유럽내 시리아 난민 위기의 성격을 분석하는 데 효과적인 분석틀을 제시해주고 있다. 유럽 난민위기의 경우 난민보호 정책과 관련해 합의가 부재한 것을 들어 난민 위기가 아니라 조울 위기라고도 하지만 정확하게 무엇을 조울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분석은 많지 않다. 시리아 난민 위기의 경우 ‘문제정의’를 둘러싼 합의가 약화되고 있는 상황(혹은 문제정의의 우선순위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유지나 부분적인 정책계승, 즉 일부 새로운 형태의 정책을 진행함으로써 정책대상의 변화되는 성격을 정책에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Ⅲ. 시리아 난민에 대한 문제정의 변화

2011년 3월 시리아 내전의 발생과 이후 점증하는 시리아 난민은 인접국가들을 시작으로 유럽과 북미지역 등 세계로 확산되었으며, 2020년 3월 현재 약 569만 명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2018년 1월 말 550만 명을 넘긴 이후 550만-570만 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⁵⁾

시리아 난민 증가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는 지중해 난민의 증가이다. 지중해 난민은 2015년 1백만 명 이상이 기록된 이후 연간 10-15만 명 수준으로 감소

5) “Trend of Registered Syrian Refugees,” <https://data2.unhcr.org/en/situations/syria> (2020.4.2. 검색).

하고 있으나, 여전히 국제적 관심이 필요한 문제이다. 특히 2016년의 경우 지중해 난민 가운데 5천 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실종되었으며, 사망·실종자 수는 2019년 1천 명대 수준으로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중해 난민 수의 1%가 넘는다.

〈표 1〉 지중해 난민의 증감

연도	도착자 수1)	사망/실종자 수	도착자 대비 사망/실종자 비율
2019	123,663	1,319	1.07
2018	141,472	2,277	1.61
2017	185,139	3,139	1.70
2016	373,652	5,096	1.36
2015	1,032,408	3,771	0.37
2014	225,455	3,538	1.57

1) 도착자 수: 이탈리아, 사이프러스, 몰타 도착자와 함께 육로와 해로로 그리스와 스페인에 도착한 난민 포함

* 출처: UNHCR, "Refugee Situation: Mediterranean Situation," <https://data2.unhcr.org/en/situations/mediterranean> (2020/04/05 검색).

난민의 이동은 이미 오래된 사안이며, 많은 경우 난민은 단기간에 급격히 발생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갑작스러운 난민 발생이 반드시 혼란을 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민관련 문제정의에 변화가 있다는 점은 이미 국제이주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Migration: IOM)과 UNHCR의 '혼합이동'(mixed movement) 혹은 '혼합이주'(mixed migration) 개념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IOM과 UNHCR은 '혼합이주'(mixed migration)에 대해 성격이 다른 사람들이 섞여 있는 이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혼합이주란 무엇인가? 혼합이주 흐름의 주된 특징은 이러한 부정기적이고 이동을 촉발하는 요소들의 복잡성에 있으며, 연관된 사람들의 프로파일과 필요가 다르다는 데 있다. 혼합적 흐름은 '난민, 망명 희망자, 경제이주자, 그리고 다른 이주자들을 포함한 복합적인 인구이동'으로 정의된다. 보호자가 없는 미성년자, 환경이주자, 밀입국자(smuggled persons), 인신매매 희생자들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혼합적 흐름의 일부를 구성할 수 있다(IOM 2008, 2).

혼합이주는 이전에도 인지되고 있었던 문제이다. 예를 들어 이주, 망명, 난민에 대한 정부간협의체(Intergovernmental Consultations on Migration, Asylum and Refugees: IGC)는 2000년 4월 실질적으로 복잡하고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는 비호신청자, 난민, 이주 흐름을 관리하기 위한 가장 나은 방안을 토의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하였다. 또한 IGC는 2000년 11월 혼합 및 2차 이동(mixed and secondary flows) 관리를 위한 비호신청자, 난민, 그리고 이주자정책을 포함한 인구이동관리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을 위한 자문을 진행하였다.⁶⁾

혼합이주와 관련해 UNHCR은 2007년 1월 UNHCR은 혼합이주와 관련해 ‘10개항의 실행계획’(10-Point Plan in Action)을 발표하였다. ‘10개항의 실행계획’은 혼합이주민 속에서 난민을 보호하기 위한 주요 파트너들 간의 협력, 일관되고 포괄적인 자료 수집과 분석, 작동 가능한 입국 시스템 구축, 적절한 접수절차, 임시서류 발급과 비호신청 의사 확인 등을 위한 프로파일링 메카니즘 구축, 상대적으로 명확한 비호신청 의사를 구분해 진행하기 위한 차별화된 과정과 절차, 난민을 위한 보다 다양한 해결책 마련, 2차 이주에 대한 관련국의 정당한 절차와 관련자 보호를 위한 대응책 마련, 난민이 아니거나 비호신청 의사가 없는 사람들을 위한 귀환문제 등에 대한 지원, 그리고 출발국, 경로국 및 도착국에서의 비정규적 이주시의 위험성과 도착지의 어려움 등을 알리는 정보 전략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⁷⁾

혼합이주에 대한 인식이 초기에 ‘다양한 사람들이 동일 경로에 섞여서 이동하고 있다’는 점과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주로 아프리카와 중동지역의 난민 이동 및 보호와 연관되어 있었다. 그러나 혼합이동(mixed movement)이라는 표현과 같이 난민을 ‘이주’라는 범주에서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의 변화도 나타나고 있다.

UNHCR은 난민에 대한 정의와 함께 난민과 이주자를 혼동하는 경향 혹은 난민을 이주자의 하위범주로 여기는 경향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UNHCR은 난민문제가 혼합이동의 형태로 진행될 때 불가피하게 이주정책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주정책이 난민, 비호 희망자, 그리고 무국적자 보호에 필요한 특수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⁸⁾ 특히 UNHCR은 국제적 수준에서 이주자에 대한 통일된 법적 정의가

6) IOM, “IGC,” in <https://www.iom.int/igc> (2020/04/02 검색).

7) UNHCR, “The 10-Point Plan in Action,” in <https://www.unhcr.org/the-10-point-plan-in-action.html> (2020/04/02 검색).

8) UNHCR, “Asylum and Migration,” in <https://www.unhcr.org/asylum-and-migration>.

부재하고, 종종 ‘이주자’라는 단어가 이주자와 난민을 모두 통칭하는 상위개념(umbrella term)으로 사용되기도 하는 ‘관행’이 난민보호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공개된 공적 토론에서 이러한 관행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주’는 보통 보다 나은 경제적 기회를 찾아 국경을 넘는 사람들과 같이 자발적 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는 안전하게 귀국할 수 없으며, 따라서 국제법에 따라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하는 난민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난민과 이주자라는 용어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는 시도는 안전을 위해 허가 없이 국경을 넘는 데 따른 비난이나 강제송환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는 난민에게 필요한 특별한 법적 보호 조치에 대한 관심을 흐리게 하고 있다. 비호를 구하는 행위에는 불법적인 요소가 없으며, 오히려 이는 보편적인 인간의 권리이다. 난민과 이주자를 혼동하는 것은 보다 많은 난민들이 그 어느 때보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시점에 난민과 비호기관에 대한 대중적 지지를 훼손할 수 있다.

국가들 사이를 이동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인권과 존엄을 보호받을 자격이 있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난민은 출신국의 상황으로 인해 되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국제법에 의해 특별히 정의되고 보호되는 집단이다. 이들을 다른 명칭으로 부르는 것은 이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에 빠트리는 것이다.⁹⁾

UNHCR의 이러한 입장은 ‘혼합이주’와 ‘혼합이동’이라는 표현 사이에 존재하는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입장 차이는 혼합이동이 아프리카와 중동에서 난민이 발생하고 이들 난민이 인접지역으로 이동할 때와는 사뭇 다르게 유럽내에서는 민감한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혼합이동의 규모가 커지면서 단순히 난민보호라는 기본적인 합의와 난민 수의 증가에 따른 보호 상의 부담 증가 간의 갈등이 아니라, 난민과 경제이주민의 구별의 어려움, 난민정책과 이주정책의 갈등에 따른 이주정책의 붕괴 가능성에 대한 경계, 그리고 난민이 아닌 사람들에게 대한 정책이 중요한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문제정의에 대한 합의가 약해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html (2020/03/15 검색).

9) UNHCR, “Refugees’ and ‘Migrants’: Frequently Asked Questions (FAQs),” 31 August 2018, <https://www.refworld.org/docid/56e81c0d4.html> (2020/02/10 검색).

IV. 유럽연합의 시리아 난민정책과 한계

일반적으로 난민 수와 난민보호 수준은 반비례(number-vs.-right thesis)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제안들도 나오고 있다(Dauvergne & Marsden 2014).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난민보호는 개별국의 법적 조치에 의존하고 있으며, 혼합이동은 개별국가들 간에 혼합이동 집단과 이들 집단내 난민의 성격이나 인정에 대한 합의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유럽연합의 난민관련정책은 1999년 이후 유럽공동난민체제(Common European Asylum System: CEAS)를 통해 개별 국가에 속했던 난민관련 정책을 지역차원의 대응으로 전환하면서 발전되어왔다. CEAS는 1999년부터 2005년까지 최소한의 공동비호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입법을 마련하고, 유럽난민기금(European Refugee Fund)을 창설하는 등 코소보 난민사태 이후 대규모 난민의 유입에 대응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이후 CEAS는 2008년 3월 EU 회원국들의 비호 입법을 연결함으로써 보호기준의 조화,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그리고 회원국 간 및 회원국과 비회원국 간 단결(solidarity)과 책임감 강화라는 세 축을 기반으로 발전하였다.¹⁰⁾

CEAS는 구체적으로는 임시보호지침(Temporary Protection Directives), 비호 희망자 접수지침(Reception Directives), 비호 희망자에 대한 책임국가관련 지침, 비호 희망자 자격지침(Qualification Directives), 그리고 비호절차지침(Asylum Procedure Directives) 등으로 구성되었다(김성진 2016b, 212). 첫째, 임시보호지침은 1998년 코소보 난민사태에 직면해 단기보호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2001년 7월 채택되었다. 둘째, 비호 희망자 접수지침은 2003년 1월 채택되었으며, 비호신청자에 대한 문서발급, 주거제공과 가족 보호, 의료 서비스와 아동에 대한 교육서비스 제공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동 지침은 비호 희망자의 주거지 제한과 1년의 취업을 허용하고 있다. 셋째, 2003년 1월에 채택된 비호 희망자에 대한 책임국가관련 지침은 비호신청을 어느 국가가 심사할 것인가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더블린규정 II' 이후 비호신청 심사는 첫 신청이 이루어진 접수국, 이전에 비자, 거주허가,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던 국가, 그리고 보호자 미동반 아동의 경우 가족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인 국가, 그리고 법적 자격이 없이 입국한 비호신청자에 대한 심사는 처음 입국한 국가에서 심사를 진행하게 되었

10) European Commission, "Common European Asylum System," https://ec.europa.eu/home-affairs/what-we-do/policies/asylum_en (2020/01/15 검색).

다.11) 넷째, 비호신청자의 자격 규정은 2004년에 채택되었으며, 1951년 난민협약 이외의 자격, 특히 난민요건에 해당하지 않지만 송환시 중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대상자에 대한 보완적 보호(subsidiary protection)를 규정하고 있다. 다섯째, 비호절차지침은 2005년 12월 채택되었으며, 심사중 체류보장 등의 최소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동 지침은 심사절차 간소화를 위해 ‘안전한 국가’(safe country of origin) 규정을 마련해 안전한 국가 출신의 비호신청자에 대한 박해 여부 판단이 어려운 경우 비호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유럽연합은 2003년 1월 비호 희망자 및 비정규 이주자의 지문등록 DB(European Dactyloscopy: EURODAC)와 2004년 유럽연합의 국경을 관리하는 유럽연합 국경 및 해안경비국(Frontex)을 설치하고,12) 2010년부터는 유럽비호지원사무소(European Asylum Support Office: EASO)를 설치해 유럽연합내 난민 관련 정책의 조율을 강화하였다(김성진 2016b, 214-215).

CEAS에서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는 더블린규약(Dublin Regulation)이다. 더블린규약은 가족적 고려부터 최근 비자를 발급받았거나 거주허가를 받았던 회원국 등 EU 회원국 간에 비호신청에 대한 심사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더블린규약은 1997년 9월 발표된 더블린협약(Doublin Convention)이 체결된 이후 2003년과 2013년 6월 각각 수정되었다. 더블린규약은 2013년 6월에 발효된 ‘더블린 III’을 보완해 ‘더블린 IV’를 준비 중이다.13)

유럽연합의 이러한 난민관련 지침들은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난민관련 정책을 통합하는 수준이었으며, 기본적인 합의가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시리아 난민이 혼합이동 형태로 대규모로 유입되면서 유럽연합의 정책은 난민보호라는 기본원칙에도 불구하고 ‘통제’에 역점을 두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개별국의 정책은 각각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반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1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미성년이 복수의 국가에 비호 신청을 한 경우, 보호자가 회원국 내에 있지 않을 때는 미성년자가 체류하면서 신청서를 작성한 국가에서 심사하도록 개정하였다. Library of Congress, “Refugee Law and Policy: European Union,” <https://www.loc.gov/law/help/refugee-law/europeanunion.php> (2020/2/20 검색).

12) 프론텍스는 유럽연합의 외부국경 관리를 조율하기 위한 기구였으나, 2015년 시리아 난민 위기가 촉발된 이후 명실상부하게 유럽연합의 외부 국경을 통제하게 되었다. 2016년 10월부터 불가리아-터키 국경지역에 유럽연합국경/해안경비대가 공식 출범하였다.

13) ‘더블린 III’의 성과 및 ‘더블린 IV’관련 제안 내용에 대해서는 European Commission, “Country Responsible for Asylum Application (Dublin),” https://ec.europa.eu/home-affairs/what-we-do/policies/asylum/examination-of-applicants_en (2020/01/15 검색) 참조.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혼합이동’으로 규정된 사람들의 적극적이고 선택적인 행동방식으로 인해 기대하는 정책효과를 내지 못하는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¹⁴⁾

유럽연합의 시리아 난민에 대한 정책은 도착 난민에 대한 지원, 터키와의 난민협약을 통한 지중해 난민의 송환, 북아프리카 국경통제 강화 및 난민보호센터 지원, 지중해 난민의 구조, 유럽도착 난민의 회원국내 분산정책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난민정책의 핵심은 난민보호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코소보 난민 사태를 겪으면서 유럽은 CEAS를 구축하고 유럽연합내 이동 자유화에 따른 난민보호정책의 조율을 진행하였으나 이러한 시스템이 ‘최소한의 합의’ 수준에 머물고 있는 동안 시리아 난민이 유입되기 시작하였다. 유럽은 이미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와 1991년 3월 유고슬라비아전쟁 등으로 비호신청자들이 유입됨에 따라 입국 제한, 책임분담, 조기송환 등을 위한 제도를 정비했으며, 혼합이동에 대한 불도착정책, 침로변경, 권리제한조치 등을 정비하였다(고기복 2007, 43-46).

특히 대량난민의 유입과 함께 정비되었던 CEAS하의 ‘임시보호조치’는 대량난민의 심사와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도입되었으나 시리아 난민 위기 상황에서는 또 다른 위기를 낳고 있다. 시리아 난민 유입 초기 신속한 절차를 위해 시리아 국적자에게 난민지위를 부여해온 독일의 경우 2015년 난민인정 비율은 95.8%(재심사시 94.5%)에 달하였으며, 기타 보완적 보호(subsidiary protection) 판정 비율은 0.2%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비율은 이미 2016년에는 첫 번째 심사에서 난민인정 비율은 56.6%(재심사시 47.2%)로 대폭 하락하였으며, 기타 보완적 보호 비율은 41.5%로 급증하였다. 난민수용에 우호적이었던 스웨덴 역시 이미 2015년에는 보완적 보호 비율이 80.4%에 달했으며, 2016년에는 86.0%로 증가되었다(김성진 2018, 112)

보완적 보호 조치는 권리제한 조치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보완적 보호는 난민보호나 망명이 인정되지 않지만 출신국에서 심각한 위협에 처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부여된다. 이들에게는 1년간 체류가 허가되며, 이후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2년씩 체류가 연장된다. 비호신청 심사기간을 포함해 5년이 경과한 후에는 경제적 능력과 적정 수준의 독일어 능력을 갖춘 경우 거주허가(settlement permit)를 얻을 수 있다. 이들은 취업허가를 얻어 노동시장에 접근할 수 있으나, 가족초청이 허용되지 않는다.¹⁵⁾ 이러한 조치는 ‘난민 자격 규정에 부합하지 않지

14) 이런 점에서 혼합이동은 여러 유형의 사람들이 섞여서 이동한다는 정의만으로는 분명한 정책목표를 설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15) Federal Office for Migration and Refugees, “Subsidiary Protection,”

만 여전히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보호한다는 기본취지에도 불구하고 가족초청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새로운 인도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또한 보호적 보호 조치를 받은 사람들이 행정·사법적인 재심을 청구하는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심사비용에 대한 부담 증가와 함께 또 다른 심사를 기다려야 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둘째, 시리아 난민의 대량유입 과정에서는 더블린규약이 작동하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었다. 대량난민의 유입과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한 조치들이 마련되고, 유럽통합의 진전과정에서 더블린규약도 변화되어왔으나, 혼합이동과정에서 난민 보호에 대한 입장 차이는 더블린규약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으로 발전하였다.

시리아 인접국에 도착한 난민의 규모가 이들 국가의 수용능력의 한계를 벗어나면서 인도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야기되었고, 독일의 메르켈(Angela Merkel) 총리는 2013년 9월 5천 명의 시리아 난민수용을 천명하였다. 독일의 난민수용 입장은 메르켈 총리의 난민수용 및 보호에 대한 강한 의지와 노동력 부족 및 2차대전 이후 터키계 이주민을 수용한 경험 등 독일의 사회·경제적 환경이 반영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독일의 난민수용정책은 단순히 5천 명의 난민수용에 그치지 않고 지중해 및 육로 도착 난민이 계속 독일로 유입되면서 더블린규약에 한계를 노정하게 되었다.

혼합이동 형태로 유럽에 유입된 난민들이 독일을 목적지로 이동하면서 첫 도착지에서의 비호신청과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따라 EU의 외부국경을 담당하는 회원국들의 국경통제 및 난민정책이 현실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운 상황을 낳게 되었다. 이러한 환경에서 EU의 외부국경을 형성하고 있는 회원국들은 '경로국'으로 전략하게 되었으며, 도착지 정책에 따라 국경의 통제나 개방을 결정하고, 그 사이에 자국에 남아있는 난민을 보호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어 독자적인 정책을 펴기 어렵게 되었다. 특히 2016년 3월 EU 집행위원회는 그리스의 비호신청 접수절차 상의 문제점과 난민수용 상태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난민의 그리스로의 소환을 금지하였다(European Commission 2016b).

또한 헝가리는 2015년 6월 이미 6만여 명의 '비정규 이주자'를 수용했으며, 자국을 벗어난 난민을 더 이상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하였다. 이와 관련해 유럽내 40여 국의 NGO들이 참여해 구성한 유럽난민/망명이사회(European Council of Refugees and Exiles: ECRS)와 UNHCR은 2017년 3월 헝가리의 비호

<https://www.bamf.de/EN/Themen/AsylFluechtlingsschutz/AblaufAsylverfahrens/Schutzformen/SubsidiaerSchutz/subsidiaerschutz-node.html> (2020/01/20 검색).

시스템상의 문제를 이유로 EU 회원국에 더블린규약에 의거해 헝가리로의 난민 이송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다.¹⁶⁾

더블린규약의 준수는 난민의 첫 도착지가 될 가능성이 높은 EU의 외부국경을 형성하고 있는 국가들에게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첫 도착지로 대규모 난민이 유입되어 비호신청이 접수될 때 적절한 주거시설과 접수절차를 마련하지 못한 경우 난민접수관련 EU 규정을 준수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고, EU 차원의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들은 EU 국경을 통제·관리하는 입장에서 있으면서도 경로국과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더블린규약은 결과적으로 난민이 처음 도착하는 국가들, 특히 EU 국경을 형성하는 회원국들에게 심각한 부담을 야기함으로써 CEAS의 중대한 구조적 문제가 되었다(Library of Congress 2016).

셋째, EU는 지중해 난민이 급증하고 인도주의적인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터키에서 그리스 도서로 도착하는 난민의 흐름을 차단하고자 2015년 11월 터키와 실천계획(EU-Turkey Action Plan)에 합의하였다. 동 계획은 시리아 난민의 대량유입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대응, 임시보호조치와 터키내 시리아 공동체를 통한 시리아 난민 지원, 그리고 EU로 유입되는 비정규적 이주 방지를 위한 협력 강화를 통해 난민 위기에 대응하는 것이다. 특히 이 계획에서는 터키의 국경 통제능력 강화를 지원하고, 프론텍스 연락관을 매개로 EU-터키 간 정보 네트워크를 개선하며, 터키 정부는 불가리아, 그리스, 터키 간 비정규 이주 통제 강화를 위한 3자 협력을 개선하고, 인신매매관련 범죄조직망을 와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 등에 대해 합의하였다.¹⁷⁾ 2016년 3월 유럽이사회와 터키는 터키를 경유해 유럽으로 유입되는 비정규적 이주민의 통제를 위한 합의를 통해 ① 2016년 3월 20일 이후 터키를 출발해 그리스 도서에 도착하는 비호신청자의 터키로의 송환, ②그리스에서 터키로 송환되는 시리아 난민 수만큼 터키내 시리아 난민의 EU내 재정착 허용, ③터키에서 EU로 향하는 새로운 해상 및 육상경로에 대한 터키의 차단조치 강화, ④비정규적 이주자 수가 현저히 감소할 경우 터키-EU간 자발적인 인도주의적 입국허용계획(Voluntary Humanitarian Admission Scheme) 시행, ⑤2016년 6월까지 터키 시민의 비자면제 추진과 이를 위한 터키

16) "Hungary: Calls for Suspension of Dublin Transfers and Policy Shift by Germany (12/04/2017)," in <https://www.asylumineurope.org/news/10-05-2017/hungary-calls-suspension-dublin-transfers-and-policy-shift-germany> (2020/01/20 검색).

17) "EU-Turkey Joint Action Plan,"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MEMO_15_5860 (2020/02/05 검색).

의 남은 요건 충족, ⑥ 터키내 난민 지원을 위한 30억 유로 지원 및 동 지원금 소진시 2018년 말까지 30억 유로 추가 지원, ⑦EU-터키 간 관세동맹 개선작업 지지, ⑧터키의 EU 가입절차 활성화, 그리고 ⑨시리아내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공동 노력 등에 합의하였다.¹⁸⁾

그러나 이러한 합의는 터키가 난민송환이 허용되는 안전한 국가인가라는 논쟁을 야기하였으며, 터키의 국내정세 악화에 따라 EU-터키관계가 악화되면서 비자면제문제 처리과정에서도 문제가 야기되었다. 2016년 5월 EU 집행위원회는 EU 각료이사회와 EU 의회에 터키의 전제조건충족을 조건으로 터키 시민의 비자면제를 요청하였으며, 당시 5개항의 조건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2016년 말 터키내 쿠데타 실패와 정부인사들이 면직되면서 비자면제 처리과정이 중단되었으며, 터키의 반테러법, 유럽경찰(European Police Service: Europol)과의 협상, 개인정보의 우선적 보호 등의 전제조건이 미충족인 상태였다. 2018년 2월 주EU 터키 대사는 터키가 비자면제에 필요한 전제조건을 만족시켰다는 보고를 제출했으나 2018년 7월 유럽의회는 보고서 승인을 거부했으며, 다른 전제조건이 모두 충족되더라도 터키가 사이프러스의 독립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비자면제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¹⁹⁾ 난민문제를 둘러싼 EU와 터키의 갈등은 에르도안(Recep T. Erdoğan) 터키 대통령이 터키군의 시리아 영토내 군사작전을 ‘침공’으로 규정할 경우 국경을 개방해 터키 내 360만 명의 시리아 난민이 유럽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등 정치적 문제와 연결되면서 EU-터키 간 합의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Norman 2019).

넷째, EU는 지중해 난민 차단을 위해 북아프리카 국경통제를 위한 협력과 난민시설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터키와의 협력을 통해 그리스로 유입되는 이동경로를 통제하고자 하는 정책과 같은 선상에서 이루어지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무엇보다 북아프리카 국경을 통제할 수 있는 국가들이 민주화 시위 이후 정치적 혼동상태에 있다는 점과 여전히 통

18) European Council,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EU-Turkey Statement, 18 March 2016,” <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16/03/18/eu-turkey-statement/> (2020/02/03 검색). 이와 함께 EU와 터키는 터키에서 그리스로 이동하는 국제적 보호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이주자의 신속한 송환, 터키 영해내 비정규적 이주자의 차단, 그리고 인신매매조직 활동을 차단하기 위한 에게해에서의 NATO 활동지지 등에 합의하였다.

19) “Erdogan: Visa Liberalization Will Benefit Both Turkey and the EU,” (29 September 2018), in <https://www.schengenvisainfo.com/news/erdogan-visa-liberalization-will-benefit-both-turkey-and-the-eu/> (2020/02/03 검색).

제를 시도할 경우 심각한 인권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주자나 난민들이 보다 통제가 느슨한 국경을 찾아 쉽게 이동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경 통제 강화와 인신매매조직 등 범죄조직 차단 등의 조치가 실효를 거두기 쉽지 않은 상태이다.

무엇보다 현재의 난민들은 초기 지중해 난민과 달리 경제적 능력이 열악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이는 이들이 현지에서 경비를 만들면서 이동할 가능성 높으며, 착취에 노출될 가능성이 이전보다 높을 수밖에 없음을 시사한다. 지중해 난민의 약 2/3가 북아프리카, 특히 리비아에서 출발하고 있다. 2016년에 발표된 IOM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9천 명 가운데 약 70%는 인신매매나 착취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약 49%는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시설에 수용되었으며, 역시 약 50%는 무임금 노동을 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터키에서 그리스로 이동하는 지중해 동부 경로의 경우 인신매매와 착취 경험자가 약 14%,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시설에 수용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약 6%, 무임금 노동의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약 7%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IOM의 설문조사는 북아프리카지역에서의 이주자 통제가 가지는 문제점을 확연히 보여주고 있다(Kelly 2016).

이러한 문제에 대해 EU는 2019년 8월 UN 마약·범죄국(UN Office on Drugs and Crime) 북아프리카사무소와 함께 북아프리카의 인신매매 및 밀입국 범죄 네트워크를 와해시키기 위해 이집트, 리비아, 모로코, 튀니지를 지원하는 3년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동 프로그램은 약 1,500만 유로의 예산으로 현장인력의 구급 및 차단 능력 향상, 인신매매조직의 적발과 조사 및 희생자 보호, 범죄조직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단속을 위한 법 집행기구의 지식과 기술 구축, 그리고 인신매매 사안을 담당할 형사절차 관련자들의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UN Office on Drugs and Crime 2019).

이러한 정책은 인신매매나 밀입국 조직의 수가 제한되어 있거나 거대규모의 조직을 붕괴시키는 데에는 효율적일 수 있다. 그러나 이전과 달리 온라인상에서 ‘밀입국 서비스’가 구매 가능하고, 이미 유럽에 도착한 난민을 비롯해 이동경로 상에 있는 난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국경 차단 등 이동관련 정보를 활용해 정부 간 정책조율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경우 대응이 수월하지 않은 한계가 있다. 이는 지중해 난민의 경우 리비아 등지에서의 차단정책 강화에도 불구하고 스페인의 난민유입 허용에 따라 북아프리카-스페인 경로에서 난민유입이 증가하고 있는 데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다섯째, 차단정책의 다른 전선은 지중해상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지중해상에서의 작전은 인명구조 활동과 국경관리 활동을 겸하고 있다. EU는 2015년부터

지중해에서의 국경관리와 인명구조를 위해 그리스와 터키 접경지역을 범위로 하는 포세이돈 작전(Operation Poseidon)과 이탈리아와 몰타, 그리고 시실리아 남부 해역을 범위로 하는 트리톤 작전(Operation Triton), 그리고 지중해 서부지역에서 스페인과 협력해 해상 경찰, 탐색과 구조작전을 수행하는 헤라(Hera), 인달로(Indalo), 미네르바(Minerva) 작전을 수행해왔다. 이들 작전에는 약 31척의 함정, 6대의 항공기와 4대의 헬리콥터, 그리고 약 1,300여 명의 프론텍스 인력이 투입되었다(European Commission 2016a).

지중해 구조활동은 시민단체가 참여하면서 다소 복잡한 속성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와 몰타 등은 NGO 구조선이 난민을 구조하더라도 입항과 해상난민의 상륙을 거부하거나 이들 구조선의 영해 진입을 차단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스페인의 입항 허가에 따라 스페인 항구에 입항한 구조선은 국제법상 가장 가까운 항구에 상륙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배했다는 이유로 출항허가를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기존의 국제법상의 논리와 현재의 구조작전에 상충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특히 시민단체의 구조선이 난민들이 출항전 위치를 전달하고, 이를 해군에 전달해 구조하는 방식, 혹은 시민단체 구조선이 구조하는 경우, 만약 출항관련 연락과정에 밀입국 조직이 연계된다면 이는 법적으로 모호한 상황을 야기할 수 있다(김성진 2018, 114).²⁰⁾ 이러한 부분은 현재 나타나고 있는 혼합이주가 이전과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해주는 현상이기도 하다.

끝으로 EU 난민정책에서 중요한 부분은 유입된 난민에 대한 책임을 나누는 것이다. 책임분담의 핵심은 재정지원일 수 있다. 그러나 난민관련 재정은 보호에 초점이 맞추어져 시급한 필요에 우선적으로 배정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 경우 위험을 벗어난 난민, 즉 목적지에 도착한 난민은 난민보호를 위한 재정에서는 아무래도 높은 우선순위를 받기 어려울 수 있으며, 도착지의 지원에 의존하게 된다. 결국 책임의 분담은 도착 난민의 분산과도 연결된다.

EU 회원국들은 그리스와 이탈리아 등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2015년 9월 16만 명의 비호신청자 재배정에 합의하였다. 수용 인원은 경제력, 인구, 실업률, 그리

20) 헝가리 의회는 개인이나 단체가 난민을 회망하는 '불법적' 이주자를 돕는 행위를 불법화하는 '소로스저지법안'(Stop Soros' laws)을 승인하였다. 유럽회의(Council of Europe)과 유럽안보협력기구(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OSCE)는 헝가리 의회의 결정과 관련해 모호하고 임의적이며, 유럽법에 위배된다고 비난하였다. "Hungary Passes Anti-immigrant 'Stop Soros' Laws," *The Guardian*, 20 June 2018, in theguardian.com/world/2018/jun/20/hungary-passes-anti-immigrant-stop-soros-laws (2020/01/20 검색).

고 지난 5년간 승인된 비호신청 건수를 고려해 정해졌다. 이런 기준으로 볼 때 스웨덴,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탈리아, 그리스, 몰타, 불가리아는 쿼터 이상으로 난민을 수용하고 있었으며, 포르투갈, 스페인, 프랑스, 핀란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등은 쿼터에 비해 수용 난민 수가 적은 편이었다(Aisch & Almukhtar 2015). 그러나 폴란드, 헝가리, 체코는 이러한 분산정책의 수용을 거부하였으며, 슬로바키아와 헝가리는 유럽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 ECJ)에 제소하였으나, ECJ는 2017년 6월 이를 기각하였다.

난민분산정책에도 불구하고 실제 재정착 난민 수는 25,000여 명에 불과하다. EU 집행위원회는 2015년 5월 2만 명의 재정착안을 제시했다. 이 안에 따르면 독일 3,086명, 프랑스 2,375명, 영국 2,309명, 그리고 이탈리아 1,989명 등으로 상대적으로 많은 인원이 배정되었으며, 이미 많은 난민을 수용하고 있는 그리스 323명, 그리고 상대적으로 인구가 작은 몰타 121명, 사이프러스 69명 등이었다. EU 집행위원회는 재정착시 2차 이주가 발생할 가능성을 지적하고, 재정착 대상자는 최소한 5년간 재정착 국가에 거주해야 하며, 이 기간내 다른 회원국으로 이주할 경우 법적 지위 획득이나 사회보장금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조건을 제시하였다(European Commission 2015).

〈표 2〉 유럽 재정착 계획(2015)

회원국	비율	배정인원	회원국	비율	배정인원
오스트리아	2.22	444	이탈리아	9.94	1,989
벨기에	2.45	490	라트비아	1.10	220
불가리아	1.08	216	리투아니아	1.03	207
크로아티아	1.58	315	룩셈부르크	0.74	147
사이프러스	0.34	69	몰타	0.60	121
체코공화국	2.63	525	네덜란드	3.66	732
덴마크 ¹⁾	1.73	345	폴란드	4.81	962
에스토니아	1.63	326	포르투갈	3.52	704
핀란드	1.46	293	루마니아	3.29	657
프랑스	11.87	2,375	슬로바키아	1.60	319
독일	15.43	3,086	슬로베니아	1.03	207
그리스	1.61	323	스페인	7.75	1,549
헝가리	1.53	307	스웨덴	2.46	491
아일랜드 ¹⁾	1.36	272	영국 ¹⁾	11.54	2,309

1) 이들 국가는 EU법에 따라 재배정을 수용하지 않을 수 있음

출전: European Commission 2015, 22.

그러나 이러한 재정착 프로그램은 그러나 우려했던 2차 이주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발틱 3국 등에 재정착된 난민은 여전히 일자리와 지원 부족을 이유로 다시 독일행을 선택하고 있으며(Sytas & Gelzis 2016), 이러한 문제는 난민과 이주자 혹은 난민정책과 이주정책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V. 결 론

유럽의 난민 위기는 난민의 위기가 아니라 유럽국가들 간의 정책조율 실패에 따른 위기라는 평을 받는다. 정책조율이 실패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개별국가의 사회·경제적 조건의 차이나 유입난민 급증에 따른 지원능력의 한계 등이 지적되기도 한다. 그러나 EU는 코소보 난민사태 이후 갑작스러운 난민의 유입에 대응하기 위해 임시보호 규정 등을 마련하고 있었다. 그동안 난민지원에 적극적이었던 스웨덴의 경우는 시리아 난민유입 초기부터 임시보호 규정을 적용했으며, 독일도 2016년 이후부터는 이러한 조치를 적용하는 사례가 급증했다. 무엇보다 정책조율에 실패했다고는 하지만 영국과 같이 시리아 난민수용에 적극적이지 않은 국가들도 난민수용 자체를 제한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임시적인 수용도 가능하고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개별국가들도 난민수용 자체를 제한하지 않는 상황에서 조율이 원활하지 않은 이유는 문제정의 오류에서 찾을 수 있다. ‘혼합이주’라는 용어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이동과 유입과정에서 난민과 경제이주의 구분히 모호해지고 있으며, 난민보호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들을 구분하는 일이 급선무가 되었다. 난민과 경제이주민 모두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지만, 이들의 법적 권리가 다르고 이들에 대한 유입국의 권리와 책임도 다르다. 특히 난민보호는 ‘이주’라는 용어와 혼재될 경우 보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혼합이동’ 표현이 사용된다는 점은 이들 두 집단이 섞여서 이동한다는 것이 단순히 이들을 구분해야 한다는 문제가 아니라, 이로 인해 난민보호에 어려움이 증가될 수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코소보 사태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변화이며, EU가 코소보 사태 이후 준비했던 난민보호지침들만으로 대응하기는 어려운 변화였다.

이러한 변화는 난민과 이주자가 동일 경로로 이동한다는 점을 넘어 이들의

행태에서도 ‘혼합’된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혼합이주의 성격에 변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코소보 난민의 경우 1년 기한의 자발적 귀환을 전제로 국가별로 분산해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였으나, 시리아 난민의 경우 분산정책에도 불구하고 독일 등 일부 국가에 편중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편중은 독일내에서도 연간 난민유입의 적정규모를 둘러싼 정치적 논쟁을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혼합이주와 난민에 대한 합의가 약화된 상태에서 기존의 난민 보호 조치가 적용되면서 나타나는 문제와 정책의 불일치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해상난민의 경우 구조활동을 둘러싼 갈등은 바로 이러한 구조대상으로서의 ‘난민’의 성격에 대한 합의의 약화에도 불구하고 난민구조라는 당연하게 여겨진 과거의 정책을 답습하는 과정에서 빚어지는 갈등이라고 할 수 있다.

시리아 난민의 문제는 그동안 난민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 특히 1951년 난민협약과 1967년 난민의정서 상의 난민규정과 현실상의 괴리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난민보호와 관련해서도 개발협력정책 등과의 연계를 통해 국제적인 책임 공유와 영향력 확대가 아닌 실질적인 개발정책 추진을 위한 국제협력이 필요함을 시사해주고 있다.

참고문헌

국문 자료

- 강우현. 2019. “해상이민자의 공해상 차단활동에 대한 국제법적 평가: 이탈리아 사례를 중심으로.” 『국제법학회논총』 64(4), 9-40.
- 국민호·양연희. 2019. “유럽의 반 난민정서 강화와 영국 비호신청자의 참상.” 『디아스포라연구』 13(1), 95-134.
- 김대근·강태경·이일. 2017. 『난민심사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형사정책연구원.
- 김성진. 2018. “유럽내 시리아 난민과 사회안보.” 『정치·정보연구』 21(1), 99-127.
- _____. 2016a. “영국의 난민정책: 시리아난민 사례를 중심으로.” 『정치정보연구』 19(2), 107-139.
- _____. 2016b. “유럽 난민 갈등: 시리아 난민을 중심으로.” 고상두/민희(편), 『사회갈등과 정치적 소통』. 서울: 오름, 195-222.
- 김용철. 2019. “국제 난민레짐의 제도변화에 관한 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17(8), 27-35.
- 김종세. 2019. “현행 난민법의 개선점.” 『법이론실무연구』 7(2), 37-59.
- 김중관. 2016. “터키의 대 시리아 난민 정책 분석.” 『민족연구』 68, 62 - 84.
- 문경삼. 1996. “정책결정이론: 종합이론과 점증이론의 재조명.” 『한국행정논집』 8(4), 693-712.
- 민지원. 2019. “캐나다 정책을 통해 본 난민신청자에 대한 처우와 국내제도 개선 방안.”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955-968.
- 박단. 2016. “시리아 난민, 파리 테러 그리고 프랑스: 파리 테러의 내적 배경을 중심으로.” 『통합유럽연구』 7(1), 1-29.
- 박선희. 2016. “프랑스의 난민정책: EU 공동난민정책의 영향을 중심으로.” 『EU 연구』 42, 27-63.
- 손지혜·윤인진. 2019. “베네수엘라 난민 사태 이후 브라질 난민정책의 변화.” 『포르투갈-브라질 연구』 16(2), 7-56.
- 송영훈. 2016. “난민의 인권과 국가안보: 한국 난민법 개정의 쟁점을 중심으로.” 『담론201』 19(3), 55 - 82.
- _____. 2018a. “수의 정치: 난민인정률의 국제비교.” 『문화와 정치』 5(4), 5-31.
- _____. 2018b. “제주 예멘 난민 위기.” 『문화과학』 96, 188 - 204.

- _____. 2014. “테러리즘과 난민문제의 안보화: 케냐의 난민정책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54(1), 195-230.
- 심성은. 2019. “EU 난민정책의 회원국 국내법에 대한 영향: 프랑스 사례연구.” 『통합유럽연구』 10(2), 191-225.
- 오현주. 2018. “EU 난민망명 수용과 통제를 위한 거버넌스 연구: 독일과 이탈리아 사례연구와 관련하여.” 『이탈리아어문학』 54, 105 - 138.
- 오혜민. 2019. “협오가 된 ‘충분한 근거가 있는’ 불안: 난민과 여성의 공포 인정 논의를 중심으로.” 『젠더와 문화』 12(2), 157-191.
- 은재호. 2007. “문제정의(problem definition)가 정책변동에 미치는 영향: 프랑스 AIDS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41(4), 243-264.
- 이기범. 2015. “해상난민 보호와 관련하여 해양을 규율하는 국제협약들의 역할 및 한계.” 『해양정책연구』 30(2)133-162.
- 이병렬 · 김희자. 2011. “캐나다, 호주, 독일, 프랑스 난민정책의 특성에 대한 연구.” 『한국사회정책』 18(2), 33-68.
- 이병하. 2017. “난민 위기의 원인과 해결책 그리고 현대의 윤리.” 『국제정치논총』 57(4), 199 - 235.
- _____. 2018. “한국 난민 이슈의 정치화.” 『문화와 정치』 5(4), 33-68.
- 이승현. 2016. “유럽의 시리아 난민유입과 독일의 노동정책.” 『국제노동브리프』 14(3), 66-81.
- 이용일. 2018. “독일의 극우정치와 난민: 독일 대안당과 ‘하이마트 정치.’” Homo Migrants 19, 94 - 123.
- 이은채. 2019. “난민불인정자의 불복절차에 관한 연구.” 『다문화사회연구』 12(3), 289-316.
- 이형석. 2019. “EU 난민위기와 EU 공통법제 변화에 관한 연구: Schengen 협약과 유럽공통망명제도를 중심으로.” 『유럽헌법연구』 30, 237-269.
- 임지영. 2019. “2015년 이후 프랑스 난민정책과 여론.” 『한국프랑스학논집』, 106, 185-204.
- 정다솜 · 권순희. 2019. “신문기사에 나타난 ‘난민’관련 은유 표현 연구: 제주도 이주 예멘 난민 기사를 중심으로.” 『한국어 의미학』 63, 1-34.
- 정창호. 2013. “정책문제 구조화를 통한 문제정의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설립과정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22(3), 237-270.
- 정희율 · 성상미 · 김영완. 2019. “국제개발협력 시각에서의 난민캠프 사업 분석 연구: 탄자니아 굿네이버스 나루구수 난민캠프 공동시장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59(4), 7-44.

한준성. 2019. “난민 위기와 지역 협력: 아프리카의 1969년 OAU 협약.” 『세계 지역연구논총』 37(2), 79-98.

영문 자료

- “Erdogan: Visa Liberalization Will Benefit Both Turkey and the EU.” (29 September 2018), in <https://www.schengenvisainfo.com/news/erdogan-visa-liberalization-will-benefit-both-turkey-and-the-eu/> (2020/02/03 검색).
- “EU-Turkey Joint Action Plan.”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MEMO_15_5860 (2020/02/05 검색).
- “Hungary: Calls for Suspension of Dublin Transfers and Policy Shift by Germany (12 April 2017).” in <https://www.asylumineurope.org/news/10-05-2017/hungary-calls-suspension-dublin-transfers-and-policy-shift-germany> (2020/01/20 검색).
- Aisch, Gregor and Sarah Almkhatar. 2015. “Seeking a Fair Distribution of Migrants in Europe.” *The New York Times*, 22 September, <https://www.nytimes.com/interactive/2015/09/04/world/europe/europe-refugee-distribution.html> (2020/04/02 검색).
- Dauvergne, Catherine and Sarah Marsden. 2014. “Beyond Numbers Versus Rights: Shifting the Parameters of Debate on Temporary Labour Migration.” *International Migration & Integration* 15(3), 525-545.
- European Commission. “Common European Asylum System.” https://ec.europa.eu/home-affairs/what-we-do/policies/asylum_en (2020/01/15 검색).
- _____. 2016a. “EU Operations in the Mediterranean Sea (4 October).” in https://ec.europa.eu/home-affairs/sites/homeaffairs/files/what-we-do/policies/securing-eu-borders/fact-sheets/docs/20161006/eu_operations_in_the_mediterranean_sea_en.pdf (2020/01/20 검색).
- _____. 2016b. “Evaluation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Dublin III Regulation: Final Report (Executive Summary, 18 March).” https://ec.europa.eu/home-affairs/sites/homeaffairs/files/what-we-do/policies/asylum/examination-of-applicants/docs/evaluation_of_the_implementation_of_the_dublin_iii_regulation_-_executive_summary_en.pdf

(2020/01/20 검색).

- _____. 2015.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the Council,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and the Committee of the Regions: A European Agenda on Migration (13 May 2015)." https://ec.europa.eu/home-affairs/sites/homeaffairs/files/what-we-do/policies/european-agenda-migration/background-information/docs/communication_on_the_european_agenda_on_migration_en.pdf (2020/02/14 검색).
- European Council,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EU-Turkey Statement, 18 March 2016." <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16/03/18/eu-turkey-statement/> (2020/02/03 검색).
- Federal Office for Migration and Refugees. "Subsidiary Protection." <https://www.bamf.de/EN/Themen/AsylFluechtlingschutz/AblaufAsylverfahren/Schutzformen/SubsidiarSchutz/subsidiarschutz-node.html> (2020/01/20 검색).
- IOM. 2008. "Challenges of Irregular Migration: Addressing Mixed Migration Flows (Discussion Note)." IOM's Nineth-Sixth Session, Discussion Note: International Dialogue on Migration 2008, p. 2, in https://www.iom.int/jahia/webdav/shared/shared/mainsite/about_iom/en/council/96/MC_INF_294.pdf (2020/04/02 검색).
- Kelly, Annie. 2016. "Survey Finds 70% of Migrants Arriving in Europe by Boat Trafficked or Exploited." *The Guardian*, 18 October, <https://www.theguardian.com/global-development/2016/oct/18/70-of-migrants-to-europe-from-north-africa-trafficked-or-exploited-united-nations-survey> (2020/04/05 검색).
- Knuth, Matthias. 2019. "독일 노동시장의 난민 통합." 『국제노동브리프』 17(2), 53-66.
- Lasswell, Harold and Abraham Kaplan. 1970. *Power and Societ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Library of Congress. 2016. "Refugee Law and Policy: European Union (21 June)." <https://www.loc.gov/law/help/refugee-law/europeanunion.php> (2020/01/15 검색).
- Norman, Greg. 2019. "Turkey's Erdogan Warns of Flooding Europe with

- Syrian Refugees if EU Calls Assault an 'Invasion'." *Fox News*, 10 October, in <https://www.foxnews.com/world/turkeys-erdogan-refugee-warning-europe> (2020/02/05 검색).
- Sytas, Andrius and Gederts Gelzis. 2016. "Resettled in the Baltics, Refugees Flee for Wealthier Lands." *Reuters*, 28 November, <https://www.reuters.com/article/us-europe-migrants-baltics-idUSKBN13N0RY> (2020/01/15 검색).
- UN Office on Drugs and Crime. 2019. "The European Union and UNODC Launch 15 Million Euro Project to Dismantle Migrant Smuggling and Human Trafficking Networks in North Africa." <https://www.unodc.org/unodc/en/frontpage/2019/August/the-european-union-and-unodc-launch-15-million-euro-project-to-dismantle-migrant-smuggling-and-human-trafficking-criminal-networks-in-north-africa.html> (2020/02/03 검색).
- UNHCR. "Refugee & Migrant Arrivals to Europe in 2019 (Mediterranean)." <https://data2.unhcr.org/en/documents/download/74670> (2020/04/02 검색)
- _____. "Asylum and Migration." <https://www.unhcr.org/asylum-and-migration.html> (2020/03/15 검색).
- _____. "Refugees' and 'Migrants': Frequently Asked Questions (FAQs)." (31 August 2018), <https://www.refworld.org/docid/56e81c0d4.html> (2020/02/10 검색).
- _____. "The 10-Point Plan in Action." <https://www.unhcr.org/the-10-point-plan-in-action.html> (2020/04/02 검색).
- _____. "Voluntary Syrian Refugee Returns as Verified by UNHCR as of 31 Jan 2020." <https://data2.unhcr.org/en/documents/download/74353> (2020/04/02 검색).

Abstract

Refugee Crisis in Europe: Problem Definition Error and its Consequences

Seongjin Kim ■ Duksung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changing feature of the refugee crisis, analyzing the contradiction between refugee protection policies. Refugee crisis can be defined with massive influx of refugees into Europe in a mixed migration form. However little literature pays attention to the consequences of changing features or mixed migration to the protection of refugees. European Union has developed Directives to coordinate refugee policies of member states after Kosovo refugee crisis although policy coordination based on directives are far from fully institutionalized. Provisional protection measures, for instance, applied to the massive influx of migration that were employed by Sweden at initial stage and followed by Germany. However, the term 'mixed migration', a group of people with different backgrounds and purposes traveling together, that constitutes a sort of definition of current refugee influx, fails to capture the mixed characteristics of refugees who seek a better life as economic migrants. Unclear definition of a group of people fled into Europe resulted in the failure of refugee distribution policy among EU member states. Existing refugee policies focusing protection and interception turned out to be inefficient, particularly for those refugees with migrant feature. The analysis suggests that the object of protection has changed and demands a new policy. Syrian refugee crisis demands a refined problem definition and more efficient development policies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block another outbreak of refugees.

Key Words: Syrian refugee, refugee crisis in Europe, mixed migration, refugee policy, problem definition

글로벌 마인드셋의 선행변수와 결과변수에 관한 연구: 중국 공기업과 사기업의 비교*

수몬이 ■ 부산외국어대학교**

유몽걸 ■ 연세대학교***

박용석 ■ 연세대학교****

〈국문요약〉

본 연구는 글로벌 마인드셋과 그 선행변수, 결과변수 간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글로벌 마인드셋에 대한 보다 세밀한 이해를 제공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글로벌 동기부여와 국제적 커리어 경험을 글로벌 마인드셋의 선행변수로 고려하여 그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글로벌 마인드셋의 효과성을 찾고자 글로벌 마인드셋이 글로벌 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중국의 공기업과 사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 1,050명을 대상으로 하여, 글로벌 마인드셋과 그 선행변수, 결과변수 간 관계가 공기업과 사기업, 두 가지의 기업 형태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글로벌 마인드셋이 글로벌 동기부여와 글로벌 역량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매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글로벌 마인드셋이 국제적 커리어 경험과 글로벌 역량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매개하고 있는 결과가 밝혀졌다. 공기업과 사기업을 비교 분석한 결과, 두 집단에서 글로벌 마인드셋이 글로벌 동기부여와 글로벌 역량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매개하고 있으며, 그 매개효과는 사기업보다 공기업에서 더 강하게 나타났다. 반면, 국제적 커리어 경험과 글로벌 역량 간 글로벌 마인드셋의 긍정적인 매개효과는 사기업에서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공기업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연구결과가 제시하고 있는 이론적 및 실증적 시사점, 미래연구 방향과 본 연구의 한계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제어: 글로벌 마인드셋, 글로벌 동기부여, 국제적 커리어 경험, 글로벌 역량, 공기업, 사기업

* 이 논문은 2019년도 연세대학교 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것임 (2019-22-0135)

** 주저자, 부산외국어대학교 동남아창의융합학부 조교수 (E-mail: sumon1989@gmail.com)

*** 공저자,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석사 (E-mail: mengjie221@naver.com)

**** 교신저자,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E-mail: yspak@yonsei.ac.kr)

I. 서론

다국적기업들의 활발한 국제화 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오늘날 글로벌 시장은 기업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는 동시에 치열한 경쟁을 맞이하게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이 경쟁우위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소프트한 역량, 즉 글로벌 마인드셋 개발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Andresen & Bergdolt 2017; Javidan & Bowen 2013). 글로벌화를 실제로 실행하는 것은 기업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Cliffe 2015), 기업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생산성 확대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인재의 역량을 키우는 것을 중요시해야 한다(Bücker & Poutsma 2010). 다국적기업의 해외 사업 확장 성공 여부는 인적자원의 글로벌화, 즉 직원들의 글로벌 마인드셋에 달려있다는 것이다(Govindarajan & Gupta 1998; Levy et al. 2007).

글로벌 마인드셋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많은 학자들은 글로벌 마인드셋과 관련된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하였다(Arora et al. 2004; Gupta & Govindarajan 2002; Javidan & Bowen 2013; Kedia & Mukherji 1999; Levy et al. 2007; Story & Barbuto Jr 2011). 글로벌 마인드셋에 크게 개념화(conceptualization)와 맥락화(contextualization) 두 가지 요인들이 포함되어 있다(Arora et al. 2004). 개념화는 개인이 글로벌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국적과 상관없이 세계시민으로 받아들이는 마인드이며, 맥락화는 현지 상황을 잘 파악하고 그 상황에 맞게 행동하고 적응하는 능력으로 정의될 수 있다(Arora et al. 2004). 즉, 글로벌 마인드셋을 가진 개인은 글로벌 상황 전체의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능력(thinking globally)과 현지 상황에 맞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acting locally)을 갖추어 있다는 것이다(Kefalas 1998).

지금까지 학자들은 글로벌 마인드셋의 정의를 내리고, 그 구성요인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으나, 글로벌 마인드셋과 다른 변수들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글로벌 마인드셋의 선행변수로 나이, 언어구사능력, 직급과 국제적 경험 등의 변수들이 고려되었지만(Arora et al. 2004; Nummela et al. 2004; Story et al. 2014), 이러한 인구통계학적 변수 외의 다른 요인들이 글로벌 마인드셋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널리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많은 연구들은 글로벌 마인드셋의 효과성과 관련해서 개념을 설명했지만(Gupta & Govindarajan 2002; Levy et al. 2007; Rhinesmith 1995), 이에 대한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글로벌 마인드셋이 기업의 재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보여준 연구(Nummela et al. 2004), 기업의 국제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Felício et al. 2016) 등의 소수의 연구는 글로벌 마인드셋이 기업수준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지만, 글로벌 마인드셋이 개인수준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글로벌 마인드셋의 선행변수와 결과변수를 고려하여 분석함으로써 글로벌 마인드셋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제공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글로벌 마인드셋의 선행변수로 글로벌 동기부여와 국제적 커리어 경험의 두 변수에 초점을 두어 그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한다. 글로벌 동기부여는 개인의 글로벌 지향적인 내재적 동기로(Vallerand 2000) 글로벌 마인드셋의 개념화를 향상시키는 변수로서, 국제적 커리어 경험은 글로벌 환경에 대응하고 적응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암묵적 지식(tacit knowledge)을 제공하여 글로벌 마인드셋의 맥락화를 증가시키는 변수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제시되어 왔으나(Bird et al. 2004; Levy et al. 2007), 아직도 실증적 분석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글로벌 마인드셋의 효과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에서는 개인의 글로벌 마인드셋이 기업성공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는데(Felício et al. 2016; Nummela et al. 2004), 본 연구는 글로벌 마인드셋의 결과변수로 개인 성과, 즉 글로벌 역량에 초점을 두어 분석함으로써 글로벌 마인드셋의 효과성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이해를 제공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실증적 분석이 시도되지 않았던 글로벌 마인드셋의 선행변수와 결과변수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 본 연구는 글로벌 마인드셋 연구에 이론적, 실증적 가치를 보완하는 연구가 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는 실증분석을 위해 중국 다국적기업의 두 가지 형태인 공기업과 사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 1,050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중국 다국적기업들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011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6.6%이상을 유지하였고(Statista 2019), 중국의 GDP가 전세계 GDP의 19.72%를 차지하고 있다(Statista 2020). 중국에서 한국의 해외직접투자는 2016년에 3,368백만달러에 달했고(Kotra 2018), 현지의 한국 기업들은 많은 중국 직원들을 채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한국 기업의 실무자들에게 중국 직원들의 글로벌 마인드셋과 관련된 이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실무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중국의 공기업과 사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글로벌 마인드셋과 관련하여 비교 분석을 하고자 한다. 중국의 공기업은 국가의 경영방

식과 정책을 잘 반영하고 국가의 지속적인 경제적 안정성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공기업은 해외 진출 절차의 상당한 부분은 국가에 기반한 정책에 따르며, 국가의 전략적 요구에 따라 진행된다(Amighini et al. 2013). 따라서 공기업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정해진 정책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업의 해외 진출 과정에 있어서 이들의 개인적인 의사결정이나 역량을 중요시하지 않은 경향이 있다. 반면 사기업은 국가적 경영방식이나 정책이 비교적 깊이 개입되지 않기 때문에, 해외 진출을 진행하는 데에 기업이 자유롭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사기업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기업의 이윤 극대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해외 진출 과정에서 개인의 역량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본 연구는 공기업과 사기업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환경적 요인이 직원의 글로벌 마인드셋과 그 선행변수와 결과변수 간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고자 한다.

가설검증을 위해 중국 다국적기업(공기업과 사기업) 총 30개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 1,050명의 설문조사결과를 분석하였다. 글로벌 마인드셋과 그 선행변수, 결과변수 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서 구조방정식(structural equation model)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2장에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연구가설 설정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리고 3장은 연구방법(연구표본, 변수의 측정, 분석방법)을 제시하고, 4장은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 본 연구 결과가 시사하고 있는 이론적, 실증적 및 실무적 의미를 제공하고, 향후 연구방향과 본 연구의 한계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및 연구가설

1. 글로벌 마인드셋의 정의 및 구성요소

글로벌 마인드셋 연구들의 바탕이 된 최초 연구에서 글로벌 마인드셋은 다양한 문화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세계중심적인 마인드(geocentric mindset)로 정의하였다(Heenan & Perlmutter 1979; Perlmutter 1969). 그 후 글로벌 마인드셋을 문화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문헌이 주류를 이루었으며(Beechler

et al. 2004; Kobrin 1994), 이들은 우월성은 국적과 상관없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좋은 생각은 지구의 어느 곳에서도 나올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글로벌 마인드셋이 형성되는 데에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개방성뿐만 아니라 복잡한 글로벌 환경을 이해할 수 있는 인지적 능력을 필수적인 조건으로 봐야 한다(Kedia & Mukherji 1999; Levy et al. 2007; Story & Barbuto Jr 2011; Story et al. 2014). 마인드셋은 인지적 필터(cognitive filter)로서의 역할을 하며(Gupta & Govindaranjan 2002), 이를 통해 개인은 여러 상황들을 관찰하고 해석하게 된다. 글로벌 마인드셋이 발달된 개인의 인지적 필터는 글로벌 시장으로부터의 새로운 기회를 인식하고, 이를 활용함으로써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된다고 볼 수 있다(Rhinesmith 1992).

글로벌 마인드셋과 일반적인 마인드셋(non-global mindset) 간 차이점에서도 글로벌 마인드셋을 이해할 수 있는데(Gupta & Govindaranjan 2002; Paul 2000; Rhinesmith 1992), 시간적 관점(time perspective), 공간적 관점(space perspective)과 개인성향(general predisposition)의 세 가지 특성에서 그 차이를 찾을 수 있다(Kedia & Mukherji 1999). 시간적 관점을 가진다는 것은 개인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글로벌 환경에 대응하는 것이고, 공간적인 관점을 가진다는 것은 개인이 접하게 되는 근무지나 인간관계 등의 공간적인 범위를 확장시킨다는 것이다. 그리고 글로벌 마인드셋을 가진 개인은 다른 문화에서 온 사람들에게 관대하고, 불확실한 상황에 불안하지 않고, 모순된 개념을 조화시키는 개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글로벌 마인드셋은 이 세 가지의 특성을 지닌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글로벌 마인드셋은 글로벌 환경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인지적 능력(Levy et al. 2007)을 포함하는 다양한 역량(meta-capabilities)으로 그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Begley & Boyd 2003; Maznevski & Lane 2004).

지금까지 많은 연구들이 각자의 관점에서 글로벌 마인드셋의 정의를 내리고, 그 구성요인에 대해 설명하였다. Arora et al.(2004)는 글로벌 마인드셋의 구성요인으로 개념화(conceptualization)와 맥락화(contextualization)를 제시하였는데, 개념화는 글로벌적인 생각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국적과 상관없이 세계시민으로 받아들이는 마인드이며, 맥락화는 현지 상황에 맞게 행동하는 능력으로 정의될 수 있다. 글로벌 마인드셋은 글로벌 환경 전체의 큰 그림을 보고 글로벌적인 사고방식을 할 수 있는 인지적 능력(thinking globally)과 현지 상황에 맞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acting locally)으로, 그 개념에 인지적, 행동적인 측면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Kefalas 1998). 다른 많은 연구에서도 글로벌 마인드셋의 구성요인들에 대해 표현하는 용어는 다르나, 개념적으로는 인지적, 행동적인 요인

이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다(예: Gupta & Govindarajan 2002; Javidan & Bowen 2013; Kedia & Mukherji 1999; Levy et al. 2007; Story & Barbuto Jr 2011). 따라서 본 연구는 글로벌 마인드셋의 정의와 구성요인으로 Arora et al.(2004)가 제시한 정의와 두 가지의 구성요인(개념화와 맥락화)을 받아들이며, 이들이 개발한 글로벌 마인드셋 문항 40개 중 일부의 문항들을 사용해서 글로벌 마인드셋을 측정하고자 한다.

2. 글로벌 마인드셋의 선행변수와 결과변수

지금까지 글로벌 마인드셋의 정의와 구성요인에 대해 개념적인 설명을 제공하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글로벌 마인드셋과 관련된 실증 연구가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Arora et al.(2004)의 연구에서 해외 업무 관련 훈련과 해외 체류기간이 글로벌 마인드셋 함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밝혀졌다. 그 외 일부의 연구에서도 글로벌 마인드셋과 그 선행변수들의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언어 능력과 해외 업무 경험이 글로벌 마인드셋 형성에 도움이 되는 결과가 나타났다(Nummela et al. 2004; Story et al. 2014). 이와 같이, 기존 연구들에서 일부의 인구통계학적인 변수들을 글로벌 마인드셋의 선행변수로 분석하였지만, 그 외 다른 변수들과 글로벌 마인드셋 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비교적 진행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글로벌 동기부여와 국제적 커리어 경험에 주목하여, 이 두 변수가 글로벌 마인드셋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글로벌 동기부여는 개인의 내재적인 면을 반영하는 변수로서 글로벌 마인드셋의 개념화를 향상시킬 수 있고, 국제적 커리어 경험은 개인이 해외 업무를 수행하면서 배운 경험으로서 글로벌 마인드셋의 맥락화를 증가시키는 변수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선행연구들에서 글로벌 마인드셋의 효과성을 분석할 필요성이 지적되었지만(Gupta & Govindarajan 2002; Levy et al. 2007; Rhinesmith 1995), 이에 대한 실증연구는 비교적 진행되지 않았다. 기업의 재무성과(Nummela et al. 2004), 기업의 국제화(Felício et al. 2016) 등의 기업수준의 성과를 글로벌 마인드셋의 결과변수로 고려해서 분석한 일부의 연구는 존재하였지만, 글로벌 마인드셋이 개인 수준의 성과, 즉 개인의 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실증연구는 진행된 바 없다. 본 연구는 글로벌 마인드셋의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하여, 글로벌 마인드셋이 개인의 글로벌 역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글로벌 역량은 글로벌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역량, 즉 글로벌 상황에 대한 현실적인 지식, 지각적인 이해 및 다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Olson & Kroeger 2001). 많은 다국적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데에 가장 어려운 점은 기업이 계획해 놓은 글로벌 비즈니스 전략을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가 부족하다는 것이다(Adler & Bartholomew 1992; Bückner & Poutsma 2010). 다국적기업이 해외 시장에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단순히 직원들의 업무 수행 능력을 훈련시키는 것 외에도, 글로벌 환경의 불확실성에 대응할 수 있는 글로벌 역량을 갖춘 인재를 키워나갈 필요가 있다(Bird et al. 2004). 본 연구는 다국적기업의 해외 운영에 있어 글로벌 역량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이를 글로벌 마인드셋의 결과변수로 고려하여, 이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1) 글로벌 동기부여가 글로벌 마인드셋에 미치는 영향

글로벌 동기부여는 다양한 문화와 글로벌 사업에 대해 자발적으로 습득하려는 개인의 내재적 동기로 정의될 수 있다(Javidan & Bowen 2013; Vallerand 2000). 자기결정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에 따르면(Deci et al. 1989; Ryan & Deci 2000), 개인의 내재적 동기부여는 외부적인 보상보다는 자신에게 즐거움과 만족감을 주는 일을 할 때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개인이 역량(competence), 관련성(relatedness)과 자율성/자기결정(autonomy/self-determination)의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 내재적 동기부여가 증가한다(Deci et al. 1991; Holtbrügge & Engelhard 2016). 역량은 주어진 업무에 능숙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이고, 관련성은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할 때 만족감을 느끼는 것이며, 자율성/자기결정은 업무를 수행할 때 자체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즉, 효과적이고, 관련성이 있고, 자기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에 의해 개인이 만족감을 느끼고 내재적인 동기를 부여받게 된다는 것이다(Deci et al. 1991).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일은 개인에게 즐거운 경험을 제공하기 때문이다(Bauer et al. 2016).

글로벌 동기부여가 높은 직원들은 다양한 문화와 글로벌 시장에 대한 지식을 자발적으로 학습하고(Lane 2009; Levy et al. 2007; Story & Barbuto Jr 2011; Story et al. 2014), 기업의 세계화 진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데(Andresen & Bergdolt 2017; Bowen & Inkpen 2009; Javidan & Bowen 2013), 이러한 행동들이 이들의 심리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때문이다(Deci et al. 1991). 글로벌 동기부여가 높은 직원들은 동기부여가 낮은 직원들보다 해외 업무를 능

숙하게 수행하고, 사회적인 관련성과 자율성을 느낄 수 있다(Bauer et al., 2016). 글로벌 동기부여는 문화적, 환경적, 전략적인 이해 및 지식을 얻기 위해 촉진할 것이며(Fan & Wanous 2008; Oh et al. 2018), 이를 통해 직원들은 다양한 국가의 관습, 규정, 가치관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Shaffer et al. 2006). 다양한 문화 및 국가에 대한 이해는 개인의 인지적 능력을 발달시켜 글로벌 환경 전체를 파악하고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따라서 글로벌 동기부여가 글로벌적인 사고방식을 할 수 있는 인지적 능력(개념화)을 향상시킴으로써 글로벌 마인드셋의 함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가설 1: 글로벌 동기부여가 글로벌 마인드셋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국제적 커리어 경험이 글로벌 마인드셋에 미치는 영향

국제적 커리어 경험은 개인이 해외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면서 쌓은 경력을 의미한다. 진로발달이론 (career development theory)의 관점에서, 개인이 실천에 의한 다양한 학습을 통해 자신의 커리어를 발전시키는데(Jokinen et al. 2008), 국제적 커리어 경험을 통해 글로벌 시장을 학습한 개인은 know-how, know-whom, know-why라는 세 가지의 역량을 갖추 수 있게 된다. 첫째, know-how는 다양한 문화와 불확실성이 높은 글로벌 환경에서 효율적으로 업무 처리를 하는 방법을 배우면서 발전될 수 있는 역량이다. 그리고 know-whom은 해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람들을 식별해서 이들과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know-why는 해외 업무에 대해 심층적인 이해이며 불확실성이 높은 해외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인식할 수 있는 역량이다. 국제적인 업무 경험은 개인에게 자신이 속해있는 환경에서 여러 상황에 맞는 업무 수행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제적인 경험은 글로벌 마인드셋의 맥락화(현지 상황에 맞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국제적 커리어 경험은 현지에서 다양한 문화적, 전략적 이슈에 직접 대처함으로써 해외 업무와 관련된 암묵적 지식(tacit knowledge)을 형성시킨다(Grant 1996). 이러한 지식은 현지 상황, 문화적 가치 및 관습들을 고려한 업무 수행 및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Eraut 2000). 또한 국제적 커리어 경험은 현지인들과 교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 현지에서 구축한 네트워크를 통해 관련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고, 이는 향후 특정한 지역과 관련된

업무를 효과적이고 수월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따라서 국제적 커리어 경험이 글로벌 마인드셋의 행동적인 측면인 맥락화 형성을 촉진하여, 궁극적으로 이는 글로벌 마인드셋을 향상시킬 것이다. 일부의 실증연구에서도 해외 체류경험, 해외 업무경험, 유학경험, 해외 경영교육 등의 다양한 국제적 경험이 글로벌 마인드셋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Arora et al. 2004; Nummela et al. 2004; Story et al. 2014). 앞서 언급한 이론적, 실증적 근거에 기반하여, 국제적 커리어 경험이 글로벌 마인드셋의 함양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설 2: 국제적 커리어 경험이 글로벌 마인드셋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글로벌 마인드셋이 글로벌 역량에 미치는 영향

글로벌 마인드셋은 개념화와 맥락화라는 두 가지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Arora et al. 2004; Kefalas 1998), 개념화는 글로벌적인 사고방식을 할 수 있는 인지적 능력이며 맥락화는 해외 업무를 현지 상황에 맞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다. 글로벌 마인드셋이 발전되어 있는 개인은 글로벌화된 생각과 현지화된 행동을 조화롭게 통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이들은 기업의 글로벌화를 추구하는 전략을 이해할 수 있는 동시에 현지화 전략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도 큰 어려움을 겪지 않고 현지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 있다는 것이다.

글로벌 마인드셋의 개념화와 맥락화, 모두 글로벌 역량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개념화는 개인의 개념적 공간에서 떨어져있는 목적(purposes), 과정(processes) 및 사람(people)에 대한 이해를 제공함으로써(Bartlett & Ghoshal 1995) 문화적 다양성과 기업의 전략적 복잡성을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인지적 역량을 발전시킨다고 볼 수 있다. 맥락화는 현지의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현지인들의 관습, 행동방식을 함께 공유하며 현지에서 운영되고 있는 전략(strategy), 구조(structure)와 체계(system)에 맞는 업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개념화(thinking globally)와 맥락화(acting locally)는 개인이 글로벌 통합전략과 지역별 대응전략 간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돕고 있을 것이다. 개념화는 경영자가 큰 그림을 보고,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돕는 글로벌 통합전략을 이해할 수 있는 인지적 역량을 개발하고, 맥락화는 현지 상황에 따른 지역별 대응전

략을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업무 수행 능력을 발전시킴으로써 글로벌 마인드셋이 개인의 글로벌 역량을 향상시킨다고 볼 수 있다.

가설 3: 글로벌 마인드셋이 글로벌 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공기업과 사기업 간 글로벌 마인드셋 매개효과의 비교

중국의 공기업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아 국가의 이익을 중요시 하며, 기업의 전반적인 운영에 정부의 개입이 많은 기업이다. 반면 사기업은 국가가 소유하지 않고 개인이나 조직이 운영하는 민간 소유 기업을 의미한다. 공기업과 사기업 간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존재한다(Amighini et al. 2013). 먼저 경제 기여도를 살펴보면, 사기업이 전체 기업의 60%이상을 차지해 중국 경제 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공기업의 경우, 기업의 수가 비교적 적지만 공업, 통신, 교통, 금융 등 국가적 인프라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기업 운영에 있어서 공기업은 국가적 경영 방침 및 정책의 영향을 받으며, 정부의 지시와 규정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반면 사기업은 개인이 자체적으로 기업을 운영하여 이윤 극대화 및 가치 창출에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공기업과 사기업에서 필요한 인재의 유형에도 차이가 존재하는데, 공기업은 국가의 정책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 필요한 반면 사기업은 기업 성과의 최대화에 초점을 두고 개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직원을 더 선호한다. 따라서 공기업은 직원들에게 국가의 지원을 통해 상대적으로 안정한 근무조건을 제공하고, 사기업은 기업 성과를 추구하는 역동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볼 수 있다.

공기업과 사기업은 해외 진출에 있어서도 다른 전략을 실행해 왔다(Amighini et al. 2013; Buckley et al. 2010; Kolstad & Wiig 2012). 중국 공기업의 해외 진출은 주로 자원 추구(resource seeking)에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공기업은 선진국에 진출하기보다 풍부한 자원을 획득할 수 있는 개발도상국이나 신흥시장 위주로 진출한다(Child & Rodrigues 2005; Quer et al. 2012). 반면 사기업은 주로 신기술, 경험 등의 전략적 자산 추구(strategic asset seeking)에 초점을 두어 해외 진출 전략을 계획한다. 따라서 사기업은 주로 기술이 발전된 선진국으로 진출하고 기술과 새로운 경험을 배우고 기업의 역량을 구축하고자 한다(Liang et al. 2012).

공기업과 사기업은 직원들에게 매우 다른 환경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마인드셋의 매개효과와 관련해서도 이들 간 차이가 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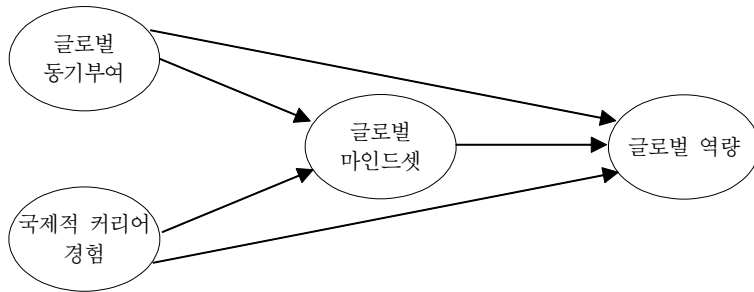
들어, 공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경우, 해외 업무를 수행할 때 국가의 정책에 따른 지시대로 행동하기가 요구되기 때문에 현지의 문화적, 상황적 요인들이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Amighini et al. 2013). 또한 이들에게 문화적인 이해와 현지화된 행동방식이 상대적으로 덜 요구될 것이고, 개인의 글로벌 동기부여와 해외 경험이 기업 전반의 운영에서 아무런 효과를 발현하지 못할 수도 있다. 또한 공기업은 자원을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신흥시장 위주로 진출하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현지에서 기술이나 경험을 학습할 것을 비교적 덜 요구할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공기업에서는 글로벌 마인드셋의 매개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반면 이윤 극대화에 초점을 둔 사기업은 해외 업무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재를 중요시할 것이며, 직원들이 글로벌 역량을 갖추도록 격려할 것이다. 또한 국가의 지원과 정책의 보호를 받는 공기업과는 달리, 사기업의 해외 진출 과정에 불확실성이 크고, 리스크 또한 클 수밖에 없다. 이러한 여러 가지 불확실성과 위협을 극복하고 해외 시장에서 지속적인 경쟁우위를 구축하기 위해 사기업은 직원들에게 글로벌 역량 개발을 요구할 것이고, 개인의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는 교육, 훈련 등의 학습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그리고 직원들의 개인적 경험 및 지식을 바탕으로 개인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역동적인 분위기를 제공한 사기업에서 직원들은 문화적, 전략적 지식을 습득하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받을 수도 있다. 또한 전략적 자산 추구의 목적으로 해외 진출을 결정한 사기업의 직원들은 기업의 의지대로 해외에서 신기술 및 경영 방침을 배우고, 이를 다시 활용하고자 노력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사기업의 여러 상황 조건들을 감안해서 본 연구는 사기업에서 글로벌 마인드셋의 매개효과가 비교적 높을 것을 예상하였다.

가설 4a: 글로벌 마인드셋이 글로벌 동기부여와 글로벌 역량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매개하는 효과는 공기업보다 사기업에서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 4b: 글로벌 마인드셋이 국제적 커리어 경험과 글로벌 역량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매개하는 효과는 공기업보다 사기업에서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그림 1〉 연구모형: 중국 공기업과 사기업의 비교 연구



Ⅲ. 연구방법

1. 연구표본

본 연구는 가설검증을 위해 중국 북부지역, 동부지역, 남부지역에 본사를 둔 중국 다국적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각 지역당 10개의 기업을 선정하여 총 30개의 기업이 연구표본에 포함되었으며, 이 중에서 공기업 12개와 사기업 18개; 제조업 21개와 서비스업 9개가 포함되었다. 해외에 자회사를 5개 이상 설립했고, 종업원 수 1,000명 이상의 중국 다국적 기업들이 연구표본에 포함되었다. 먼저 기업의 인사담당자에게 설문조사 참여 여부를 확인하고, 설문조사 참여에 동의한 기업들이 연구대상으로 선정되었다. 각 기업의 인사담당자를 통해 얻은 직원들의 메일 주소로 설문지를 전달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30개의 다국적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 1,116명한테서 설문응답을 받았고, 이 중에서 불완성한 응답을 제외한 후 총 1,050명의 응답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설문지는 영어로 작성되었다. 그리고 전문 번역 회사에 맡겨서 중국어로 번역한 후 다시 영어로 번역해서 번역-역번역 절차에 따라 진행하였다(Brislin 1970). 그리고 응답자들이 중국인 직원들이기 때문에 중국어로 번역된 설문지를 활용해서 조사하였다. 설문지는 글로벌 동기부여, 국제적 커리어 경험, 글로벌 마인드셋, 글로벌 역량 등의 주요 변수들과 인구통계학적인 변수들을 측정하는 문항들

로 구성되었다. 응답 시간은 약 15분 정도이며, 응답자들이 솔직하고 자유롭게 응답을 할 수 있게끔 응답 결과를 익명으로 처리하였다. 연구표본에 남성 52.3%, 여성 47.7%가 포함되고, 평균 나이는 33.47세이다.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 8.4%, 대학 졸업 68.9%, 석사 졸업 21%, 박사 졸업 1.7%를 차지하고 있다. 직급은 사원급 57.3%, 대리급 15.7%, 과장급 12.1%, 차장급 5.6%, 부장급 6.3%와 임원급 3%로 나타났다. 응답자들 중 대부분(56.8%)이 1개의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응답자들의 평균 해외체류기간은 6 개월이다.

2. 변수의 측정

1) 글로벌 동기부여

글로벌 동기부여는 다양한 문화와 정보를 자발적으로 습득하려는 개인의 내재적 동기이다(Deci et al. 1989; Ryan & Deci 2000; Vallerand 2000). 따라서 본 연구는 다양한 문화와 글로벌 환경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적극적으로 배우고 습득하려는 동기를 묻는 4개의 문항으로 글로벌 동기부여를 측정하였다. 문항들은 “나는 글로벌 이슈를 다루는 서적 및 출판물을 자주 읽는다, 나는 해외 국가들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자주 방문한다, 나는 최신 글로벌 이슈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국제 뉴스를 자주 본다, 나는 해외 문화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는 편이다”의 문항들이다. 문항들은 6점 척도(1 =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6 = 매우 동의한다)로 응답하도록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문항들의 신뢰도(Cronbach's α) 값은 0.875이다.

2) 국제적 커리어 경험

본 연구는 국제적 커리어 경험을 해외 업무 경험에 대해 묻는 4개의 문항으로 측정하였다(Zucchella et al. 2007). 문항들을 6점 척도(1 =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6 = 매우 동의한다)로 측정하였으며, 구체적으로 “나는 글로벌 프로젝트에 자주 참여한다, 나는 외국 환경에 여러 번 적응해 본 경험이 있다(예: 해외 파견, 교환학생); 나는 해외 관련 업무를 자주 경험하는 편이다(예: 해외 영업/기획, 글로벌 R&D); 나의 업무는 국내업무보다 해외업무(international operation)와 관련이 있다”의 문항들로 측정하였다. 신뢰도 분석결과, 4개의 문항들의 Cronbach's α 값은 0.893이다.

3) 글로벌 마인드셋

글로벌 마인드셋을 Arora et al.(2004)의 40개의 문항 중에서 6개의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이 문항들은 글로벌 마인드셋의 두 가지 구성요인인 개념화와 맥락화의 개념을 반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우리는 현재 글로벌 빌리지(global village)에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해도 불안함을 느끼지 않는다; 나는 다른 문화권에서 온 사람을 만나면 호기심을 느낀다; 나는 다른 문화 또한 다른 업무 진행 방식에 흥미를 느낀다; 나는 새로운 문화적 환경을 접하는 것이 즐겁다; 나는 친숙하지 않은 환경에도 잘 적응한다”의 문항들로 구성되었다(6점 척도; 1 =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6 = 매우 동의한다). 글로벌 마인드셋을 측정하는 문항들의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0.826이다.

4) 글로벌 역량

본 연구는 글로벌 역량을 글로벌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역량, 즉 글로벌 상황에 대한 현실적인 지식, 지각적인 이해 및 다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으로 정의하였다(Olson & Kroeger 2001). 따라서 글로벌 역량의 개념을 반영하고 있는 3개의 문항을 글로벌 역량의 측정으로 사용하였다(Caligiuri 2006; Olson & Kroeger 2001). 구체적으로 “나는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며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다; 나는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다; 나는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여 일하도록 만들 수 있다”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문항들은 6점 척도(1 =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6 = 매우 동의한다)로 설문지를 설계하였다. 글로벌 역량을 측정하는 문항들의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0.871이다.

3. 분석방법

본 연구는 글로벌마인드셋의 선행변수로 글로벌 동기부여와 국제적 커리어 경험을, 결과변수로 글로벌 역량을 고려하여, 글로벌 마인드셋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가설검증을 위해, 매개효과 분석이 가능한 구조방정식(structural equation model)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통계적 분석을 위해 AMOS 25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였다.

IV. 연구결과

1.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본 연구의 분석에 포함된 변수들의 평균, 표준편차, 상관관계들의 통계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설문문항들을 6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글로벌 동기부여의 평균 3.11(표준편차 = 1.26)과 국제적 커리어 경험의 평균 2.93(표준편차 = 1.44)로 나타났다. 글로벌 마인드셋의 평균 4.03(표준편차 = 1.08)과 글로벌 역량의 평균 3.82(표준편차 = 1.23)이며, 이들은 비교적 높은 평균값을 보여주고 있다.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글로벌 동기부여는 글로벌 마인드셋($r = .44, p < .001$), 글로벌 역량($r = .61, p < .001$)과 강한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국제적 커리어 경험이 글로벌 마인드셋($r = .38, p < .001$), 글로벌 역량($r = .52, p < .001$)과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갖는 결과가 의외하게 나타났다. 또한 글로벌 마인드셋과 글로벌 역량 간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갖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r = .55, p < .001$).

〈표 1〉 평균, 표준편차와 상관관계 분석 결과

변수	평균	표준 편차	1	2	3	4	5	6	7	8	9	10
1. 성별	1.48	0.50	1.00									
2. 나이	33.47	7.87	-.14***	1.00								
3. 교육수준	2.16	0.58	.01	-.08**	1.00							
4. 직급	1.97	1.41	-.19***	.40***	.17***	1.00						
5. 외국어능력	1.09	0.32	-.00	.05	.15***	.16***	1.00					
6. 해외체류기간	1.63	1.07	.01	-.05	.32***	.25***	.25***	1.00				
7. 글로벌 동기부여	3.11	1.26	-.06	-.09**	.16***	.14***	.15***	.32***	1.00			
8. 국제적 커리어 경험	2.93	1.44	-.06	-.10**	.19***	.16***	.15***	.38***	.66***	1.00		
9. 글로벌 마인드셋	4.03	1.08	-.05	-.06	.12***	.10***	.13***	.18***	.44***	.38***	1.00	
10. 글로벌 역량	3.82	1.23	-.04	-.05	.14***	.11***	.11**	.22***	.61***	.52***	.55***	1.00

N = 1,050; * $p < .05$, ** $p < .01$, *** $p < .001$ (two-tailed)

2. 측정의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본 연구는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에 포함된 변수들의 평균분산추출값(average variance extracted), 합성 신뢰도(composite reliability)와 변수들 간의 최대공통분산값(maximum shared variance)의 통계를 통해서 측정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하였다<표 2>. 변수들의 합성 신뢰도가 0.7 이상이므로 변수들의 측정에 대한 높은 신뢰도가 확인되었다. 또한 모든 변수들의 평균분산추출값이 0.5 이상이며, 이는 해당 변수에 대한 측정 문항들 간 집중타당도(convergent validity)가 높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Fornell & Larcker 1981). 판별타당도(discriminant validity)를 확인하기 위해 평균분산추출값과 최대공통분산값을 비교하였다. 변수들의 평균분산추출값이 변수들 간의 최대공통분산값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판별타당도가 높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Shook et al. 2004).

〈표 2〉 집중타당도 (convergent validity)와 판별타당도 (discriminant validity) 분석 결과

변수	평균분산추출 (AVE)	합성 신뢰도 (CR)	최대공통분산 (MSV)		
			1	2	3
1. 글로벌 동기부여	0.638	0.876			
2. 국제적 커리어 경험	0.686	0.897	0.470		
3. 글로벌 마인드셋	0.530	0.704	0.255	0.158	
4. 글로벌 역량	0.694	0.825	0.507	0.323	0.3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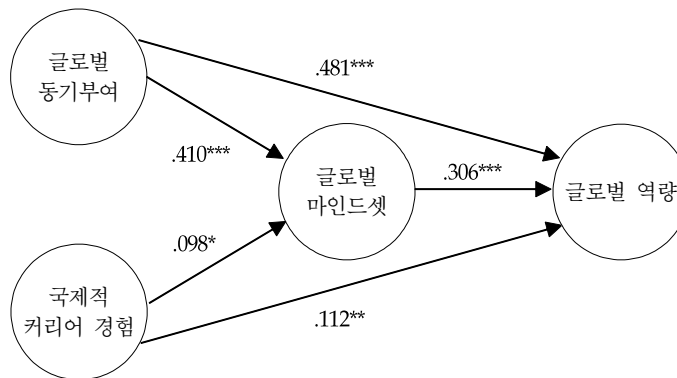
AVE = average variance extracted; CR = composite reliability; MSV = maximum shared variance

3. 구조방정식 모형 결과

글로벌 마인드셋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그림 2>에 제시되어 있다.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면, χ^2 값이 유의하게 나타났으나($\chi^2 = 340.638$, $df = 84$, $p < 0.001$), 이는 표본의 크기, 자유도와 모형의 복잡성에 민감하기 때문에 다른 적합도 지수들로 모형 적합도를 평가하였다(Bagozzi & Yi 1988). 적합도 지수들은 0.90 이상이며(NFI = 0.96, RFI = 0.94, IFI = 0.97, TLI = 0.96, CFI = 0.97), RMSEA 값은 0.058로 나타났다. 모형 적합도 평가 기준에 근거하여(Browne & Cudeck 1992; Hu & Bentler 1999), 본 연구모형은 데이터와 잘 부합되어 있으며, 양호한 적합도를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가설 검증 결과가 <그림 2>에 정리되어 있다. 글로벌 동기부여가 글로벌 마인드셋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beta = .410, p < .001$). 따라서 가설 1이 지지되었다. 또한 가설 2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국제적 커리어 경험이 글로벌 마인드셋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밝혀졌다($\beta = .098, p < .05$). 따라서 가설 2는 지지되었다. 그리고 글로벌 마인드셋이 글로벌 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나타났으며($\beta = .306, p < .001$), 가설 3이 지지되었다.

<그림 2> 연구결과 (전체 샘플)



$\chi^2=340.638, df = 84, p < 0.001$

RMSEA = 0.058, NFI = 0.96, RFI = 0.94, IFI = 0.97, TLI = 0.96, CFI = 0.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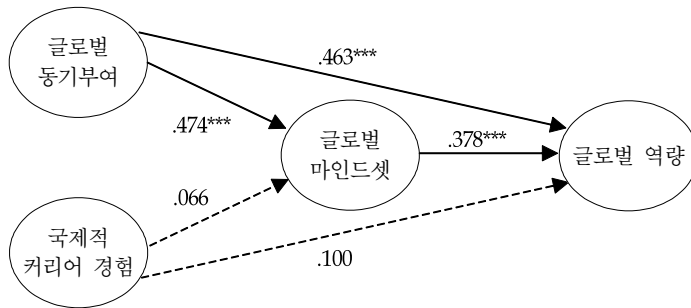
N = 1050; * $p < .05$, ** $p < .01$, *** $p < .001$

본 연구모형을 중국 공기업과 사기업의 샘플을 나누어서 분석한 결과는 <그림 3>과 <그림 4>에 나타나 있다. 두 모형 모두 적합도가 양호하며 실제 자료와 잘 부합되어 있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공기업과 사기업의 비교 분석결과, 두 집단 모두 글로벌 동기부여가 글로벌 역량에 직간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에서 글로벌 마인드셋이 글로벌 동기부여와 글로벌 역량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매개하고 있는 결과가 보였으며, 가설 4a와는 달리 그 매개효과가 사기업보다 공기업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4a는 기각되었다.

국제적 커리어 경험의 경우, 사기업에서 국제적 커리어 경험이 글로벌 역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beta = .146, p < .01$), 글로벌 마인드셋이 국제적 커리어

경험과 글로벌 역량에 대한 관계를 부분적으로 매개하고 있는 결과가 나타났다(<그림 4>). 반면 공기업에서는 국제적 커리어 경험에서 글로벌 역량에 이르는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이 관계에서 글로벌 마인드셋의 매개효과도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그림 3>). 따라서 글로벌 마인드셋이 국제적 커리어 경험과 글로벌 역량의 관계를 매개하는 효과는 공기업보다 사기업에서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 4b는 지지되었다.

〈그림 3〉 연구결과 (공기업 샘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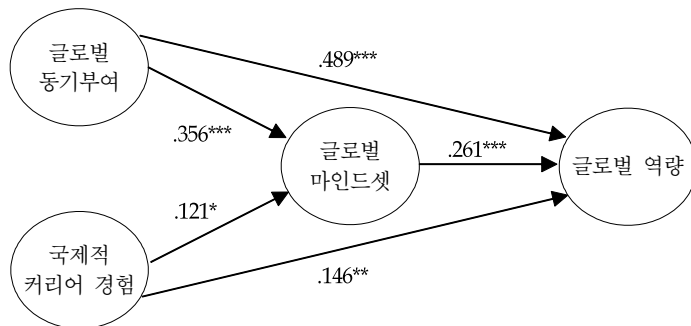


$\chi^2=260.728$, $df = 84$, $p < 0.001$

RMSEA = 0.070, NFI = 0.93, RFI = 0.90, IFI = 0.95, TLI = 0.93, CFI = 0.95

N = 413;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4〉 연구결과 (사기업 샘플)



$\chi^2=264.907$, $df = 84$, $p < 0.001$

RMSEA = 0.065, NFI = 0.95, RFI = 0.93, IFI = 0.97, TLI = 0.95, CFI = 0.97

N = 637; * $p < .05$, ** $p < .01$, *** $p < .001$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글로벌 마인드셋의 선행변수로 글로벌 동기부여와 국제적 커리어 경험에, 결과변수로 글로벌 역량에 초점을 두어 그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먼저, 글로벌 동기부여와 국제적 커리어 경험이 글로벌 역량에 직접적으로, 또한 글로벌 마인드셋을 매개로 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글로벌 마인드셋과 글로벌 역량의 함양에 개인의 내재적인 글로벌 동기부여와 외부적인 글로벌 환경에서 배움을 통해서 쌓은 국제적 커리어 경험, 모두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다국적기업들이 직원들의 글로벌 마인드셋과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들의 글로벌 지향적인 동기부여를 격려하고, 직원들이 글로벌 환경에서 업무 수행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외 파견, 글로벌 프로젝트 운영 등의 해외 관련 업무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해주고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글로벌 마인드셋이 글로벌 역량을 증가시키는 결과가 밝혀져, 글로벌 마인드셋의 효과성이 발견되었다. 글로벌 마인드셋이 기업성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소수의 연구가 존재하였으나(예: Felício et al. 2016; Nummela et al. 2004), 개인수준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아직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았다(Levy et al. 2007). 글로벌 마인드셋이 개인의 글로벌 역량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밝힌 본 연구는 글로벌 마인드셋이 기업성과뿐만 아니라 개인의 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증명한다는 점에서 실증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다국적기업의 글로벌 인재 육성에 글로벌 마인드셋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글로벌 인재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글로벌 마인드셋부터 함양하여야 한다는 것을 제시해 준다는 점에서도 실무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글로벌 동기부여가 국제적 커리어 경험보다 글로벌 마인드셋에 더 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전체 샘플뿐만 아니라 공기업과 사기업 샘플들에서도 일관성 있게 나타났다. 이는 글로벌 마인드셋 함양을 위해서 해외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험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개인의 내재적인 동기부여가 글로벌 마인드셋을 훨씬 더 강하게 향상시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다국적기업이 다양성 교육, 다문화 프로그램 등의 글로벌 지향적인 동기부여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학습 기회를 직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글로벌 마인드셋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해주고 있다.

더 나아가 본 연구는 중국 공기업과 사기업 샘플을 나누어, 글로벌 마인드셋의 매개효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글로벌 동기부여와 글로벌 역량 간의 관계에서 글로벌 마인드셋의 긍정적인 매개효과는 공기업보다 사기업에서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을 예상한 가설 4a와 달리, 오히려 사기업보다 공기업에서 그 매개효과가 더 강한 결과가 나타났다(<그림 3과 4>). 공기업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국가의 정책에 따른 실행이 요구되고(Amighini et al. 2013), 개인의 의사결정이 거의 영향력이 없는 환경에서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환경적 요인이 내재적 글로벌 동기부여가 높은 개인의 글로벌 마인드셋 향상에 아무런 장애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의 글로벌 동기부여가 외부적 환경요인보다 글로벌 마인드셋 함양에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제시해주고 있다.

또한 공기업과 사기업에서 국제적 커리어 경험과 글로벌 역량 간의 관계에서 글로벌 마인드셋의 매개효과를 비교 분석한 결과, 본 연구의 가설 4b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글로벌 마인드셋의 긍정적인 매개효과가 사기업에서 유의하게 나타난 반면, 공기업에서는 유의한 결과가 발견되지 않았다. 국가적 정책의 큰 영향을 받는 공기업에서 직원들이 국제적 커리어 경험이 있더라도 이는 수동적인 경험일 가능성이 크고, 이러한 경험은 글로벌 마인드셋이나 글로벌 역량을 향상시키기에는 제한적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기업의 경우, 국가의 규정에서 비교적 자유롭고 의사결정권을 기업이 가지고 있다. 따라서 기업이 직원들이 국제적 커리어 경험을 통해 글로벌 시장을 배우도록 격려하고, 이러한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직원들이 글로벌 마인드셋과 글로벌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밝힌 본 연구는 공기업 경영자들에게 직원들이 해외 업무를 수행하면서 쌓아왔던 경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의 글로벌 마인드셋과 글로벌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을 계획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제시해준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글로벌 마인드셋 연구에 중요한 실증적,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지만, 여러 현실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 향후 연구에서 이를 보완하는 연구 설계를 계획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본 연구는 글로벌 동기부여와 국제적 커리어 경험을 글로벌 마인드셋의 선행변수로 고려하여 분석하였지만, 데이터의 한계로 인해 글로벌 마인드셋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변수들을 분석에 포함하지 못하였다. 예를 들어, 내향성, 외향성 등의 개인의 특성을 글로벌 마인드셋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고려할 수 있다. 향후 연구는 개인 특성 및 성격(personality)의 변수들을 글로벌 마인드셋의 선행변수로 분석하여 보다 보완적인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글로벌 마인드셋의 효

과성을 분석하기 위해 그 결과변수로 글로벌 역량에 초점을 두어 분석하였으나, 향후 연구는 그 외의 다른 결과변수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마인드셋의 결과변수로 다양성 관리능력, 기업가 정신, 창의성 등의 개인의 성과 변수들을 고려할 수 있고, 추후 연구에서 이 변수들에 글로벌 마인드셋이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여 그 효과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중국 기업의 두 가지 형태인 공기업과 사기업 샘플을 나누어, 기업 특성이 글로벌 마인드셋과 그의 선행변수와 결과변수들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데이터의 한계로 인해 글로벌 마인드셋과 관련하여 국가별 비교 분석을 실시하지 못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국가에서 자료 수집 확대를 통한 국가별 비교 연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분석에 포함되어 있는 변수들이 개인 수준에서 직원 본인이 응답한 설문 결과를 사용해서 측정되었으므로 동일방법편의(common method bias)가 하나의 한계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원천에서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여 이를 보완해서 보다 발전적인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Adler, N. J. and S. Bartholomew. 1992. "Managing Globally Competent People." *Academy of Management Perspectives* 6(3), 52-65.
- Amighini, A. A., R. Rabellotti and M. Sanfilippo. 2013. "Do Chinese State-Owned and Private Enterprises Differ in Their Internationalization Strategies?" *China Economic Review* 27, 312-325.
- Andresen, M. and F. Bergdolt. 2017.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on the Definitions of Global Mindset and Cultural Intelligence-Merging Two Different Research Stream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28(1), 170-195.
- Arora, A., A. Jaju, A. G. Kefalas and T. Perenich. 2004. "An Exploratory Analysis of Global Managerial Mindsets: A Case of US Textile and Apparel Industry." *Journal of International Management* 10(3), 393-411.
- Bagozzi, R. P. and Y. Yi. 1988. "On the Evaluation of Structural Equation Models." *Journal of the Academy of Marketing Science* 16(1), 74-94.
- Bartlett, C. A. and S. Ghoshal. 1995. *Transnational Management: Text, Cases and Reading in Cross-border Management*. Irwin, Chicago.
- Bauer, K. N., K. A. Orvis, K. Ely and E. A. Surface. 2016. "Re-examination of Motivation in Learning Contexts: Meta-analytically Investigating the Role Type of Motivation Plays in the Prediction of Key Training Outcomes." *Journal of Business and Psychology* 31(1), 33-50.
- Beechler, S., O. Levy, S. Taylor and N. Boyacıgiller. 2004. "Does It Really Matter If Japanese MNCs Think Globally?" in *Japanese Firms in Transition: Responding to the Globalization Challenge*, 261-288. Emerald Group Publishing Limited.
- Begley, T. M. and D. P. Boyd. 2003. "The Need for a Corporate Global Mind-set." *MIT Sloan Management Review* 44(2), 25-32.
- Bird, A., J. S. Osland and H. W. Lane. 2004. "Global Competencies: An Introduction." in *the Blackwell Handbook of Global Management: A Guide to Managing Complexity*, 57-80.
- Bowen, D. E. and A. C. Inkpen. 2009. "Exploring the Role of 'Global Mindset' in Leading Change in International Contexts." *The Journal of Applied*

- Behavioral Science* 45(2), 239-260.
- Brislin, R. W. 1970. "Back-translation for Cross-cultural Research."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1(3), 185-216.
- Browne, M. W. and R. Cudeck. 1992.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Sociological Methods & Research* 21(2), 230-258.
- Buckley, P. J., L. J. Clegg, A. Cross, X. Liu, H. Voss and P. Zheng. 2010. "The Determinants of Chinese 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Foreign Direct Investment, China and the World Economy*, 81-118. Palgrave Macmillan, London.
- Bücker, J. and E. Poutsma. 2010. "Global Management Competencies: A Theoretical Foundation." *Journal of Managerial Psychology* 25(8), 829-844.
- Caligiuri, P. 2006. "Developing Global Leaders." *Human Resource Management Review* 16(2), 219-228.
- Child, J. and S. B. Rodrigues. 2005. "The Internationalization of Chinese Firms: A Case for Theoretical Extension?" *Management and Organization Review* 1(3), 381-410.
- Cliffe, S. 2015. "Companies Don't Go Global, People Do." *Harvard Business Review* 93(10), 82-85.
- Deci, E. L., J. P. Connell and R. M. Ryan. 1989. "Self-determination in a Work Organization."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4(4), 580-590.
- Deci, E. L., R. J. Vallerand, L. G. Pelletier and R. M. Ryan. 1991. "Motivation and Education: The Self-determination Perspective." *Educational Psychologist* 26(3-4), 325-346.
- Eraut, M. 2000. "Non formal Learning and Tacit Knowledge in Professional Work."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0(1), 113-136.
- Fan, J. and J. P. Wanous. 2008. "Organizational and Cultural Entry: A New Type of Orientation Program for Multiple Boundary Crossing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93(6), 1390-1400.
- Felício, J. A., I. Meidutė and Ø. Kyvik. 2016. "Global Mindset, Cultural Context, and the Internationalization of SMEs."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69(11), 4924-4932.
- Fornell, C. and D. F. Larcker. 1981. "Evalua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Journal of*

- Marketing Research* 18(1), 39-50.
- Govindarajan, V. and A. K. Gupta. 1998. "Success Is All in the Mindset." *Financial Times*, February 27.
- Grant, R. M. 1996. "Toward a Knowledge based Theory of the Firm."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17(S2), 109-122.
- Gupta, A. K. and V. Govindarajan. 2002. "Cultivating a Global Mindset." *Academy of Management Perspectives* 16(1), 116-126.
- Heenan, D. A. and H. V. Perlmutter. 1979. *Multinational Organizational Development: A Social Architectural Approach* Reading, MA: Addison-Wesley.
- Holtbrügge, D. and F. Engelhard. 2016. "Study Abroad Programs: Individual Motivations, Cultural Intelligence, and the Mediating Role of Cultural Boundary Spanning." *Academy of Management Learning & Education* 15(3), 435-455.
- Hu, L. T. and P. M. Bentler.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6(1), 1-55.
- Javidan, M. and D. Bowen. 2013. "The 'Global Mindset' of Managers." *Organizational Dynamics* 42(2), 145-155.
- Jokinen, T., C. Brewster and V. Suutari. 2008. "Career Capital during International Work Experiences: Contrasting Self-initiated Expatriate Experiences and Assigned Expatriation."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19(6), 979-998.
- Kedia, B. L. and A. Mukherji. 1999. "Global Managers: Developing a Mindset for Global Competitiveness." *Journal of World Business* 34(3), 230-251.
- Kefalas, A. G. 1998. "Think Globally, Act Locally." *Thunderbird International Business Review* 40(6), 547-562.
- Kobrin, S. J. 1994. "Is there a Relationship between a Geocentric Mind-set and Multinational Strategy?"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25(3), 493-511.
- Kolstad, I. and A. Wiig. 2012. "What Determines Chinese Outward FDI?" *Journal of World Business* 47(1), 26-34.

- Kotra. 2018. *Quarterly Report, Foreign Direct Investment Trends*. Kotra.
- Lane, H. W. 2009. *International Management Behavior: Leading with a Global Mindset*. Chichester, West Sussex: Wiley.
- Levy, O., S. Beechler, S. Taylor and N. A. Boyacigiller. 2007. "What We Talk about When We Talk about 'Global Mindset': Managerial Cognition in Multinational Corporations."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38(2), 231-258.
- Liang, X., X. Lu and L. Wang. 2012. "Outward Internationalization of Private Enterprises in China: The effect of Competitiv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Compared to Home Market Rivals." *Journal of World Business* 47(1), 134-144.
- Maznevski, M. L. and H. W. Lane. 2004. "Shaping the Global Mindset: Designing Educational Experiences for Effective Global Thinking and Action." in *Crossing Cultures: Insights from Master Teachers*, edited by Boyacigiller, N., Goodman, R. M., and Phillips, M., 171-184. Routledge: London.
- Nummela, N., S. Saarenketo and K. Puumalainen. 2004. "A Global Mindset—A Prerequisite for Successful Internationalization?" *Canadian Journal of Administrative Sciences* 21(1), 51-64.
- Oh, H., S. Lee and S. H. Oh. 2018. "Expatriate Managers' Cross-Cultural Motivation and Host Country National Employees' Attitudes."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An International Journal* 46(5), 841-860.
- Olson, C. L. and K. R. Kroeger. 2001. "Global Competency and Intercultural Sensitivity." *Journal of Studies in International Education* 5(2), 116-137.
- Paul, H. 2000. "Creating a Global Mindset." *Thunderbird International Business Review* 42(2), 187-200.
- Perlmutter, H. V. 1969. "The Tortuous Evolution of the Multinational Corporation." *Columbia Journal of World Business* 4(1), 9-18.
- Quer, D., E. Claver and L. Rienda. 2012. "Political Risk, Cultural Distance, and 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Empirical Evidence from Large Chinese Firms." *Asia Pacific Journal of Management* 29(4), 1089-1104.
- Rhinesmith, S. H. 1992. "Global Mindsets for Global Managers." *Training &*

- Development* 46(10), 63-69.
- Rhinesmith, S. H. 1995. "Open the Door to a Global Mindset." *Training & Development* 49(5), 34-44.
- Ryan, R. M. and E. L. Deci. 2000. "Intrinsic and Extrinsic Motivations: Classic Definitions and New Directions."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25(1), 54-67.
- Shaffer, M. A., D. A. Harrison, H. Gregersen, J. S. Black and L. A. Ferzandi. 2006. "You Can Take It with You: Individual Differences and Expatriate Effectivenes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91(1), 109-125.
- Shook, C. L., D. J. Ketchen Jr, G. T. M. Hult and K. M. Kacmar. 2004. "An Assessment of the Us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Strategic Management Research."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25(4), 397-404.
- Statista. 2019. *Gross Domestic Product(GDP) Growth Rate in China 2011-2023*. The statistics portal.
- Statista. 2020. *China's share of global gross domestic product(GDP) 2012-2024*. The statistics portal.
- Story, J. S. and J. E. Barbuto Jr. 2011. "Global Mindset: A Construct Clarification and Framework." *Journal of Leadership & Organizational Studies* 18(3), 377-384.
- Story, J. S., J. E. Barbuto Jr, F. Luthans and J. A. Bovaird. 2014. "Meeting the Challenges of Effective International HRM: Analysis of the Antecedents of Global Mindset." *Human Resource Management* 53(1), 131-155.
- Vallerand, R. J. 2000. "Deci and Ryan's Self-determination Theory: A View from the Hierarchical Model of Intrinsic and Extrinsic Motivation." *Psychological Inquiry* 11(4), 312-318.
- Zucchella, A., G. Palamara and S. Denicolai. 2007. "The Drivers of the Early Internationalization of the Firm." *Journal of World Business* 42(3), 268-280.

Abstract

The Antecedent and Outcome Variables of Global Mindset: A Comparative Study of State- and Privately-Owned Enterprises in China

Mon Yee Hsu ■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Meng Jie Liu ■ Yonsei University

Yong Suhk Pak ■ Yonsei University

This study aimed to provide a more detailed understanding of a global mindset by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lobal mindset, its antecedent and outcome variables.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s of global motivation and international career experience as antecedent variables of the global mindset. In addition, this study also examined the effect of the global mindset on global competence. Data were collected from 1,050 employees working at state- and privately-owned enterprises in China. This study compared the mediating effect of the global mindset on its antecedent and outcome variables between the samples of the two types of enterprises.

Results revealed that the global mindset positive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global motivation and global competence and also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ational career experience and global competence. The results also showed that the global mindset positive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global motivation and global competence in both state- and privately-owned enterprises, and the mediating effect was stronger in the state-owned enterprises than in the privately-owned enterprises. In contrast, the positive mediating effect of the global mindset between international career experience and global competence was significant in the privately-owned enterprises, but not in the state-owned enterprises. The theoretical and empirical implications, future research directions, and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at the end.

Key Words: Global mindset, global motivation, international career experience,
global competence, state-owned enterprise, privately-owned
enterprise

지방정치에서 신뢰가 정치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대인 신뢰와 제도 및 정치 신뢰를 중심으로*

이재현 ■ 부경대학교**

김 욱 ■ 배재대학교***

〈국문요약〉

이 연구는 정치효능감과 사회적 자본의 요소 중 하나인 신뢰는 효과적인 지방정치와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요인일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신뢰가 정치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대전광역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대인신뢰 및 정치신뢰와 정치효능감의 영향 관계를 검토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뢰 측정문항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 한 결과, 지방정부의 자치에 대한 신뢰와 일반적 정치신뢰로 묶인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지방분권화가 전개됨에 따라 지방정부의 자치기능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점차 명확해지고 있는 결과로 사료된다. 둘째, 회귀 분석결과 대인신뢰와 정치신뢰 모두 정치효능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자치에 대한 신뢰가 정치효능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대인신뢰에서는 특수신뢰가 정치효능감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민의 지방자치에 대한 신뢰형성 및 증진을 통한 정치효능감 제고가 효과적인 지방분권과 지방정치를 작동시킬 수 있음을 주장한다.

*주제어: 정치효능감, 대인신뢰, 제도 및 정치신뢰, 지방정치, 사회적 자본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3A2075531). 유익한 심사와 논평으로 논문의 완성도에 도움을 준 3인의 심사위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주저자, 부경대학교 지방분권발전연구소 전임연구원 (E-mail: leejh@cnu.ac.kr)

*** 교신저자,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E-mail: wkim@pcu.ac.kr)

I. 서론

대한민국은 현재 지방분권과 지역발전이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더 나아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희망과 믿음을 가지고 있다. 지역사회 역량의 총합이 국가경쟁력에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지역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민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기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정치적 주체인 시민의 역량과 시민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와의 관계가 어떠하냐에 따라 지방분권과 지역발전이 성공 혹은 실패할 수 있는 중요한 관건일 것이다. 왜냐하면 시민의 역량과 사회관계 속에서의 시민이 (지역)사회와 얼마나 유기적이고 효과적으로 반응하는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시민역량과 지역사회 역량 차원에서 지방분권과 지역사회 발전을 견인할 인지적 차원의 요인은 무엇일까? 이와 관련하여,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연구자들은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 축적은 그 사회의 정치와 경제를 견인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주장한다(이희창·박희봉 2005; Coleman 1990; Fukuyama 1995; Krishna 2000; Putnam 1993). 아울러 신뢰가 충만한 사회를 발전 잠재성과 능력이 있는 사회라고 주장하는 후쿠야마(Fukuyama 1995)의 견해를 수용한다면, 지역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사회적 자본은 매우 중요한 요인이고 할 수 있다. 특히 Putnam(1993)은 신뢰(trust)와 호혜(reciprocity) 같은 사회적 자본의 인지적 측면이 지역발전에 핵심 요소라고 주장한 바 있다. 따라서 지방분권과 지역발전에 있어서 시민역량과 지역사회와의 관계는 사회적 자본의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민참여를 촉진하는 데 기여하는 사회적 자본은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자치활동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하상근 2018). 시민참여를 전제로 한 지방분권과 지역사회 발전은 정치적 참여가 필수적이고, 지역사회에서 시민의 참여와 의사소통 경험이 시민의 자기 효능감(self efficacy)과 집합적 효능감(collective efficacy) 형성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곽현근 2008; Speer & Hughees 1995; Wandersman & Florin 2000), 시민의 정치효능감(political efficacy) 역시 지역사회 발전에 중요한 척도와 요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자본이 개인의 사회적 관계를 확장시켜 공적 영역인 정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자본의 증가에 따른 정치적 관심 또는 정치참여의 증가 양태를 규명해야 한다(이현우 외 2011).

그러나 정치효능감이 정치적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한 국내외적 연구는

많은 편이지만 무엇이 정치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관심은 비교적 적은 편이다(박영득 2016). 이에 본 연구는 지방분권과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사회적 자본, 즉 신뢰를 중심으로 시민의 정치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정치효능감의 영향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는 신뢰와 정치효능감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기존연구들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가설을 설정한다. 제3장에서 연구설계와 제4장에서 분석결과를 도출하고, 제5장 결론에서 분석결과에 따른 시사점과 함의를 도출한다.

II. 이론적 배경 및 기존연구 검토

1. 신뢰와 정치효능감의 관계

1) 사회적 자본으로써의 신뢰

한 국가와 사회에서 관계적 맥락에서 형성되는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은 신뢰(trust), 규범(norm), 수평적 네트워크(horizontal network) 등의 요소를 가지고 있고, 사회 구성원간의 상호협력적 태도와 행위를 형성 및 촉진하여 사회통합과 정책추진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Putnam 1993). 좀 더 개인적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사회적 자본은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한 구성원이 된 개인이 이익과 혜택을 얻을 수 있게 만드는 일종의 투자자원을 의미한다(Warren 2008, 125). 더 나아가 개개인이 단체 또는 조직을 구성하여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성향으로 인해 시민의 연대와 자발적 참여가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견해(Tocqueville 2003)는 사회적 자본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리고 생산적 개념으로써 사회적 자본이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회적 관계와 구조 속에서 개개인의 특정 행위를 규정하는 규범체계라는 견해(Coleman 1988) 또한 그러하다. 따라서 사회적 자본은 상호 인식을 토대로 제도화된 관계의 연결망 또는 그 관계와 연계된 실질적 잠재적 자원이다(Bourdieu 1985). 이러한 견해와 주장들을 종합하면, 사회적 자본은 사회의 능률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신뢰, 규범, 네트워크와 같은 사회적 조직의 특질이 반영된 무형적 자산인 것이다.

사회적 자본은 인지적 차원에서 보면 신뢰와 규범을 토대로 한 조직적 체계인 수평적 네트워크가 구축되면서 형성된다. 사회적 자본 연구에 가장 대표적인 연구자인 Putnam(2000)은 사회적 자본을 결속형 사회자본(bonding social

capital)과 교량형 사회자본(bridging social capital)으로 구분하였다. 결속형 사회적 자본은 동질적 사회관계망 안에서 관계가 깊어지고 그 안에서 신뢰가 축적되어 생기는 특징을 갖는 반면, 교량형 사회적 자본은 이질적 사회집단 속에서 만들어지는 관계에 기초해 형성된다는 특징을 갖는다. 결속형 사회적 자본은 본질적으로 배타적 또는 폐쇄적이고 내부지향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으며, 집단 내 구성원들의 동질성을 강화하여 자신들의 이득을 획득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측면이 있지만, 다른 집단을 향한 배타성과 적대감을 증대시킨다는 부정적인 측면 또한 존재한다. 반면에 교량형 사회적 자본은 집단 내 구성원 간 연계는 다소 느슨하지만 다른 집단에 개방적이고 포용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교량형 사회적 자본은 내부결속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비록 ‘약한 유대’(weak ties)라 하더라도 외부와의 관계형성을 통한 자원과 기회의 접근가능성을 강조한다. 즉, 교량형 사회적 자본은 수평적이지만 다소 이질적 네트워크 사이의 약한 유대와 다양한 자원과의 접근가능성을 강조한다. 그리고 Woolcock(1998)은 한 개인이 사회적 연결망에 내재된 정보, 신뢰, 그리고 호혜성의 규범을 사회적 자본으로 보았고, Krishna(2000)는 모든 사회에 어떠한 형태로든 존재하는 신뢰와 협력을 사회적 자본의 핵심으로 보았다. 사회적 자본은 그 기능에 따라 다양한 구조에 속한 개인으로 하여금 특정 행위를 유도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사회 역동성의 핵심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Coleman 1990).

지금까지 사회적 자본에 대한 여러 연구자들의 견해와 정의의 핵심은 집단에 속한 개인이 신뢰와 같은 인지적 차원을 강조하는 것이다. 인지적 차원에서 사회적 자본은 개인들이 가지는 사회구성원 사이의 관계에 대한 규범, 가치, 믿음과 태도를 말하며, 분석의 초점을 개인에 맞추고 한 사회 안에서 비교적 일관성 있는 가치들의 확대에 관심을 두고 있다(Grix 2001; Jackman & Miller 1998).¹⁾ 인지적 차원이라는 것은 주관적 감정에 기반한 인식과 태도 또는 정향을 의미한다.²⁾ 이러한 사회적 자본으로써 신뢰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정치적 행위와 결부

1) 다른 한편으로 구조적 사회적 자본은 개인의 태도나 집단의 문화와는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존재하면서 사회구성원간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네트워크의 존재와 특성뿐만 아니라 역할, 규칙, 절차와 같은 정치적·사회적·경제적 구조나 제도까지를 포함하며, 인지적 사회적 자본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곽현근·유현숙 2011).

2) 반면에, 사회적 자본을 객관적 차원과 주관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논의한 Paxton(1999)은, 전자를 구성원간의 네트워크 결사체가 사회적 공간에서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 현상을 의미하고, 후자를 개인들의 네트워크가 호혜, 신뢰 등의 감정의 상태로 정의하였다. 다만 본 연구는 설문조사 분석의 특성상 주로 감정과 인식이라는 차원에서 논의한다는 점에서 후자를 의미한다.

된다면, 정치효능감이 가장 대표적일 것이다. 왜냐하면 정치효능감은 시민 개개인이 정치적 대상에게 느끼는 일종의 믿음 또는 신념이기 때문이다. 즉 사회적 자본이 충분한 사람이 정치참여에 적극적일 가능성이 높다면, 정치참여 증대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적 성향이 정치효능감일 수 있다. 따라서 인지적 차원에서 중요시되는 사회적 자본을 정치참여와 정치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효능감과 연관지어 논의할 필요가 있다. 정치효능감 또한 시민들의 인지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지역발전의 원동력인 사회적 자본과 정치참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인지적 차원에서의 정치효능감의 관계가 어떠한 형태와 구조로 결정되는지 본 연구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2) 정치효능감

정치효능감(political efficacy)의 전통적인 개념은 자신이 정치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개개인의 감정(feeling)으로 정의하고 있다(Erikson & Tedin 2015; Madsen 1987). 이러한 정치효능감은 외재적 효능감과 내재적 효능감으로 구분되는데, 외재적 효능감(external efficacy)은 시민들의 요구에 대해서 정부 당국과 기구들이 제대로 잘 반응(responsiveness)한다는 믿음이고, 내재적 효능감(internal political efficacy)은 효과적으로 정치를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다(Lassen & Serritzlew 2011; Niemi et al. 1991). 따라서 정치효능감은 유권자들의 정치적 참여 및 활동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되고, 강한 정치효능감은 안정적인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상적인 정치문화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Almond & Verba 2015).

비교적 높은 정치효능감을 지닌 사람들은 정치활동에 적극적인 반면에 낮은 정치효능감을 지닌 사람들의 경우 정치활동에 관심이 없거나 관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의도적으로 기권하려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 정치적 동원에 가장 최적화된 조건은 '높은 정치효능감과 낮은 정부신뢰'라고 주장한 Gamson(1968)의 이른바 '갬슨가설(Gamson hypothesis)'에서 이러한 주장에 대한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 그 후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정치효능감이 낮은 상태에서 정부신뢰에 대한 태도나 정향이 높고 낮음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정치 참여의 유형을 구분한 Seligson(1980)의 연구와 Craig(1980)의 연구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이러한 연구들에 따르면, 정치효능감이 낮은 상태에서 정부신뢰가 높을 경우에는 정치활동에 순응적 무관심(allegiant apathy)을 보이고, 정부신뢰가 낮을 경우에는 소외된 기권(alienated withdrawal)의 행태를 보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유사한 맥락에

서 정한울과 이곤수(2013)는 정치참여를 선거 참여와 비선거 참여로 구분하고 ‘낮은 정치신뢰-높은 정치효능감’의 격차가 정치참여를 강화시킬 수 있다는 가설을 검증한 결과, 선거에서는 정치효능감과 정치신뢰가 참여를 강화시키는 반면, 비선거 참여에서는 정치효능감은 참여를 강화시키지만 정치신뢰는 참여를 약화시킨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와는 달리 김한나(2016)는 높은 내적 정치효능감과 낮은 정부신뢰는 투표 참여(선거 참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정당일체감의 강도가 주요 영향요인으로 나타난다고 하였고, 시위와 같은 저항적 정치참여(비선거 참여)에서는 높은 내적 정치효능감과 낮은 정부신뢰가 참여를 유발하는 요인이라고 하였다.

한국사례에 대한 대다수의 연구는 경험적 차원에서 투표참여에 대한 정치효능감의 긍정적 효과에 주목하였다(강경태 2003; 강우진 2012; 이수영·곽진영 2002; 이재현·김욱 2018; 정준표 2008). 그러나 정치신뢰의 경우 다소 상이한 연구결과를 보이고 있다. 정치신뢰는 정부 같은 국민의 대표기관이나 대의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긍정적 기대감에 의해 지지와 협력의 기반이 되고 궁극적으로 대의민주주의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좌우할 수 있다(Putnam 2000, 287). 유권자의 정치참여는 정치효능감과 정치신뢰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 특히 투표참여는 정치효능감 및 정치신뢰 요인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다(Bimber 2003, 220). 그 이유는 정치효능감의 경우, 정치참여를 촉진시키는 요인이고 정치신뢰는 정부 결정에 정통성을 부여하여 순응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안정성을 높이고 간접민주주의를 보강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가상준 2007; Craig 1990; Erikson & Tedin 2015). 따라서 정치효능감과 정치신뢰는 민주주의체제의 건전성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로 간주된다(Craig et al. 1990). 이렇듯 정치효능감이 정치신뢰와 관련이 깊은 요인이라면, 신뢰를 강조하는 사회적 자본과의 연관성이 충분히 검토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다음 절에서 기존연구를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본 연구의 가설을 도출한다.

2. 기존 연구 검토 및 가설설정

사회적 자본은 정치참여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자본이 사회적 상호관계에 기초한다는 데에만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을 뿐 지금까지도 그 효과는 물론이고 그 본질이나 개념 정의에 있어서도 통일된 견해가 없다. 그 이유는 다양한 형태로 사회

적 자본이 존재하고, 사회적 자본에 대한 효과 또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이현우 외 2011). 특히 사회적 자본과 정치효능감 모두 인지적 차원에서 측정되고 분석된다는 점에서 일관된 결과나 효과가 난다고 단언할 수 없다. 사회적 자본에 대한 개념 정의는 관점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나 대체로 사회적 자본이 신뢰, 규범, 참여, 네트워크 등을 핵심요소로 하고 있다. 규범은 호혜성을 기본으로 하여 공동체 유대감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신뢰는 존경과 우의 등 특별한 관계에 기반을 두고 구성원간 상호관계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Fukuyama 2001).

김명숙(2004)은 사회자본이 지방정치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에서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 효능감 및 협조가 지방정부에 유의미하다고 보고한 바 있고, 박희봉(2002)은 사회자본이 경제발전과 거버넌스와 가정, 조직에 순기능적 역할을 한다고 하였으며, 소진광(2000)은 사회자본이 지방자치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요소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김옥(2013)은 사회적 연결성 및 유대감 등과 같은 사회적 자본이 정치효능감과 결부되어 정치참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사회적 자본이 지역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말로니와 그의 동료들의 연구(Maloney et al. 2000)에 의하면, 지역공동체를 위한 자발적 결사체는 인접한 다른 결사체와의 유대 강화 노력을 경주하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거버넌스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특히 지방의회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한다. 그들의 연구는 시민들이 지방의회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불신하는 한국 지방정치의 현재 주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결국 그들이 주장하는 사회적 자본이 지역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지역에 대한 애착과 관심이 지방정치에서 주요 행위자인 지방자치단체 집행부와 지방의회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는 지방분권과 지역발전에 사회적 자본이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밝히는 것이지만, 지역사회 구성원이 지역특성에 기반한 사회적 자본과 지방정치에 필요한 정치효능감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한 한계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 사회적 자본과 정치참여에 대한 연구에서 정치효능감에 대한 논의가 있다. 이현우 외(2011)는 개인이 결사체 가입이 증가할수록 정치적 관심과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함과 동시에 한국의 지역주의와 사회적 자본의 관계를 규명하였다. 그들에 의하면 폐쇄적이고 내부지향적인 결속형 사회자본의 축적이 지역주의를 유지하고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이숙중·유희정(2010)은 사회신뢰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자본은 투표참여와

같은 인습적 정치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정부신뢰는 집회나 시위와 같은 비인습적 정치참여에 유의미한 영향관계가 있음을 발견했다. 이들에 의하면 개인적 인지 차원에서 사회적 자본은 개인의 정치효능감 및 행동 방식의 변화를 가져와 정치참여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사회적 자본과 정치효능감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지 못한 한계를 갖는다. 왜냐하면 이 연구는 정치효능감에 대한 매개변수를 사용하지 않고 논리적 추론에 의해서 다시 말해, 사회적 자본이 정치참여에 유의미한 영향관계가 보인다는 점에서 정치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정치효능감을 사회적 자본과 연결시켜 추론했기 때문이다.

장석준(2012)은 결속형 사회적 자본은 지방정부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교량형 사회적 자본과 일반화된 호혜성 규범이 높을수록 지방정부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2009년도 기초자치단체의 집합자료를 통해 분석한 바 있다. 그의 분석에 의하면, 결속형 사회적 자본은 지방정부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교량형 사회적 자본은 지방정부 성과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다고 하였다. 다만 이 연구는 인식차원에서의 사회적 자본이 아닌 해당 관변단체인가 그렇지 않은 단체인가를 기준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시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 향상은 정부에 대한 적극적 의사 표현의 증가로 이어져 정치효능감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김명숙(2004)은 사회신뢰, 사회규범, 사회연계망이 증가할수록 정치효능감이 증가할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분석한 결과, 이들 변수는 모두 정치효능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가 정치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연구는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와 정치효능감의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뿐 정치효능감과 사회적 자본에 대한 요인들을 상관분석을 통해 연구되었다는 점에서 인과적 경로를 설정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Uslaner (2002)는 주로 개인적 경험에 기초하고 있는 특수한 신뢰와 개인적 경험을 넘어 주로 도덕적 인식에 기초한 보편적 신뢰는 구분된다고 하였다. 더 나아가 Newton et al.(2018)은 이러한 사회적 신뢰(social trust)는 정치신뢰와는 관련이 없이 독립적일 수 있기 때문에 정치신뢰와는 구분되는 개념이라고 하였다. 이는 외국인이나 종교가 다른 사람과 같이 자신을 기준으로 이질적인 인식을 갖기 쉬운 사람에 대한 신뢰와 친구, 친척과 같은 자신이 잘 아는 상대적으로 동질적인 사람들에 대한 신뢰는 구분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정치신뢰와 독립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효능감과의 영향관계를 규명하려는 본 연구에 있어 중요한 함의와 동기를 제공한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사회적 자

본은 사회적 네트워크, 호혜적 규범, 그리고 신뢰로 구성된다. 이 중에서 본 연구가 주목하고 있는 신뢰 요인이다.³⁾

사회적 자본으로써의 신뢰와 정치효능감을 결부시켜 논의된 연구는 없지 않지만 정치효능감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분석하는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정치신뢰를 지방과 중앙 차원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연구는 더욱 그러하다. 정치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요인이 과연 무엇인지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대인신뢰와 정치신뢰와 관련된 문항을 탐색적 요인분석으로 확인 및 구분하고 그에 따른 정치효능감과 영향관계를 구분하고자 한다. 따라서 기존 연구들이 정치효능감에 미치는 신뢰의 영향요인 중에서 주로 구분하지 않았던 대인신뢰를 특수신뢰 및 일반신뢰로 구분하고, 지방자치 신뢰와 정치신뢰 차원으로 구분하여 검증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의의가 있고 하겠다. 이를 위해 본 연구의 가설은 “대인신뢰(일반신뢰와 특수신뢰)는 정치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가설 1)”와 “지방정치 차원과 중앙정치 차원의 신뢰는 차별적으로 나타나고 정치효능감에도 유의미한 영향관계를 보일 것이다(가설2)”이다.

III. 연구설계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부경대학교 지방분권발전연구소가 ‘대전 리서치센터’에 의뢰하여 2018년 11월 30일부터 12월 27일까지 진행한 “대전광역시 사회적 자본과 주민의식 조사”를 활용하였다. 샘플링은 대전시 5개 자치구 인구,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한 비례층화추출(proportional stratified sampling)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모집단은 20세 이상 대전광역시민으로 하여 847명 표본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모집단 대상 95% 신뢰수준에서 최대 허용오차 $\pm 3.37\%$ 이다. 본 연구의 표본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 <표 1>과 같다.

3) Newton et al.(2018)의 설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신뢰는 수평적 신뢰를, 정치신뢰는 수직적 신뢰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에 신뢰형성의 구조적 차원에서 사회적 신뢰와 정치신뢰로 구분할 수도 있다. 둘째, 신뢰의 대상에 따라 사회적 신뢰로서의 대인신뢰(trust in people)와 정치제도와 같은 체제와 관련된 제도신뢰(trust in institution)로 구분할 수 있다.

〈표 1〉 설문 응답자 표본집단

항목		빈도(명)	%	항목		빈도(명)	%
성별	남성	427	50.4	월 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20	2.4
	여성	420	49.6		100~149만원	35	4.1
연령	20대	171	20.2		150~199만원	25	3.0
	30대	153	18.1		200~249만원	39	4.6
	40대	181	21.4		250~299만원	36	4.3
	50대	169	19.9		300~399만원	178	21.0
	60대 이상	108	20.4		400~499만원	211	24.9
					500~999만원	281	33.2
학력	초졸	18	2.1		1,000만원이상	22	2.6
	중졸	48	5.7	직업	직업 없음	36	4.3
	고졸	268	31.6		가사	108	12.8
	대학교 재학	105	12.4		관리직	50	5.9
	대학교 졸업	356	42.0		사무직	202	23.8
	대학원 이상	52	6.1		판매직	146	17.2
거주지	대덕구	110	13.0		서비스직	100	11.8
	동구	136	16.1		생산기술직	98	11.6
	서구	265	31.3		전문직	42	5.0
	유성구	197	23.3		학생	65	7.7
	중구	139	16.4				

본 연구의 분석에 앞서 사회적 자본 및 정치효능감과 관련된 총 23개 문항을 <표 2>와 같이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으로 변수 축약하였다.⁴⁾ 기존 연구들은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으로 변수들 간의 기존 관계를 가설로 설정하고 진행해 왔다, 그 이유는 아마도 사회적 자본의 신뢰요인 중에서 정치신뢰 요인을 중앙정치 차원에서의 문항만을 고려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지방정치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 대한 신뢰를 포함하기 때문에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시행하였다.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 노력에 따라 시민들이 지방정치 관련 신뢰와 중앙정치 관련 신뢰가 구분 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시행한 것이다. KMO(Kaiser-Meyer-Olkin) 값을 확인한 결과 0.908($p<0.01$)로 나타나 표본 적합

4) 기존 연구들은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으로 변수들 간의 기존 관계를 가설로 설정하고 진행해 왔다, 그 이유는 아마도 사회적 자본의 신뢰요인 중에서 정치신뢰 요인을 중앙정치 차원에서의 문항만을 고려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지방정치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 대한 신뢰를 포함하기 때문에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시행하였다.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 노력에 따라 시민들이 지방정치 관련 신뢰와 중앙정치 관련 신뢰가 구분 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시행한 것이다.

성이 매우 좋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종속변수(정치효능감)⁵⁾와 독립변수(사회적 자본의 대인신뢰 및 통제변수 포함)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우선 종속변수인 정치효능감 측정은 Craig et al.(1990)이 사용한 설문 문항을 준용하였고, 5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다)로 “나의 투표로 정치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정치와 사회 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다.” 2개 문항을 활용하였다. Fac_5 요인을 보면 정치문제에 대한 이해 정도와 자신의 투표가 사회변화를 이끌 수 있다는 신념 등을 반영한 요인이라는 점에서 정치효능감 변수임을 확인하였고, 문항 신뢰도 Cronbach's α 값이 0.691로 나타나 두 문항에 대한 통합 변수로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종속변수로 활용한다.

둘째, Fac_3 요인의 경우, 응답자 자신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물리적 또는 정서적 거리가 먼 타인, 즉 종교나 정치적 견해가 다른 사람이나 타 지역 사람 또는 외국인 등에 대한 신뢰를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Fac_3 요인은 대인신뢰(trust in people) 중에서 일반신뢰(generalized trust) 변수로 명명하였다(Cronbach's α 값: 0.818). Fac_4 요인의 경우, 친인척이나 가족, 그리고 동료나 이웃 등 비교적 자신과 가까운 사람에 대한 신뢰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인신뢰 중에서 특수신뢰(particularized trust) 변수로 명명한다(Cronbach's α 값: 0.729).

셋째, Fac_1과 Fac_2는 통상 제도적 신뢰와 정치신뢰를 의미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Fac_1의 경우는 거주지의 행정과 거주지의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신뢰 요인으로 묶여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Fac_1은 응답자 자신의 거주지를 중심으로 한 지방정부의 행정에 대한 신뢰요인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신뢰 변수로 명명하였다. Fac_2 요인의 경우, 중앙 행정부처, 청와대, 국회, 정당에 대한 신뢰에 더하여 지방광역의회 의정에 대한 신뢰가 함께 묶여서 나타나, 정치신뢰 변수로 명명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단순다수제의 광역의회 선거와 달리 기초의회의 중선거구제가 대표성 증진에 대한 의문(조성대 2010), 기초의회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저평가와 낮은 민감성(지병근 2014), 그리고 기초의회선거의 무관심과 정보부족(황아란 2007) 등이 기초의회 의정에 대한 신뢰가 정치신뢰가 아닌 지방자치신뢰로 묶여서 인식한 결과라고 여겨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반신뢰(Fac_3)와 특수신뢰(Fac_4), 지방자치신뢰(Fac_1)와 정치신뢰(Fac_2)로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5) 정치효능감 측정은 Craig et al.(1990)이 사용한 설문 문항을 준용하였고, 5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다)로 “나의 투표로 정치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정치와 사회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다.” 2개 문항을 활용하였다.

〈표 2〉 요인분석 결과

	Fac_1 (지방 자치 신뢰)	Fac_2 (정치 신뢰)	Fac_3 (일반 신뢰)	Fac_4 (특수 신뢰)	Fac_5 (정치 효능감)
나는 거주지 구청의 행정을 신뢰한다	.799	.122	.105	.066	.146
나는 대전광역시청의 행정을 신뢰한다	.768	.297	.139	.158	.183
나는 거주지 주민센터(동사무소)의 행정을 신뢰한다	.726	.244	.131	.186	.068
나는 현재의 거주지 구청장을 신뢰한다	.630	.308	.247	.057	.167
나는 현재의 대전광역시 시장을 신뢰한다	.596	.325	.231	.098	.139
나는 거주지 구의회 의정을 신뢰한다	.567	.545	.129	.105	.059
나는 국회를 신뢰한다	.198	.796	.054	-.002	.075
나는 중앙 행정부처를 신뢰한다	.339	.737	.009	.001	.003
나는 청와대를 신뢰한다	.145	.681	.102	-.057	.123
나는 정당을 신뢰한다	.166	.659	.093	.205	.291
나는 대전광역시 의회의 의정을 신뢰한다	.437	.603	.153	.028	.050
나는 정치적 견해가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편이다	.129	.075	.758	.040	.059
나는 종교가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편이다	.123	.083	.717	.096	-.136
나는 인간관계에서 대부분의 사람을 신뢰하는 편이다	.111	.085	.710	.483	.145
나는 외국인을 신뢰하는 편이다	.226	.078	.706	.079	.161
나는 출신지역이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편이다	.083	.069	.693	.261	.131
나는 친구를 신뢰한다	.099	.148	.043	.766	-.153
나는 친인척을 신뢰한다	.063	.011	.129	.755	.039
나는 이웃을 신뢰한다	.015	-.006	.178	.636	.406
나는 가족을 신뢰한다	.189	-.204	.236	.592	.179
나는 직장동료(학생은 동료 학생)를 신뢰한다	.195	.188	.329	.442	.141
나의 투표로 정치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289	.153	.073	.077	.766
나는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정치와 사회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다	.175	.235	.104	.123	.763
Cronbach's α 값	0.878	0.819	0.818	0.729	0.691
eigen value	3.527	3.308	3.024	2.579	1.715
공통변량(%)	15.335	14.381	13.150	11.215	7.457
누적변량(%)	15.335	29.716	42.866	54.081	61.538

주) KMO(Kaiser-Meyer-Olkin) 측도= 0.908, df=253, $\chi^2=8688.9$ ($p<0.01$)

마지막으로, 그 밖의 통제변수로서 성별(①남자, ②여자), 연령(①20대~⑥70세 이상), 학력(①초등학교 졸업 이하~⑥대학원 이상), 소득(월평균수입 ①100만원 미만~⑨ 1,000만원 이상), 주관적인 정치성향인식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주관적인 정치성향은 “가장 진보적인 사람을 ①, 가장 보수적인 사람을 ⑨라고 할 때, 귀하께서는 어디쯤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문항과 “①진보~⑤중도~⑨보수” 9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지금까지 제시한 본 연구의 분석변수에 대한 기술통계값은 아래의 <표 3>과 같다.

<표 3> 분석변수의 기술통계량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정치효능감	847	1	5	3.3247	.74987
일반신뢰	847	1.4	4.8	3.3136	.55368
특수신뢰	847	2.2	5.0	3.8340	.47904
지방자치신뢰	847	1	4.83	3.2855	.57167
정치신뢰	847	1.2	4.80	3.0765	.60079
정치성향	847	1	9	5.18	1.731
성별	847	1	2	1.4959	.50028
연령	847	1	6	3.1004	1.54310
학력	847	1	6	4.0496	1.18297
월평균수입	847	1	9	6.0756	2.52720

IV. 실증분석결과

1. 신뢰와 정치효능감 상관분석 결과

본 연구의 주요 분석에 앞서 상관분석을 통해 정치효능감 변수와 신뢰변수간의 관계를 대략적으로 살펴보는 동시에 다중공선성 유무를 확인하고자 한다. 우선 신뢰와 정치효능감 상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지방자치신뢰의 상관계수가 0.479로 가장 높은 상관성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정치신뢰(상관계수 0.415), 특수신뢰(.335), 일반신뢰(.283)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치효능감이 정치적

요인에 의해 주로 반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만 단순상관분석을 통해서 본 연구가 주목하고자 하는 사회적 자본으로써 신뢰와 정치효능감의 영향 관계 및 함수를 규명하기에는 부족하다. 상관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단순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 변인들간의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대략적 추정일 뿐이다. 따라서 정치효능감에 미치는 변인들간의 함수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회귀분석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아울러 본 연구의 분석변수간 상관계수가 최대 0.682(정치신뢰와 지방자치신뢰)를 넘지 않으므로 분석변수의 다중공선성은 낮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보다 엄밀한 체크를 위해서 다음 회귀분석에서 VIF를 통해 공선성 문제 여부를 다시 확인할 것이다.⁶⁾

〈표 4〉 신뢰와 정치효능감 상관분석 결과

		정치 효능감	일반신뢰	특수신뢰	지방자치 신뢰	정치신뢰
정치 효능감	Pearson 상관계수 N	1 847				
일반신뢰	Pearson 상관계수 N	.283** 847	1 847			
특수신뢰	Pearson 상관계수 N	.335** 847	.498** 847	1 847		
지방자치 신뢰	Pearson 상관계수 N	.479** 847	.433** 847	.362** 847	1 847	
정치신뢰	Pearson 상관계수 N	.415** 847	.273** 847	.186** 847	.681** 847	1 847

주) ** $p < 0.01$ (양쪽)

6) 지면 활용과 가독성을 위해 표에서는 생략했지만, 통제변수(정치성향, 성별, 연령, 학력, 월평균수입)도 함께 포함하여 상관분석 한 결과에서도 연령과 월평균 수입 변수간의 상관계수가 0.441로 가장 크게 나타나 본 연구의 회귀분석 모형에 사용한 변수의 다중공선성은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2. 회귀분석 결과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아래 <표 5>와 같이 세 개의 모형으로 구분하였다. 모형 1은 대인신뢰에 통제변수를 포함시킨 모형이고, 모형 2는 제도 및 정치신뢰에 통제변수를 포함시킨 모형이며, 모형 3은 모형 1과 모형 2를 통합한 모형이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모형1은 대인신뢰가 정치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가설 1을 검증한 것이다. 분석결과를 보면, 일반신뢰와 특수신뢰 모두 통계적 유의수준 0.01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일반신뢰보다 특수신뢰가 정치효능감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신뢰에 대상인 가족의 경우 정치적 대화의 동원효과가 더 클 수 있다고 주장한 박선경·신재혁(2019)의 연구를 고려하면 집단의 물리적 또는 심리적 거리가 멀어질수록 정치적인 의견 교환이 어려워지고 결국 내집단 지향의 신뢰가 정치효능감에 영향을 더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주관적인 정치성향은 통계적 유의수준 0.01에서 진보적인 성향을 지닌 사람일수록 정치효능감이 높게 나타나는 결과를 보여 정치적인 성향이 진보적이라고 응답한 집단이 보수적이라고 응답한 집단 보다 정치효능감이 높음을 제기한 연구(안형기·신범순 2006)와 같은 결과이다. 연령의 경우, 권혁남(2011)의 연구와 달리 기존 연구들(박영득 2016; 류태건 2010; Merolla et al. 2013)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본 연구에서는 연령의 증가는 정치효능감에 통계적 유의수준 0.01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가상준(2007)은 집단간 차이분석을 통해 정치효능감은 50대 이상부터는 다시 증가하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맥락이라고 사료된다. 소득수준은 일반적으로 정치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는데(가상준 2007; 박영득 2016; Wu 2003), 본 연구도 같은 결과를 보였다. 최종학력으로 측정된 교육수준도 모형 1에서는 통계적 유의수준 0.05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소득과 교육수준이 통상적으로 비례한다는 점에서 정치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된다.

둘째, 모형2는 제도 및 정치신뢰가 정치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가설 2를 검증한 것이다. 통제변수의 경우 모형 1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지방자치신뢰와 정치신뢰 모두 정치효능감에 통계적 유의수준 0.01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신뢰는 정부의 정책에 대한 평가와도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에서(Erikson & Tedin 2015),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다면 그 만큼 정부정책의 피드백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개인의 정치효능감이

높게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분석 결과도 그러한 맥락에서 볼 수 있다. 특히 일반적 정치신뢰(회귀계수 0.163, $p<0.01$) 보다 지방정부 차원의 지방자치 신뢰(회귀계수 0.479, $p<0.01$)가 정치효능감에 보다 더 큰 영향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지방분권에 따른 지방자치의 질적 향상은 정치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5〉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정치효능감		모형1(대인신뢰)		모형2 (제도·정치신뢰)		모형3		VIF ⁷⁾
		B	s.e	B	s.e	B	s.e	
대인 신뢰	일반신뢰	.176**	.049			.020	.048	1.484
	특수신뢰	.409**	.057			.305**	.054	1.402
제도·정치 신뢰	지방자치 신뢰			.479**	.053	.358**	.057	2.236
	정치신뢰			.163**	.054	.188**	.053	2.136
통제 변수	정치성향	-.080**	.015	-.035*	.016	-.035*	.015	1.500
	성별	.006	.047	-.023	.045	-.021	.044	1.030
	연령	.075**	.019	.052**	.018	.050**	.018	1.586
	학력	.061*	.026	.020	.025	.030	.024	1.720
	월평균 수입	.028*	.012	.033**	.011	.031**	.011	1.589
(상수)		.928**	.260	1.018**	.217	.083	.258	
Durbin-Watson		1.413		1.401		1.434		
F값		27.148**		42.913**		39.537**		
R ²		0.185		0.264		0.298		

주) * $p<0.05$, ** $p<0.01$

마지막으로, 모형3은 대인신뢰와 제도 및 정치신뢰가 정치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통합모형으로 가설 3을 검증한 것이다. 정치효능감과 대인신뢰와의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일반신뢰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영향관계를 찾을 수 없었지만 (+)의 방향성을 보였고, 특수신뢰는 정치효능감에

7) 분산팽창지수(VIF: Variance Inflation Factor)가 10이하로 나타났기 때문에 본 회귀분석의 다중공선성과 산포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p<0.01$)으로 긍정적인 영향관계를 보였다. 이는 앞서 상관분석에서 보였던 상관관계의 강도와 관계가 있다고 사료된다. 결국 자신과 보다 가까운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사회에 대한 의견과 정서를 공유한 결과가 정치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차재권·류태건(2019)은 일반신뢰보다 특수신뢰가 높은 현상은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대전광역시의 경우 일반신뢰 수준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수준을 보인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신뢰가 정치 및 행정관련 신뢰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정치효능감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것은 특정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일반신뢰를 구성하는 문항이 정치적 견해나 종교, 지역 등이 다른 사람에 대한 신뢰 등을 묻는 문항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정치적 이슈에 대한 정보교환이나 소통이 외부지향적이지 아니라 내부지향적인 신뢰의 속성에 의해 보다 쉽게 이루어 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지방자치신뢰와 정치신뢰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p<0.01$)에서 정치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연구에서도 검증된 정치신뢰가 정치효능감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는 결과(이재현·김욱 2018)를 재확인 입증한 것으로 정치효능감은 정치적 영역에서의 변수가 가장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⁸⁾ 정치성향의 경우 모형 1, 2와 마찬가지로 진보적인 성향일수록 정치효능감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젊은 층이 진보적이라는 일반적 설명과 본 연구에서 보여진 연령 증가와 정치효능감의 정비례 관계를 생각하면 모순적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진보적이면서 연령대가 높은 사람일수록 정치효능감이 높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사시기가 2018년 문재인 정부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감안하고 실제로 높은 연령대에서 정치현상을 이해하는 학습효과로 인한 것이라면 일견 이해되는 부분이다. 통제변수는 본 연구의 주된 관심 변수들 보다 회귀계수가 작게 나타났고 어디까지나 분석변수를 통제하는 목적하기에 추가적 설명은 논외로 한다. 결국 통합모형의 결과는 대인신뢰보다 정치적 차원에서의 신뢰가 정치효능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정치효능감이 제도 및 정치신뢰와 관련이 있음은 당연한 결과라고 여길 수 있다. 그러나 이 변수들에서 지방자치 신뢰가 정치효능감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과는 지방정치에 대한 합의가 적지 않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 토의 및 결론 파트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8) 제도 및 정치 신뢰요인 변수를 제외한 회귀분석으로 확인한 결과, 대인신뢰 두 변수 모두 통계적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함을 보였고, 회귀계수는 일반신뢰 0.168, 특수신뢰 0.386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치·행정신뢰 요인이 정치효능감에 매우 주요한 변인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었다.

V. 토의 및 결론

정치효능감은 지역사회에서 시민의 정치적 참여를 증진시키고 지역사회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정치효능감에 대한 주된 관심을 정치효능감이 정치적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정치효능감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분석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정치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요인이 과연 무엇인지를 규명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자료로, 지역발전과 정치참여에 중요한 요소로 꼽히는 사회적 자본의 한 유형인 신뢰를 가지고 분석하였다. 신뢰는 사회적 신뢰로써 대인신뢰와 제도적 신뢰로써 정치신뢰가 있다. 대인신뢰는 개인 자신을 중심으로 보았을 때 자신이 잘 알고 있고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대상에 대한 특수신뢰와 그 보다 먼 거리에 위치하고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대상에 대한 일반신뢰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정치신뢰는 통상 정부신뢰, 정치제도 신뢰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지방분권과 지방정치의 발전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지방분권의 진전에 따른 시민들이 지방자치와 관련된 신뢰를 일반적인 정치제도에 대한 신뢰와 구분하여 인식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제도 및 정치신뢰와 관련된 변수들은 지방자치에 대한 신뢰와 일반적으로 알려진 정치에 대한 신뢰로 구분할 수 있었다. 지방분권화에 따른 지방자치의 효과가 시민들의 인식적 차원에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그렇다면 대인신뢰와 정치신뢰가 시민들의 정치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될까? 그리고 본 연구가 주목하는 지방자치에 대한 신뢰와 일반 정치에 대한 신뢰는 정치효능감에 어떠한 영향관계를 갖을까? 이를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대인신뢰보다는 특수신뢰가 정치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관계를 확인하였고, 일반적인 정치신뢰보다 지방자치에 대한 신뢰가 시민의 입장에서 정치효능감에 유의미하고 긍정적인 영향관계를 확인하였다. 구체적인 본 연구의 함의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인신뢰의 경우(모형1) 모두 정치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일반신뢰가 정치효능감에 미치는 영향(176, $p<0.01$)보다 특수신뢰가 정치효능감에 미치는 영향(409, $p<0.01$)이 더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 간 대화를 많이 할수록 정치에 관한 관심과 정치효능감 모두 증가하여 투표에 참여할 확률이 높아짐을 밝힌 박선경·신재혁(2019)의 최근 연구결과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시민 개인이 정치관련 정보와 대화의 채널이 물리적·심리적 거리가 상대적

으로 가까운 지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정치효능감은 보다 효과적으로 발휘될 수 있다.

둘째, 제도 및 정치신뢰의 경우(모형 2) 모두 정치효능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긍정적인 영향관계를 보였는데, 지방자치 신뢰가 정치효능감에 미치는 영향(.479, $p<0.01$)이 정치제도신뢰가 정치효능감에 미치는 영향(.163, $p<0.01$)보다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청와대, 중앙 부처, 의회, 정당 등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정치신뢰도 정치효능감에 중요하지만, 그 보다 지방분권에 따른 지방자치의 측면에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정치와 행정을 신뢰하고 지지할 경우 개인이 느끼는 정치효능감이 더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풀뿌리 민주주의로 대표되는 지방자치는 민주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시민참여에 필요한 정치적 자원을 보완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지원과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다(김중욱 2012). 따라서 지역발전과 지방정치 활성화를 위해 시민참여를 민주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끌어 낼 필요가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그 출발점이 지방자치의 신뢰를 높여 정치효능감을 증진시켜야 한다.

셋째, 대인신뢰와 제도 및 정치신뢰를 통합하여 네 개의 변인을 모두 고려한 결과(모형 3) 다른 변인(통제변수)을 통제하였을 경우, 네 개의 변인 중에서 일반 신뢰 변인을 제외한 세 개 요인이 정치효능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긍정적으로 나타났고, 특히 지방자치 신뢰가 정치효능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358, $p<0.01$). 그 다음으로 특수신뢰(.305, $p<0.01$), 정치신뢰(.188, $p<0.01$) 순으로 정치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신뢰와 지방자치 신뢰가 정치효능감에 주요한 영향요인이라는 이 결과는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과의 유대관계를 통한 특수신뢰와 자신과 가장 밀접한 지역단위에서의 지방자치 신뢰의 중요성을 함의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지방자치 차원에서의 자기 조직화 실현과정이 민주적 시민참여 효능감 형성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홍일표·하승수 2003). 그리고 무엇보다 지방정부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는 상징적인 것이라기 보다는 실질적이고,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가 지방과 중앙간 권력의 균형과 관련된 실질적인 요인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Fitzgerald & Wolak 2016, 132), 실제로 시민들의 정치효능감 제고에 필요한 요인을 시민과 가장 가까운 대상과 지역에서 찾을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사회적 자본과 정치효능감 증대를 지방분권과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의 함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항의 한계로 정치효능감에 대한 변수가 다양하고 충분하지 못했기에 향후 정치효능감에 대한

측정변수를 보다 다양하고 충분하게 설정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특정 지역(대전광역시)만을 대상으로 조사된 자료를 가지고 분석하였기에 일반화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앞서 지적했듯이 정치효능감에 대한 영향요인을 직접적으로, 그리고 사회적 자본으로써 신뢰 변인을 통해 규명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는 점에서 본 연구가 그 간극을 조금이나마 메우고자 했지만 부족하기에 향후 후속 연구에서는 지역별 또는 권역별로 구분하고 그 특징과 함의를 유형화한 연구로 보다 더 풍부하게 진행되기를 희망한다.

참고문헌

국문 자료

- 가상준. 2007. “정치효능감 및 신뢰감 함양을 통한 민주시민교육.” 『한국민주시민교육회보』 12(1), 109-127.
- 강경태. 2003. “한국 대통령 선거 어떤 유권자가 참여하나?: 선거관심도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7(1), 91-111.
- 강우진. 2012. “경제정책에 대한 인식과 주택소유 형태가 투표불참에 미치는 영향 연구: 18대 총선의 경우.” 『한국정당학회보』 11(2), 67-94.
- 곽현근. 2007. “지역사회 사회자본에 미치는 동네효과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 11(4), 59-86.
- 곽현근. 2008. “지역사회 주민조직 참여의 영향요인 및 집합적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대전광역시를 대상으로.” 『한국행정연구』 17(2), 115-146.
- 곽현근, 유현숙. 2011. “지역사회 주민조직 참여가 인지적 사회자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주민조직 유형별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회보』 25(2), 61-91.
- 권혁남. 2011. “2010 지방선거에서 미디어 이용과 TV 토론관심시청이 정치효능감, 투표행위에 미치는 효과연구.” 『한국언론학보』 55(6), 126-151.
- 김명숙. 2004. “지역 사회자본의 지방정치에 대한 효과.”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6(3), 23-42.
- 김 옥. 2013. “투표참여와 다른 유형의 정치참여 간의 연계성 분석.” 『정치정보연구』 16(2), 27-59.
- 김종욱. 2012. “로컬 거버넌스에서의 시민참여와 정치적 평등성, 정치적 효능감.” 『한국행정학회보』 46(2), 137-160.
- 류태건. 2010. “정치효능·정치신뢰·정치참여의 이론과 현실.” 『지방정부연구』 14(2), 243-267.
- 박선경, 신재혁. 2019. “가족끼리의 정치에 관한 대화는 투표 참여확률을 높일까?” 『21세기정치학회보』 29(4), 1-22.
- 박영득. 2016. “외적 정치효능감의 소득편향과 공공서비스의 역할.” 『현대정치연구』 9(2), 5-29.
- 박희봉. 2002. “조직 내 사회자본 형성요인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 6(1), 221-237.

- 소진광. 2000. “지방자치와 사회적 자본.”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2(4), 93-112.
- 안형기, 신범순. 2006. “정치참여 결정요인으로서의 인지적 효능감: 네티즌의 투표행위를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0(1), 27-49.
- 이수영, 곽진영. 2002. “한국인의 정치참여의 변화와 지속성: 남성과 여성의 참여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5(4), 165-188.
- 이숙중, 유희정. 2010. “개인의 사회자본이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 『한국정치학회보』 44(4), 287-313.
- 이재현, 김욱. 2018. “비제도적 정치참여가 제도적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 정치효능감과 정치신뢰도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정치학회보』 8(1), 89-112.
- 이현우, 이지호, 한영빈. 2011. “사회자본(Social Capital) 특성이 지역주의에 미치는 영향.” 『한국정치학회보』 45(2), 149-171.
- 이희창, 박희봉. 2005. “사회자본과 지역발전” 『한국행정논집』 17(4), 1183-1207.
- 장석준. 2012. “사회 자본이 지방정부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호혜성 규범과 교량형·결속형 연결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3(2), 279-303.
- 정준표. 2008. “사회경제적 지위와 투표: 제18대 총선과 제17대 총선의 비교.” 『현대정치연구』 1(2), 37-74.
- 정한울, 이근수. 2013. “정치효능감과 정치신뢰의 조합이 정치 참여에 미치는 영향.” 『의정연구』 38, 211-244.
- 조성대. 2010. “선거구제의 정치적 효과에 관한 연구: 6·2 지방선거에서 기초의회와 광역의회의 선거구제 비교.” 『현대정치연구』 3(2), 115-150.
- 지병근. 2014. 선거구 제도와 군소정당 지지자들의 투표행태: 2010년 기초의회선거 사례 분석. 『한국정치연구』 23(2), 185-210.
- 차재권, 류태건. 2019. “대전 시민의 신뢰: 유형별 수준과 사회집단 간 차이.” 『21세기정치학회보』 29(2), 23-41.
- 하상근. 2018. “사회적 자본이 시민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사회적 및 정치적 참여를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30(4), 909-937.
- 홍일표, 하승수. 2003. “시민참여의 한일비교: 제도와 운동의 동학.” 『시민사회와 NGO』 1(2), 155-188.
- 황아란. 2007. “기초 지방의원 선거의 중선거구제 개편과 정치적 효과.” 『지방정부연구』 11(1), 209-225.

영문 자료

- Almond, Gabriel Abraham and Sidney Verba. 2015. *The civic culture: Political attitudes and democracy in five nation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Bimber, Bruce. 2003. *Information and American democracy: Technology in the evolution of political power*.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oleman, James S.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S95-S120.
- Coleman, James S. 1990. *Foundations of Social Theor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Craig, Stephen C., Richard G. Niemi, and Glenn E. Silver. 1990. "Political Efficacy and Trust: A Report on the NES Pilot Study Items." *Political Behavior* 12(3), 289-314.
- Erikson, Robert S. and Kent L. Tedin. 2015. *American public opinion: Its origins, content and impact*. New York: Routledge.
- Fitzgerald, Jennifer and Jennifer Wolak. 2016. "The roots of trust in local government in western Europe."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Review* 37(1), 130-146.
- Fukuyama, Francis. 1995. "Social Capital and the Global Economy." *Foreign Affairs* 74(5), 89-103.
- Fukuyama, Francis. 2001. "Social Capital, Civil Society and Development." *Third World Quarterly* 22(1), 7-20.
- Gamson, William. A. 1968. *Power and discontent*. Homewood, IL: Dorsey Press.
- Grix, Jonathan. 2001. "Social capital as a concept in the social sciences: The current state of the debate." *Democratization* 8(3), 189-210.
- Jackman, Robert W. and Ross A. Miller. 1998. "Social capital and politics."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1(1), 47-73.
- Krishna, Anirudh. 2000. "Creating and harnessing social capital." in *Social capital: a multifaceted perspective*, edited by Ismail Serageldin and Partha Dasgupta, Washington, DC: World Bank.
- Lassen, David Dreyer and Søren Serritzlew. 2011. "Jurisdiction size and local democracy: Evidence on internal political efficacy from large-scale municipal reform."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105(2), 238-260.

- Madsen, Douglas. 1987. "Political self-efficacy tested."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1(2), 571-581.
- Maloney, William, Graham Smith, and Gerry Stoker. 2000. "Social capital and urban governance: adding a more contextualized 'top down' perspective." *Political studies* 48(4), 802-820.
- Merolla, Jennifer L., Abbylin H. Sellers, and Derek J. Fowler. 2013. "Descriptive Representation, Political Efficacy, and African Americans in the 2008 Presidential Election." *Political Psychology* 34(6), 863-873.
- Newton, Kenneth, Dietlind Stolle, and Sonja Zmerli. 2018. "Social and political trust." in *The Oxford handbook of social and political trust*, edited by Eric M. Uslaner, 37-56.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Niemi, R. G. Stephen C. Craig, and Franco Mattei. 1991. "Measuring internal political efficacy in the 1988 National Election Stud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5(4), 1407-1413.
- Paxton, Pamela. 1999. "Is social capital declining in the United States? A multiple indicator assessment."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5(1), 88-127.
- Putnam Robert. D. 1993.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Putnam, Robert. D. 안칭시 외 역. 2000. 『사회적 자본과 민주주의』. 서울: 박영사.
- Seligson, Mitchell A. 1980. "Trust, efficacy and modes of political participation: A study of Costa Rican peasants."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10(1), 75-98.
- Speer, Paul W. and Joseph Hughey. 1995. "Community Organizing: An Ecological Route to Empowerment and Power."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3(5), 729-748.
- Uslaner, Eric M. 2002. *The Moral Foundation of Trus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andersman, Abraham and Paul Florin. 2000. "Citizen Participation and Community Organizations." in *Handbook of Community Psychology*, edited by Julian Rappaport and Edward Seidman, 247-272. New York: Kluwer Academic.

- Warren, Mark E. 2008. "The nature and logic of bad social capital." in *The Handbook of Social Capital*, edited by Dario Castiglione, Jan W. Van Deth, and Guglielmo Wolleb, 122-149.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Woolcock, Michael. 1998. "Social capital and economic development: Toward a theoretical synthesis and policy framework." *Theory and society* 27(2), 151-208.
- Wu, Chung-Li. 2003. "Psycho-Political Correlates of Political Efficacy: The Case of the 1994 New Orleans Mayoral Election." *Journals of Black Studies* 33(6), 729-760.

Abstract

**A Study on the Effects of Trust on Political Efficacy
in Local Politics: Focusing on trust in people and
trust in institution and politics**

Jae-Hyun Lee ■ Pukyong National University

Wook Kim ■ Pai-Chai University

The political efficacy and social capital(trust) are necessary factors for local politics and regional development. Therefore, this study examined its impact with a survey of citizens in Daejeon.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1) as a result of the exploratory factor analysis with a question item of trust measurement, Institutional and political trust was divided into trust in the local autonomy and general political trust. (2) Regression analysis shows that both trust in people and trust in institution and politics have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political efficacy. In particular, trust in local autonomy and particularized trust were found to have had the greatest impact on political efficacy. Hence, it is necessary to heighten the level of people's political efficacy by increasing the trust in people and trust in local autonomy.

Key Words: Political efficacy, Trust in people, Trust in institution and politics,
Local politics, Social capital